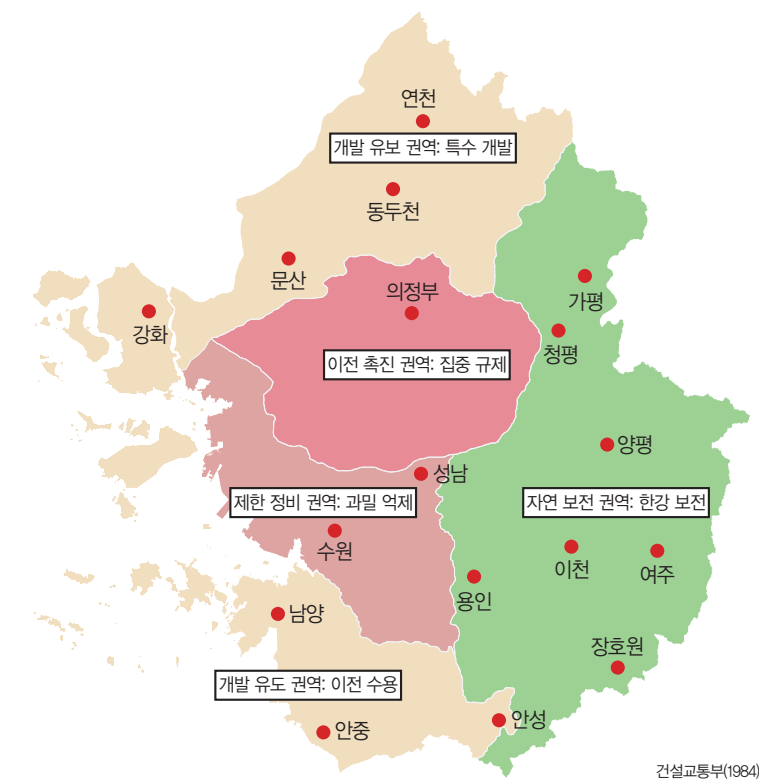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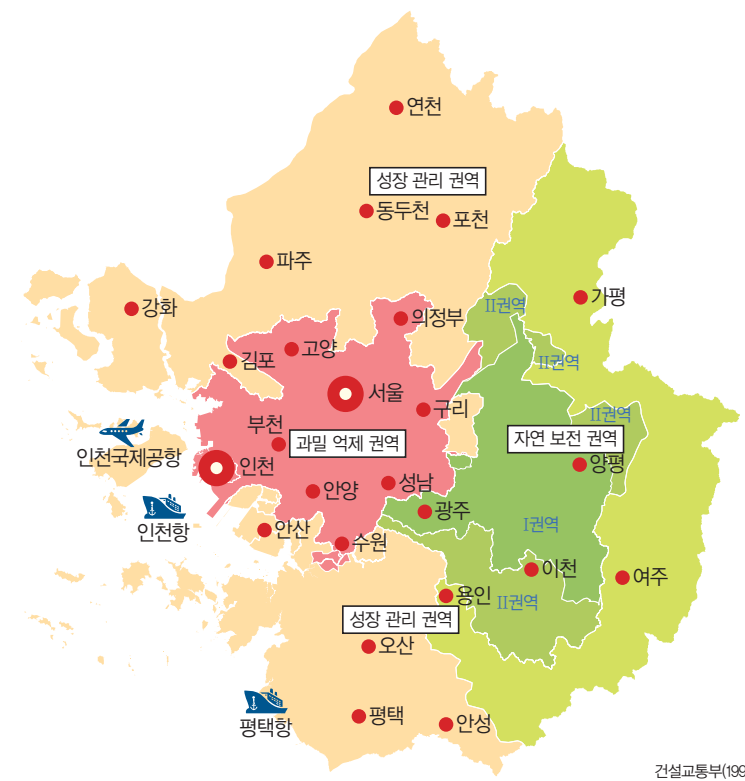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1982~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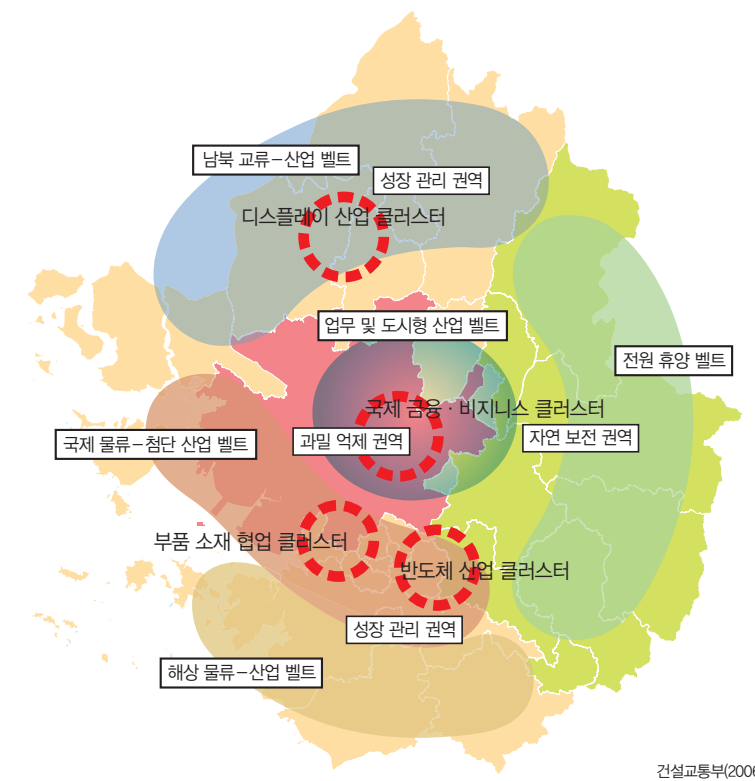
건설교통부(1984)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1997~2011)



건설교통부(1997)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2006)

제1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도시 간 기능 분담을 통한 다핵적 광역 대도시 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전 촉진 권역, 제한 정비 권역, 개발 유도 권역, 자연 보전 권역, 개발 유보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전 촉진 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에 대해서는 단핵 의존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핵 도시 구조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부도심을 형성하는 것을 재정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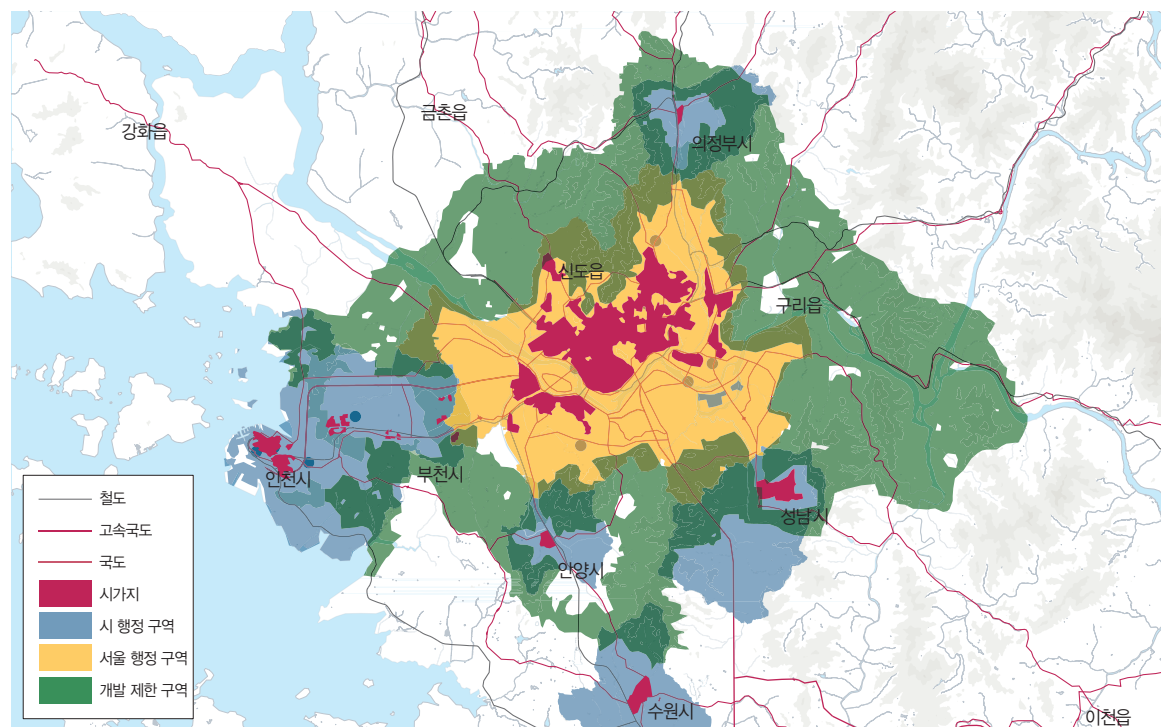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목표 인구 달성 실패에 따른 인구 집중 문제의 해결과 세계화·개방화의 도래, 광역 도시화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세계화와 지방화, 통일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공간

구조의 기틀 마련,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적정 수준의 기능 분담 추진을 공간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축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의 국내적 여건 변화와 중국의 성장,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다핵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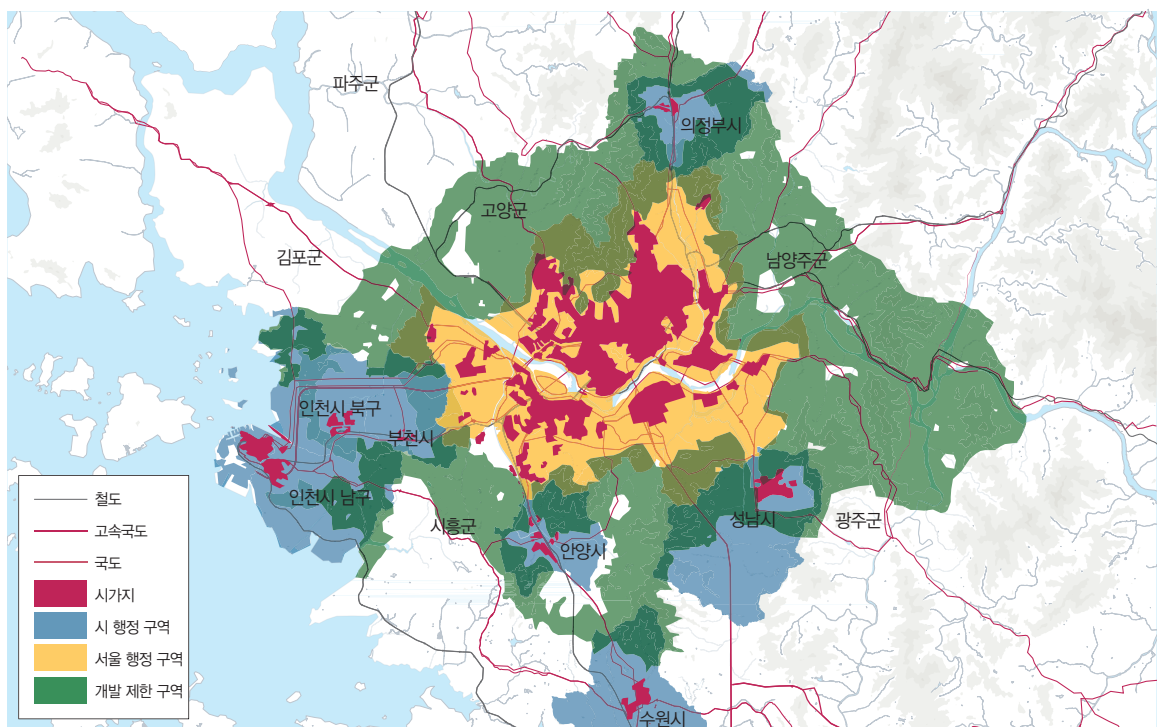
공간 구조로 전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 벨트 구축,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 체계에서 환상 격자형 교통 체계로 전환,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공간 구조(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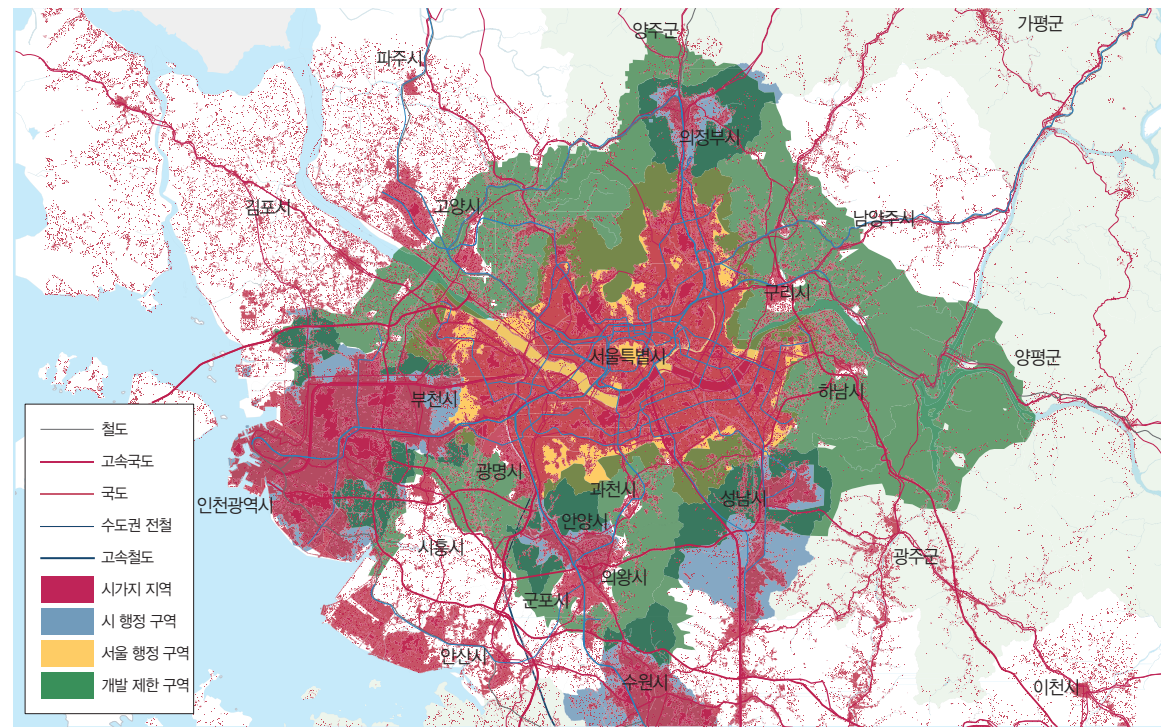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수도권 공간 구조(1980년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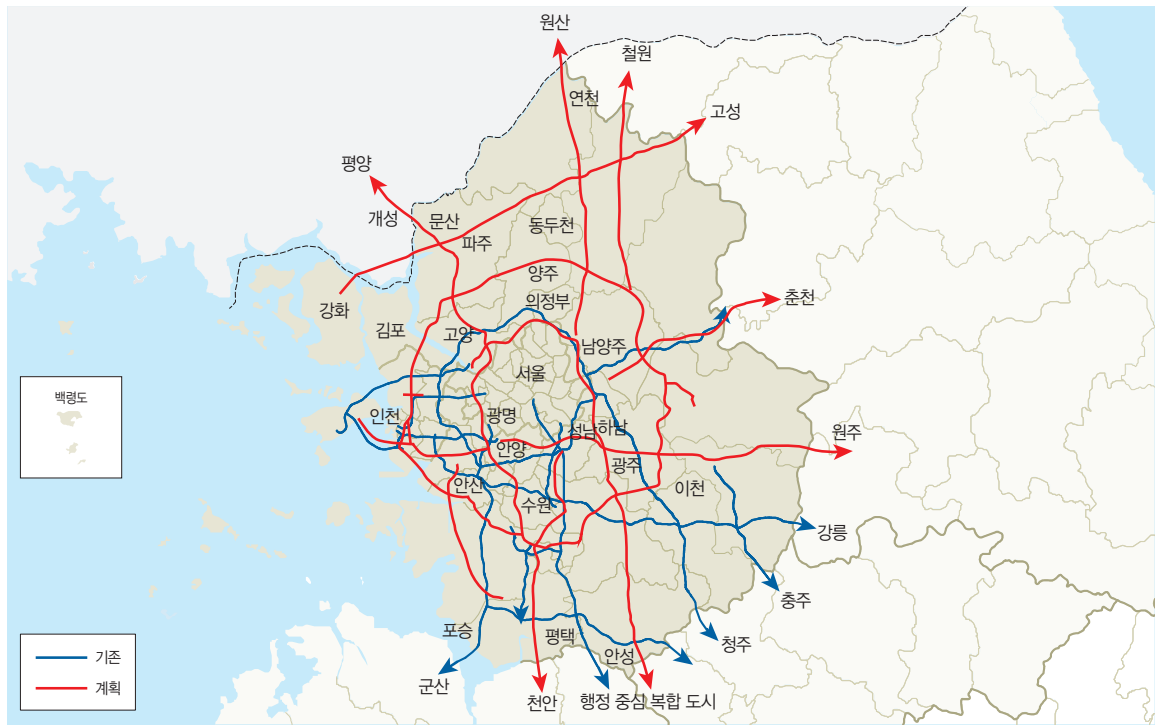
수도권 공간 구조(2000년대)



주: 시가지 지역은 위성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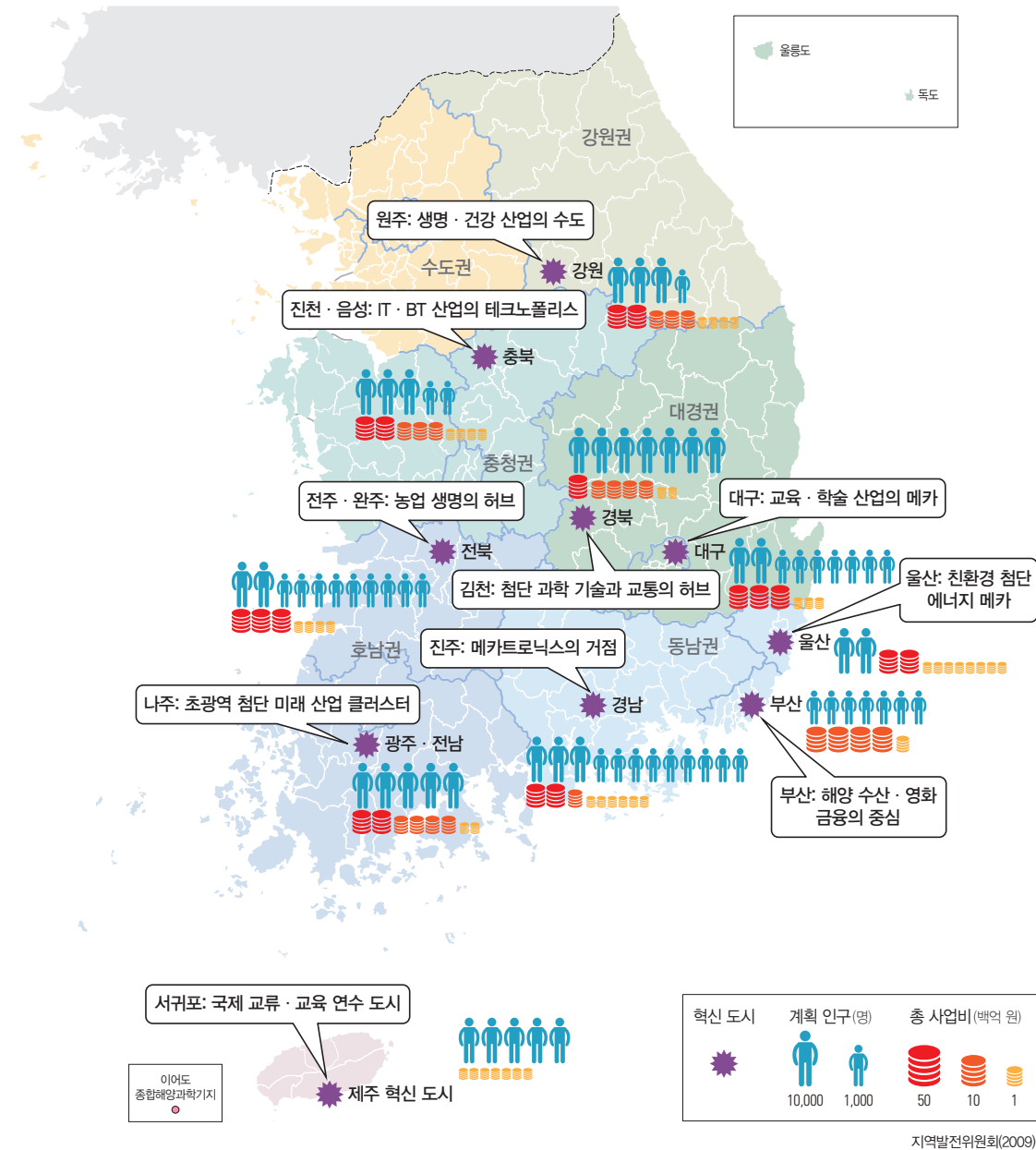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수도권 간선 도로망 구축 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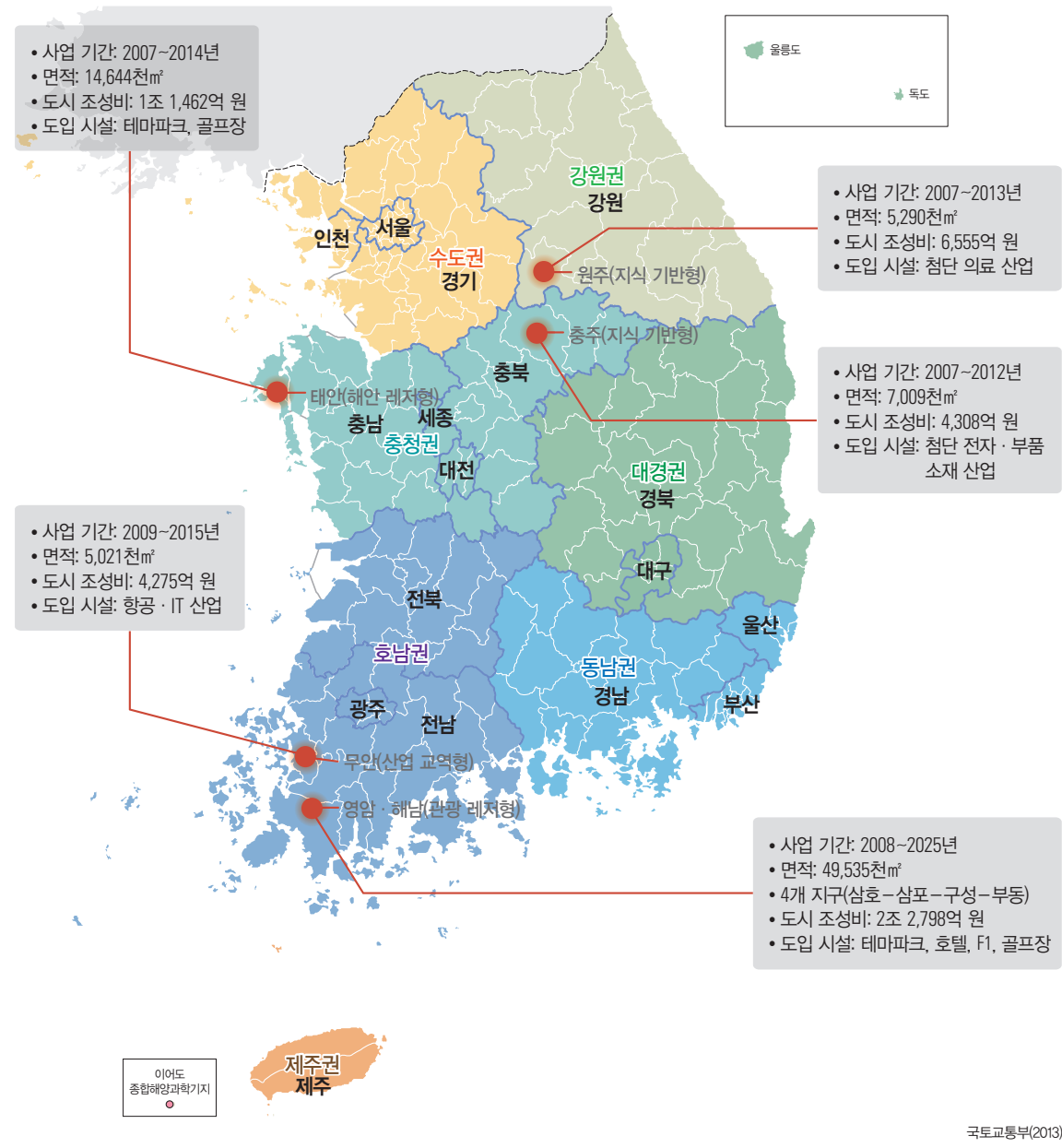


건설교통부(2006)

혁신 도시 현황



기업 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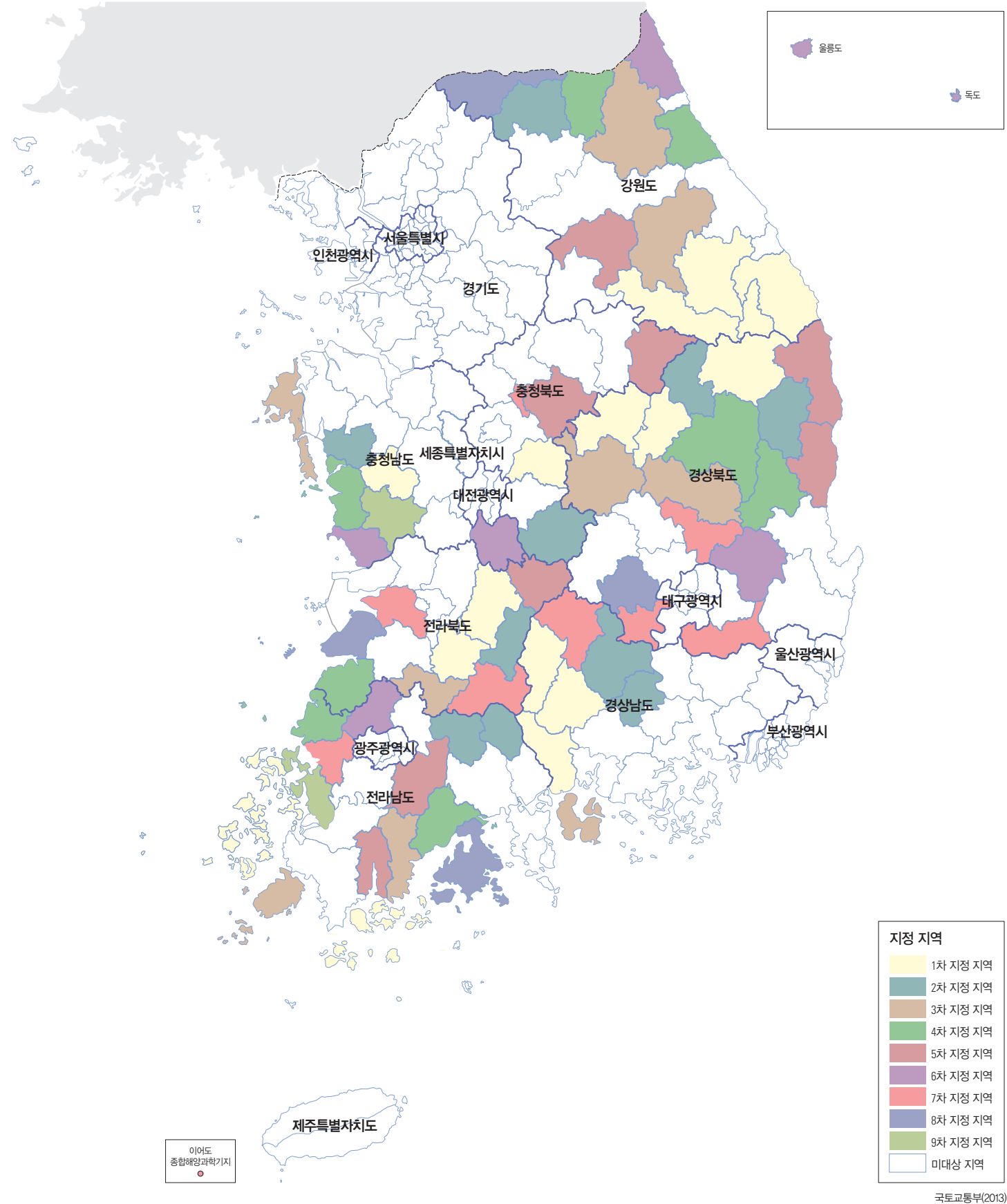


세종시 생활권별 개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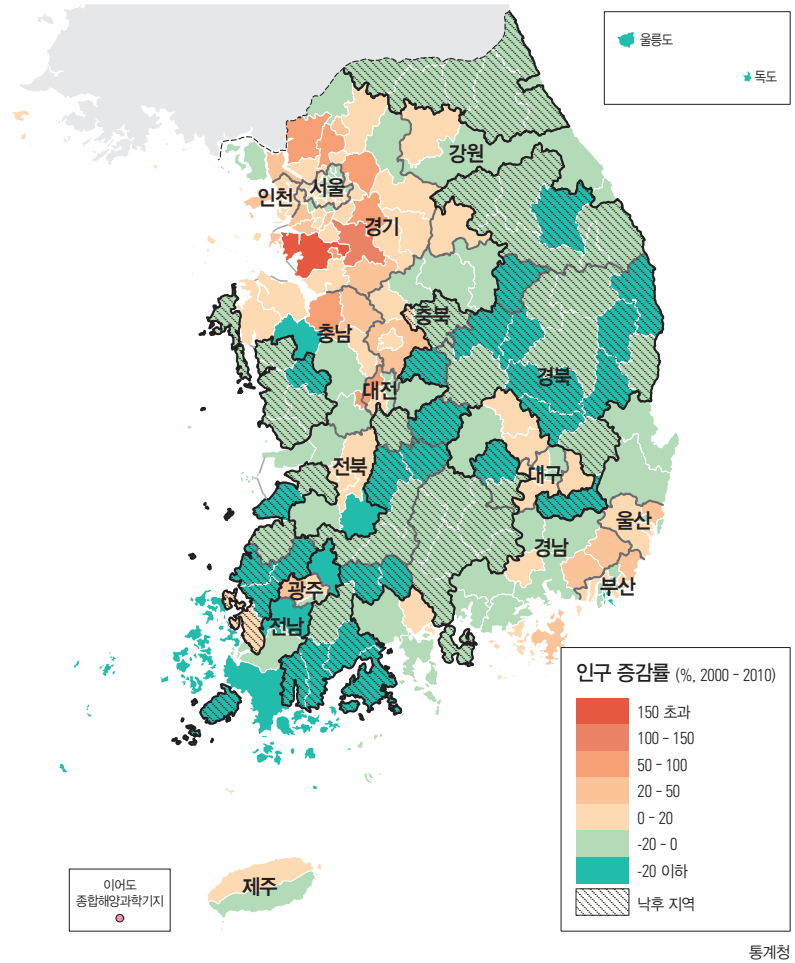


지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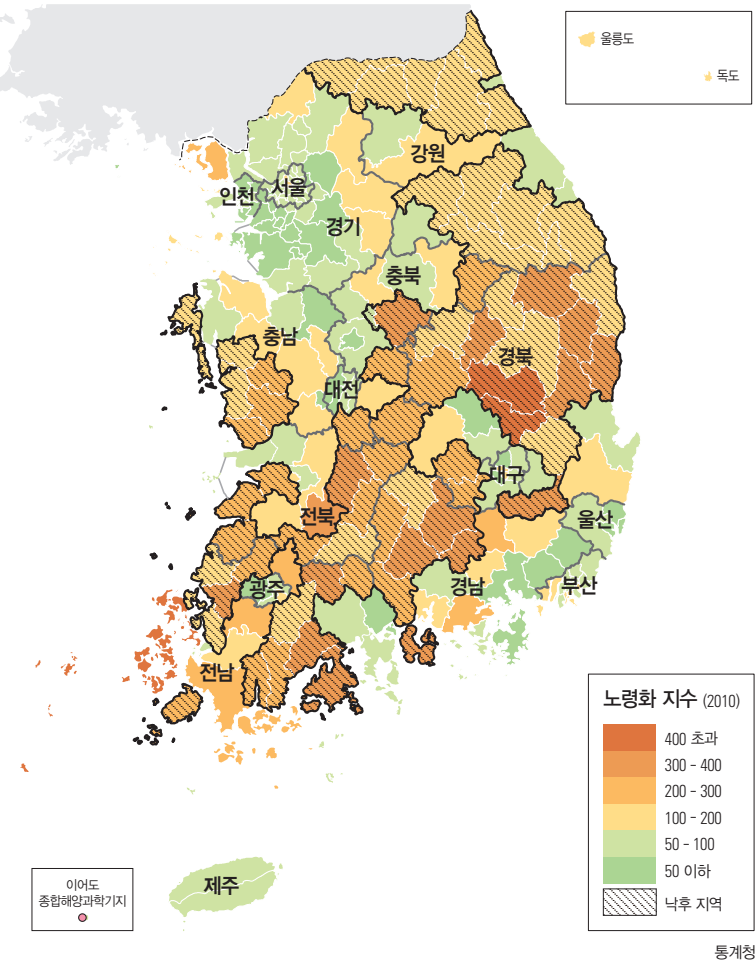
낙후 지역형 개발 촉진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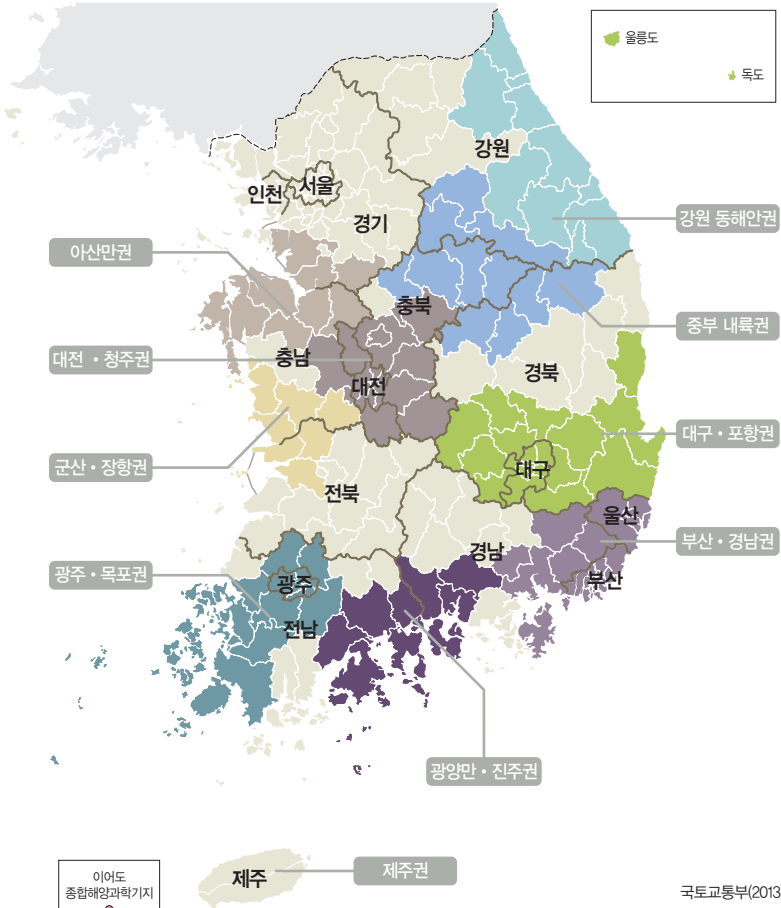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낙후 지역



노령화 지수와 낙후 지역



10대 광역권 지정 현황도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 기반 및 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 촉진 지구를 지정하였다. 개발 촉진 지구는 낙후 지역형·균형 개발형·도농 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낙후 지역형은 전국 시·군의 낙후도를 평가하여 전국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표가 공통 지표 1개, 특성 지표 1개 이상인 경우 지정하는데, 2013년 7월 현재 52개 지구, 70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균형 개발형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아산만 지구에 해당한다. 도농 통합형은 새로운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 지대를 수도권의 대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낙후 지역형 개발 촉진 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구분	전국 (7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지구	시·군
계	53	71	7	12	5	5	7	7	8	9	9	14	11	17	6	7
1차	7	16	탄광 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소백산 주변 (봉화·예천·문경)		지리산 주변 (하동·산청·함양)	
2차	7	11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산악 휴양형 (영주·영양)		의령·함천	
3차	6	11	평창·인제·정선		—		태안		순창		장흥·진도		중서부 평야 (상주·의성)		남해·하동	
4차	6	10	양구·양양		—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호 주변 (안동·청송)		합천·산청	
5차	7	9	횡성		단양·괴산		—		무주		화순·강진		동해 연안 (울진·영덕)		함양	
6차 (2007~2009)	6	6	고성		—		서천·금산		—		장성		영천·울릉		—	
7차 (2009~2010)	8	8	—		증평		—		남원·김제		함평		청도·군위·고령		거창	
8차 (2011)	4	4	철원		—		—		부안		고흥		성주		—	
9차 (2013)	2	2	—		—		부여		—		무안		—		—	

* 미지정 시·군(40곳): 예산, 담양, 경남 고성, 홍천, 옥천, 정읍, 해남, 나주, 청영, 밀양
주: [녹색] 인은 지구 기간 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지구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의 특성 및 분포, 교통 접근성,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하여 문화 관광 권역을 구분했다. 문화 관광 권역은 동·서·남해안 및 접경 지역의 광역 관광 벨트 및 백제 문화 지역·유교 문화 지역·지리산 등과 같이 특정 자원이 여러 행정 구역에 걸치는 광역 관광권을 문화 관광 특정 지역으로 개발·육성한 것이다. 또한 4대강과 연계한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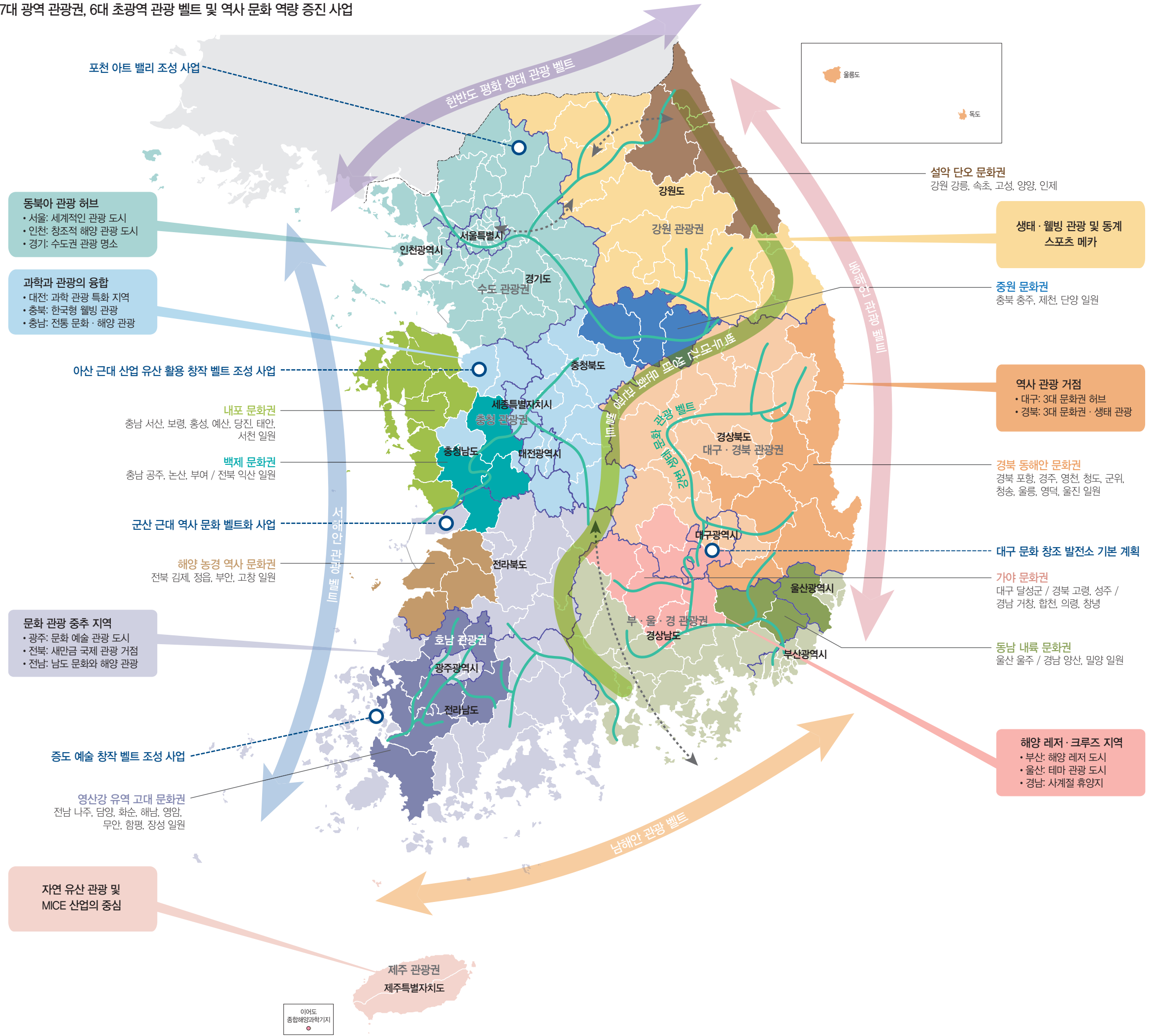
및 강변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도록 했다.

제3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서는 '다층적 지역 관광 발전 전략'을 도입하여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 경제권을 관광 권역으로 수용하였으며, 6대 초광역 관광 벨트 설정으로 계획 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다.

역사 문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 근대 산업 유산을 활용한 문화 예술 창작 벨트 조성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마을의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화권형 특정 지역의 지정(국토교통부) 등이 있다.

국토의 문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도(古都) 육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고도의 훼손된 역사적 골격을 계획적으로 복원하여 국토 전반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품질을 제고하는 전진 기지로 활용하며 고도가 가진 유·무형의 역사 자산과 자연 지형, 역사적 사건 등을 공간 계획적으로 연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7대 광역 관광권, 6대 초광역 관광 벨트 및 역사 문화 역량 증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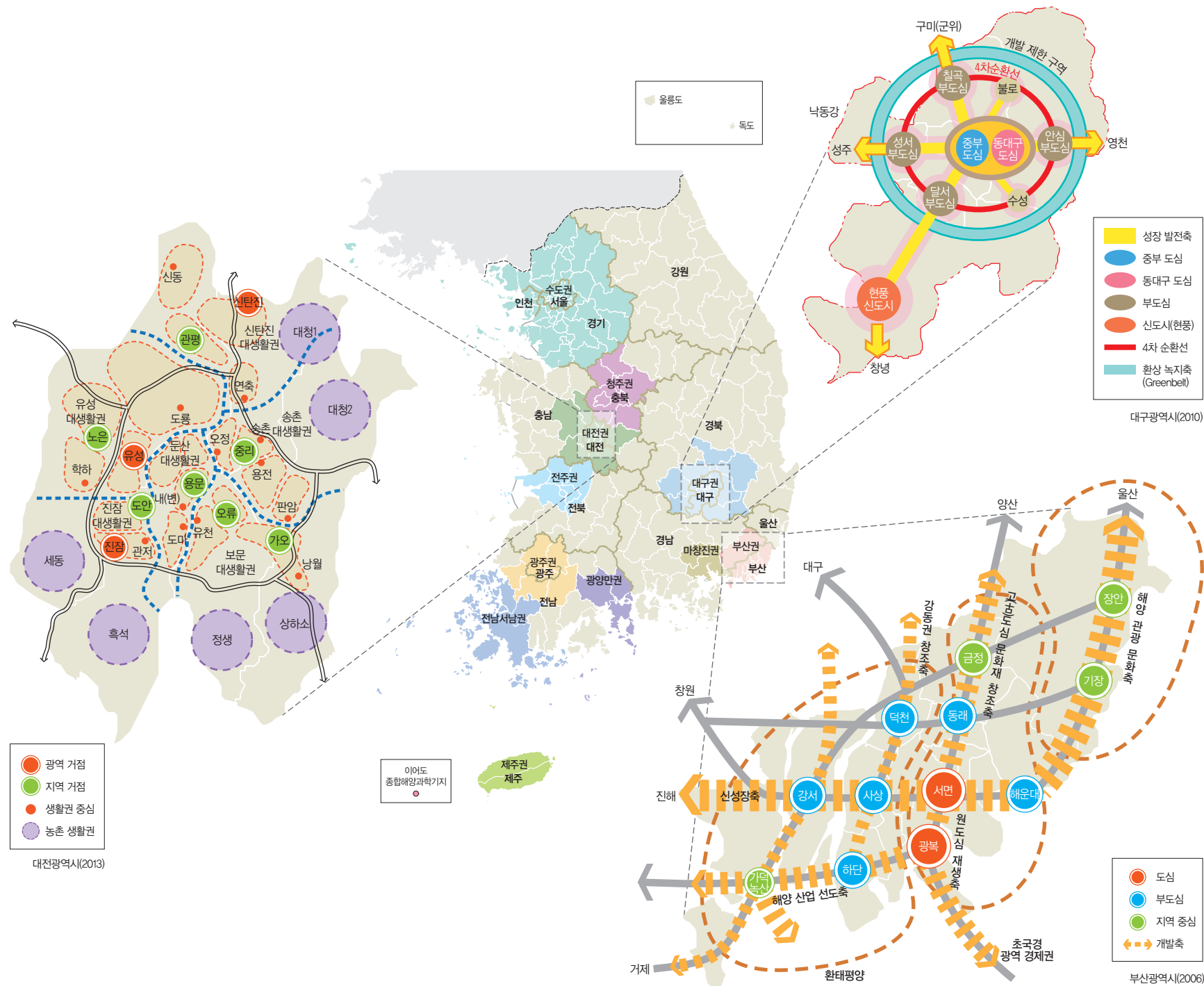


백두대간 생태 문화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백두대간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이용자연 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 지대웰빙 고부가 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안전되고 풍요로운 생활 기반 조성 및 지역 간 연계 강화	서해안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적 해양 레저 관광 네트워크 구축해양 관광 협력 지역 설정(서해 5도)과 남북 교류의 교두보 확보갯벌 및 해안 자원을 활용한 생태 테마 및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	동해안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해안의 자연과 문화 결합지역 자원의 고부가 가치 산업화동해안의 국제적 관광 거점국제 크루즈, 항공 교통 활성화	남해안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의 지속적 추진영남과 호남이 결합된 남중권 육성크루즈 관광 기반 구축 및 관광 활성화	한반도 평화 생태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태 자원의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UNESCO 생물 보전 권역으로 지정, 문화 유산과 생태 지역의 관광 활성화강화~고성까지 민통선 지역의 명품 자전거 코스(평화누리) 개발	강변 생태 문화 관광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강: 역사적 전통을 있는 문화 물길금강: 자연성의 녹색 관광 문화 물길낙동강: 자연, 문화의 다양성의 물길영산강, 섬진강: 남도 문화의 재창조, 여맥의 물길
--	--	--	---	--	---

대한민국정부(2011), 문화체육관광부(2011), 국토연구원(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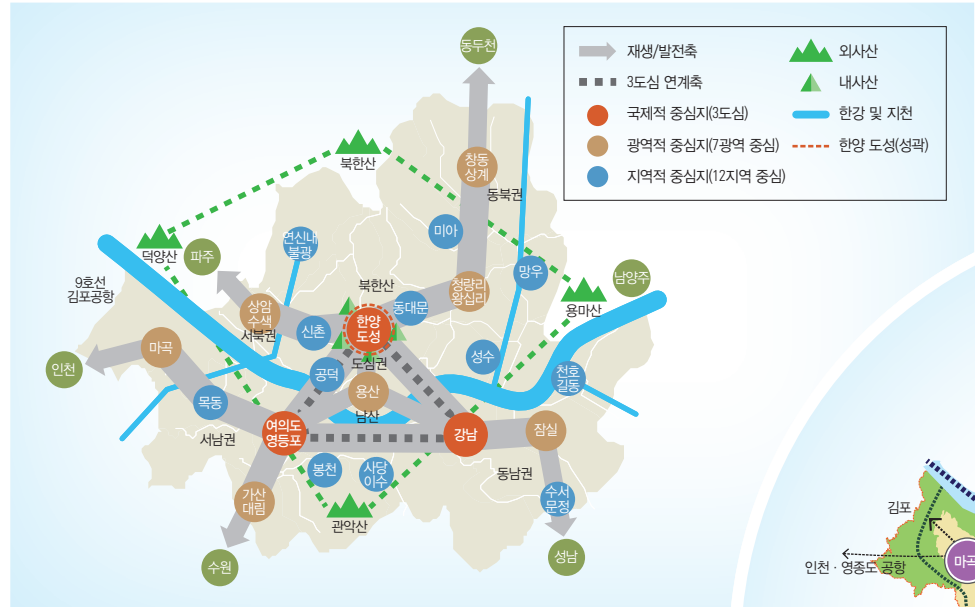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권 및 주요 도시 기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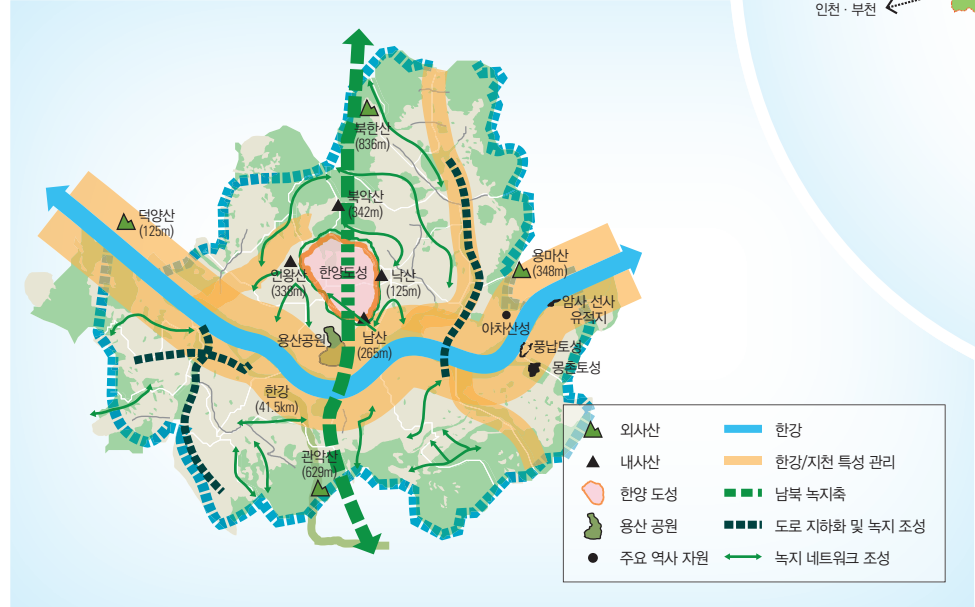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공간 구조 계획



녹지축 구상



광역 교통축



생활권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적절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광역 도시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2013년 3월 현재 총 11개 권역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재정 등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 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 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신도시 분포



일산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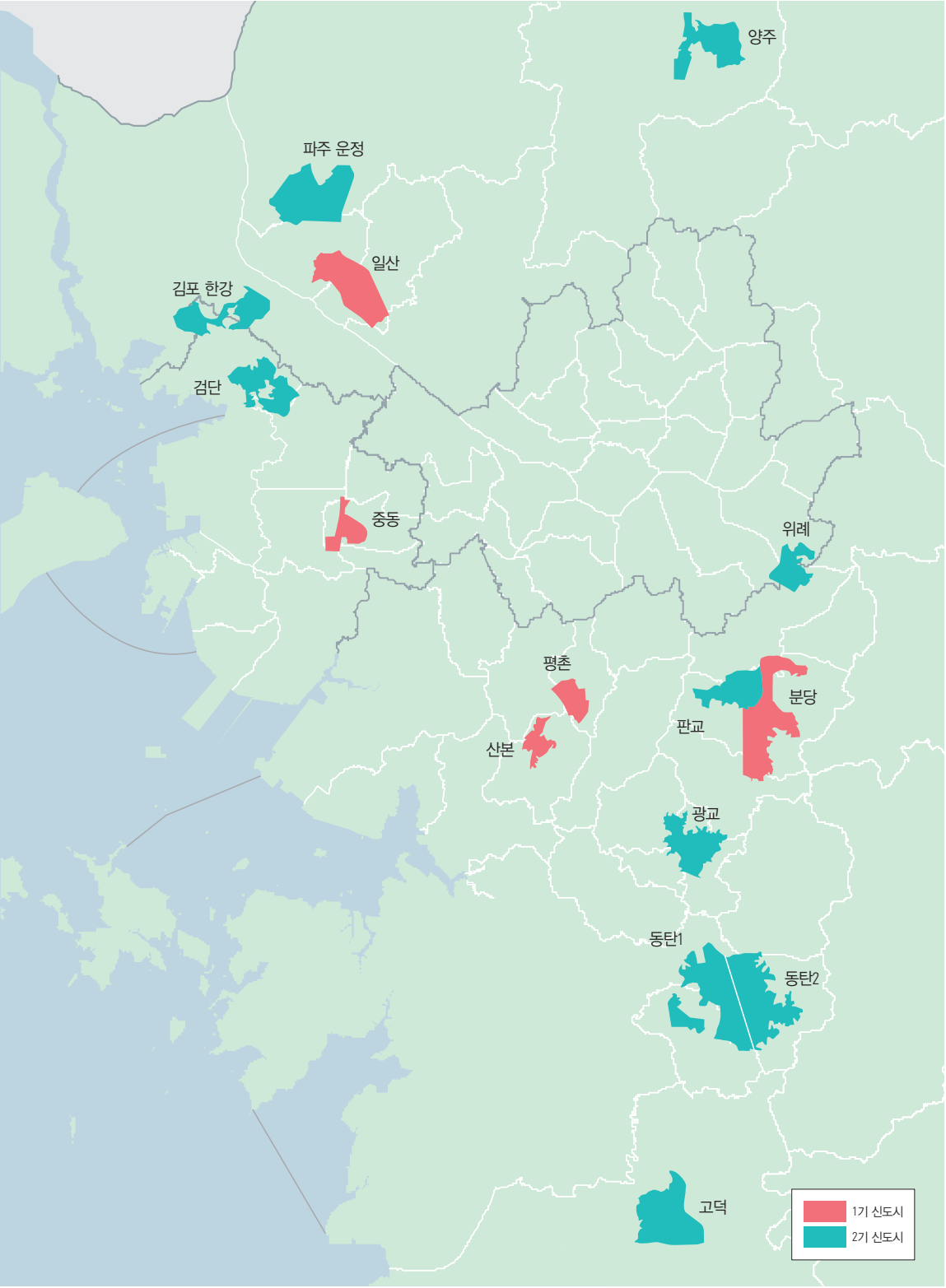
중동



평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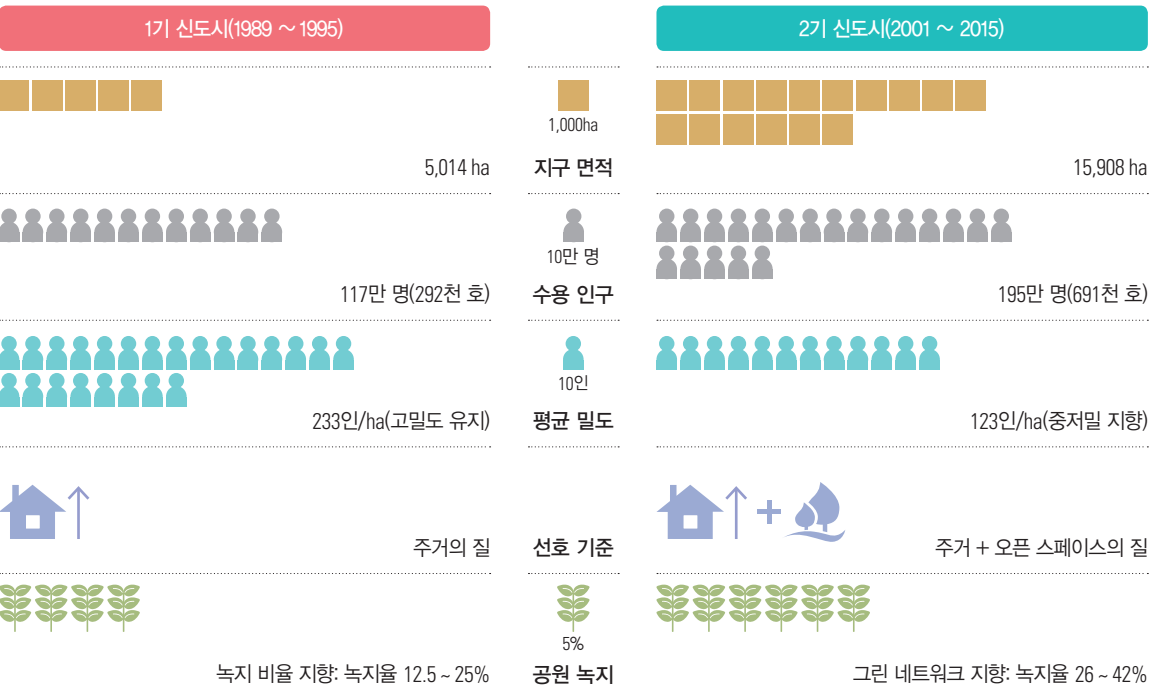


산본



국토교통부(2014)

1, 2기 신도시 비교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의 첫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둘째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신도시 개발을 보면,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및 경제 개발 정책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 신시가지(인구 15만 명)이며, 여타 개발 사례에는 광주 대단지(성남), 영동 지구 및 여의도 등이 포함된다.

1970년대 신도시 개발의 특징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임해 지역에 산업 기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인데, 신공업 도시인 창원(인구 30만 명) 계획 때 신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개발 사례에는 대덕 연구 학원 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 도시, 구미 공단 배후 도시, 서울 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이 포함된다.

1980년대에는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 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Newtown in Town)가 건설되었고, 특히 서울의 인구 분산 및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즉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아울러 대전 둔산 및 계룡 지구 등 일부 행정 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도 건설되었는데, 신도시 개발 수법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이 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신도시의 일시 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



판교



김포 한강



동탄



파주 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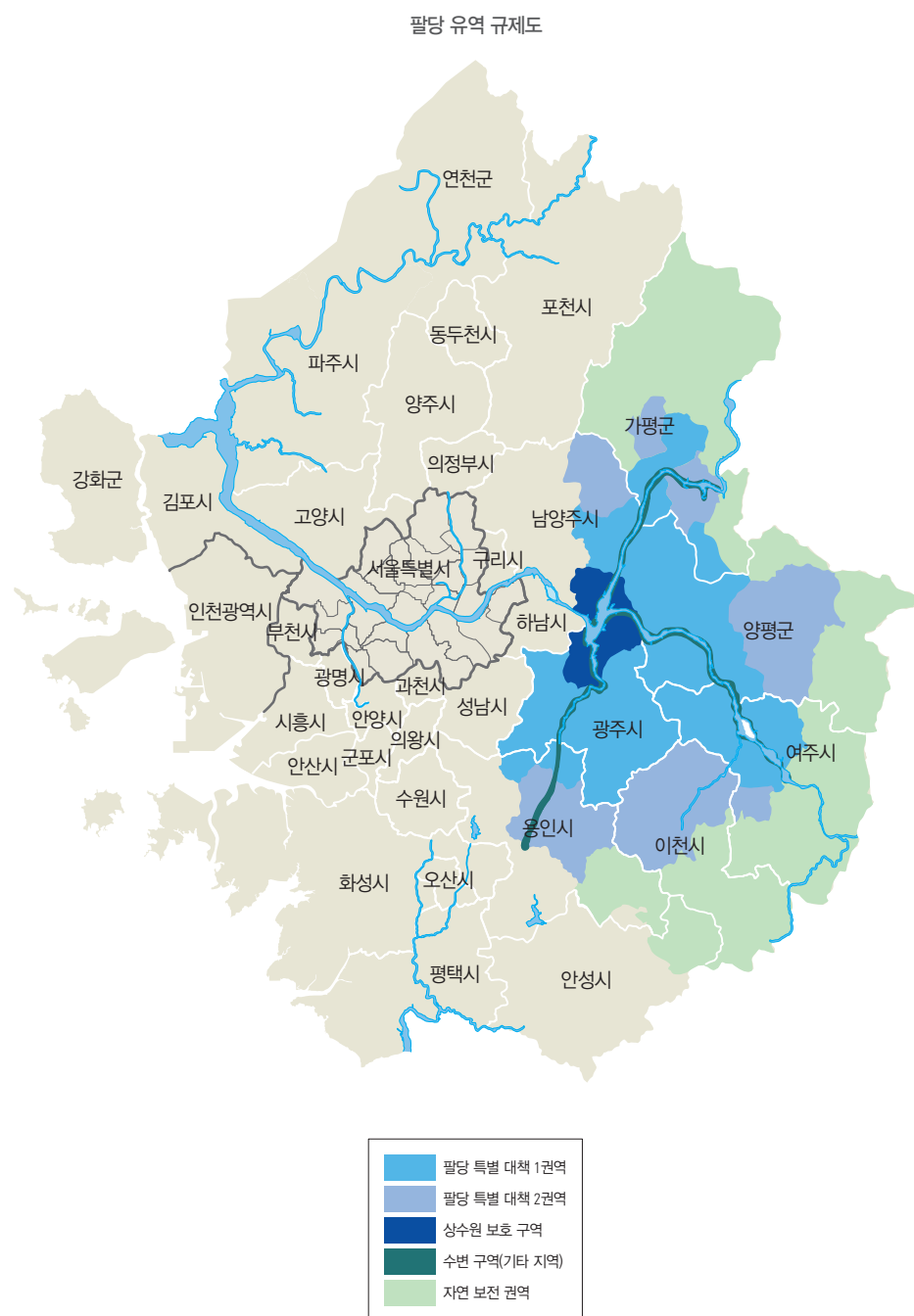


위례

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였다. 그러나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Development without Planning)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신도시 개발은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 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발 사례에는 판교, 동탄(1,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대전 도안 등 제2기 신도시가 포함된다.

수도권 규제 현황



경기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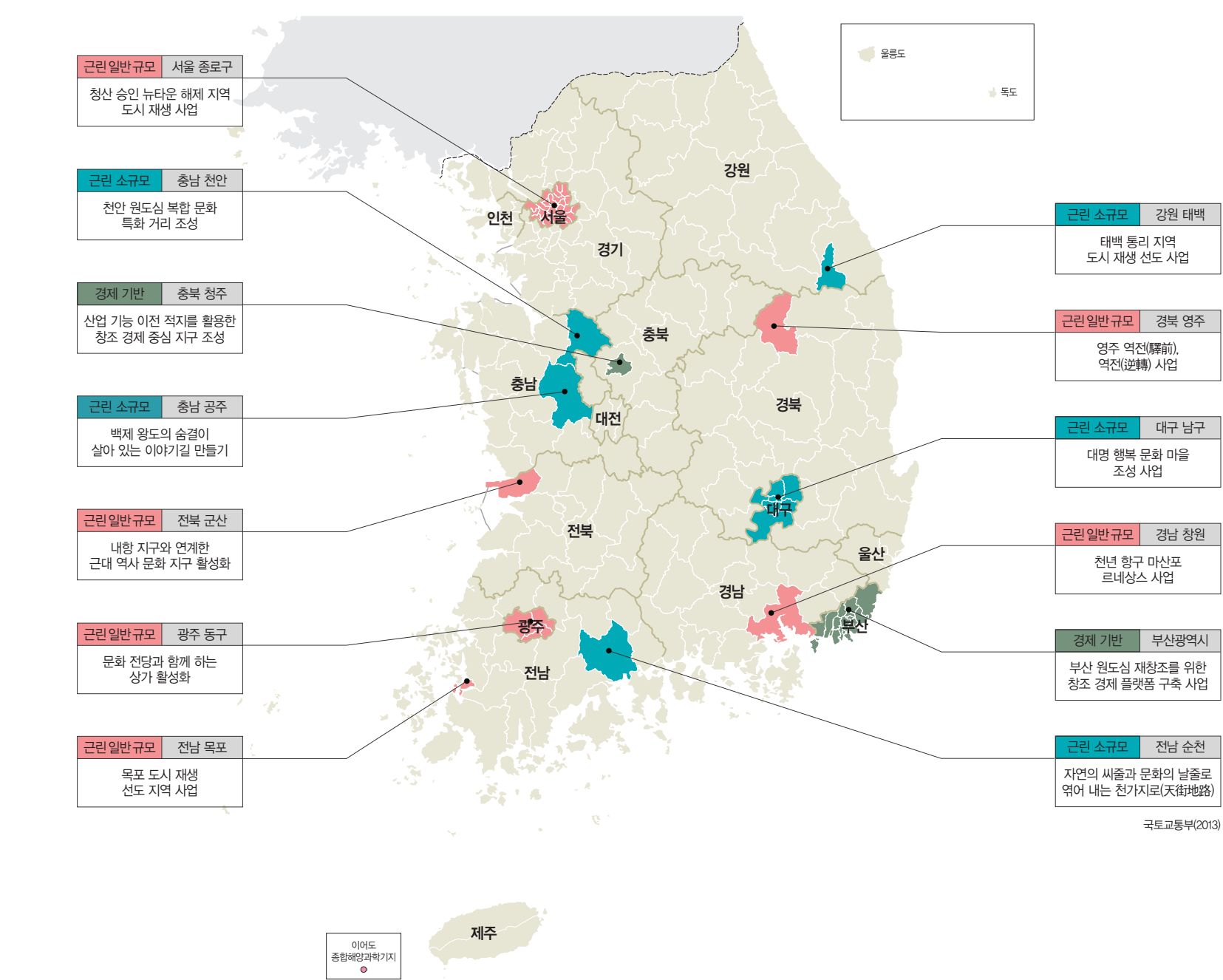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내용으로는 대기

업 신·증설 금지(자연 보전 권역),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 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 입지 규제 등이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 수도권 및 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수질 보전 관련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수변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등과 함께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질 보전 관련 규제 지역의 경우 자연 보전 권역과 중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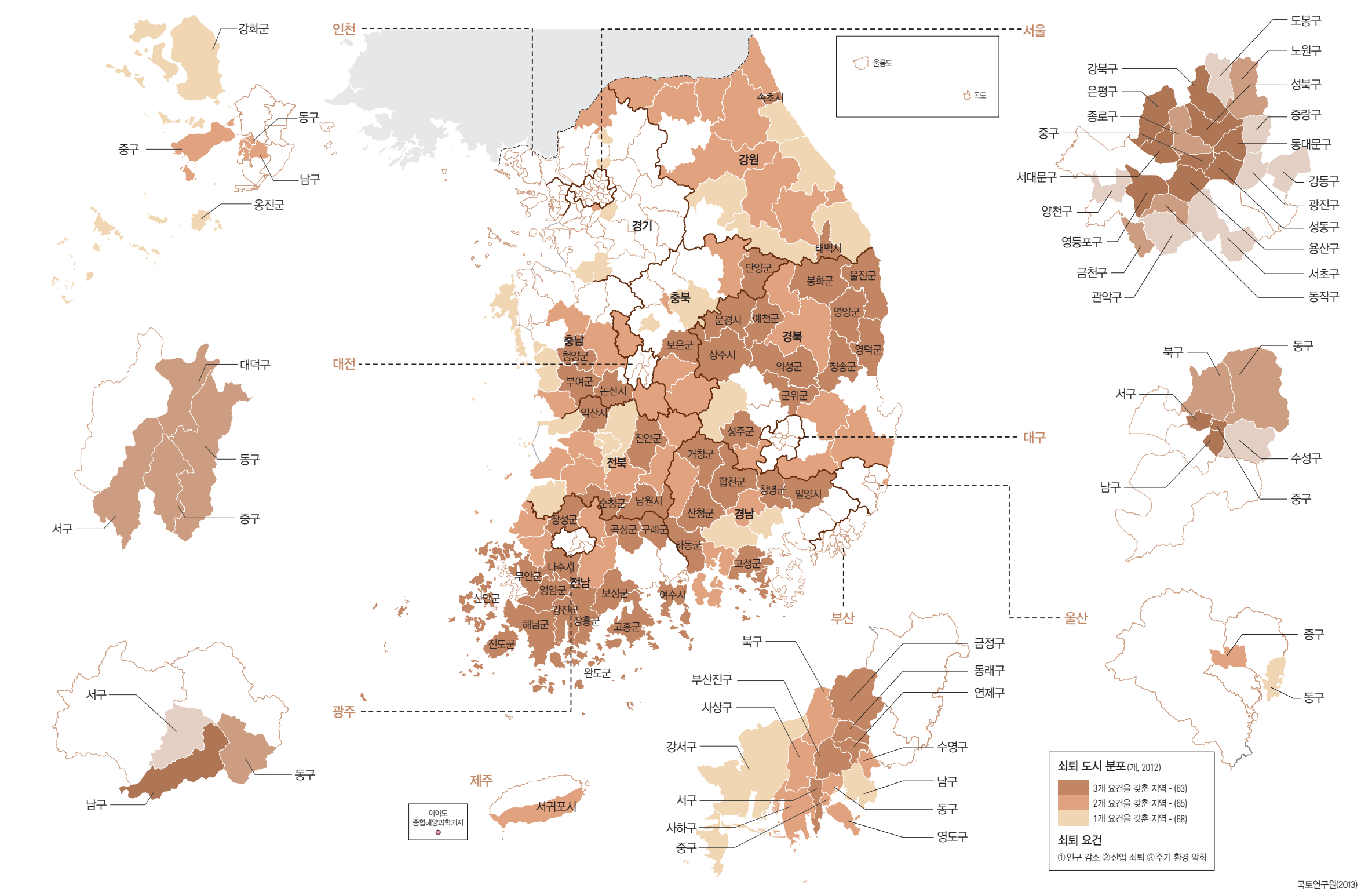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13곳을 지정하였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 경제 기반형 선도 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 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 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전국의 228개 시·군·구를 진단체 ①인구 감소, ②산업 쇠퇴, ③주거 환경 악화 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도시 쇠퇴 진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①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 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 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며, ②산업 쇠퇴 지역은 10년 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 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③주거 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도시 재생 대상 지역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이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그 물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일체의 목적,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 내 공공 부문,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면서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의 하위 공간 단위로서 시·도 등 광역 자치 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 자치 단체 등 행정 구역 단위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 및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광역 경제권, 지역 행복 생활권 등의 시책들이 도입되면서 보다 기능 중심의 지역 범위가 고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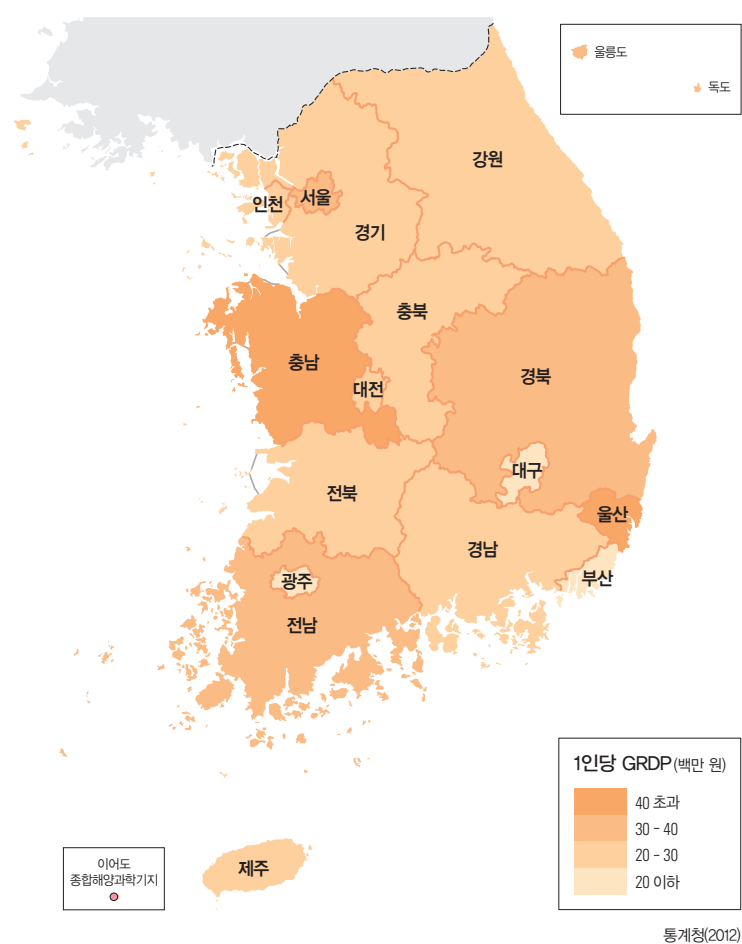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 경제 하에서 구조적 역동성과 부존 자원 등 여건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발전 정도의 공간적 차이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부,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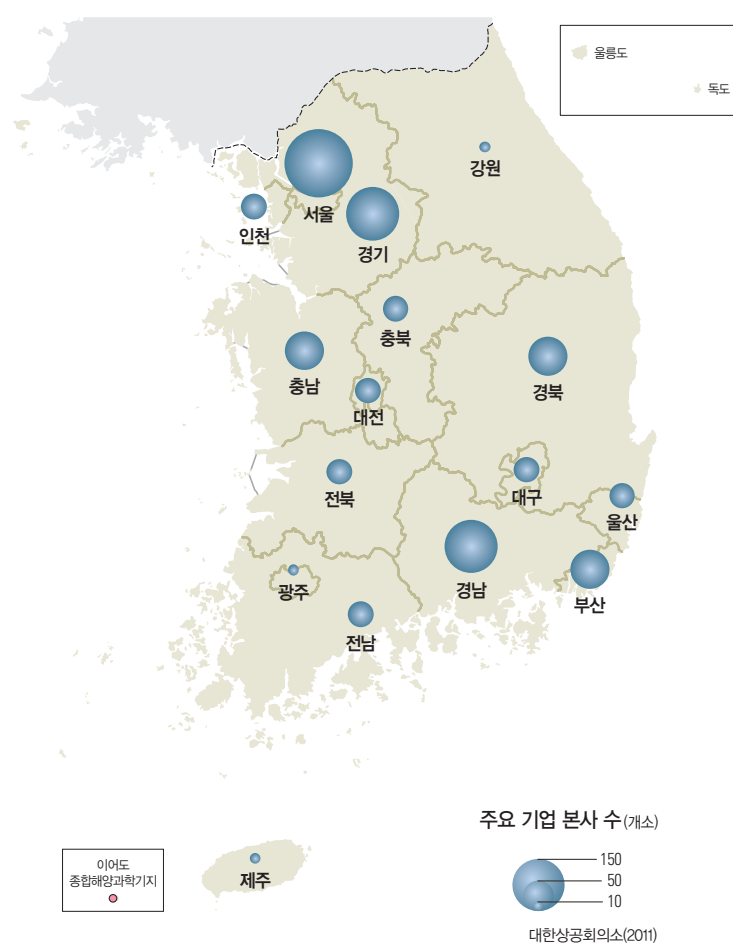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도 오랜 기간 동안 낙후 지역 문제의 해소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물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력 및 삶의 질의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낙후 지역 발전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초기 기업 이전과 경제 성장 기반 확충 등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점차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과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 지방, 도시 대 농촌으로 구분되는 공간적 격차 구조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 지역 간 경쟁 심화, 지방 자치의 심화와 주민의 발전 욕구 분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도 뚜렷해짐에 따라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 정책의 모색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지역 발전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정주 여건 개선,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 등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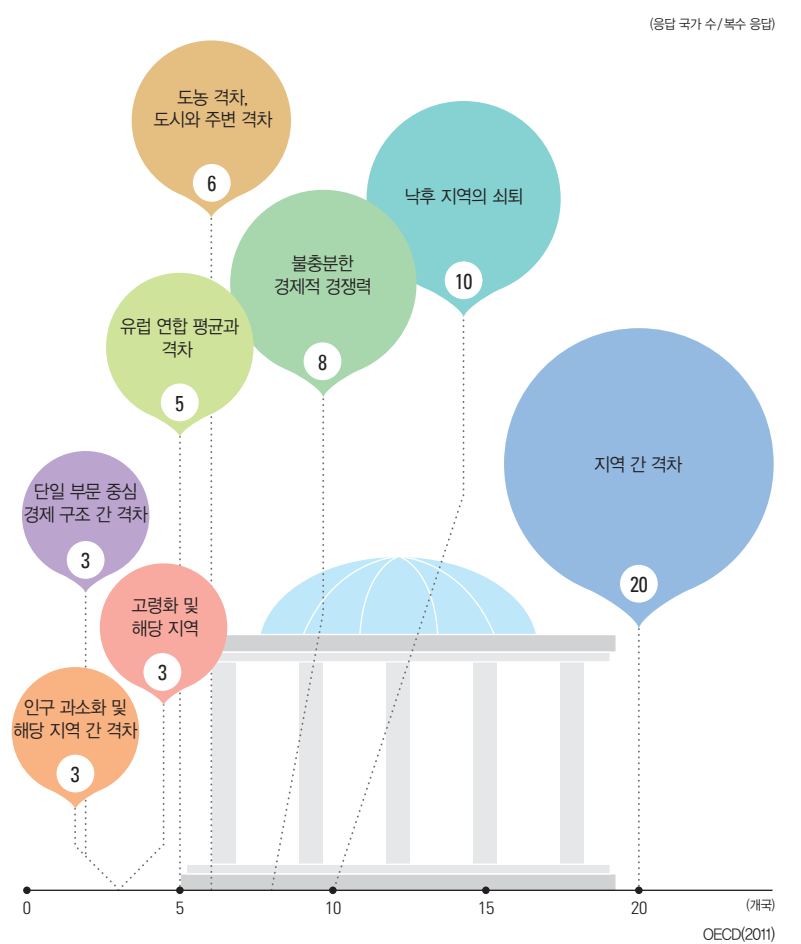
1인당 GRDP



주요 기업 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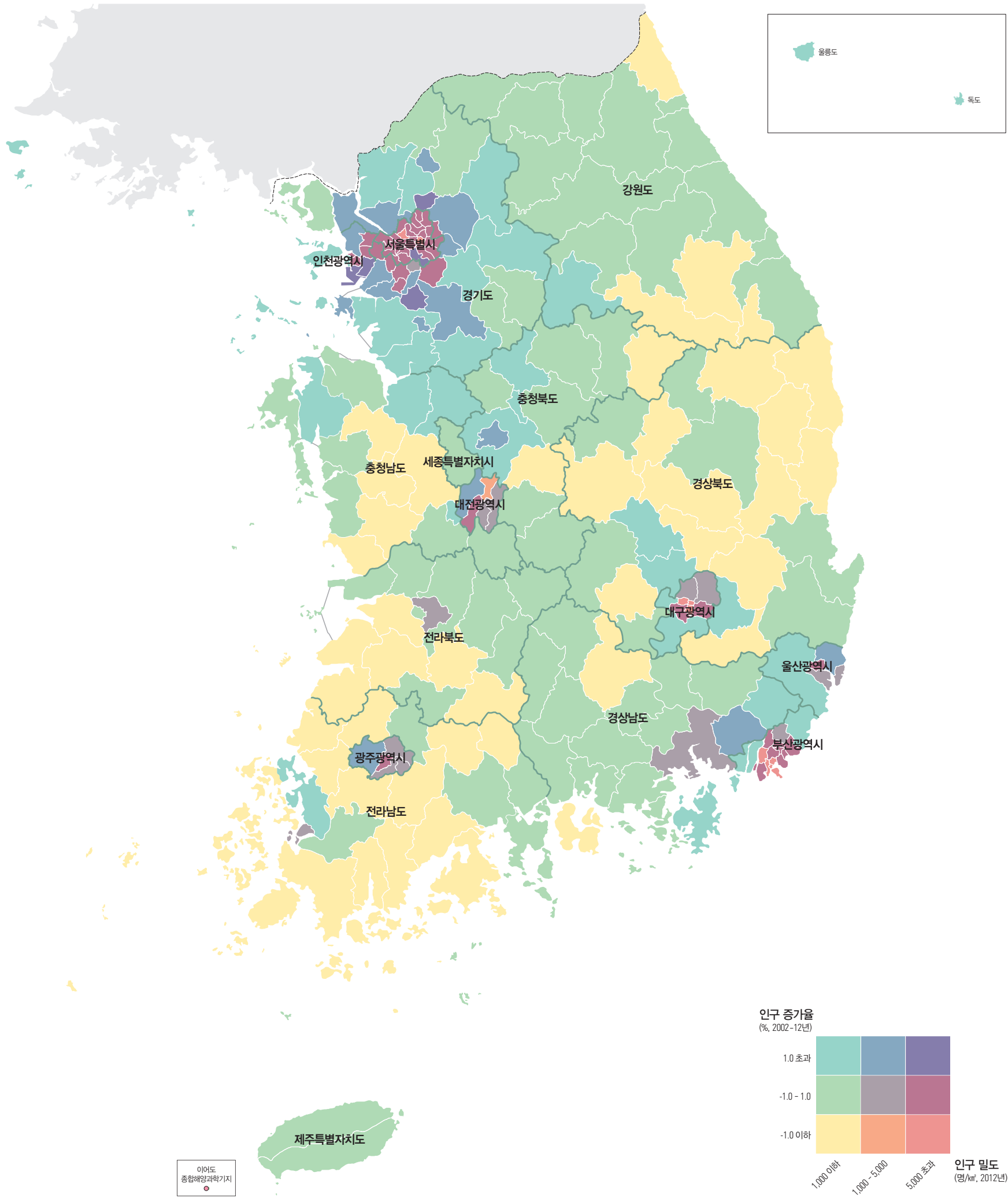


OECD 중앙 정부의 지역 문제 인식



지역 발전 현황 및 정책 기본 틀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실태: 인구 측면



우리나라 지역 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 발전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 법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 기술 진흥, 지역 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지역의 복지 및 보건 의료의 확충 등과 함께 낙후 지역을 위한 성장 촉진 지역 등의 개발, 공공 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제반 지역 발전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발전 특별 회계는 2014년 생활 기반 재정, 경제 발전 재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 새로이 구분되면서,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영된 지역 발전의 의미는 이전과 달리 주민·지방자치단체·중앙 정부의 동반자적 협업 관계 속에서 주민 실생활에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사회 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도록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으로 정책 주안점이 옮겨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발전의 공간적 패턴은 매우 불균등하다.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도시 대 농촌 등의 구조적인 지역 격차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더욱 중시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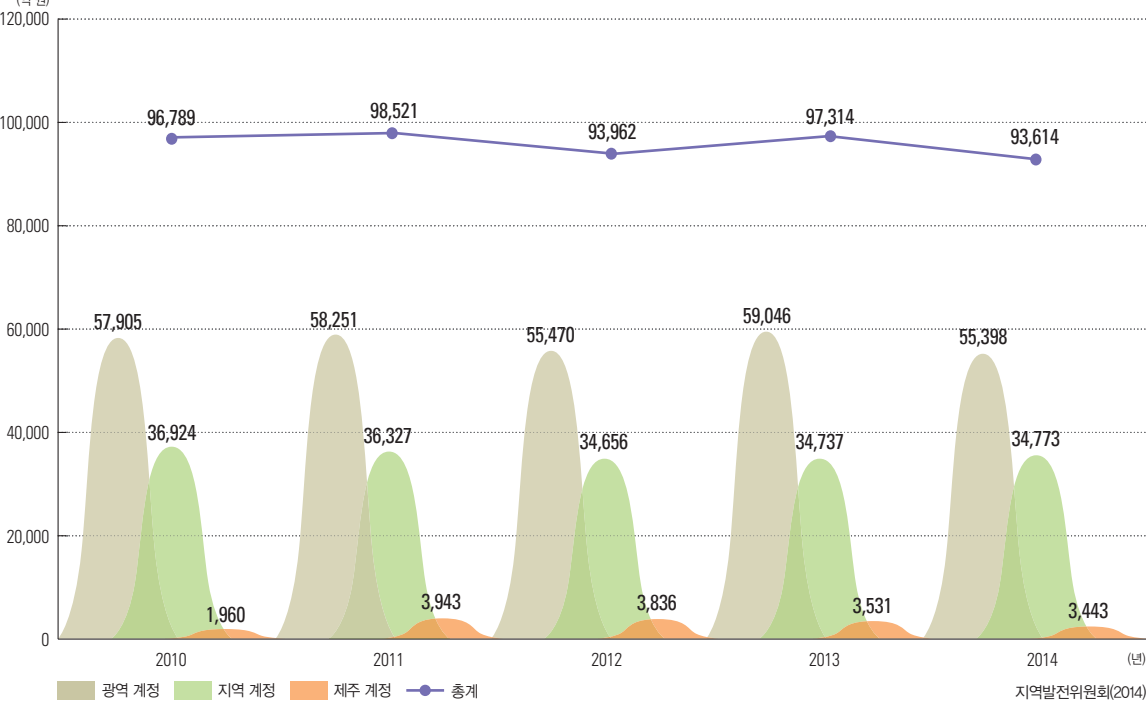
2005년 도입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행복 생활권 등 기초 단위 역량 강화, 마을 단위 사업 수요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의 명칭도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의 지역 개발 계정은 '생활 기반 재정'으로, 광역 계정은 '경제 발전 재정'으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신설되었다.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 이후 지역 발전 예산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편성 절차도 지역 주도 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행복 생활권 추진과 관련된 시·군·구 의견 및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포괄 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문화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OECD 지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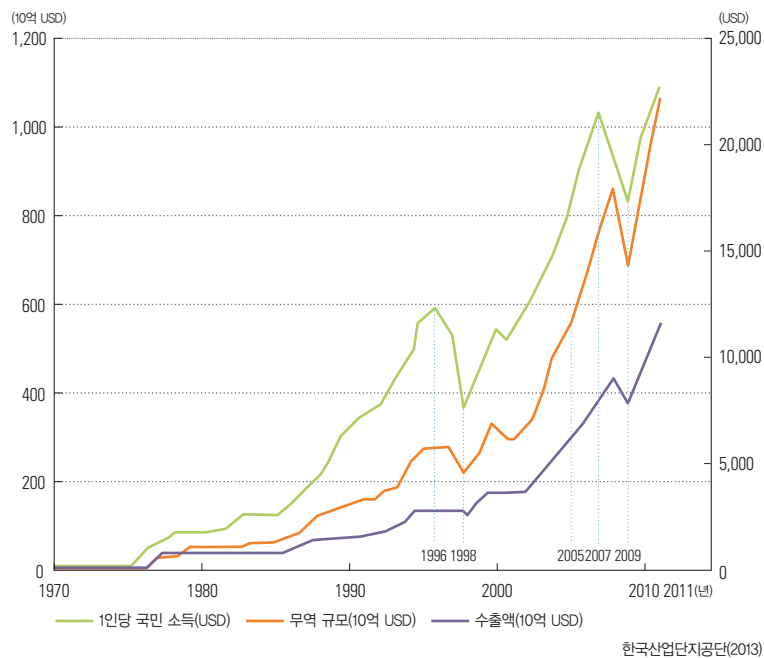
	기존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문제 인식	소득, 기반 시설, 고용 면에서 지역 간 격차	지역 경쟁력의 결여, 지역 잠재력의 저활용
목표	균형적 지역 개발을 통한 형평성	경쟁력과 형평성
정책들	낙후 지역의 입지 불이익에 대한 일시적 보상, 외부 충격 대응(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	지역 프로그램을 통한 저활용 지역 잠재력을 활용(잠재력을 위한 사전 대응)
정책 수단	보조금과 지원금(중종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연성 및 경쟁 자본의 혼합 투자(비즈니스 환경, 노동 시장, 기반 시설)
정책 주체	중앙 정부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공공, 민간 및 NGOs)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 변화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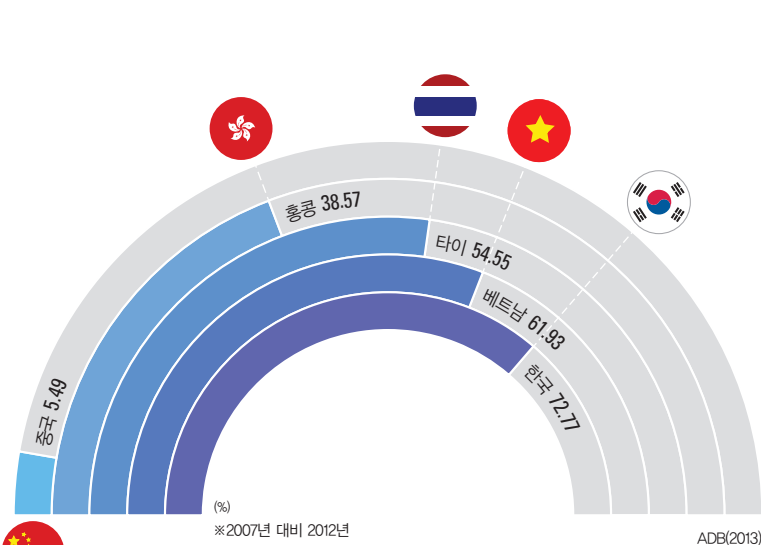


지역 발전 정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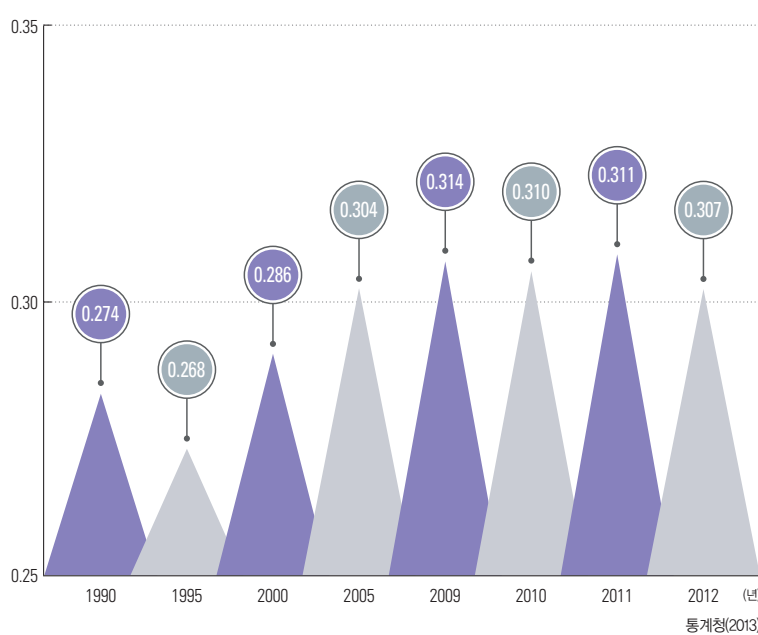
경제 성장 추이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한국의 지니 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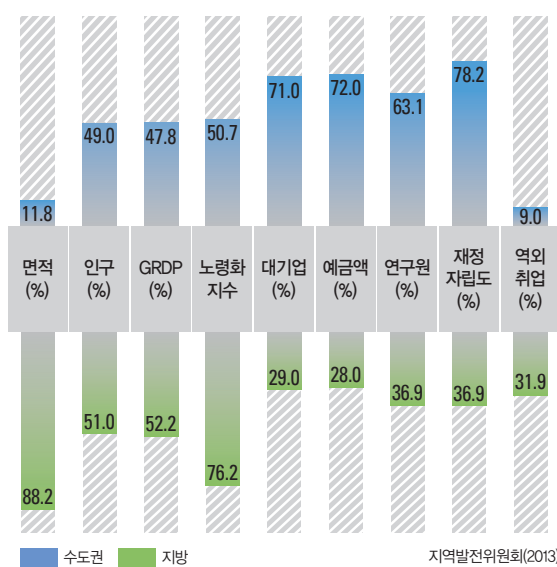
근대화 50년 동안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뚜렷한 명암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285배, 수출 규모는 16,600배 증가하였고,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세계를 열광시키는 한류 등을 통한 국가 브랜드의 향상 등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혼율과 자살률이 각각 OECD 국가 중 7위와 1위를 차지하고, 국민 행복 지수도 세계 148개 국가 중 9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세대·소득 계층·지역 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어 사회 갈등 지수도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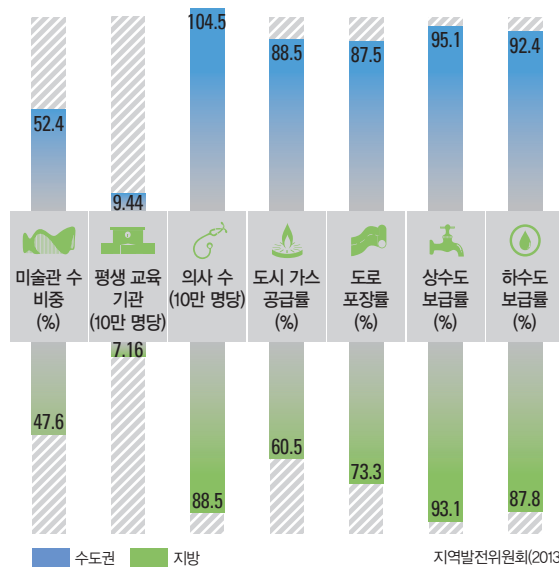
쇠퇴하고 있으며,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감소 → 활력 저하 →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상향식, 분권식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도 이제는 주민 생활 체감형 정책, 현장과 밀착된 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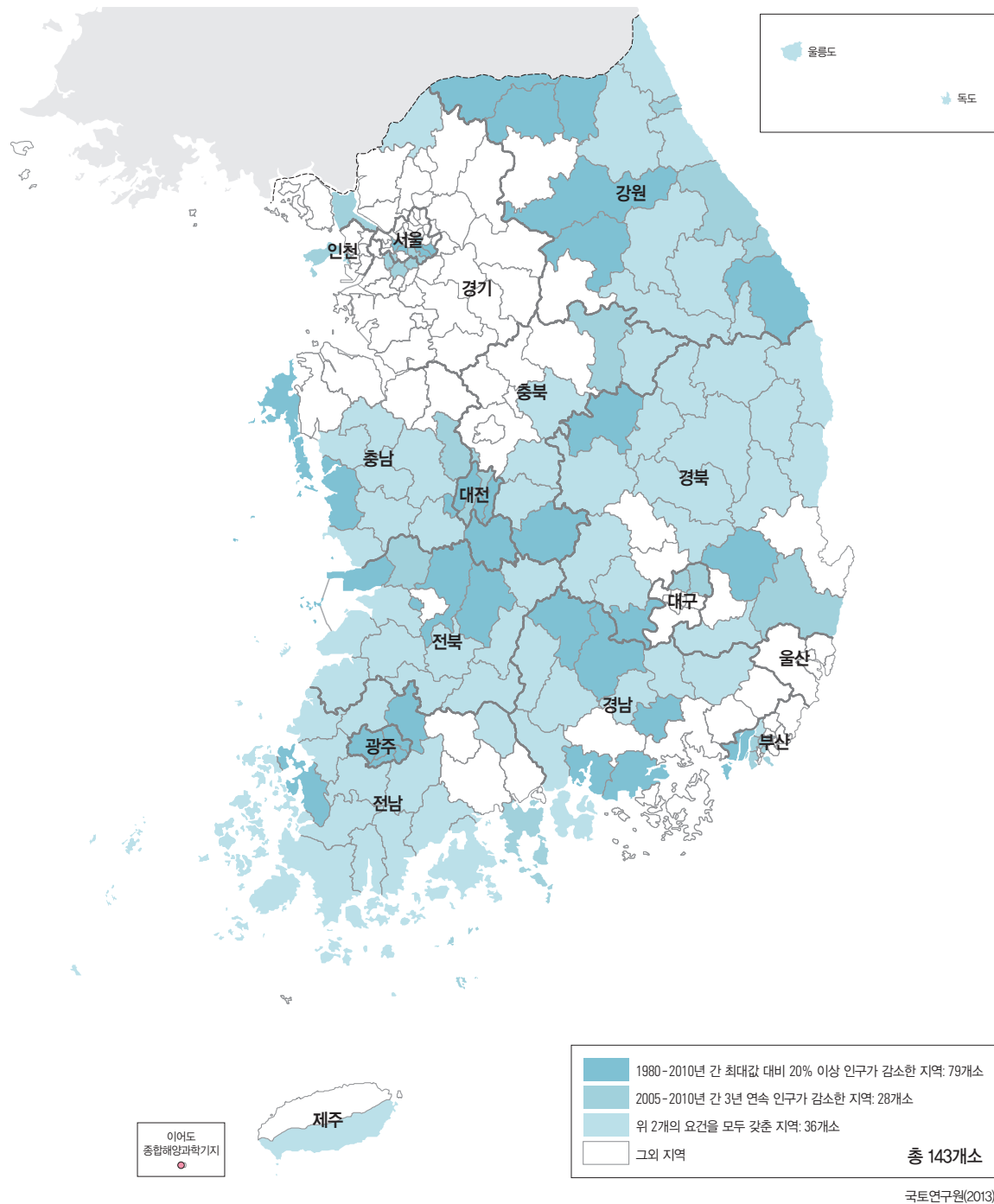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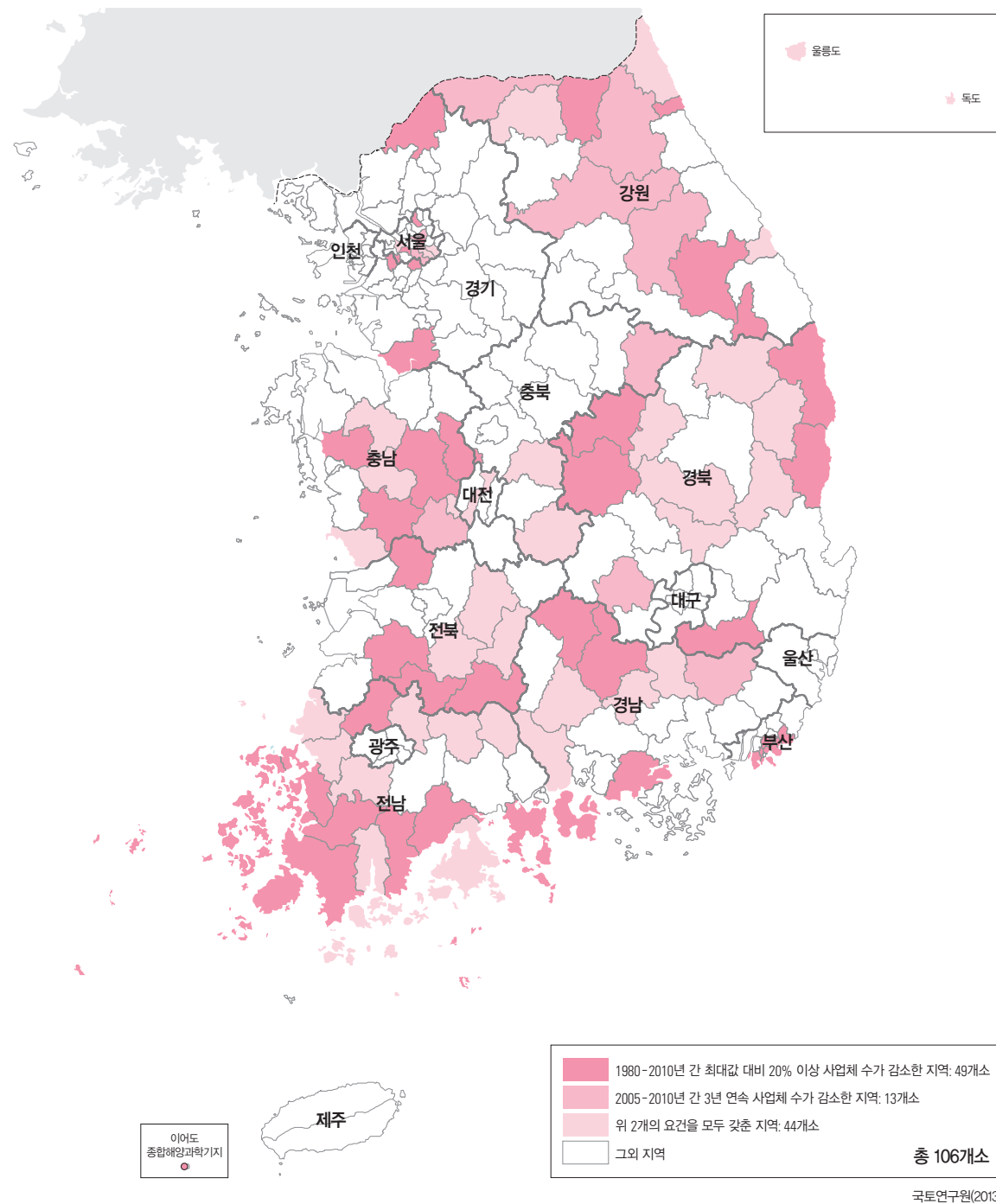
인구 감소 지역

143개 지역(62%)



사업체 수 감소 지역

106개 지역(46%)



지역 발전 정책의 변화

참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의 한계로 인한 국민 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고착 등을 주요한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정책의 목표를 '다핵형·창조형 선진 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더 나아가 혁신 주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 등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참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혁신 정책, 균형 정책, 산업 정책, 공간 정책, 질적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참여 정부의 혁신 정책, 산업 정책, 균형 정책, 분산 정책은 주로 시·도와 시·군·구 등 기존 행정 구역 공간 단위로 추진되었다.

참여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균형 발전 정책이란 핵심 국정 과제로 지역 정책의 위상 격상,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비수도권 내 성장 지표 개선 등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의 체감도 미흡, 소규모 분산 투자, 유사 중복 사업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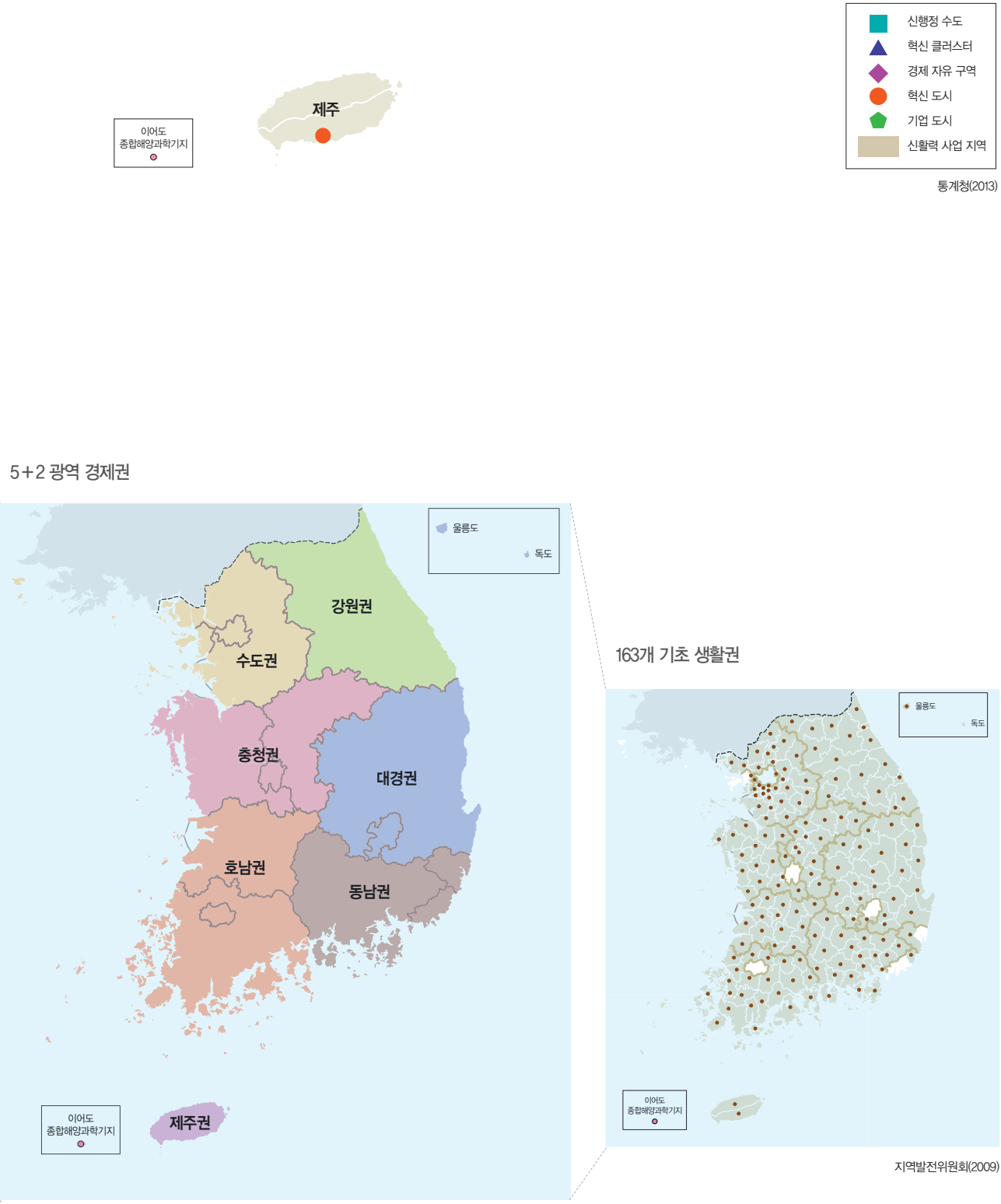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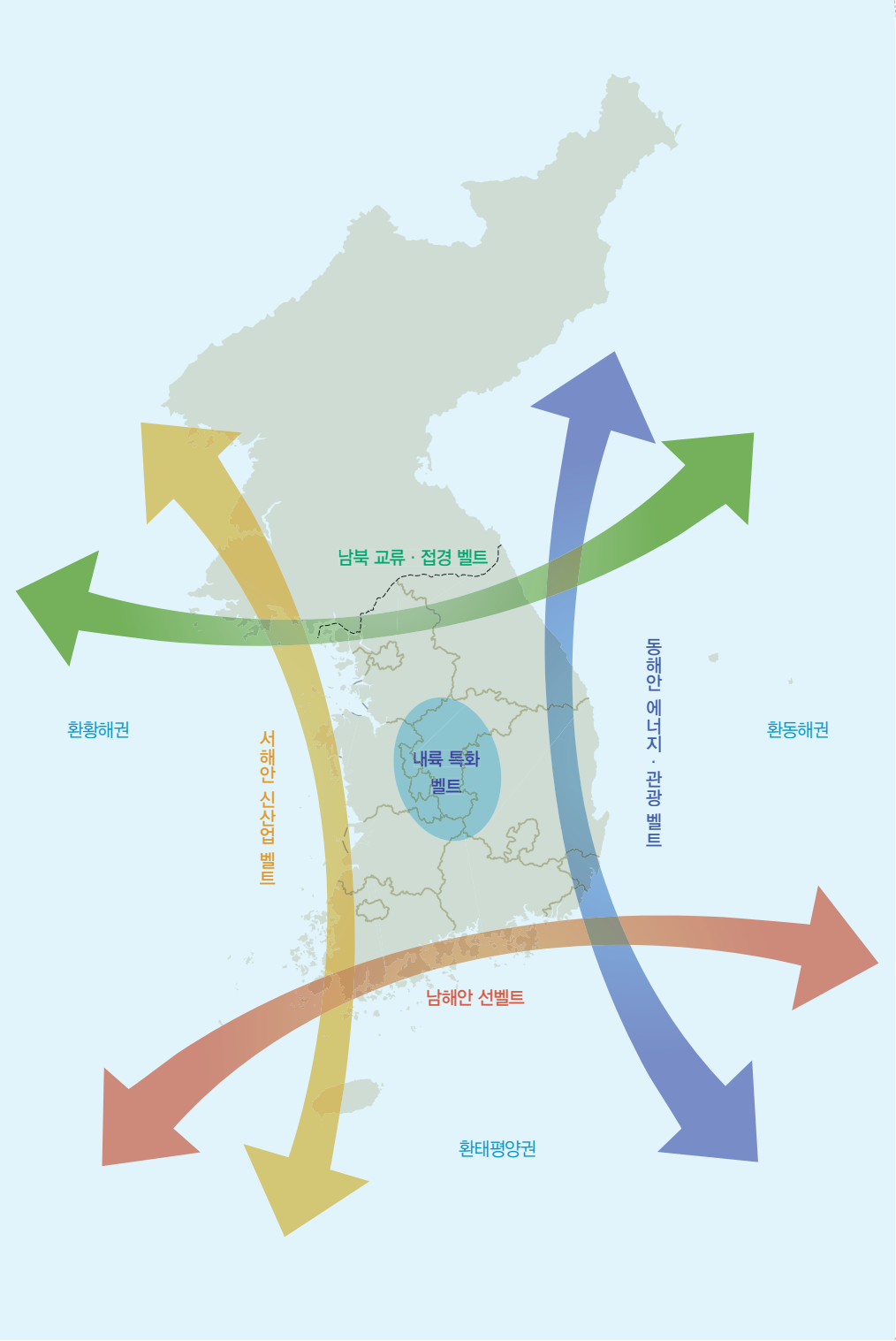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행정 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 투자와 특화 발전 취약, 지역 주도의 발전 역량 미흡, 지역 간 소모적 경쟁과 갈등 등을 핵심

적 지역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 개성을 살린 특화 발전, 지방 분권·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역 간 협력과 동반 발전을 하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기존 지역 발전 시책의 발전·보완을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실행적 정책 수단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와 광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광역 시·도를 5+2, 7개의 광역 경제권에 포함하여 광역 경제권 단위에서 선도 산업, 인재 양성 사업, 30대 SOC 사업을 전개하였고, 4+3, 7개의 초광역 개발권 벨트를 통해 광역 경제권 간의 연계 협력, 해외 인접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 정책 성과는 기존 행정 구역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연결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초생활권, 광역 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새로운 지역 정책의 공간 단위 제시, 참여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지방 재정 분권화 촉진 등이다. 반면에 한계점에는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역 정책 지속, 광역 경제권 정책의 성과 창출 한계,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의 성과 미흡 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 정책

5대 초광역 개발권



국토의 변화와 발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지역 발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며(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Everywhere) 하는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 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 행복 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행복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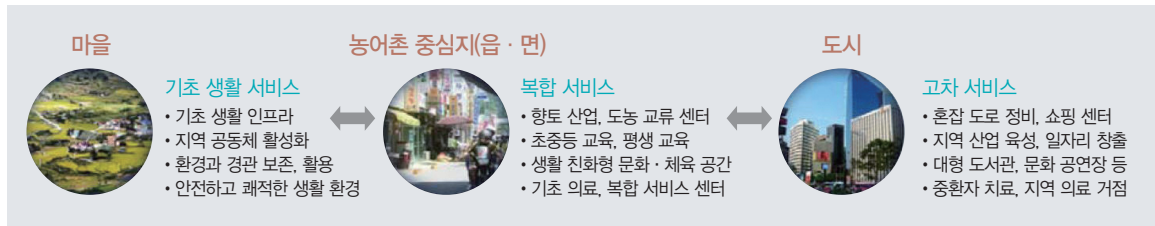
권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고차 서비스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은 지역 주민의 행복과 희망의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론타워 역할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셋째,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은 사업 기획,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의 범위 확대,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 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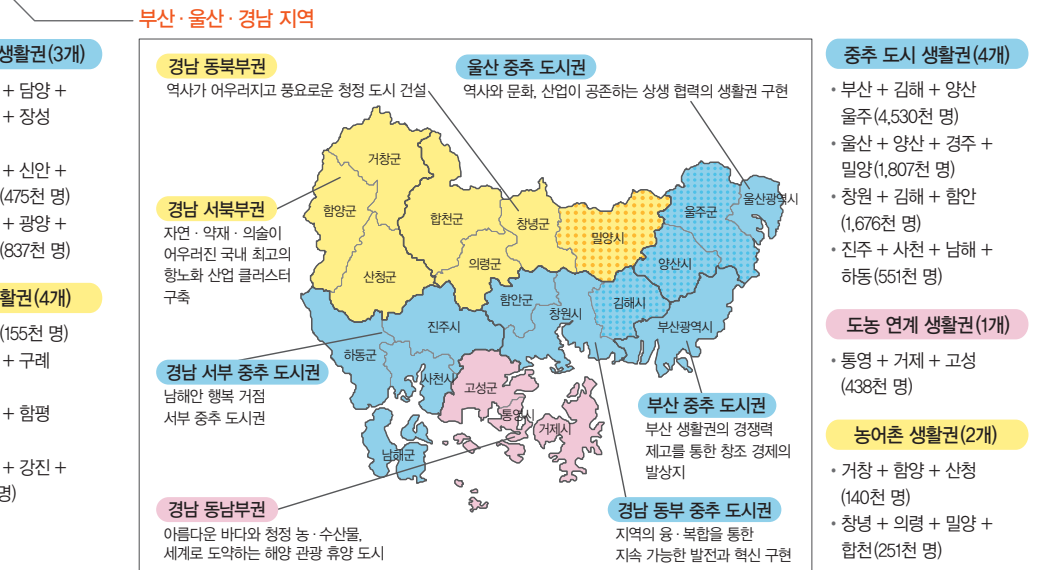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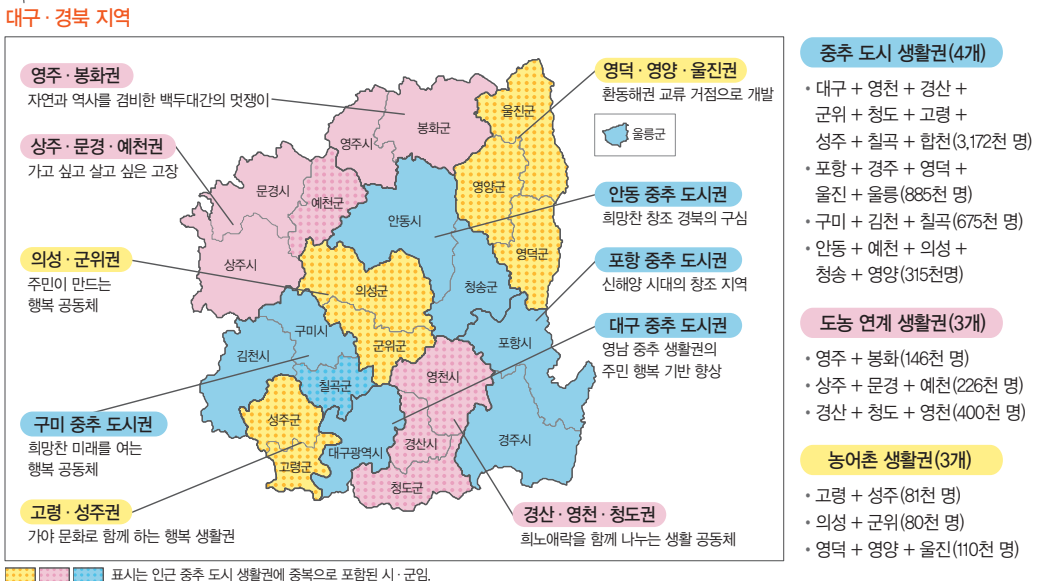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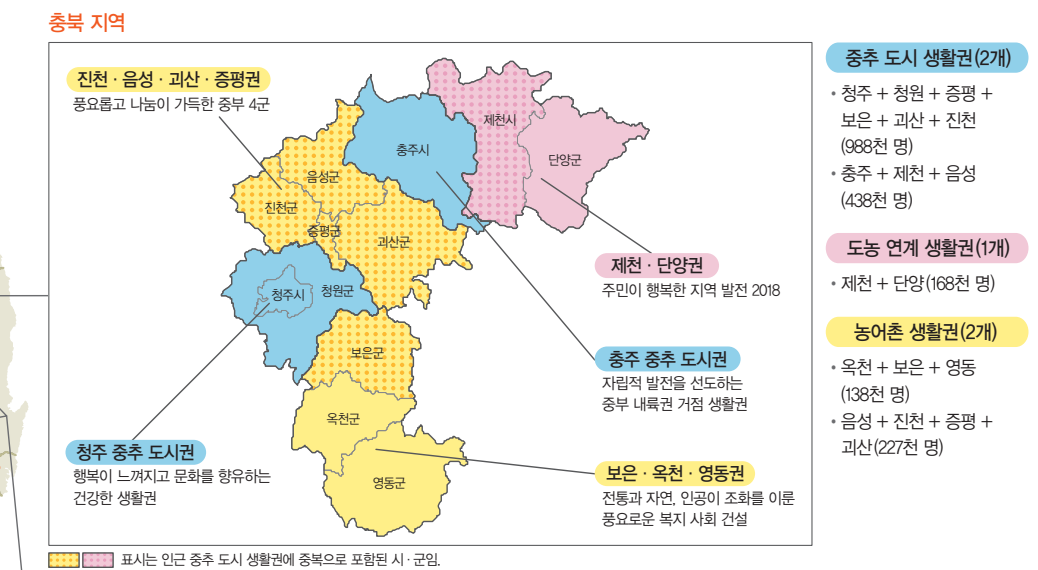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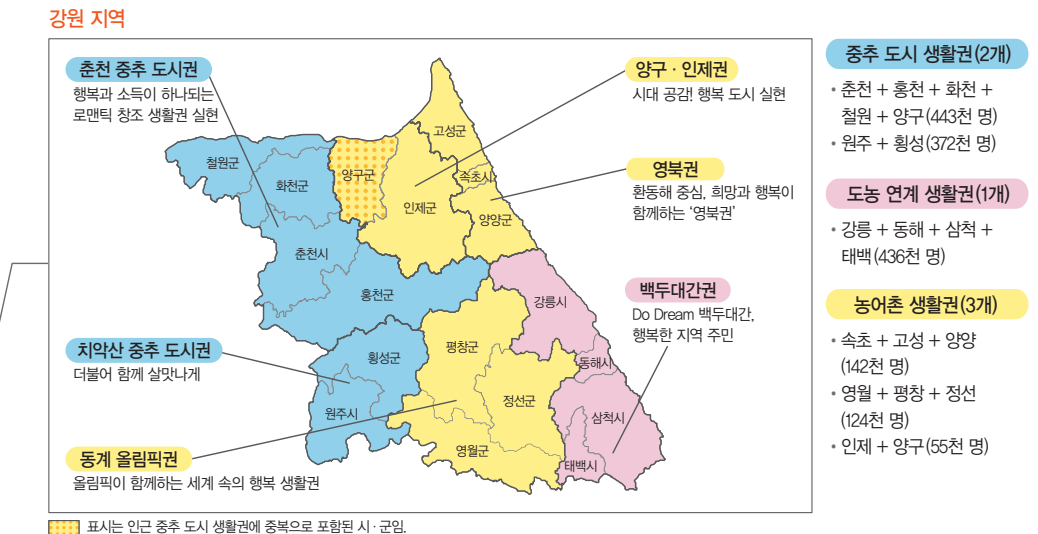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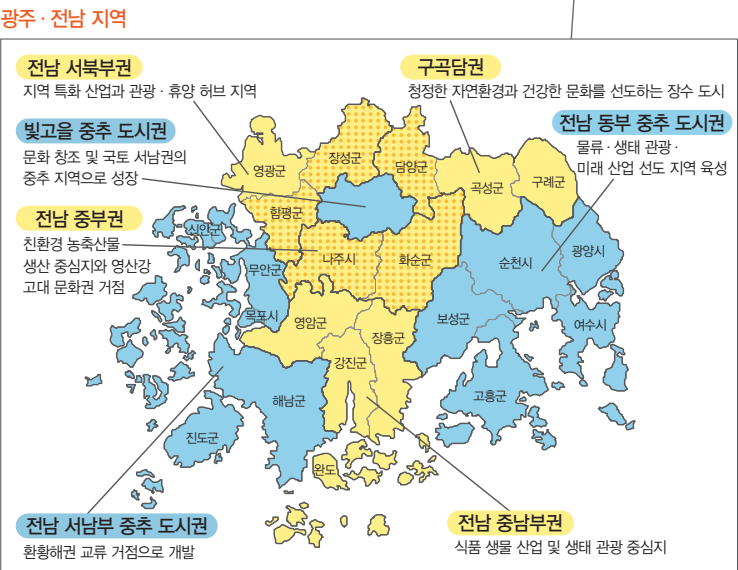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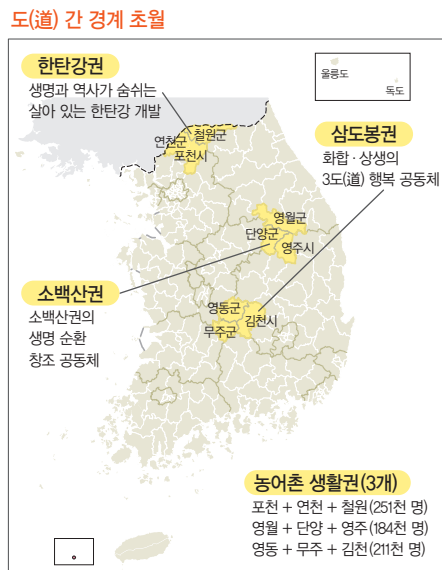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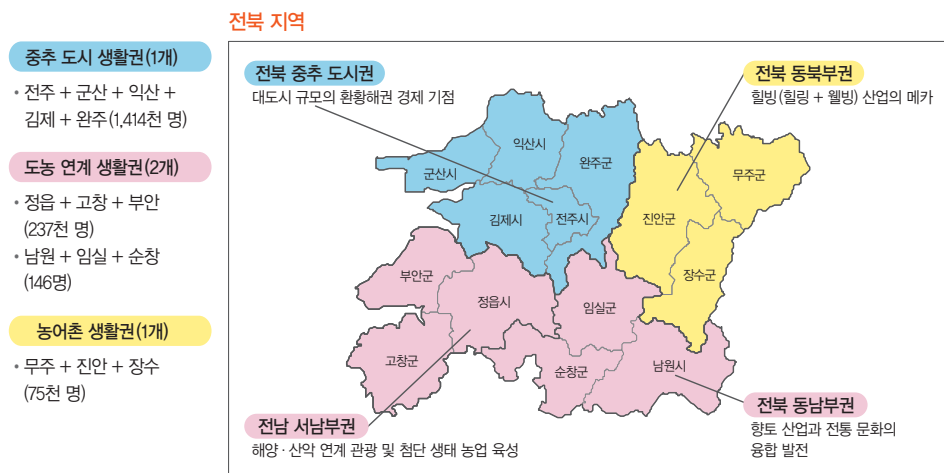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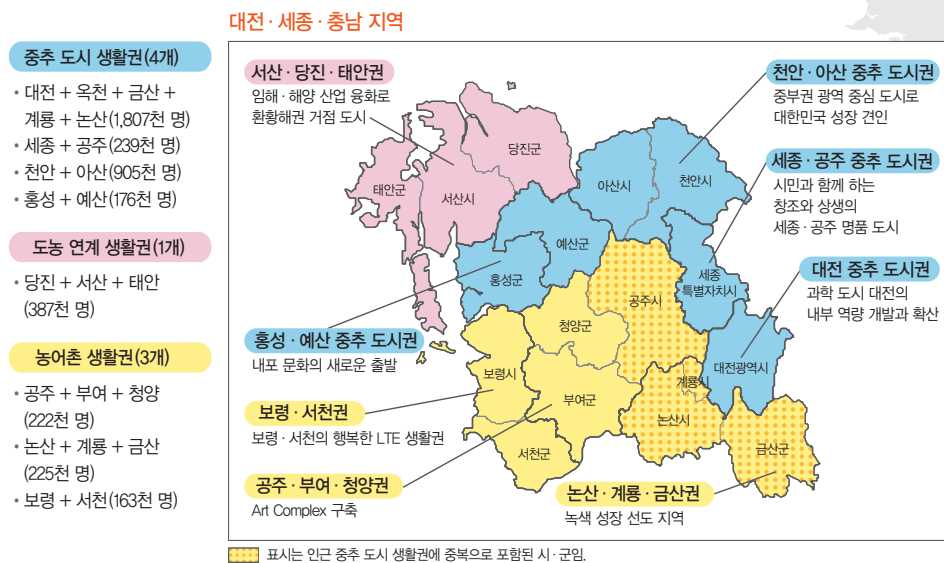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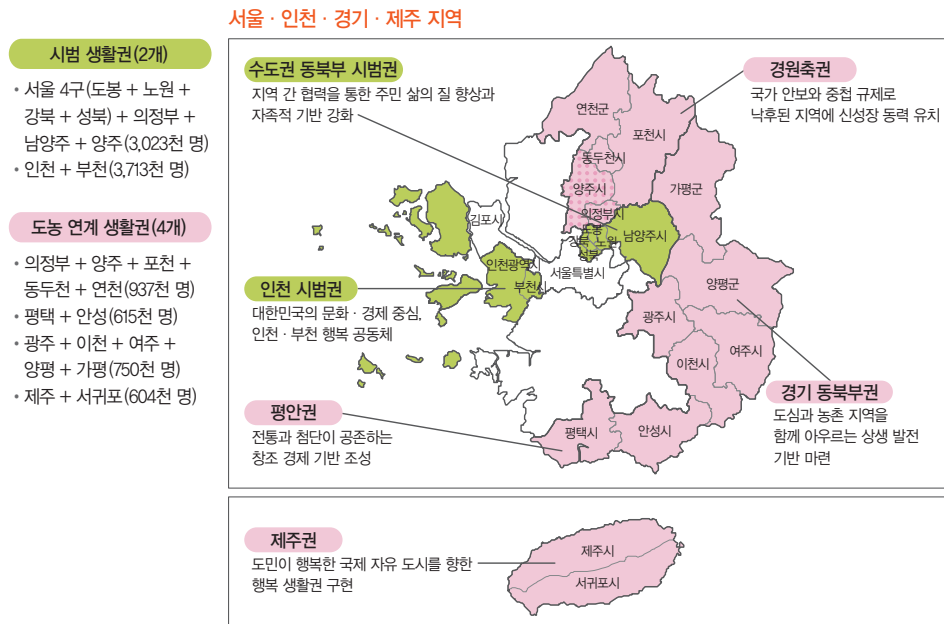
기초 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며, 중심 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배후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 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할 권역이다.

지역 행복 생활권의 개념



지역 행복 생활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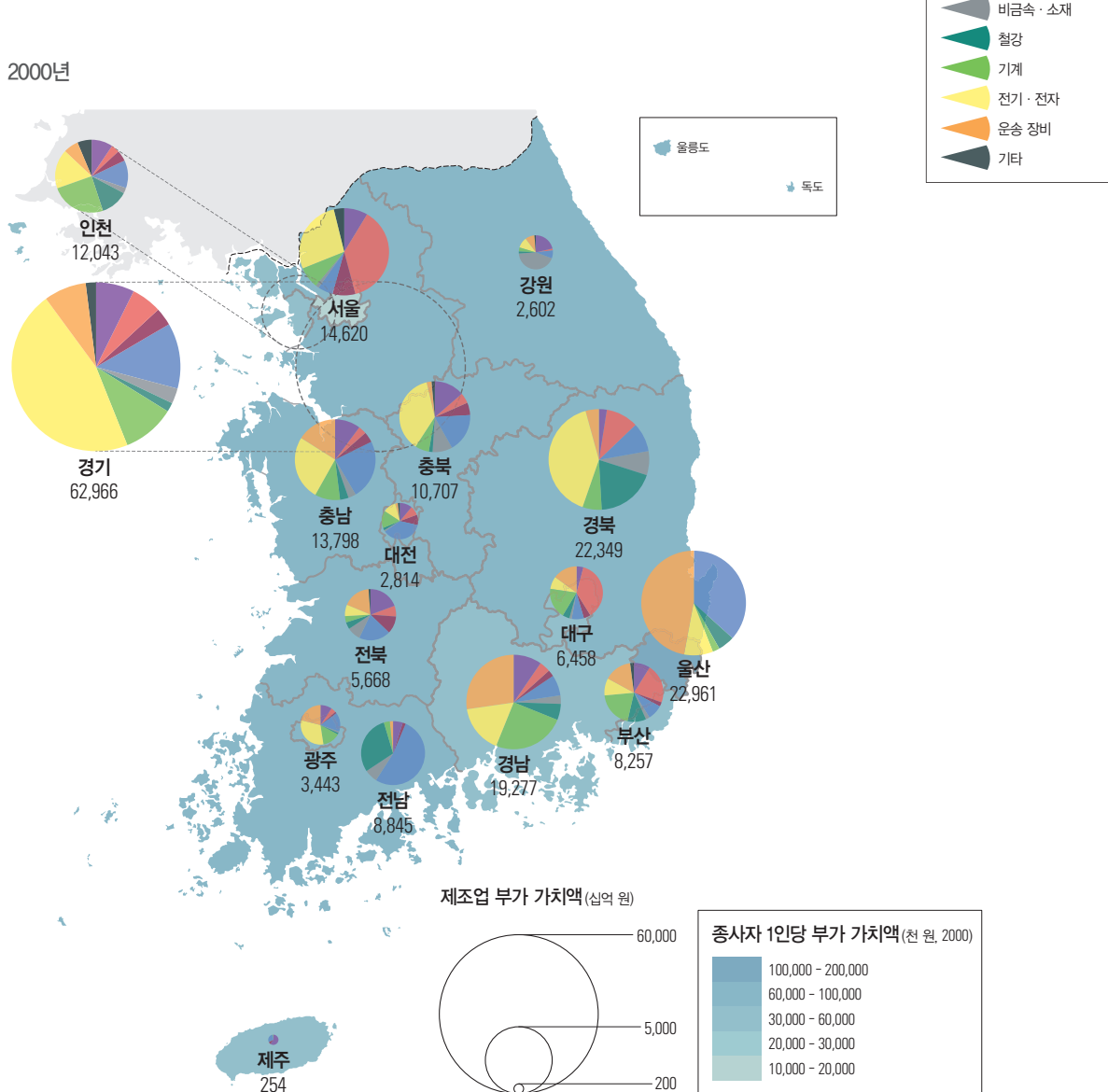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4개 지역 산업 진흥 계획이 추진된 1999년에 지역 산업 육성 정

공간 범위	1999~2002	2003~2007	2008~2012
광역 경제권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2008~2012)
광역시·도	4개 시·도 지역 전략 산업 (1단계 1999~2003, 2단계 2004~2008)		Post 4+9 지역 전략 산업 (2008~2012)
시·군·구	9개 시·도 지역 전략 산업 (2002~2007)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2004~2012)		

산업연구원(2013)

1980, 1982년



인천 5,756

경기 18,101

서울 8,212

강원 735

충남 1,349

충북 2,304

대전 1,070

경북 5,972

대구 2,422

전북 1,349

전남 2,801

광주 898

부산 5,426

경남 12,531

제주 69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1990)

30,000 - 60,000
20,000 - 30,000
10,000 - 20,000

이러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서울 14,086

강원 3,794

인천 19,806

충북 2,376

충남 58,296

경북 51,453

대전 6,821

전북 12,122

광주 8,787

전남 29,334

경남 49,921

대구 9,539

부산 13,601

울산 48,947

제주 429

제주도

통도

제조업 부가 가치액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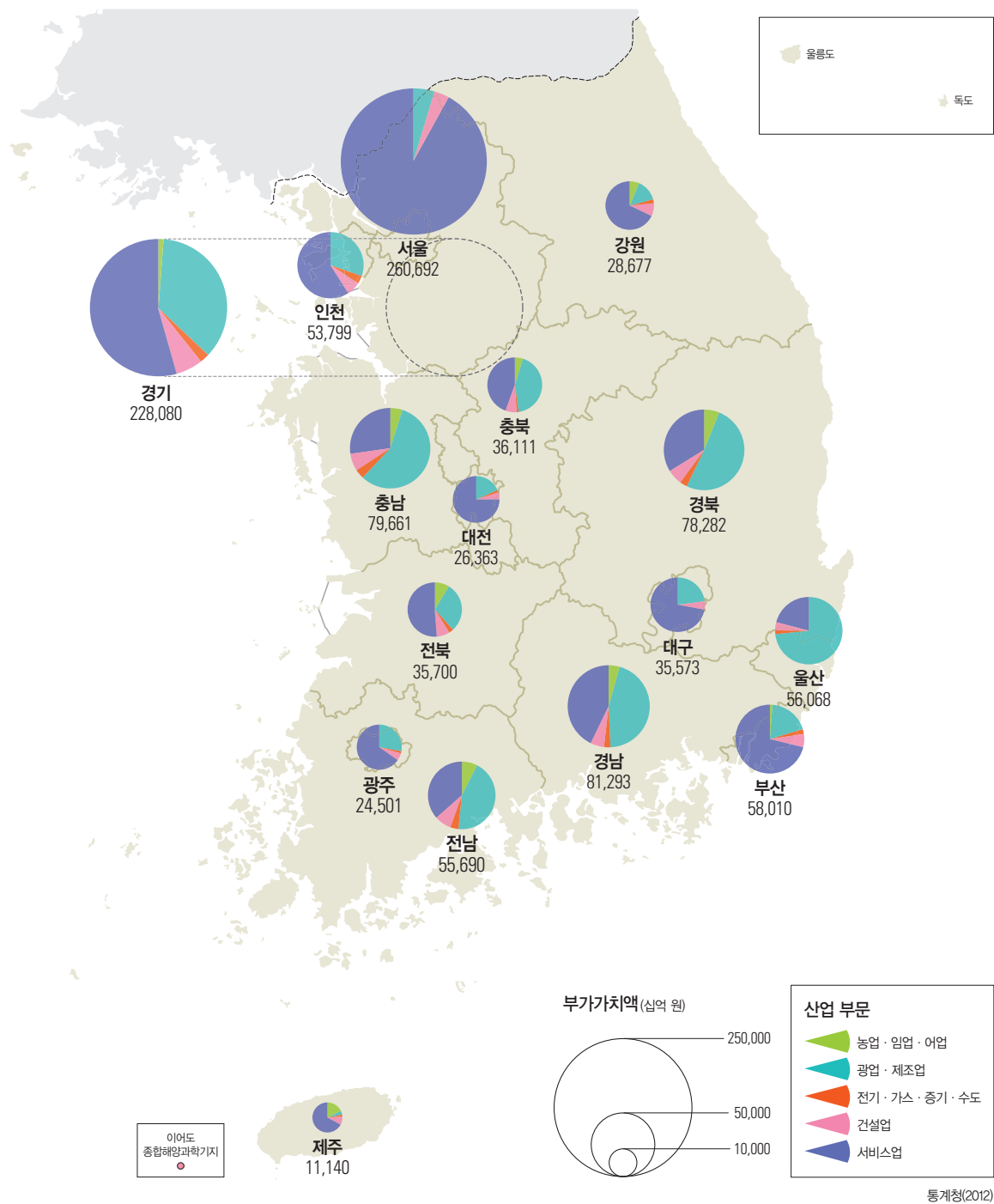
100,000
50,000
2,000

종사자 1인당 부가 가치액
(천 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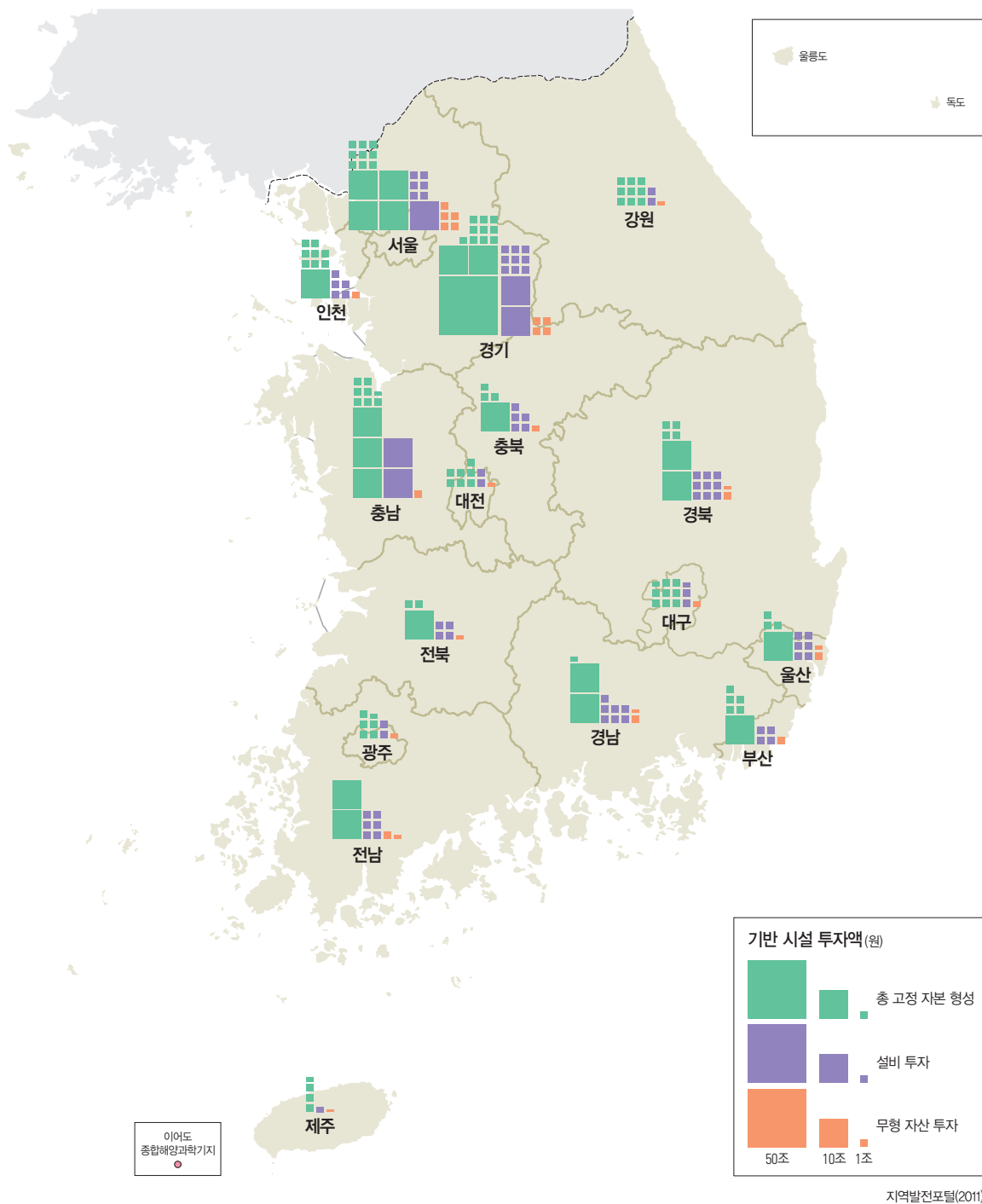
200,000 초과
100,000 - 200,000
60,000 - 100,000
30,000 - 60,000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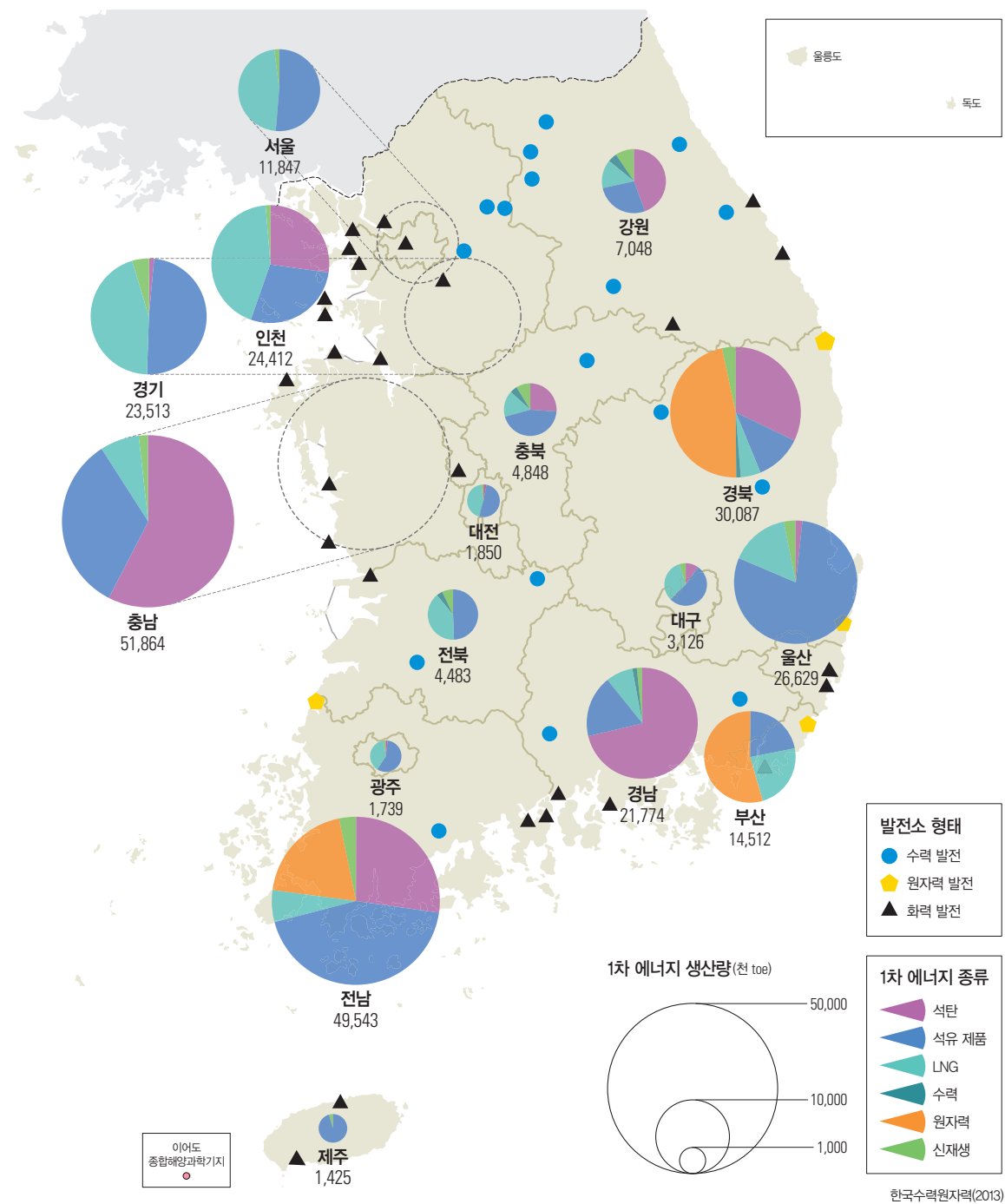
산업 생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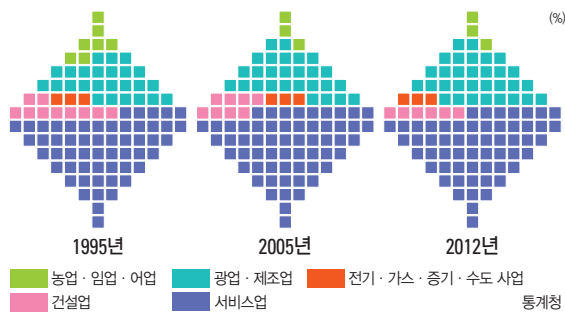
기반 시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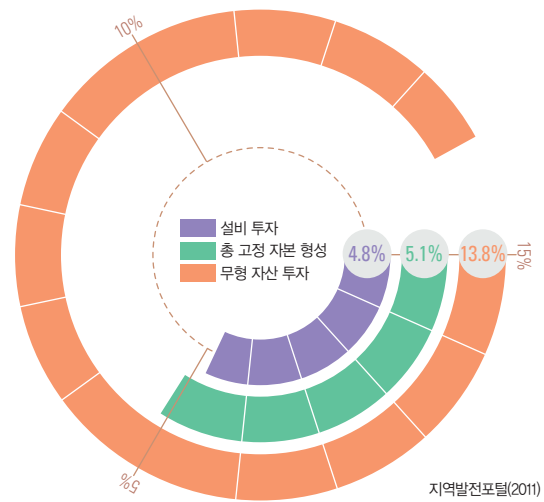
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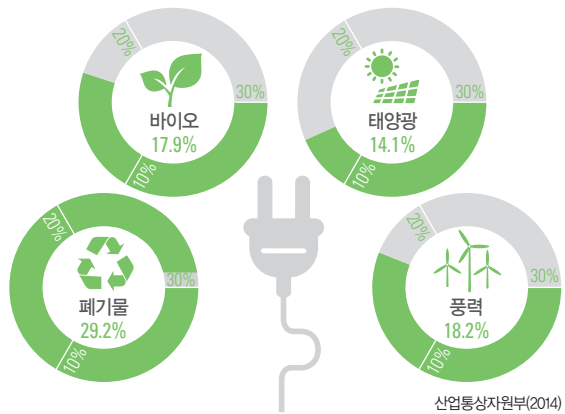
연도별 산업 구조의 변동



기반 시설 투자의 연평균 변화율(1995~2011년)



2035년 주요 신·재생 에너지원별 보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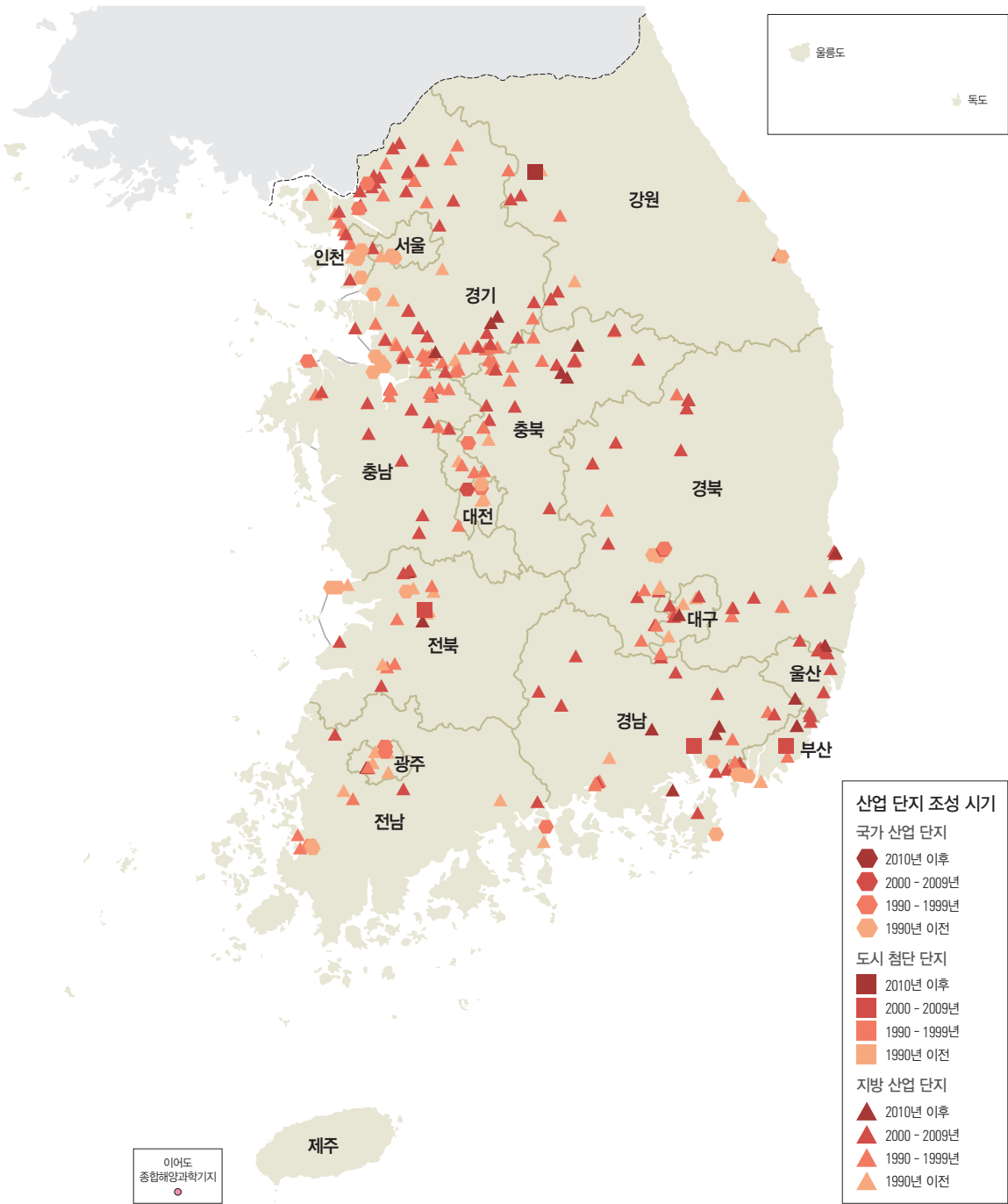
지역 발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동을 초래한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도별 산업 구조도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다. 부가 가치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의 증가와 농림어업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 공간적인 집중도가 계속 증가해 왔다.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는 제조업과 함께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반면, 낮은 산업에는 광업, 농림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 발전의 추진은 지역 내 기반 시설의 투자를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1995년 이후 총 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무형 자산 투자는 각각 연평균 5.1%, 4.8%, 13.8%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충남, 울산, 인천, 경기 등 전통적인 산업 중심 지역에서 총 고정 자본 형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총 고정 자본 형성, 설비 투자, 무형 자산 투자의 집중도도 1995년 이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 시설 투자가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핵심 지원 시설로 에너지 생산 거점인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 경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총 23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반면, 화력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한편 수력 발전소는 강원 5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경기, 충북, 전북, 전남에 분포하고 있다.

산업 단지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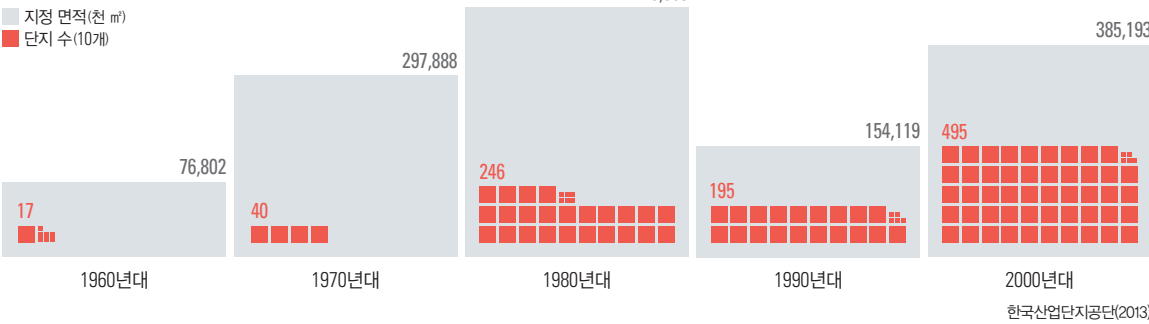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국토교통부(2014)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단지인 울산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된 이래로 어느덧 산업 단지 1,000개 시대를 맞고 있다. 그동안 산업 단지는 세계의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를 국민 소득 2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꾸준히 단지 수와 지정 면적이 증가해 오다가 1990년대에 다소 둔화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산업 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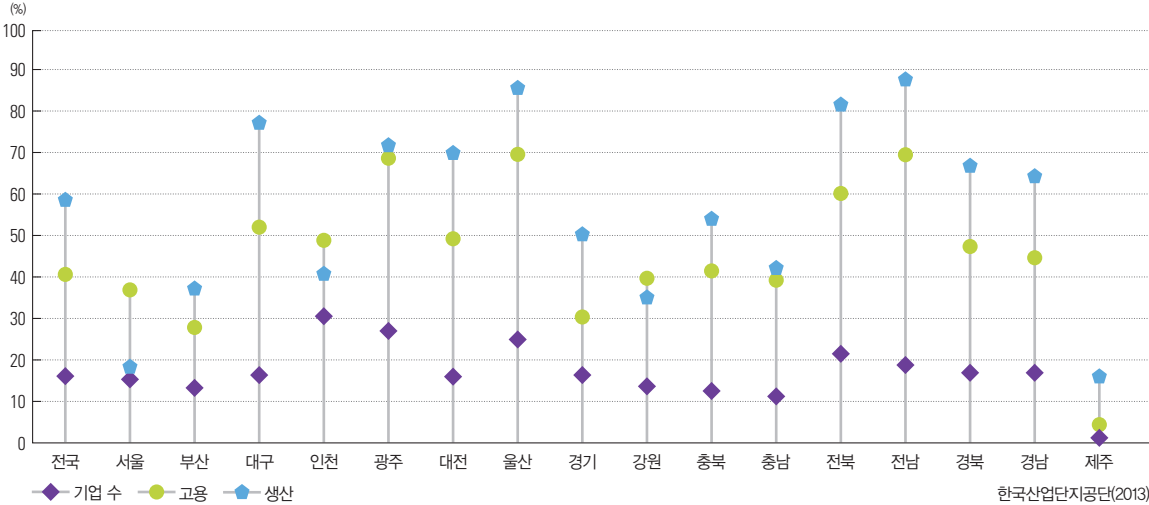
62%, 수출의 79%,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동안 양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해 온 산업 단지는 현재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한계 산업의 구조 조정 등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부응한 산업 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지식 기반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산업 단지 지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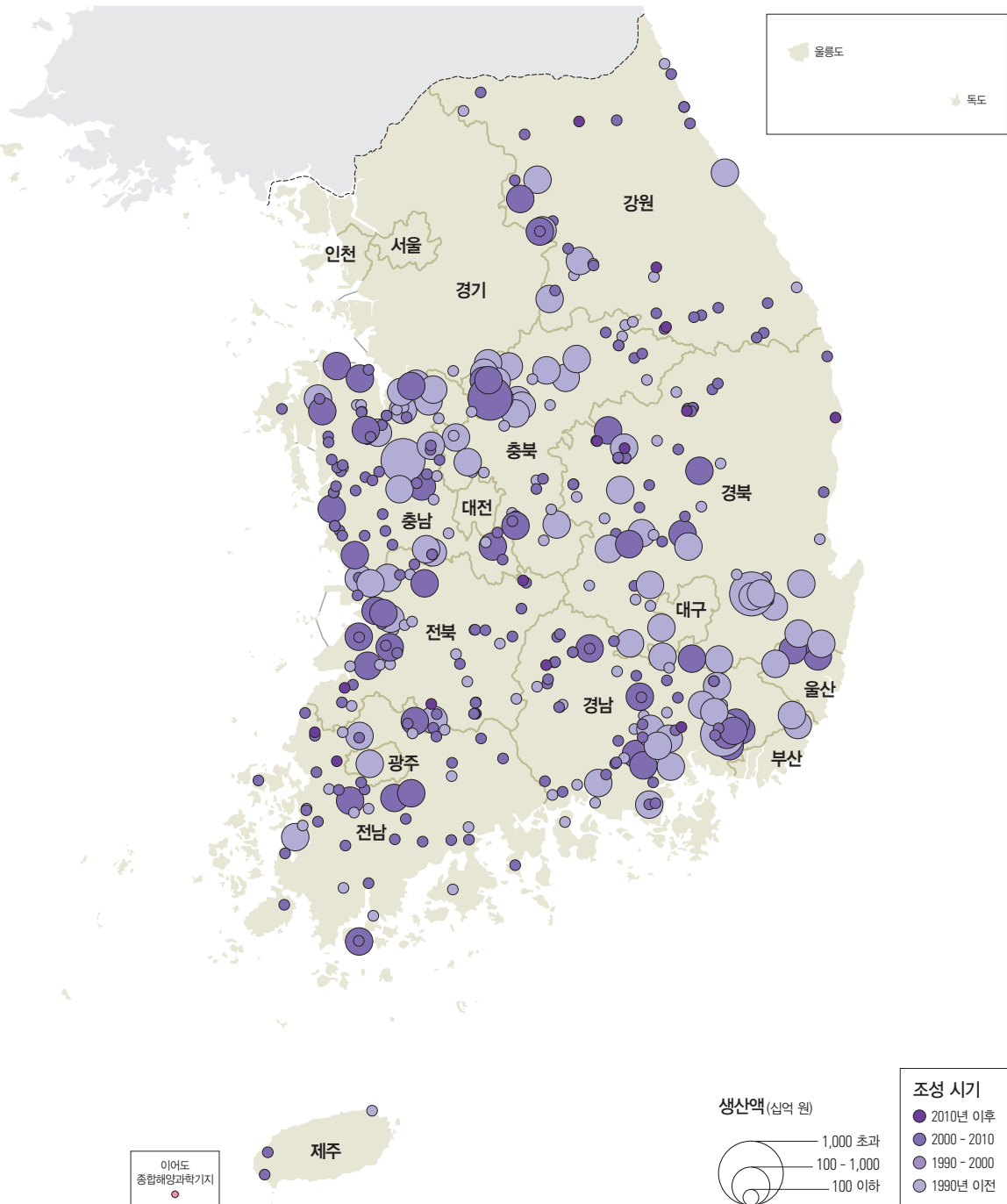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산업 단지의 지역 경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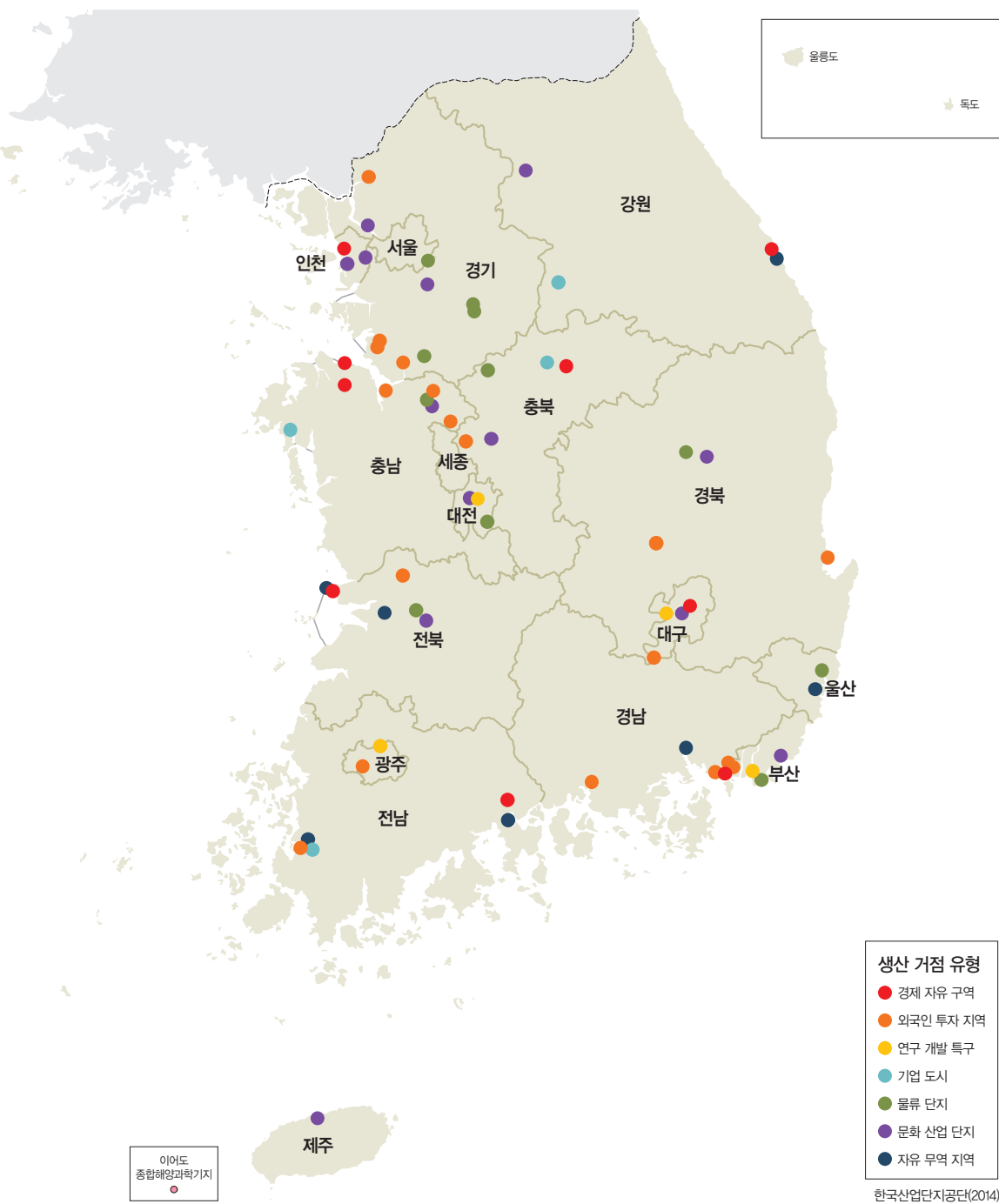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2013)

농공 단지 분포 변화



한국산업단지공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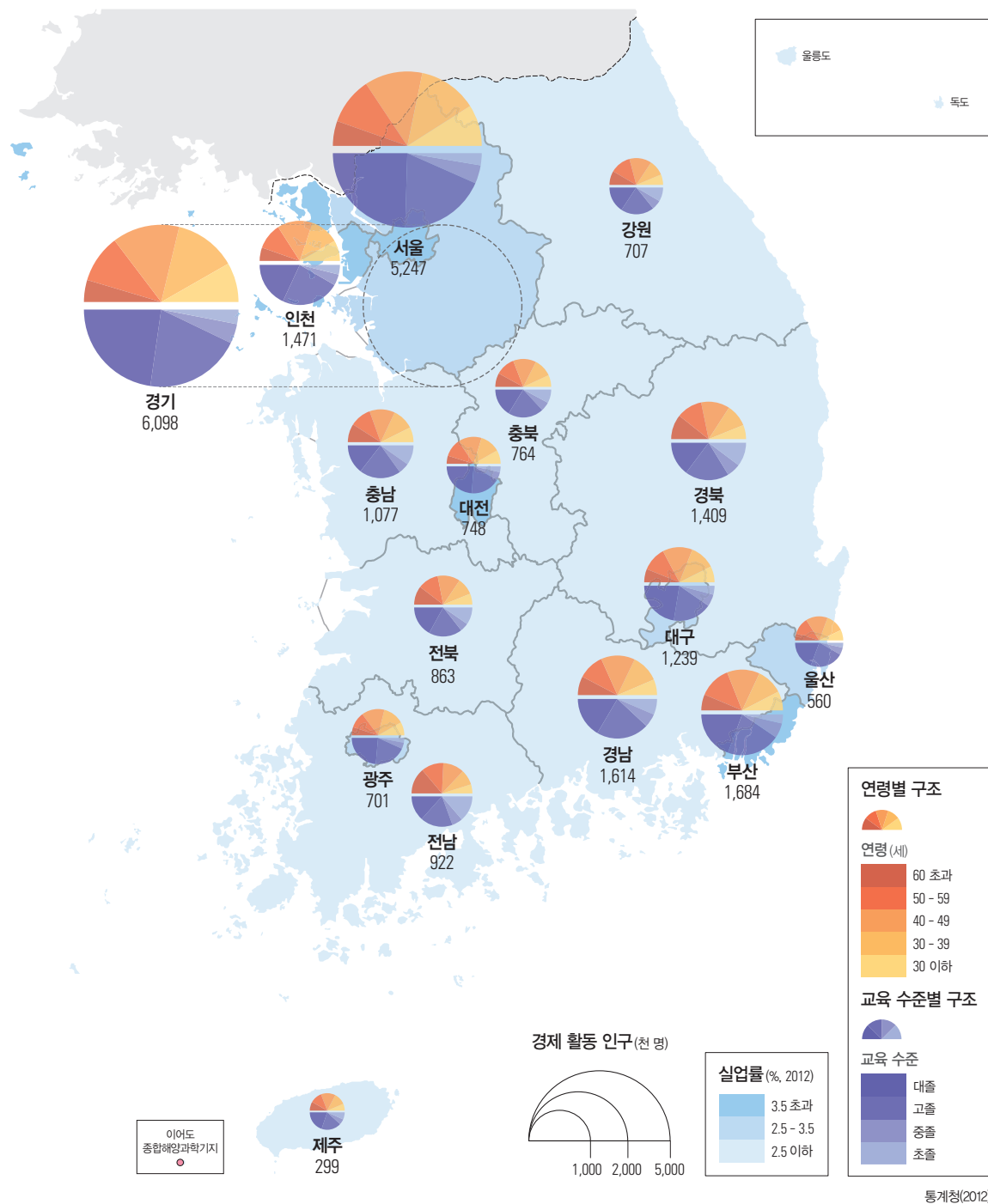
새로운 산업 생산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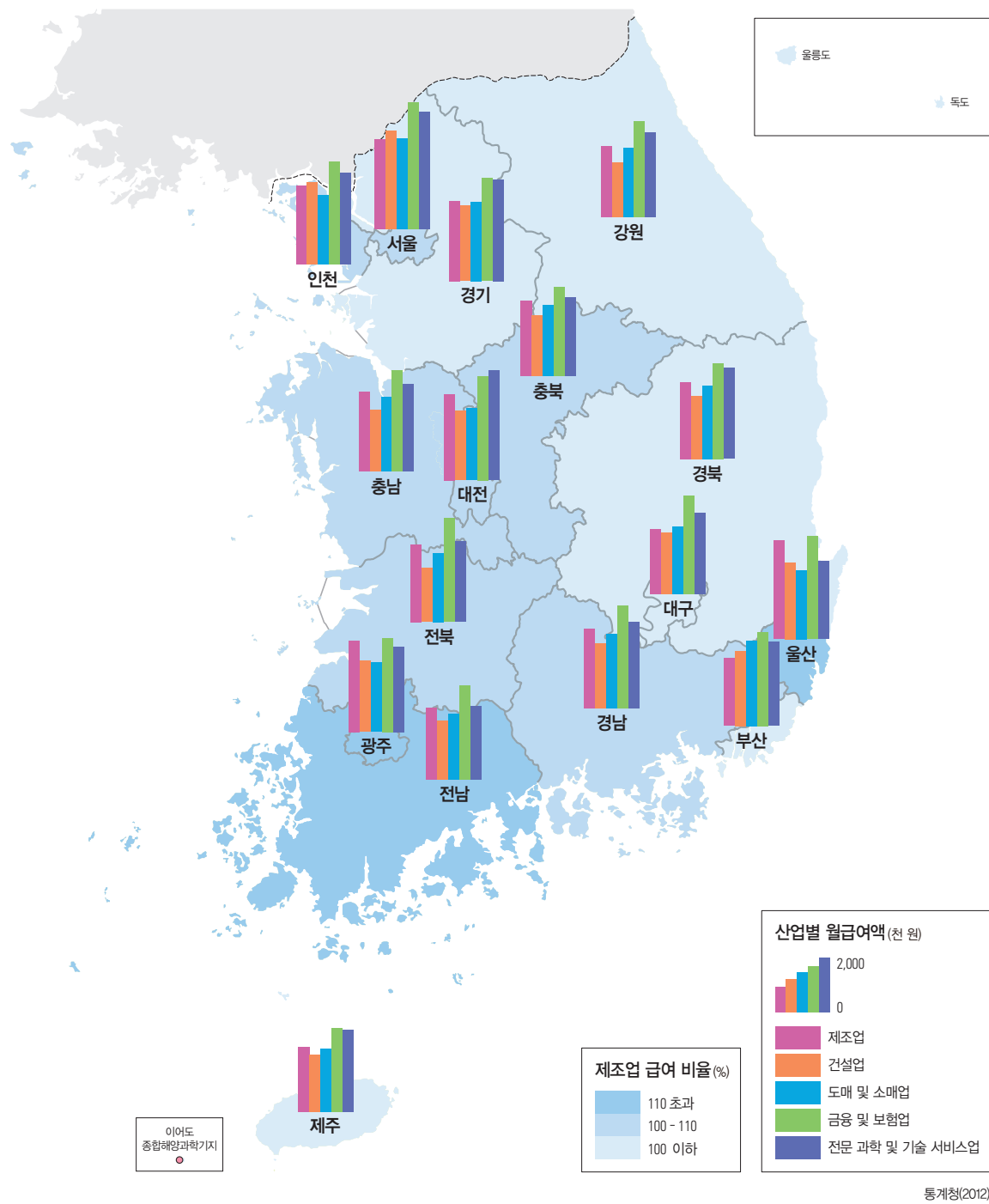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2014)

지역 발전의 성과: 인적 자본과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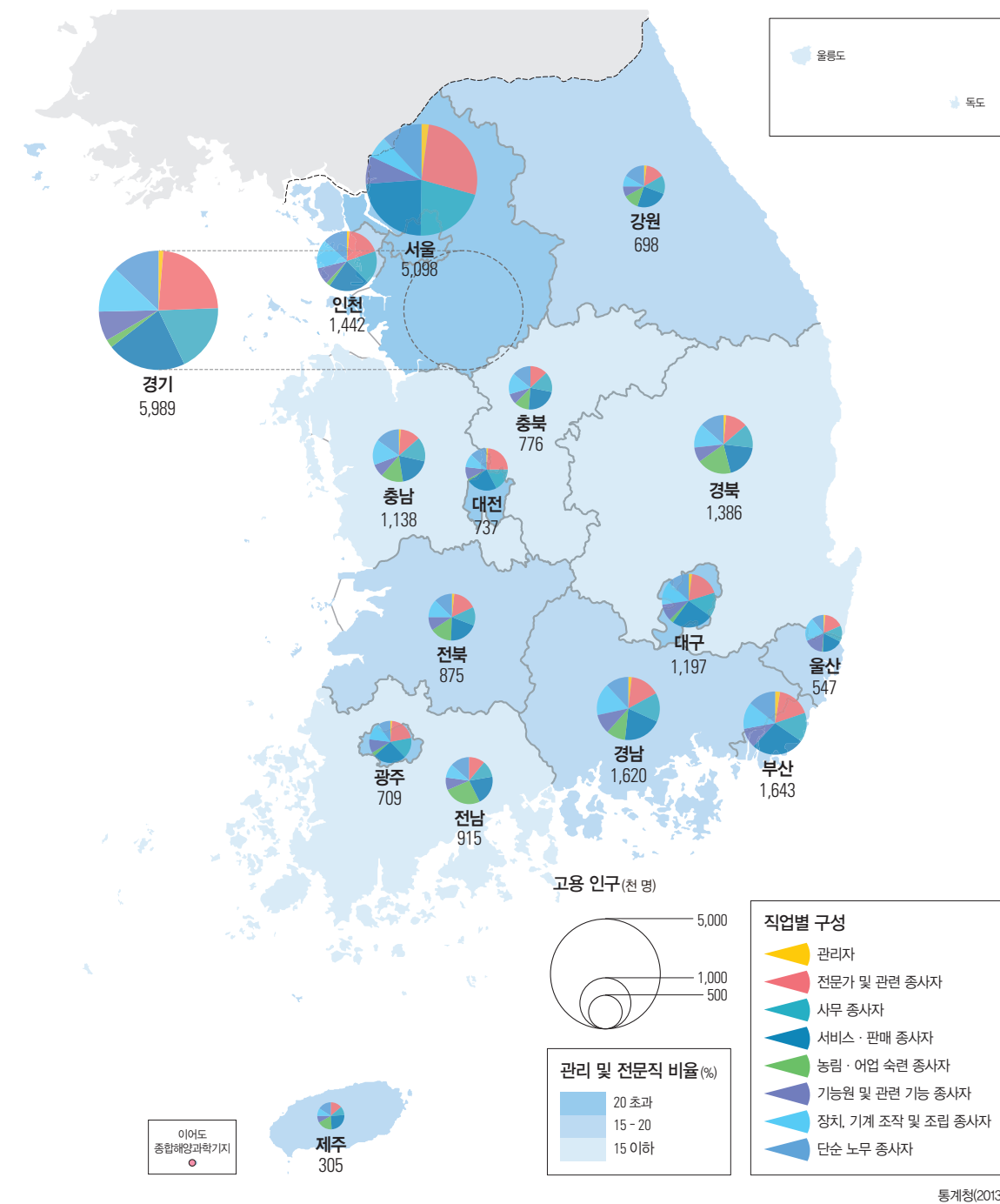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



산업별 월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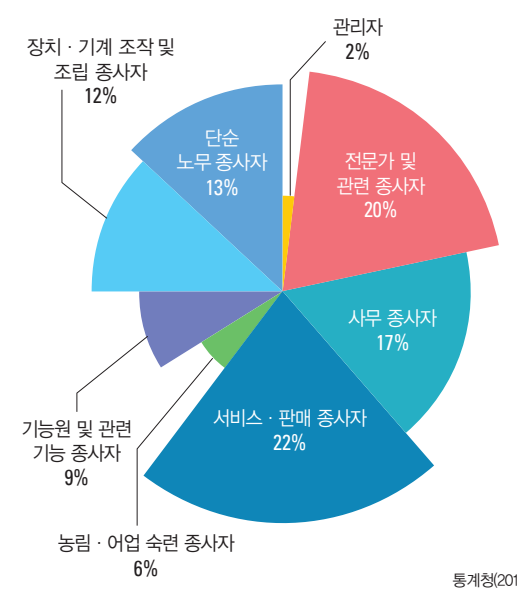


직업별 고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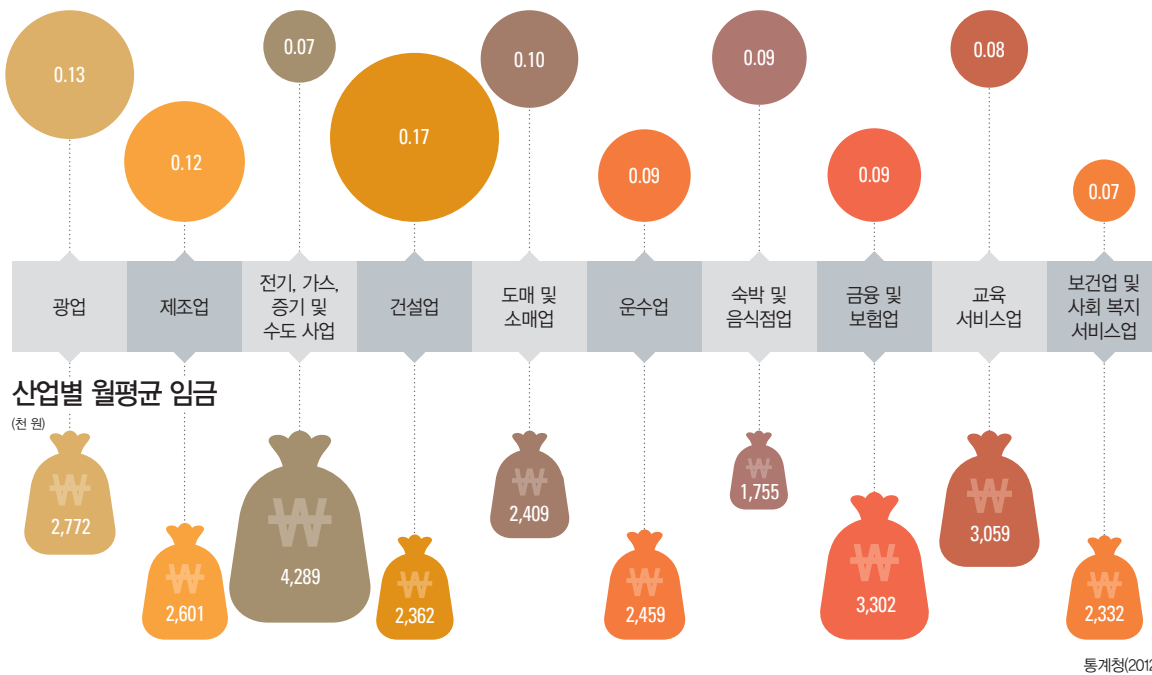


지역 산업 성장에 따라 시·도별 고용 구조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다. 한편 산업별 월급여액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종사자가 4,289천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1,755천 원으로 가장 낮다. 아울러 시·도 간 임금 격차를 보면, 건설업 부문에서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부문에서 격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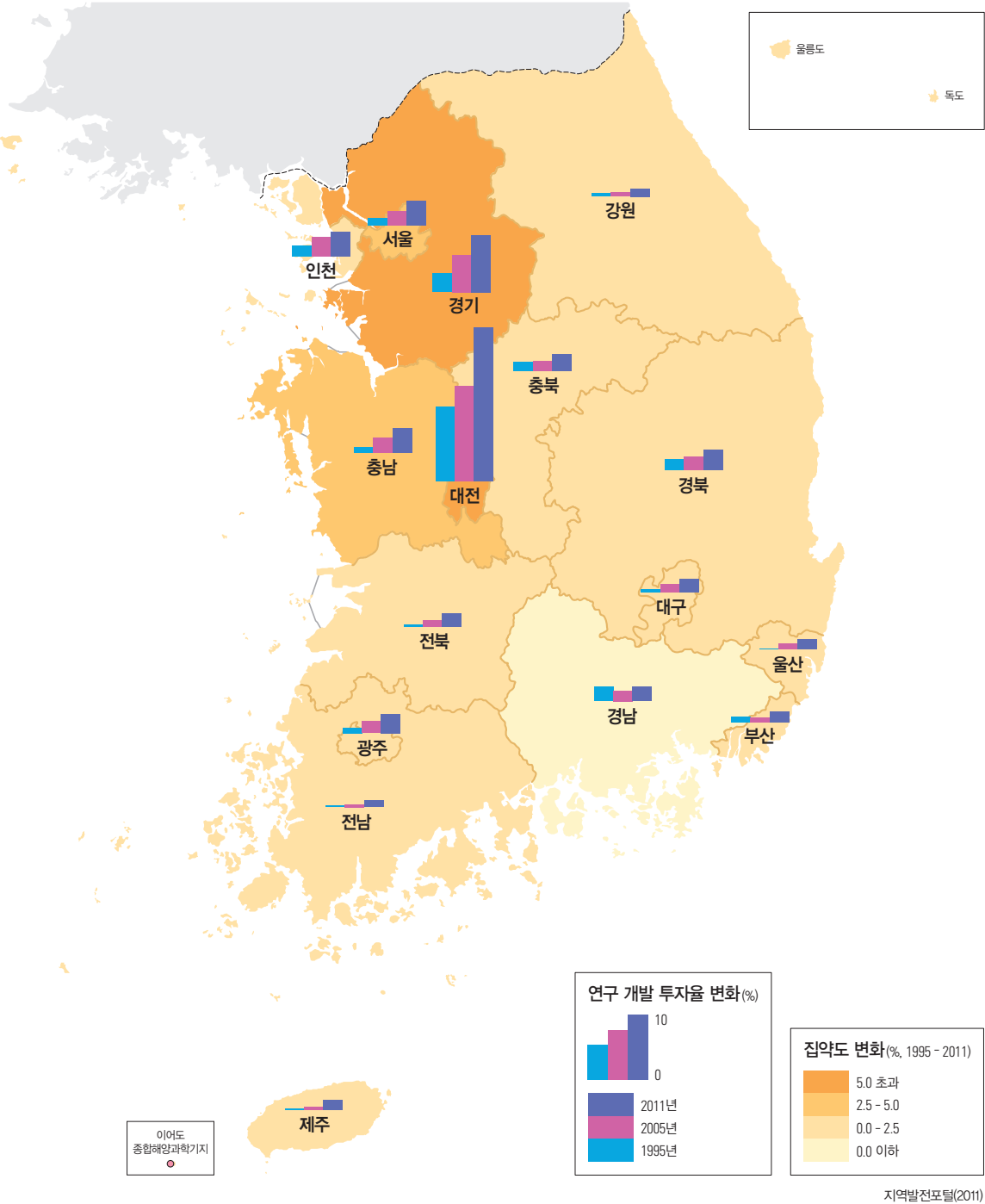
직업별 노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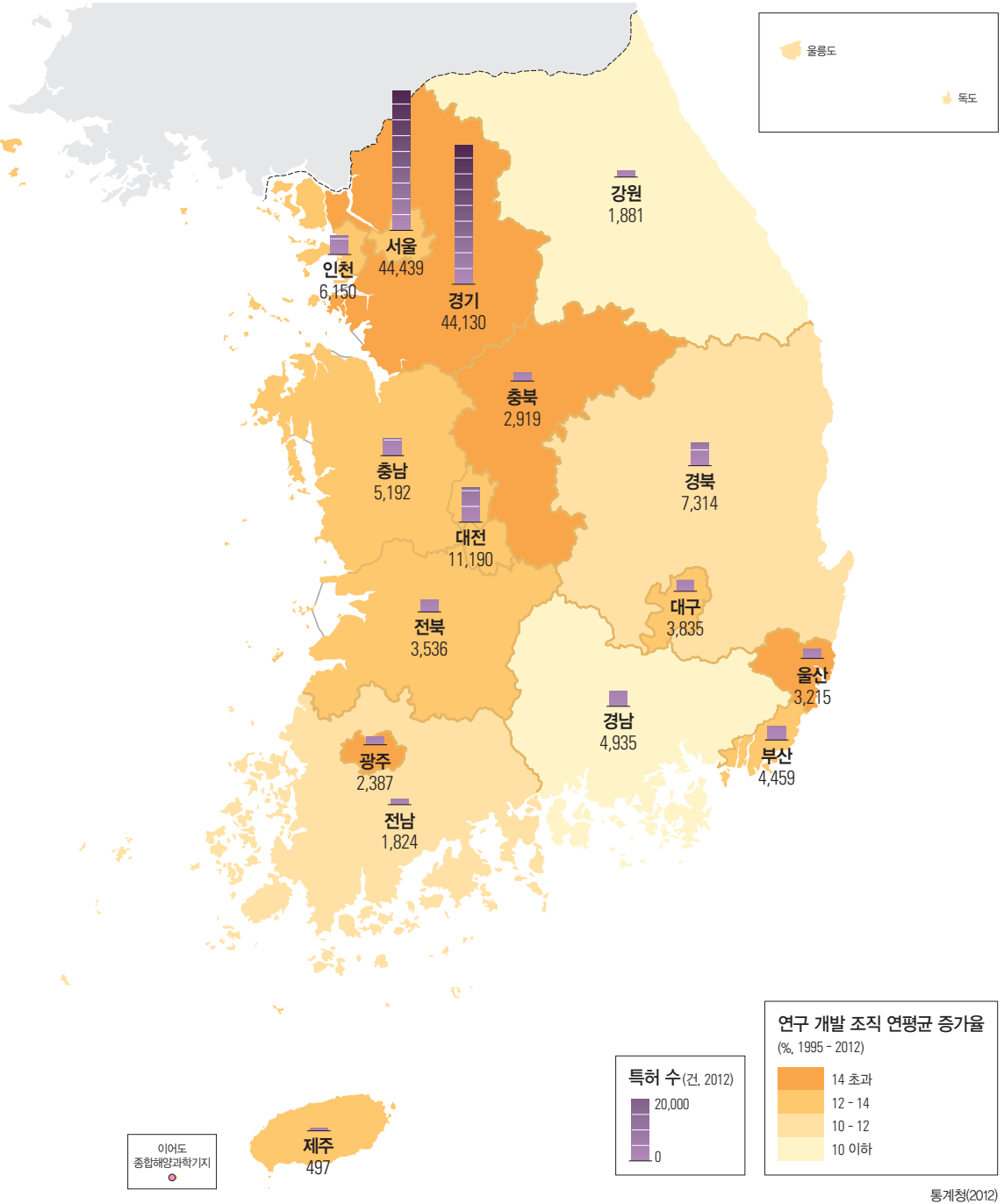
시·도별, 산업별 임금 격차: 변이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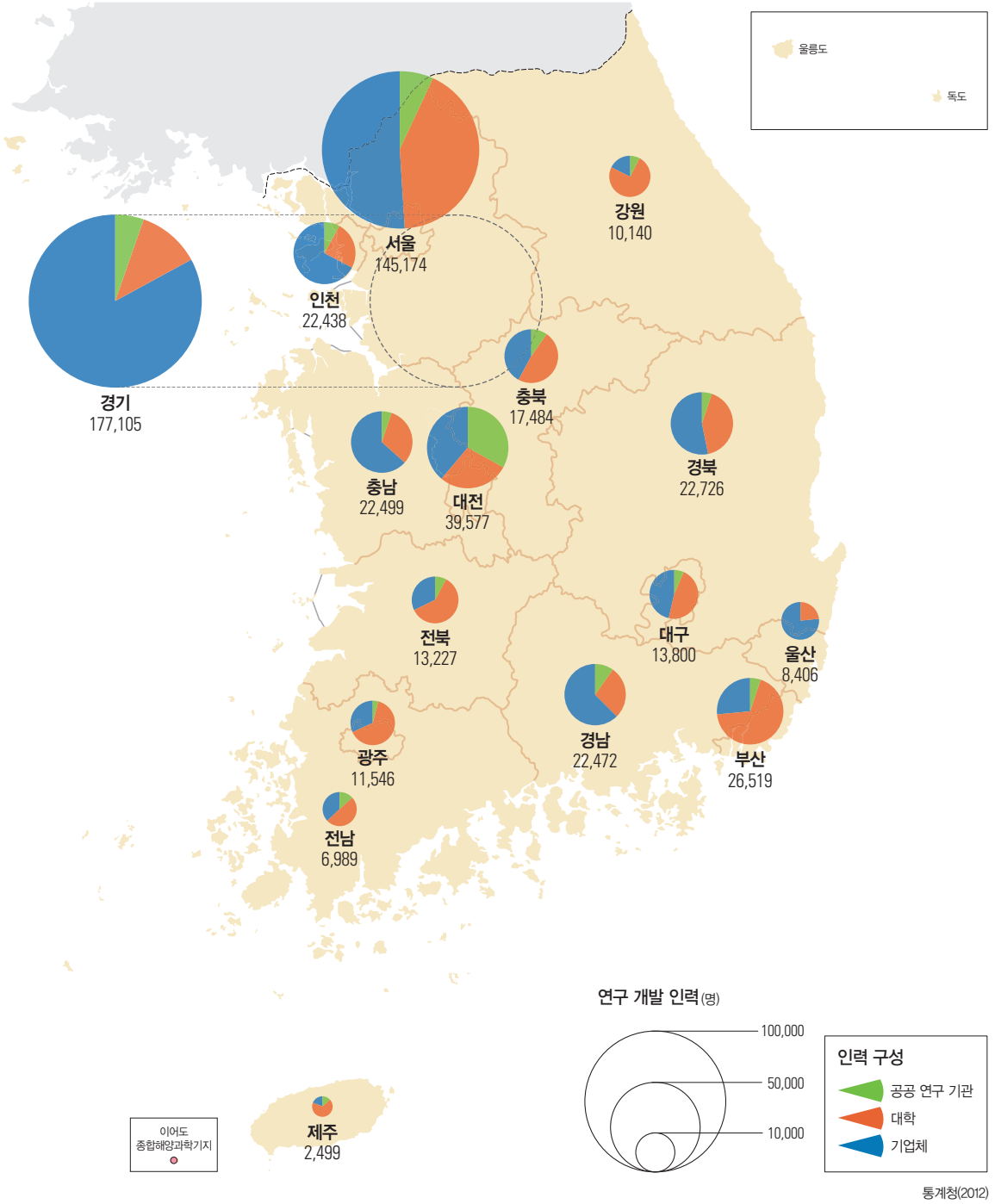
연구 개발 투자 및 집약도 변화



연구 개발 조직 증가 및 특허



연구 개발 인력



지식 기반 및 창조 경제로 이행하면서 지역 내 연구 개발 및 지역 혁신 관련 역량은 지역 발전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GDP 대비 R&D 투자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각도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혁신을 지원하고, 기술 파급 효과를 촉진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자생적 발전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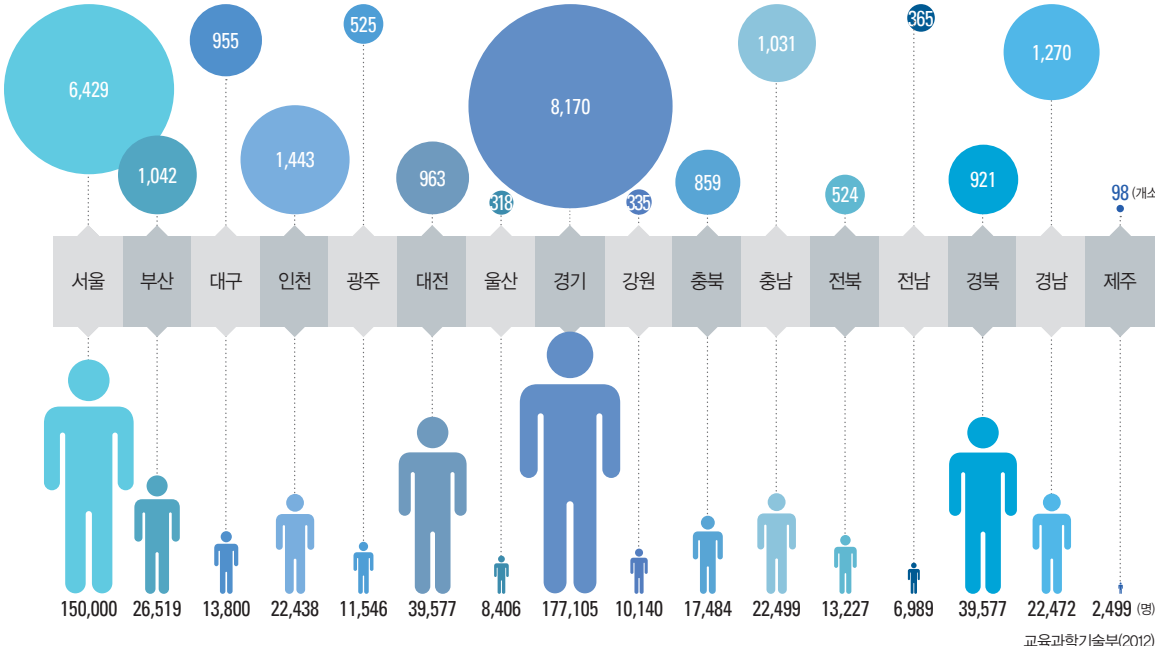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연구 개발 투자는 시·도별로 상당히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개발 투자율의 경우, 대전이 23.5로 최고 수준인 반면, 전남은 1.03에 불과하다. 연구 개발 집약도도 대전과 충남

이 각각 9.66과 0.23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 개발의 공간적 불평등은 관련된 지역 경제 성과 차이를 결정하지만, 더 나아가 향후 발전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문제로 간주된다.

연구 개발 기능의 공간적 불평등은 시·도별 연구 개발 조직의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전국 연구 개발 조직의 63.5%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연구 개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연구 개발 인력은 562,601명에 달하는데, 이 중 공공 연구 기관과 대학의 비중이 각각 8.3%, 32.8%인 반면, 기업체의 비중은 59%에 달한다. 또한 기업체 연구 개발 인력 중 71.1%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 역량의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시·도별 연구 개발 조직 수와 인력 수



경제와 산업

지난 60여 년 한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정리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힘입어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내외적인 상황이 변화하면서 구조 조정의 압력이 강해졌고, 인적 자원 개발, 연구 개발 활동과 혁신성 증대 등의 노력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전의 추동력이 옮겨졌고, 재벌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졌다.

먼저, 국가별 GDP 순위 변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31위, 1965년 41위로 하락했다가 1970년 32위, 1975년 30위로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1980년 28위, 1985년 18위, 1990년 15위, 1995년 11위로 성장하다가 이후 12~15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인 1차 산업 중심의 후진국형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를 보였다. 농림·어업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40% 이상, 취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반

면 제조업은 국내 총생산의 20% 미만, 취업자의 10% 미만을 나타냈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전쟁 수행 등에 필요한 제조업의 주된 부분이 북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1950년대 초반 6·25 전쟁, 남북 분단을 겪으면서 제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 작업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거쳤고, 산업은 수입 대체 산업 중심의 소극적 정책에 그쳤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산업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돌입하는데, 이때부터 제조업이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삼고,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전략을 추진하여 섬유 제품, 합판, 가발, 신발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력 산업이 변화하였다. 주요 수출 상품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반에는 철광석 등 광물과 생사

가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1970~1980년대까지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두각을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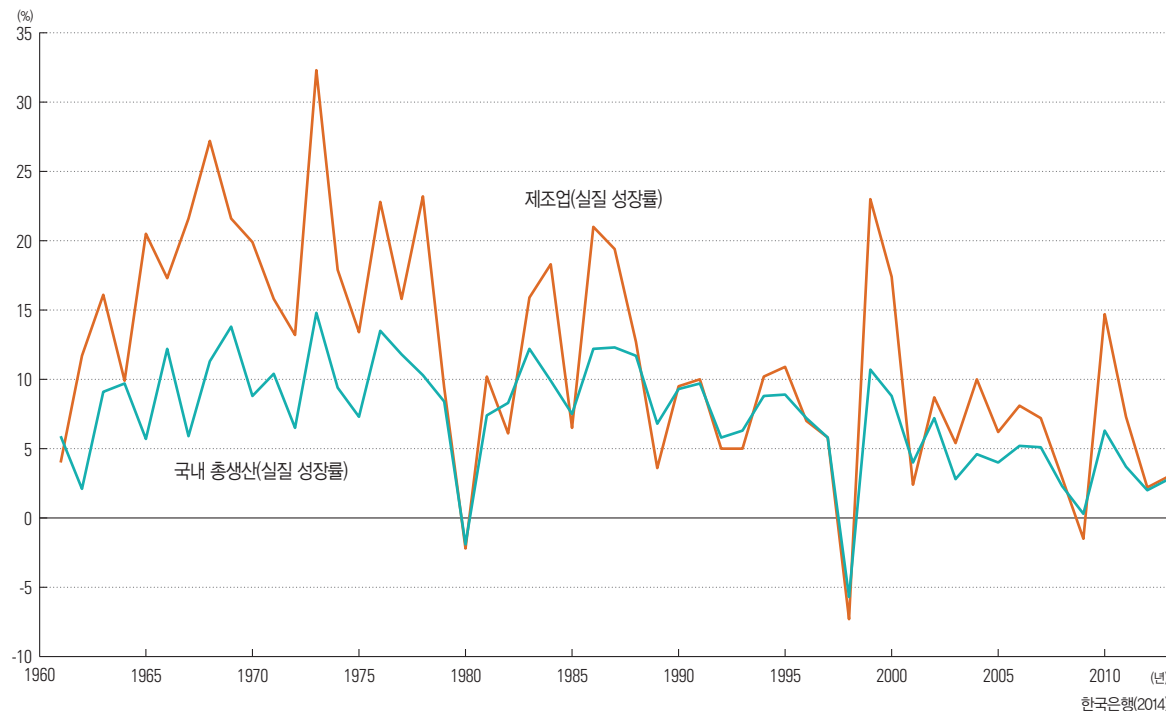
국내 총생산의 실질 성장률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 4% 미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1961~1970) 8.4%, 1970년대(1971~1980) 9.0%, 1980년대(1981~1990) 9.7%로 1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변화의 정도는 있으나, 1960년대 16.8%, 1970년대 15.8%, 1980년대 12.2%로 10%를 훨씬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1991~2000) 6.5%로 떨어졌고 2000년대(2001~2010)에는 4%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위기, 1997년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는 제조업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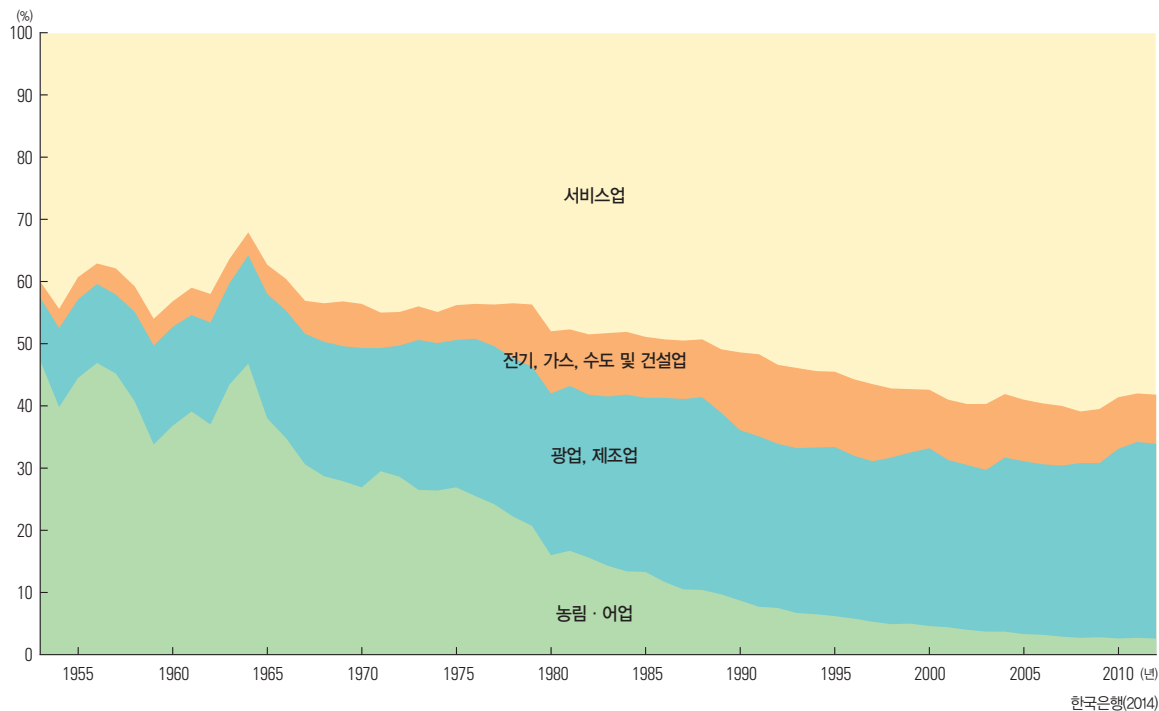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1950년대 40% 이상에서 2000년대 3%대로 하락하였고, 제조업은 같은 시기 12.0%에서 27.4%로 증가, 서비스업은 41.1%에서 59.5%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제조업 구조에 있어서 1950~1970년대까지는 경공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다가 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와 세계화는 국토 공간에 투영되어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고,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달로 인해 수출입에 용이한 남동 해안 지역 도시들이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적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 규제, 산업 시설 지방 이전, 지역 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국내 총생산 및 제조업 실질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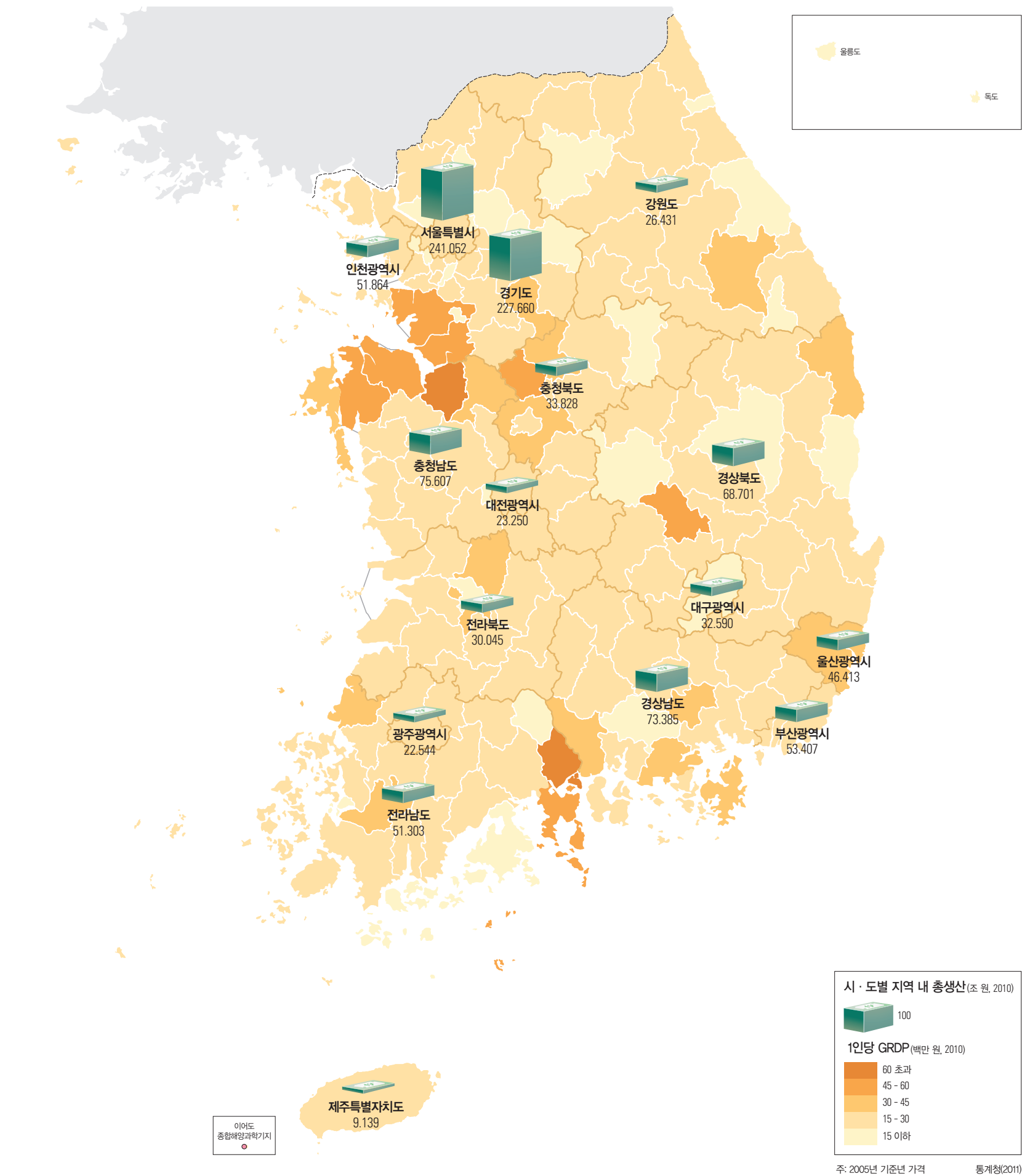


산업별 부가 가치 비중 변화



한국의 경제 성장

지역 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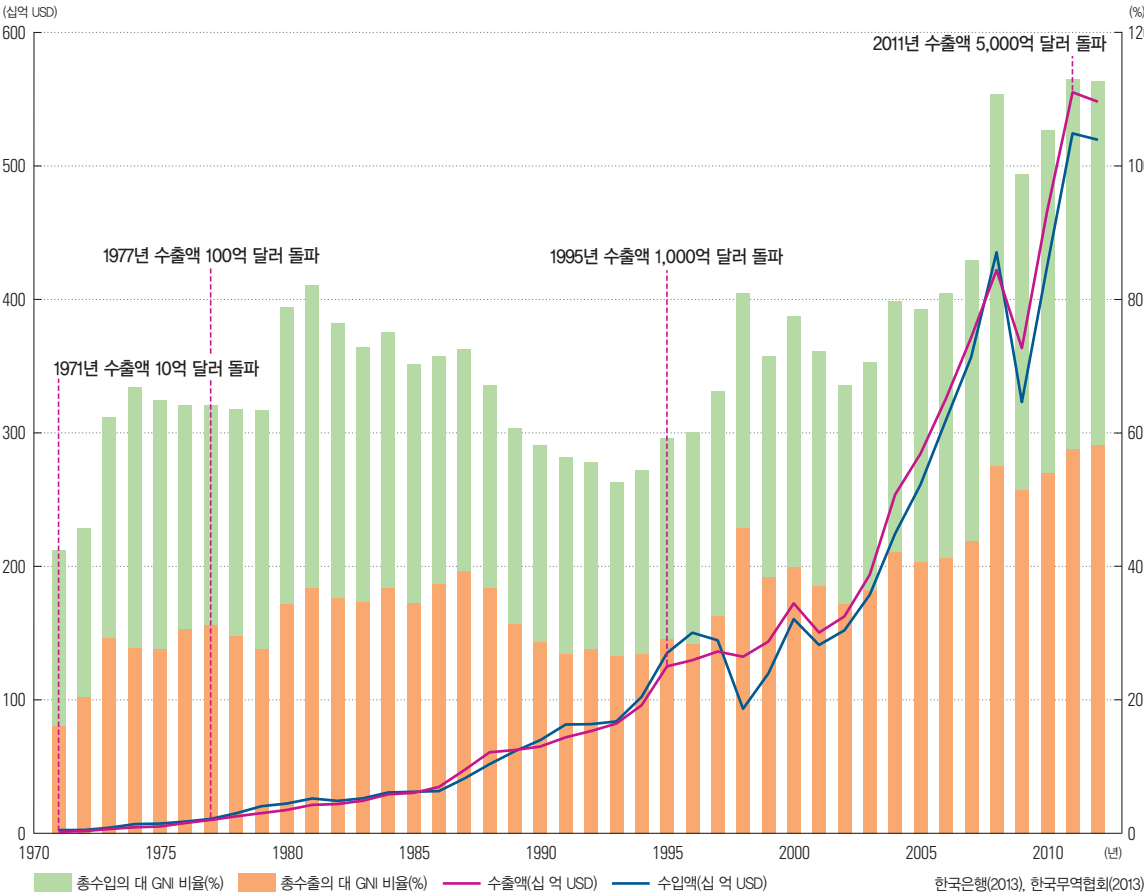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별 경제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지역 내 총생산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면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 되지만, 추계시 이용하는 자료와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민 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총생산이 한 국가의 생산 활동을 측정하는 생산 지표인 반면에, 국민 총소득은 국민의 후생 수준을 측정하는 소득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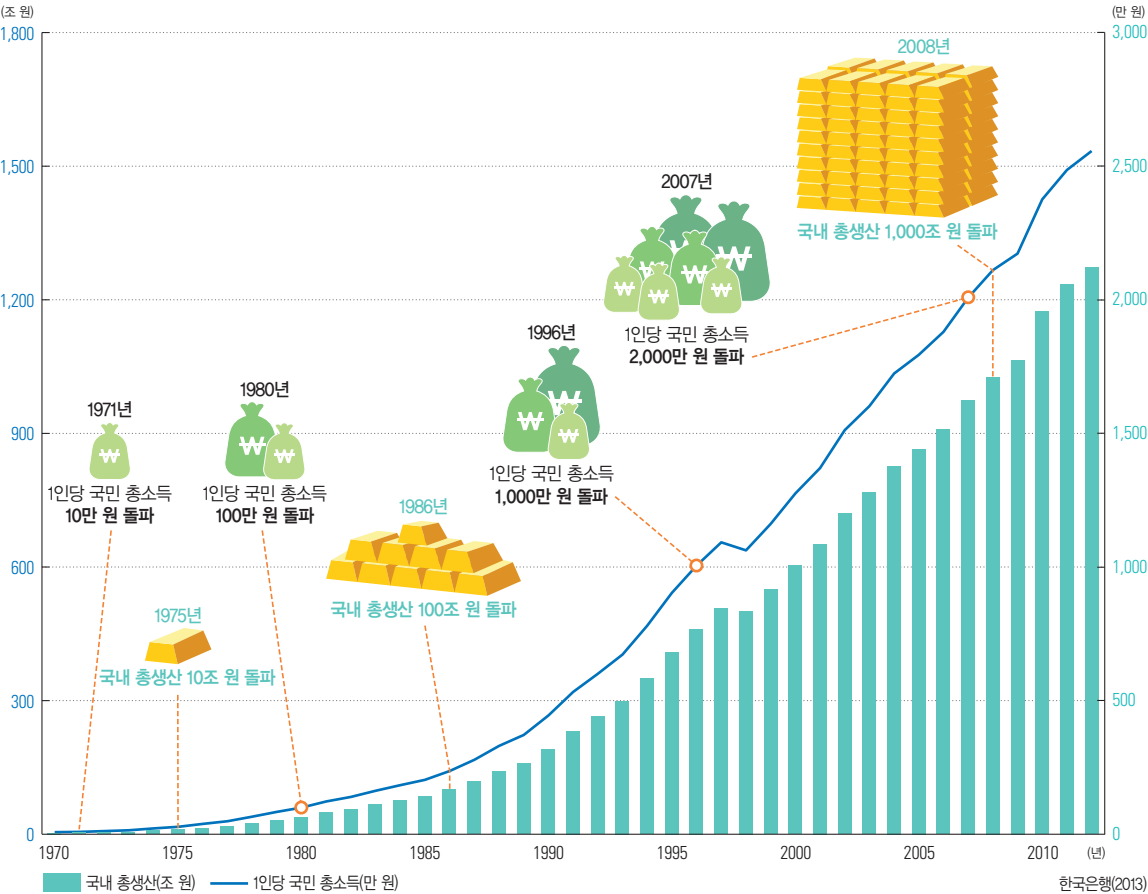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명목 기준)은 2013년 1조 1,975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5위를 차지하였고,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는 12위를 차지하였다. 1960년 31위, 1970년 32위, 1980년 28위를 기록한 이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85년 18위, 1990년 15위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이후 11~15 위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1975년 10조 원을 돌파하였고, 11년만인 1986년에 10배인 100조 원을 돌파하였다. 10조 원 돌파 33년만인 2008년에 100배인 1,000조 원을 돌파하여 압축적 경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충격으로 1998년 한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71년 10만 원이었던 것이 9년만인 1980년 100만 원을 돌파하였고, 이후 16년만인 1996년에 1,000만 원을 넘어섰다. 2007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 2,000만 원을 돌파하여 2013년 현재 2,50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수출 지향 산업 정책에 따른 수출 산업의 발달이다. 수출액과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몇 번의 경제 위기는 있었으나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이래 6년만에 10배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4년만인 199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수출과 수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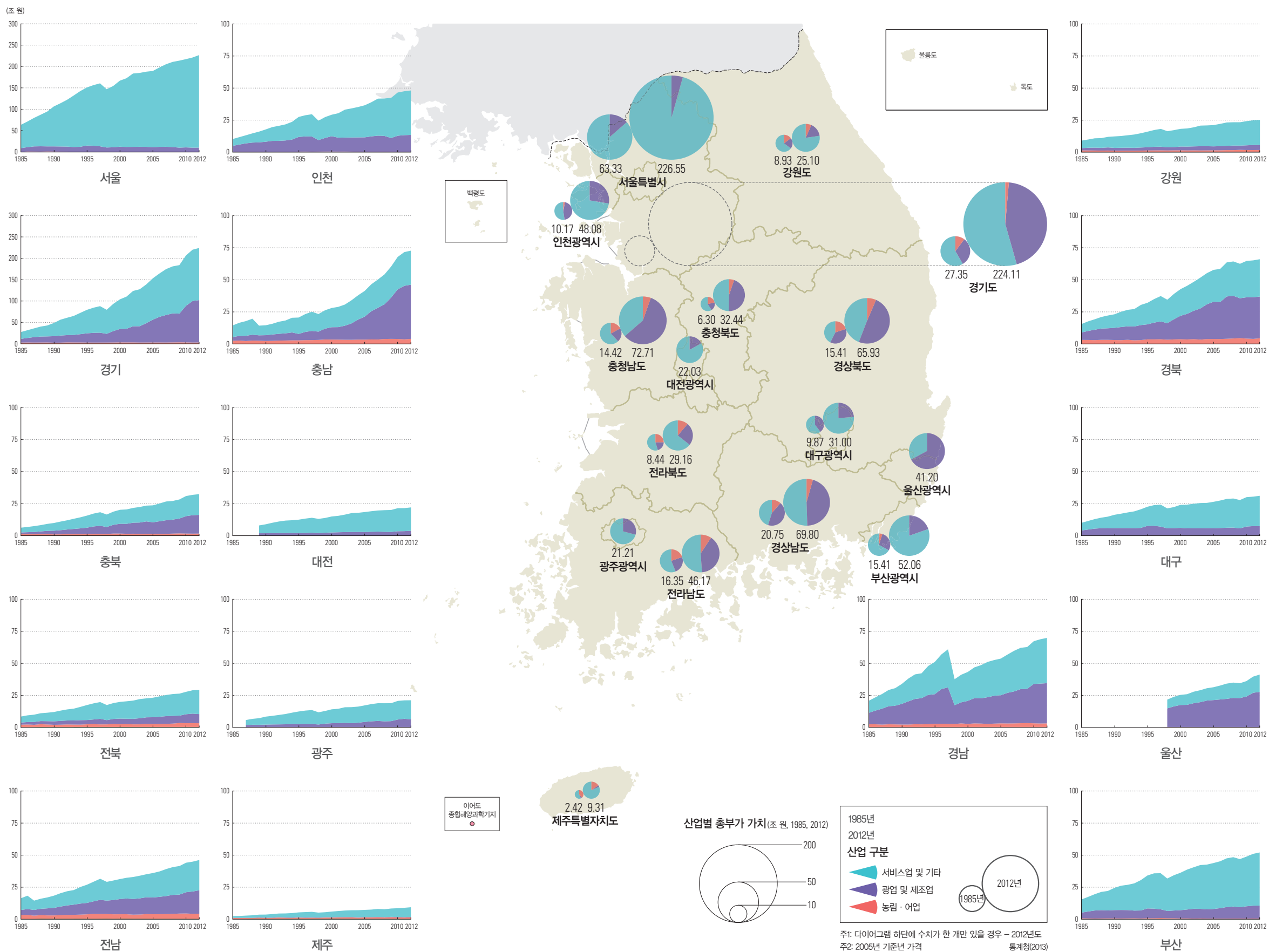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



국토의 변화와 발전

산업 구조와 공간

지역 내 총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 변화



산업 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의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문별 취업자 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감소, 광업 및 제조업의 증가와 감소,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농림·어업 비중 감소와 제조업 비중 증가의 산업 구조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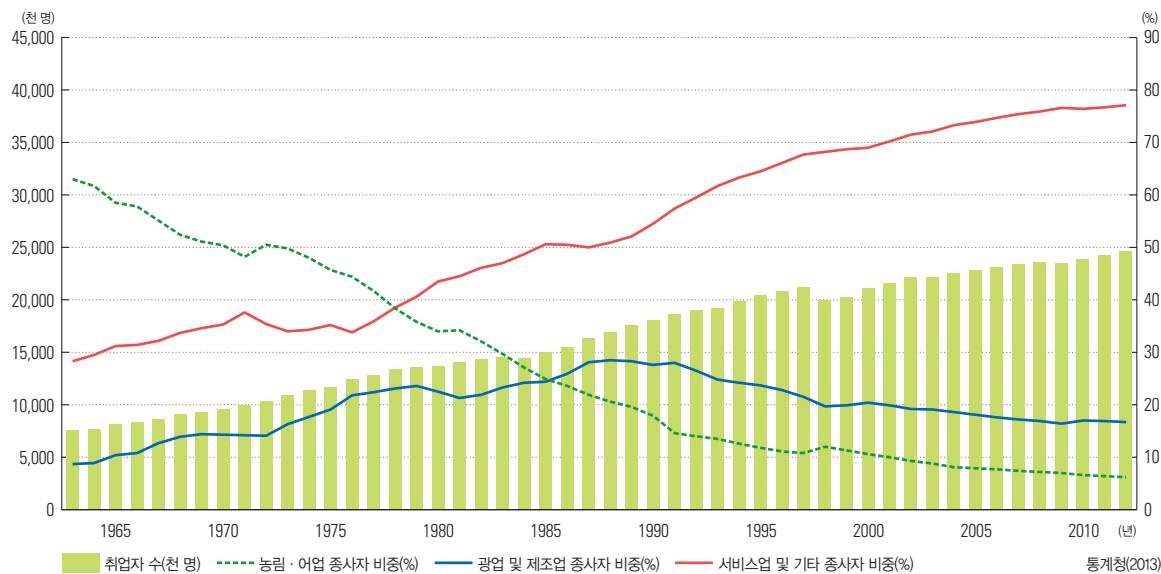
행되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몇백 년 동안 겪은 변화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한지 30여 년의 기간 동안 겪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의 산업화는 압축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85년과 2012년의 지역 내 총부가 가치 변화를 통해 시·도별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27년 동안 총부가 가치의 성장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급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1985년 서울 63조 원, 경기도 27조 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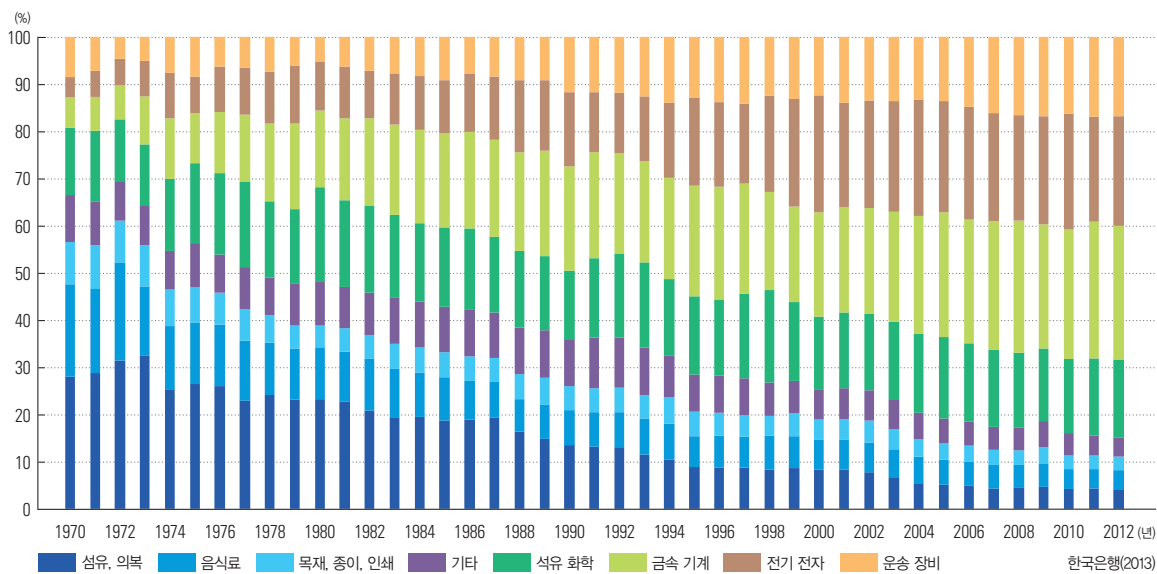
년 226조 원, 224조 원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농업·어업의 비중 감소가 나타났고, 광역시는 제조업 비중 감소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 증가가 특징적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제조업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수도권 남부에서 충청도로 이어지는 제조업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이 95.5%, 제주도는 81.3%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한국 경제의 급성장은 제조업이 주도하였는데, 이에 한국의 산업 발전은 제조업의 발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부문별 총부가 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 섬유 의복과 음식료 등 경공업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지난 40여 년 간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등 부문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 부문으로 중심이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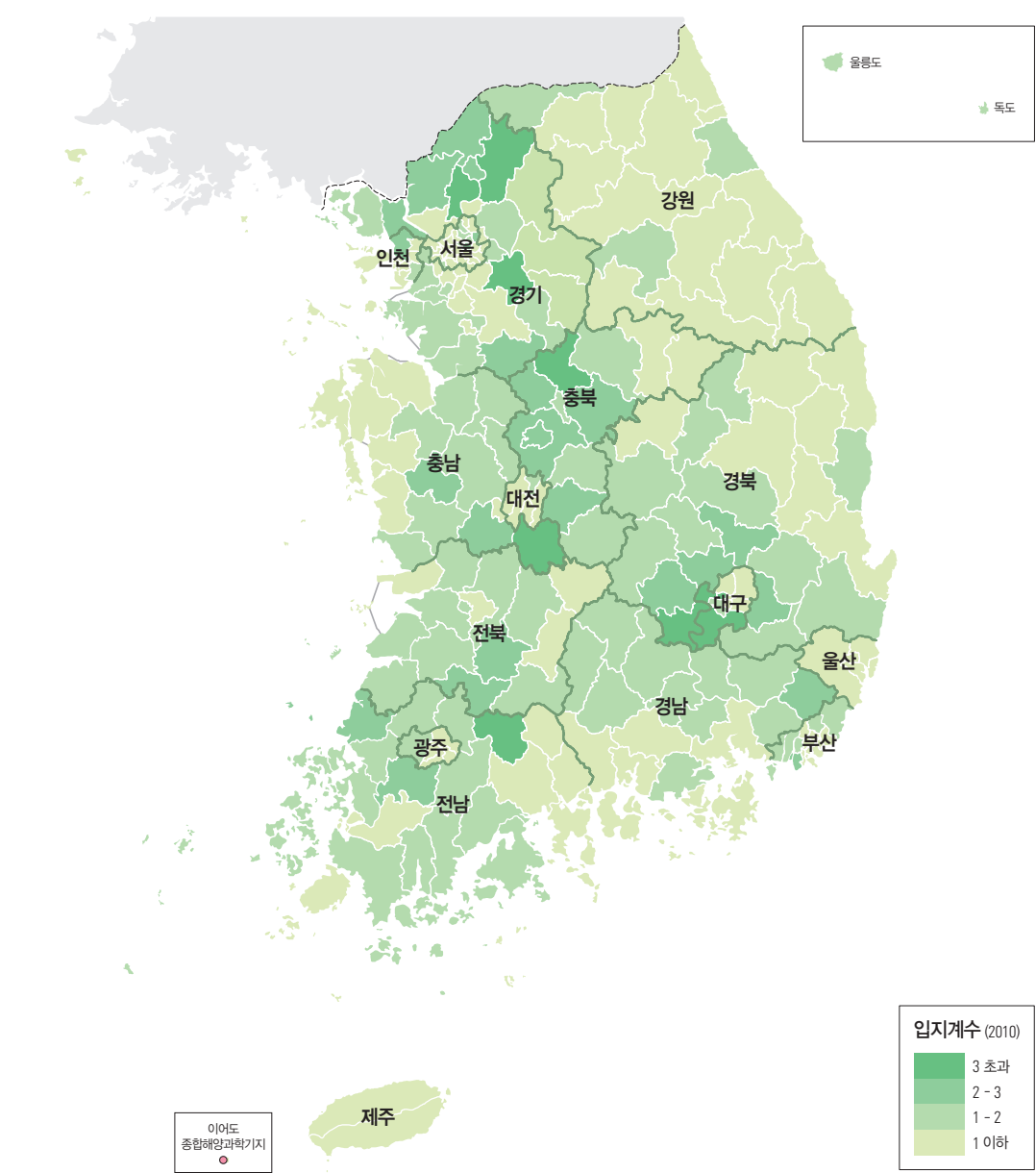
산업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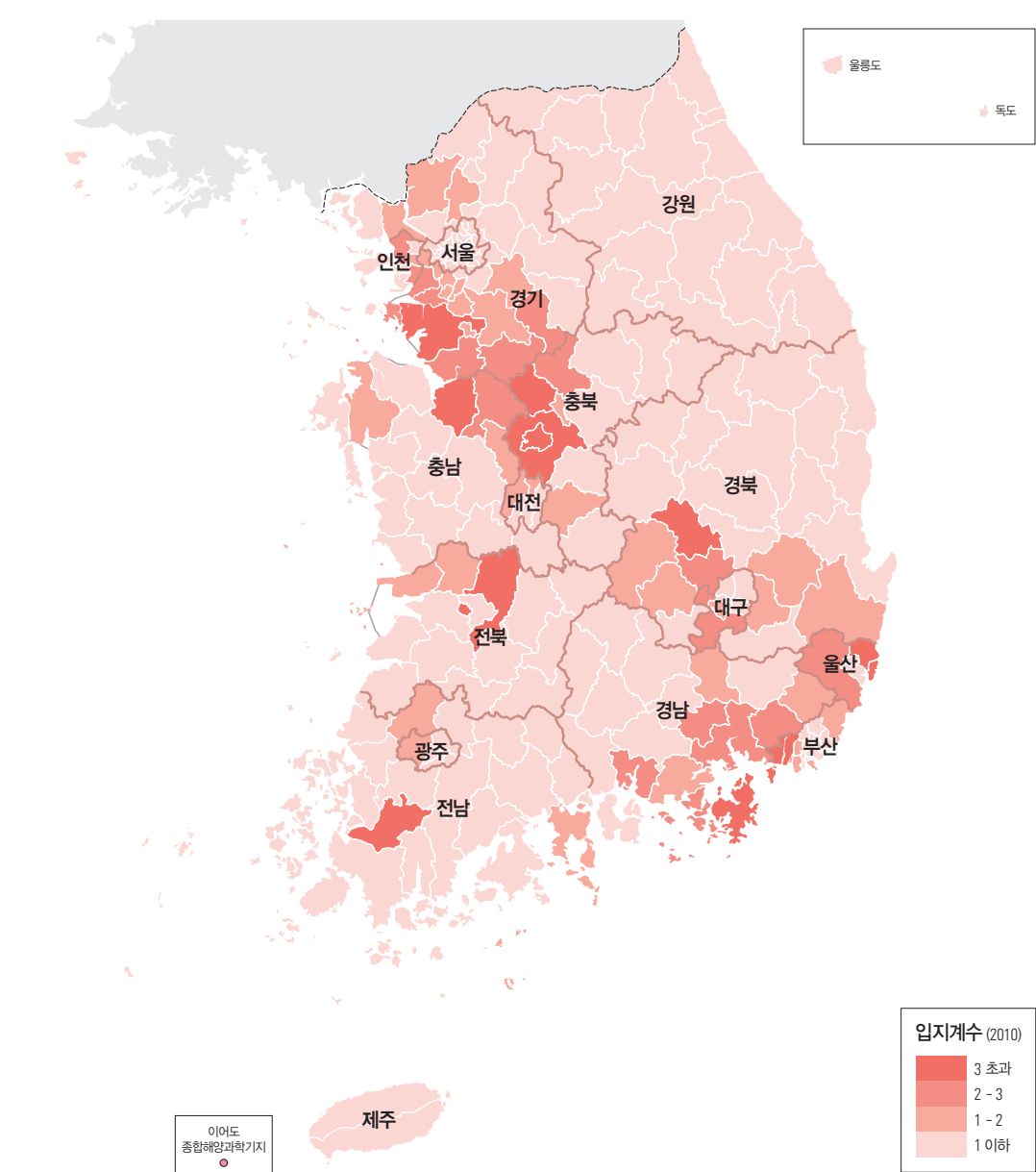
제조업 구조의 변화



경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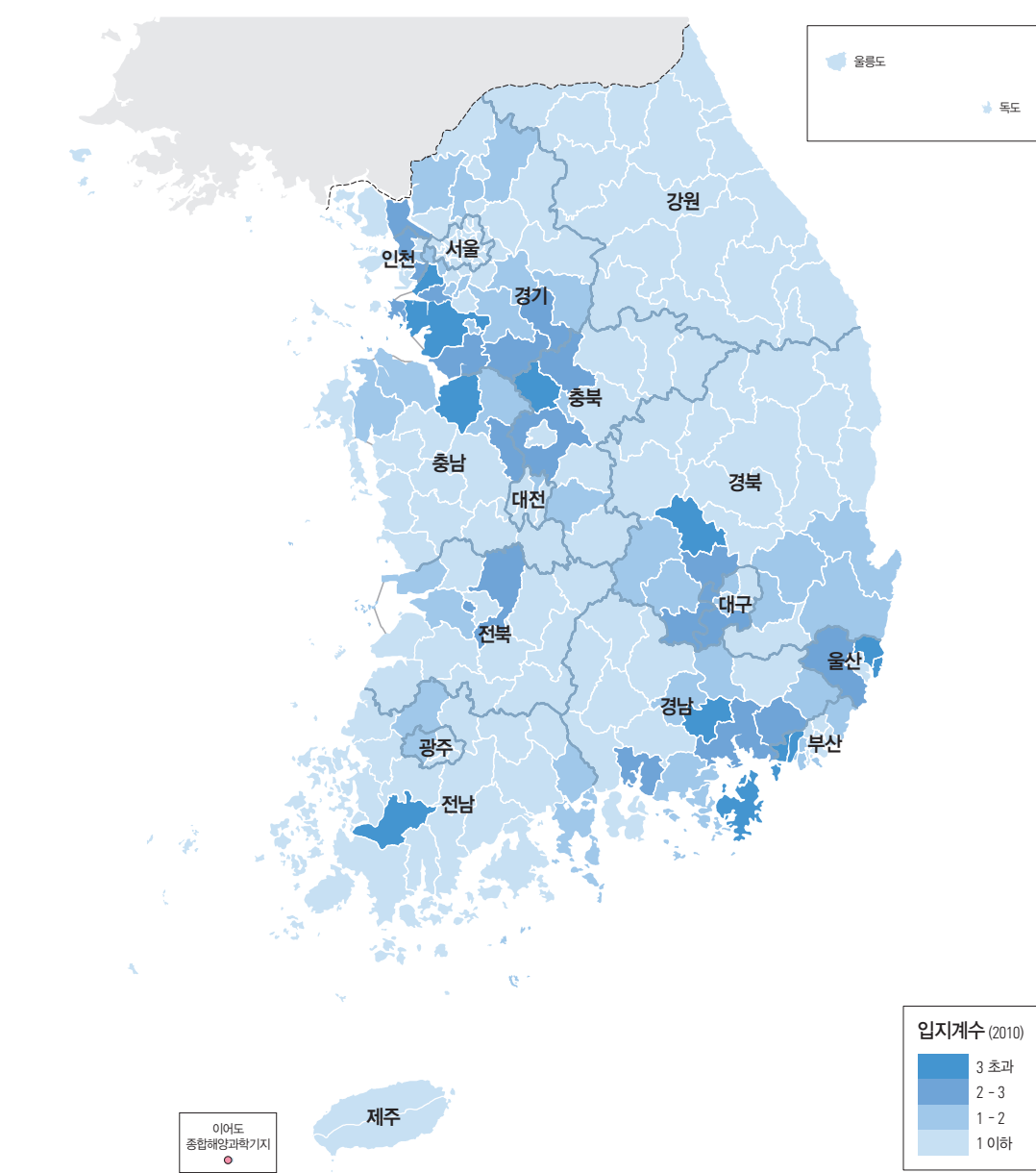
첨단 기술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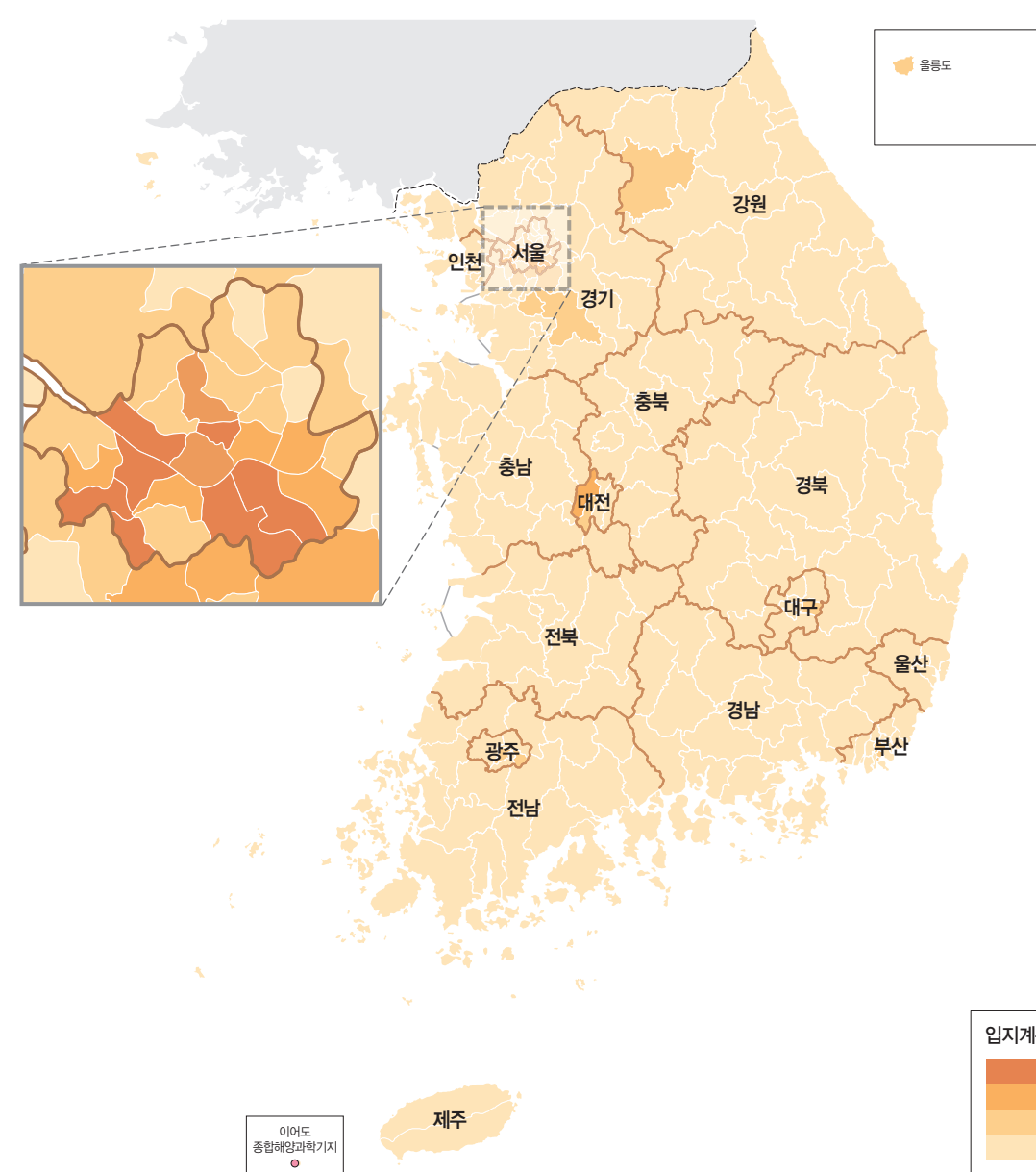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 특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로, 특정 산업의 전국 점유율에 대한 지역 점유율의 비중(중사자의 수 기준)을 나타낸다. 대개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구분되는데, 경

공업은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및 인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기타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 중화학 공업은 펄프 및 종이 제품, 석유 및 화학 제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및 금속 가공 제품,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및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첨단 기술 산업과

중화학 공업



지식 집약 사업 서비스



지식 집약 서비스는 OECD의 첨단 기술 제조업 정의와 지식 집약적 시장 서비스업의 정의를 따라 구분하였다. 첨단 기술 산업은 화학 제품, 의약품, 전기 전자, 정밀 기기, 자동차 및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 포함되고, 지식 집약 서비스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

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산업은 전반적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특히 중화학 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은 수도권 남부와 남동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지식 집약 서비스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업 구조와 혁신성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수출 산업 분야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각화를 통해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특히 상위 50대 기업이 43%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전 업종 500인 이상 사업체 수의 57.3%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반면,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체의 22.8%만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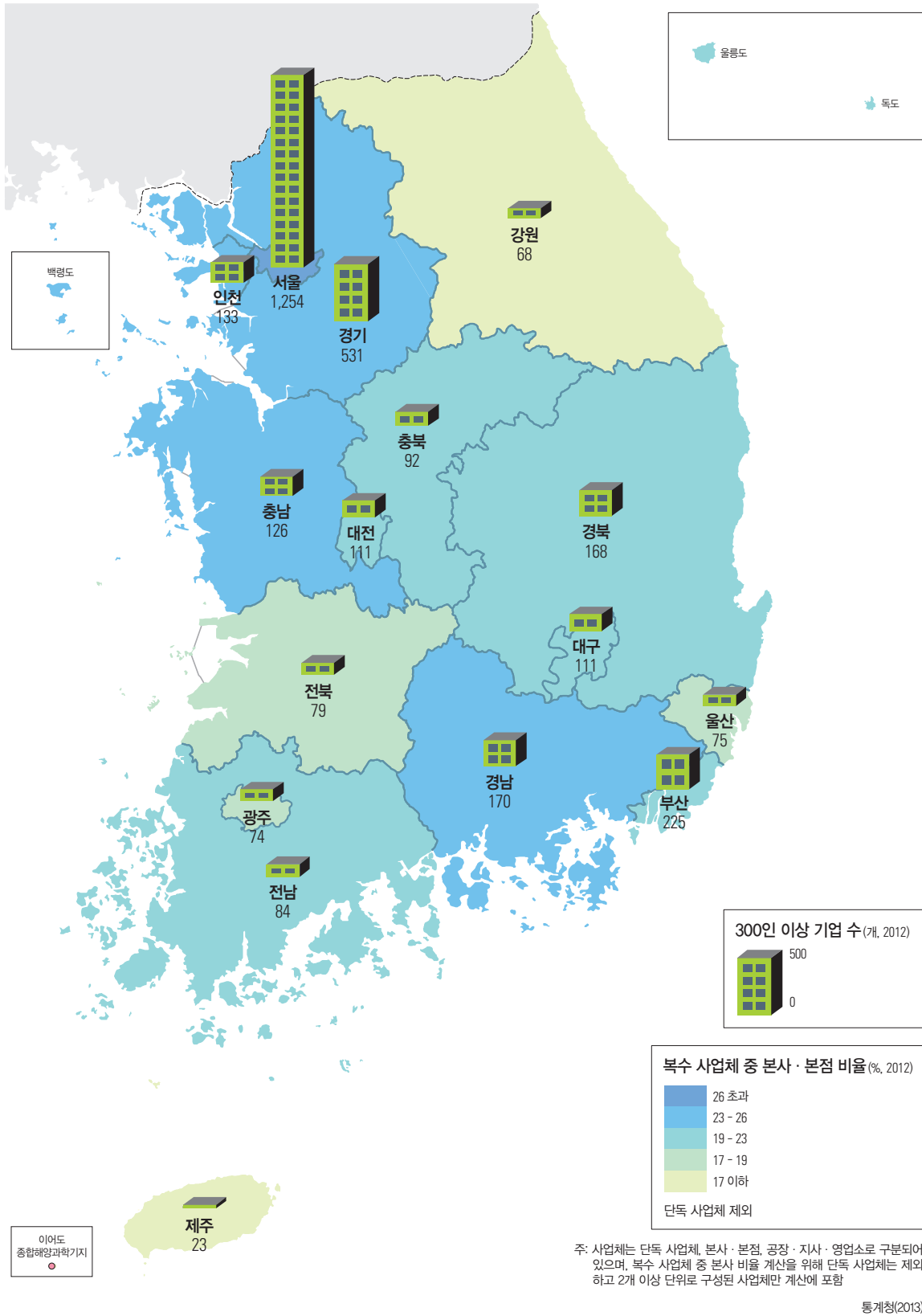
상 사업체 수가 본사, 공장, 영업소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입지가 그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본사 입지만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상장 기업 본사 중 서울에 529개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712개사가 있고, 비수도권에 288개사가 있다. 주요 대기업 본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70%가 넘게 입지하고 있어서 관리 통제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보여 준다.

한국의 산업은 1970년대 초까지 경공업 중심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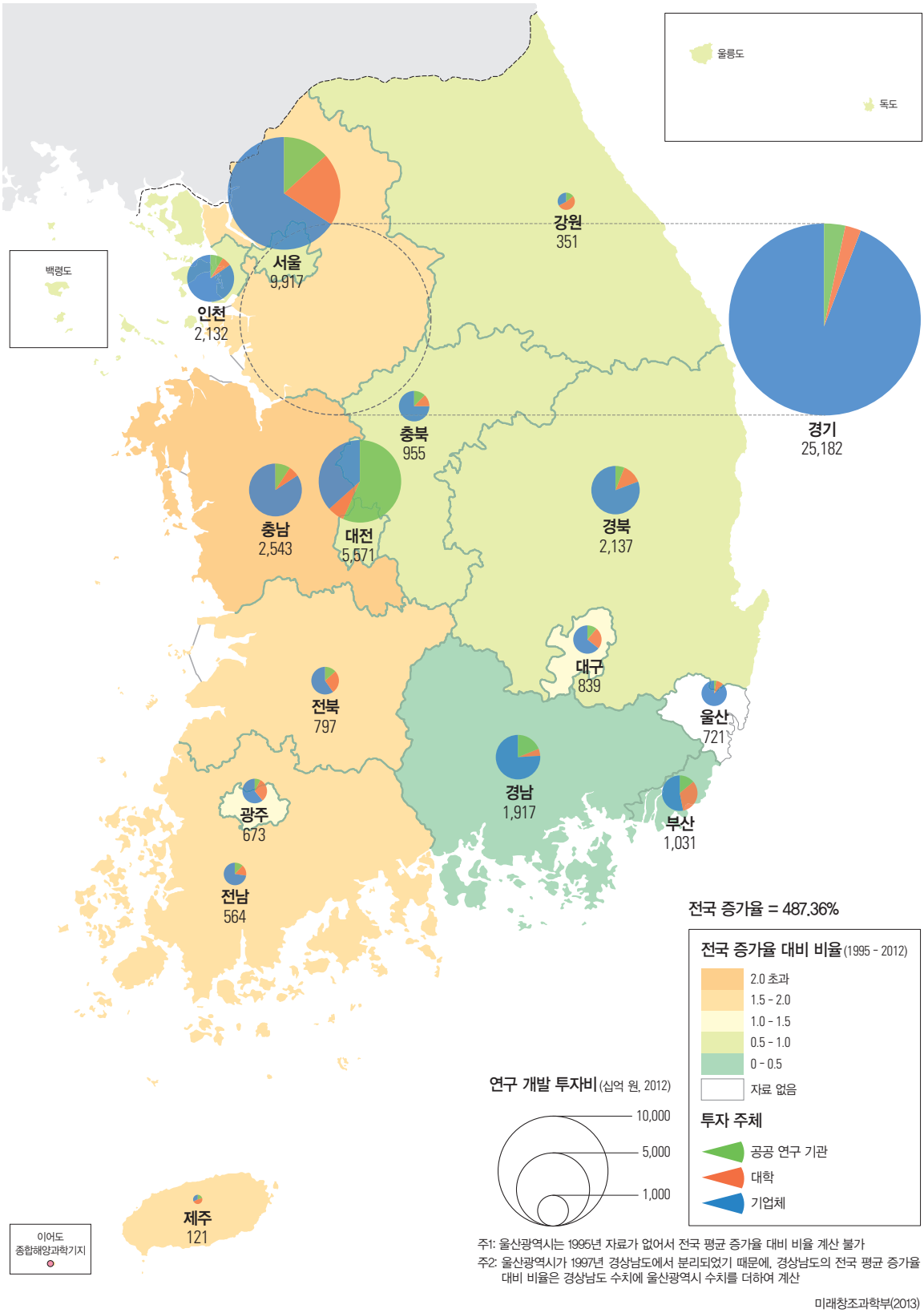
주도형 산업 구조를 유지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투자 주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기술 개발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 구조로 변모하였다. 연구 개발 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GDP 대비 1%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4%가 넘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성장세가 빠른 것이다. 주체별 연구 개발 투자비 비중은 1970년대까지 공공 연구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1980년

대부터 기업체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대 말부터 기업체 비중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5.4%, 서울이 17.9%를 차지하여 수도권이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주요 연구 기관이 집적해 있어서 공공 연구 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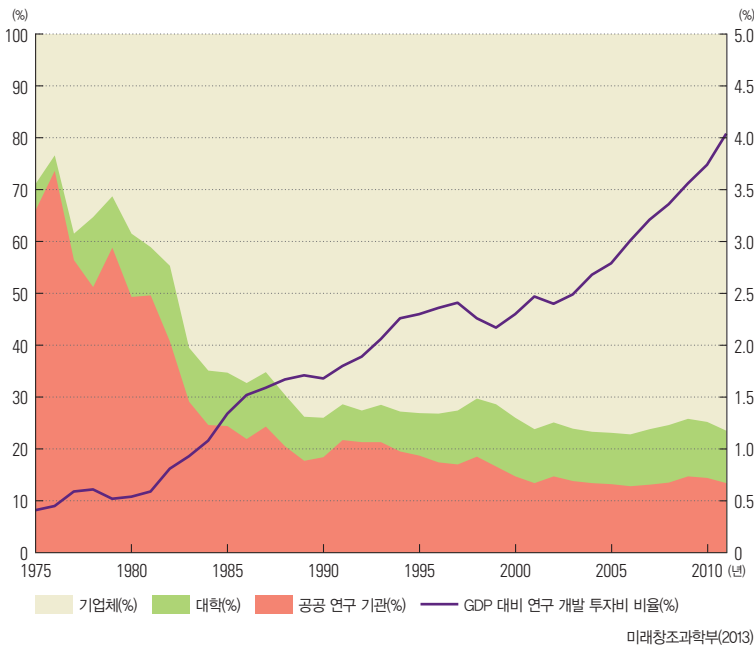
기업 조직 및 규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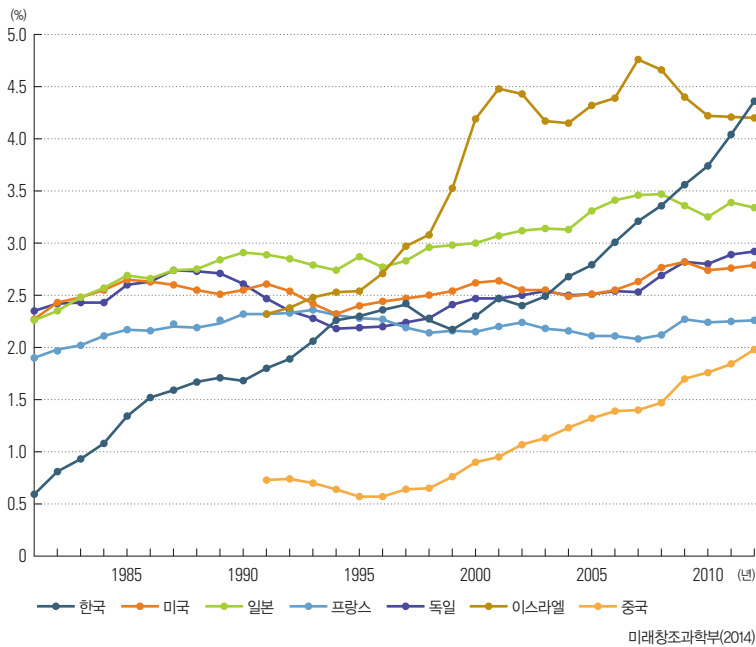
시·도별 연구 개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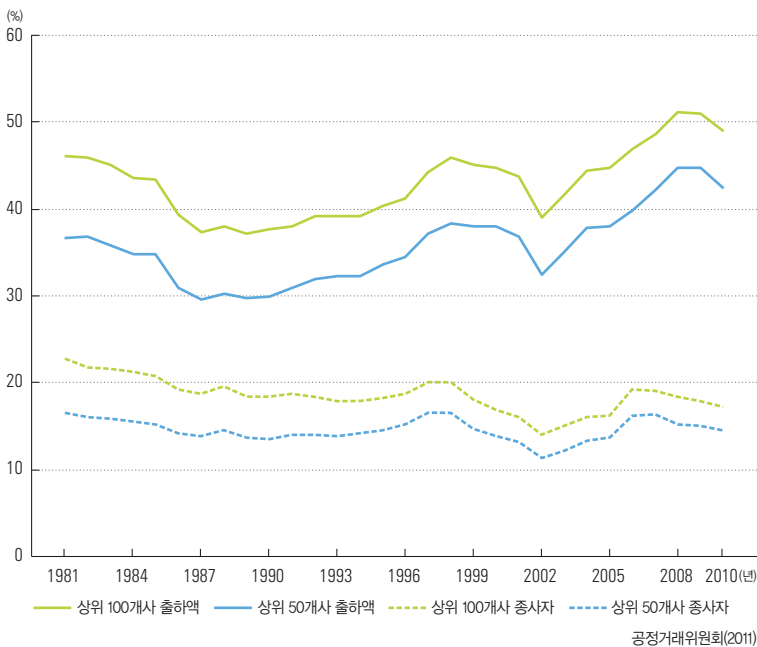
주체별 연구 개발비 비중 변화



주요 국가별 연구 개발비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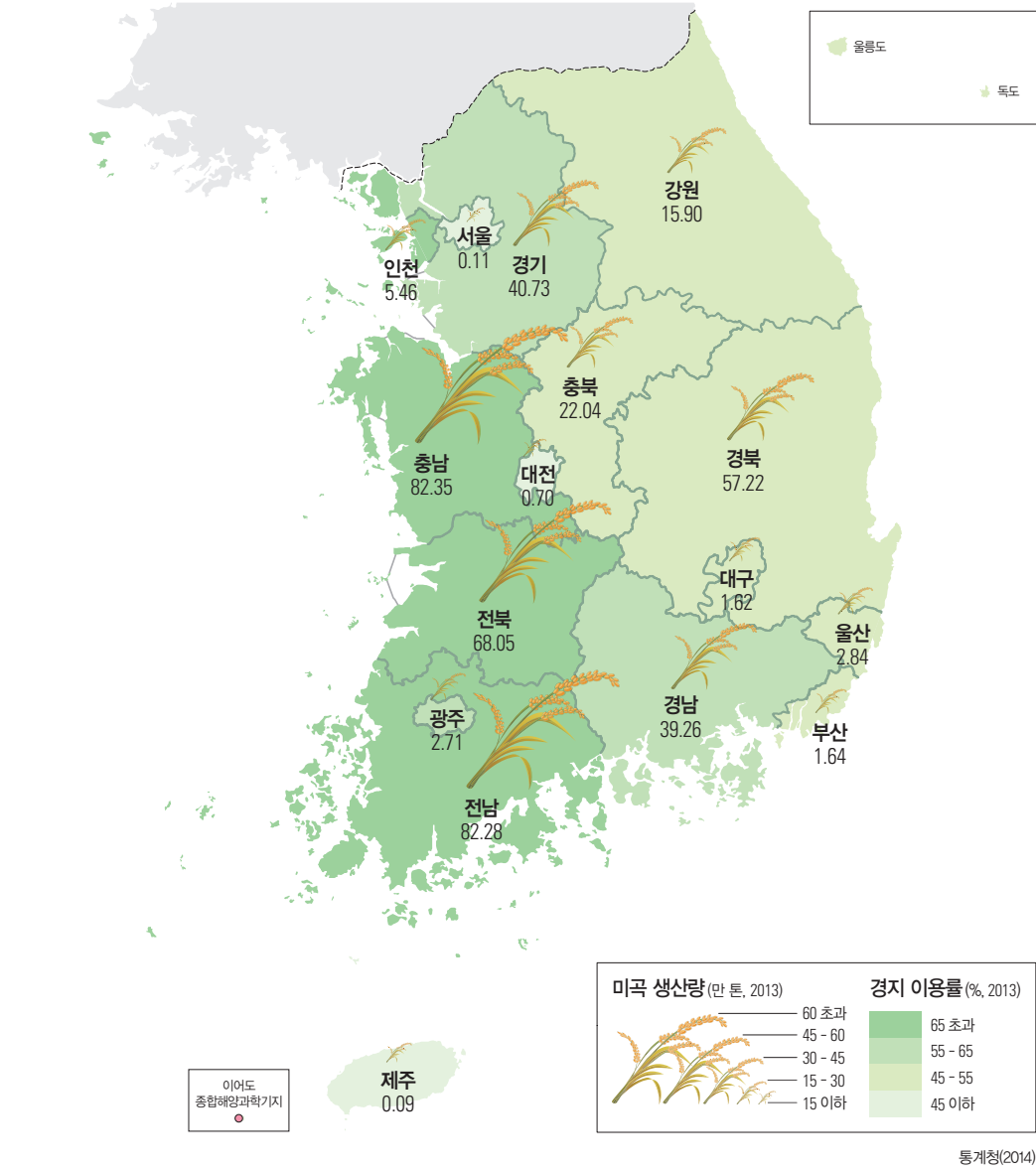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



자원 분포와 에너지 소비

식량 자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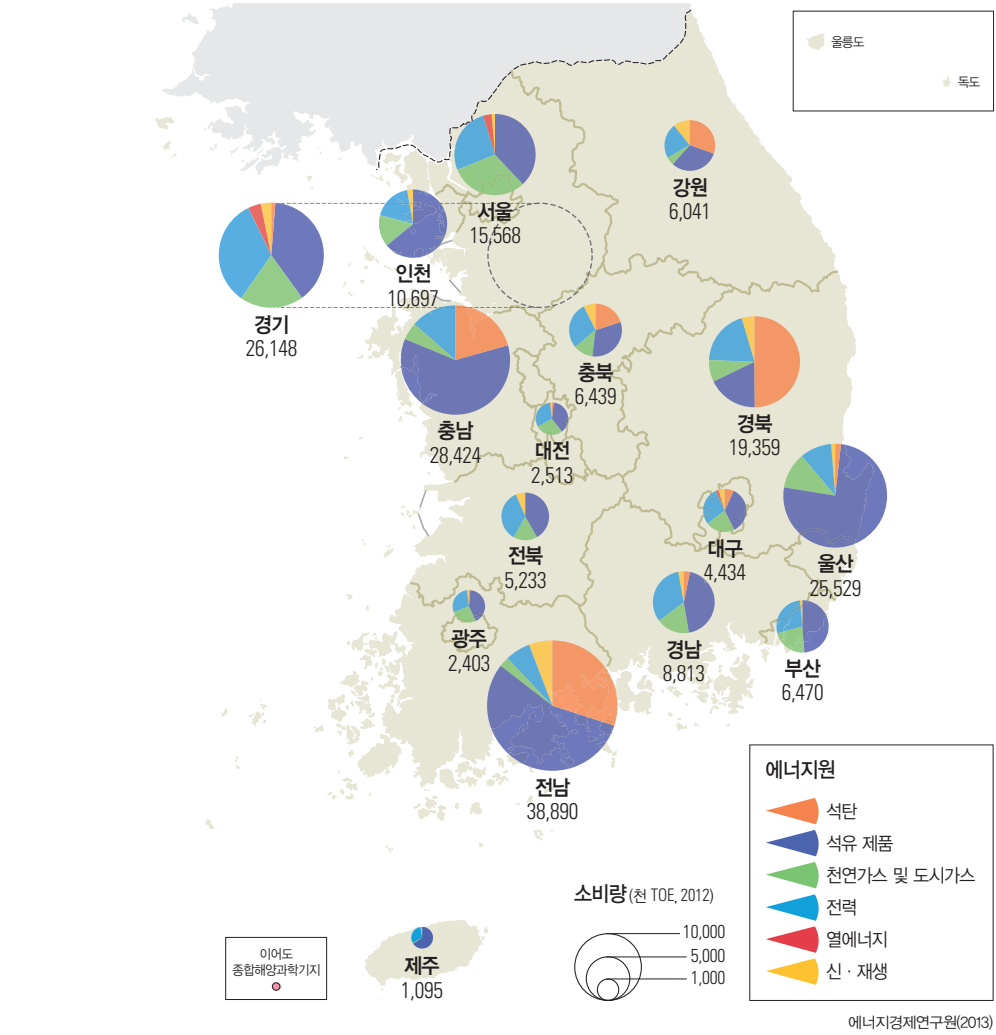


여러 가지 자원 중 식량 자원과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량 자원 중 농산물의 산출 구조를 농업 총생산액으로 살펴보면, 경종 작물(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등)과 축산의 생산 비율은 1950년대 초 9:1이었던 것이 점차 축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7:3 정도의 비율로 변화하였다. 특히 농산물 중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50% 이상에서 점차 감소하여 30%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곡의 생산은 전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의 생산량이 많다. 농산물의 전체 재배 면적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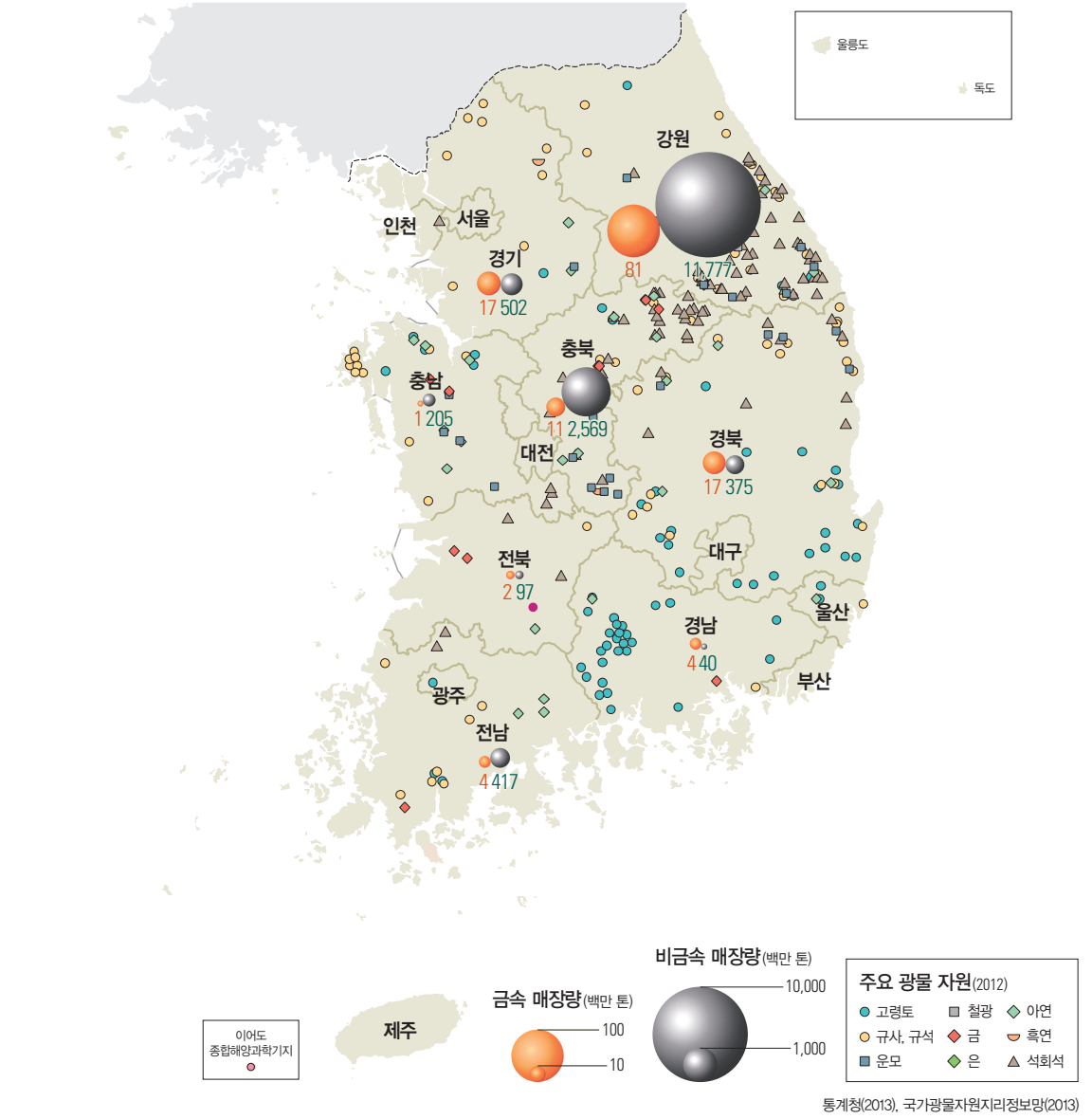
속 감소하고 있고, 개별 작물의 재배 면적도 공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약 300종이고, 이 중 유용한 광물은 140여 종에 이른다. 그렇지만 광물 자원으로 채굴되는 것은 20종 정도이며, 매장량이 풍부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하자원으로 산출되는 광물은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로 구분된다. 금속 광물 중 철, 망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아연 등은 강원도 태백산 광화대(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일원)에, 동은 태백산 광화대 및 경상남·북도 일원에, 금·은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으나 부존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

에너지원별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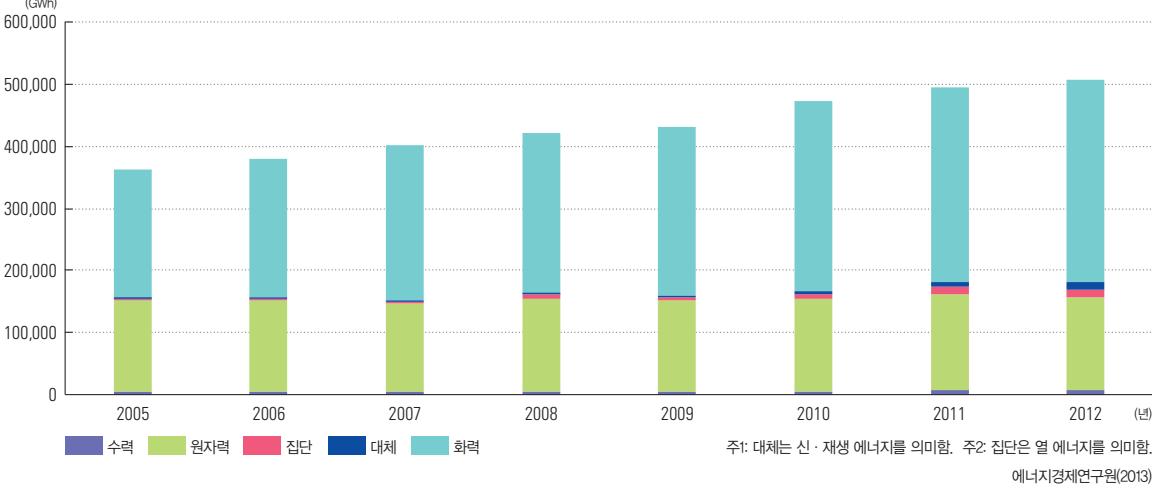
광물 자원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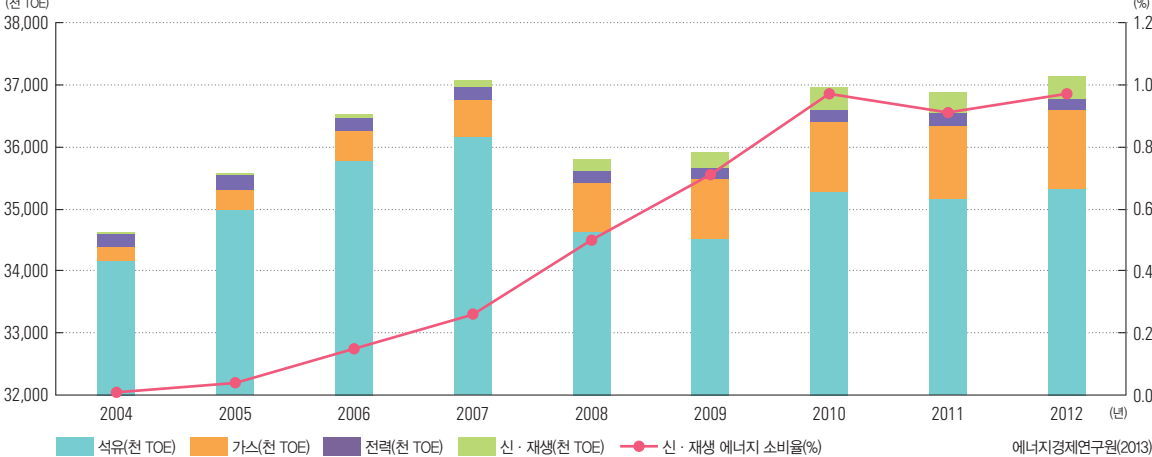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자원은 석회석, 고령토, 석탄 등인데, 석회석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지에서 채굴되며 채굴량은 시멘트 공업의 성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석회석, 규석 등은 한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석탄 자원은 무연탄, 갈탄, 토탄이 있으나 갈탄과 토탄은 부존 상태가 불량하고 경제성이 희박하여 개발되지 않고 있다. 무연탄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및 경기도 일원에 분포해 있지만, 절반 이상이 태백산 지역의 탄전에 매장되어 있다. 실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태양력, 수력,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구분된다. 석탄이나 수력과 같은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95% 이상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액이 1/4 정도에 달하고, 수입 에너지에서 원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순으로 나타나고,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을 살펴보면 화력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량



국민 경제 활동의 변화

국민 경제 활동은 고용과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고용은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구성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구직 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외하므로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있고, 이에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률은 대체로 일자리가 많은 도

시 지역에서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은 영향이 크다. 한편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인구 대비 실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비도시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높더라도 이들이 일할 의향이 없거나 실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농촌 지역은 농업·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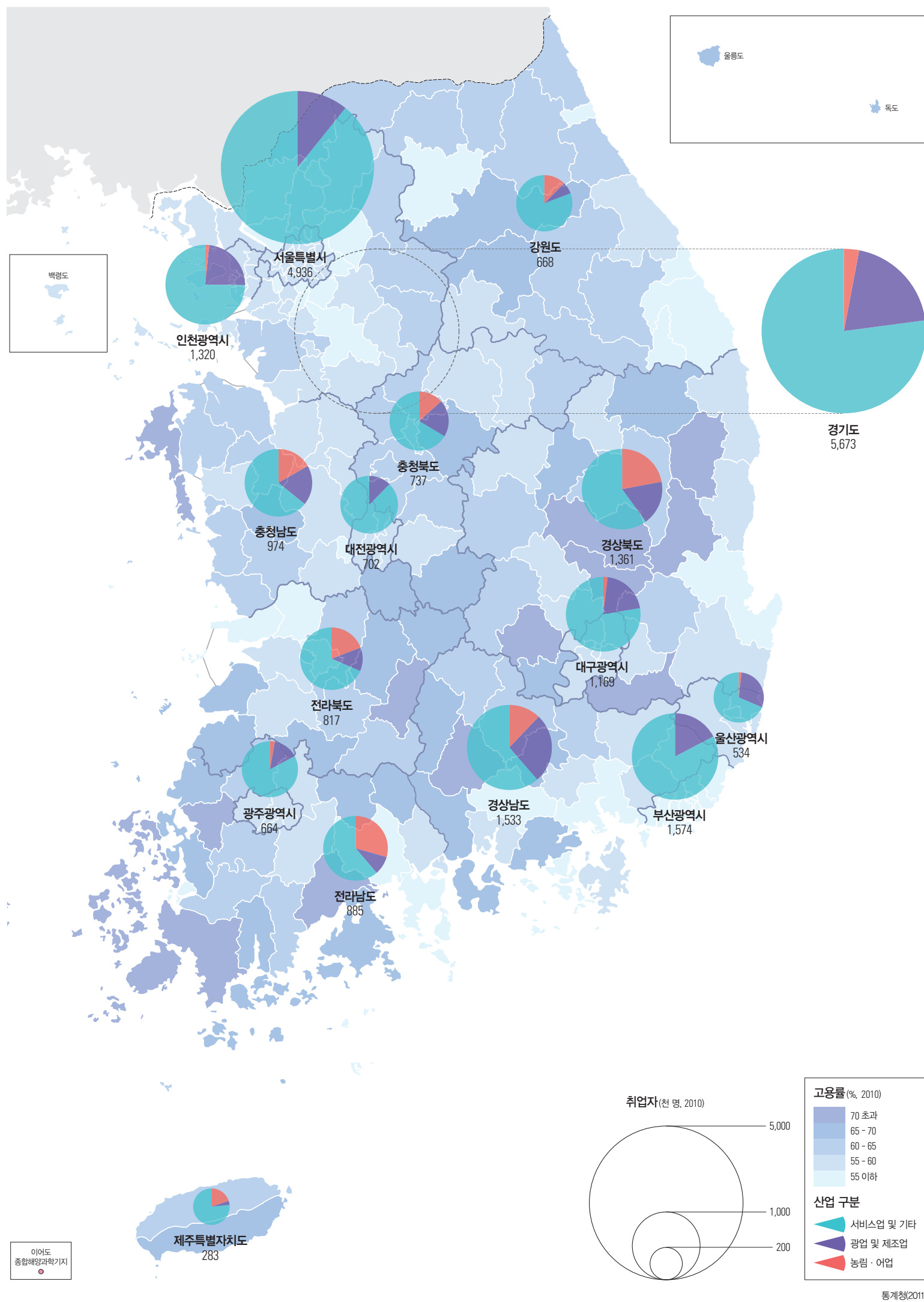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

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기준 시점(2010년)의 지수(100)와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거시 경제 지표로서 가구 부문 전체의 물가 상승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010년이 100이라고 할 때 1975년은 11.0, 1985년은 34.2, 1995년은 60.2, 2005년은 86.1의 물가 지수를 나타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신 부문 물가 지수가 1985년 이래 감소하고 있고,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던 오락 및 문화 부문 물가 지수는 이후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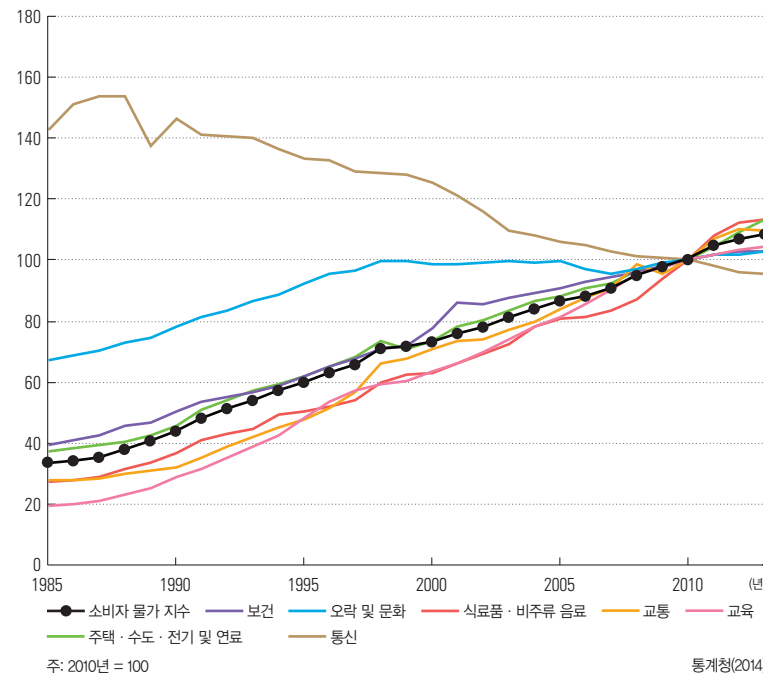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 이는 국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 노동 쟁의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1997 외환 위기 당시 경제 성장률, 국민 총생산, 수출입, 외환 보유고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하락을 보인 반면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에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국민 경제 활동 전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 성장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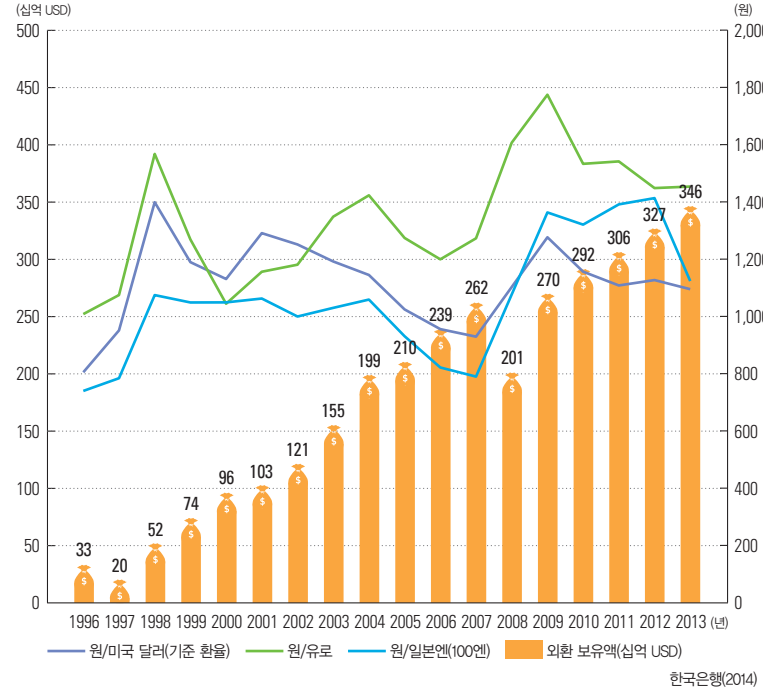
고용률과 산업별 취업자 비중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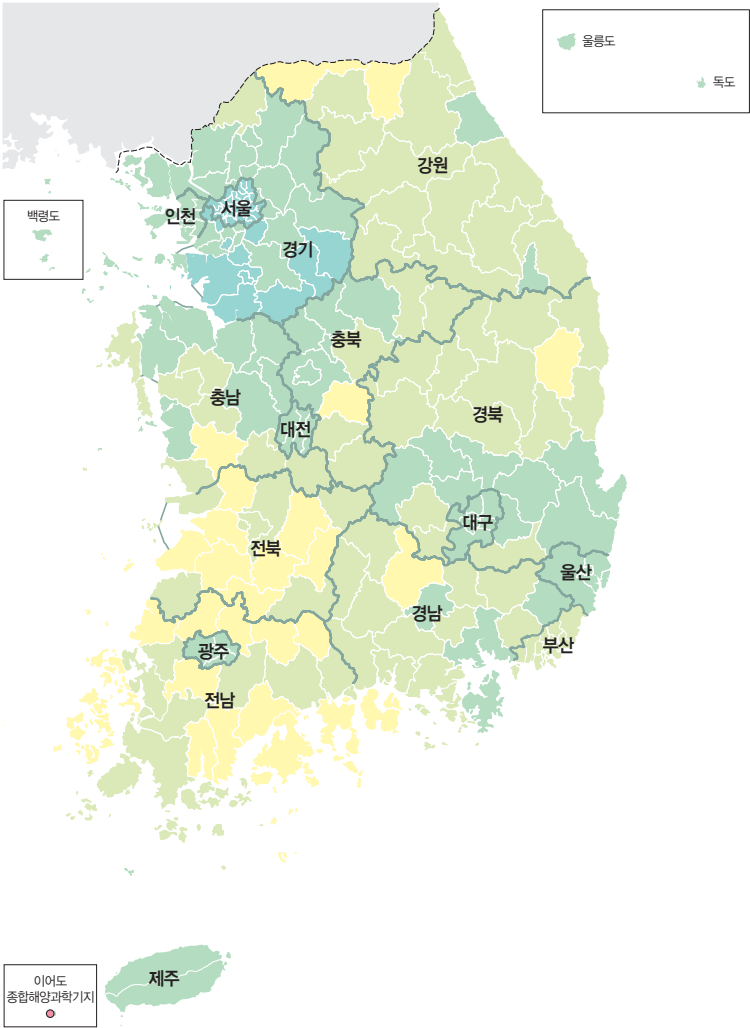
환율과 외환 보유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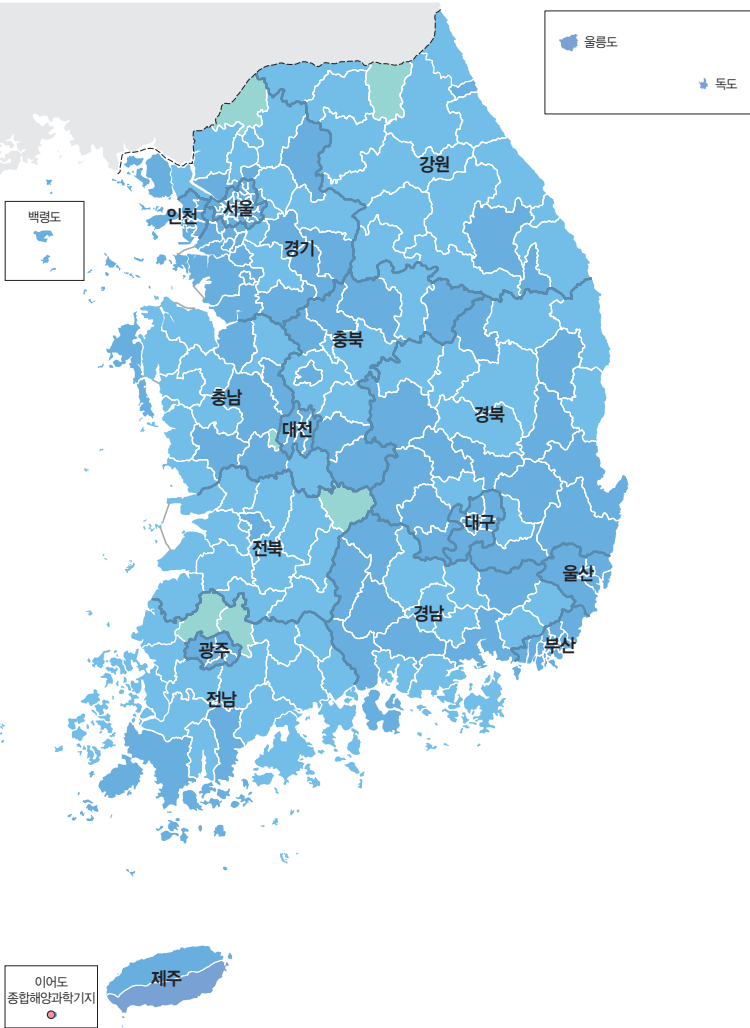
금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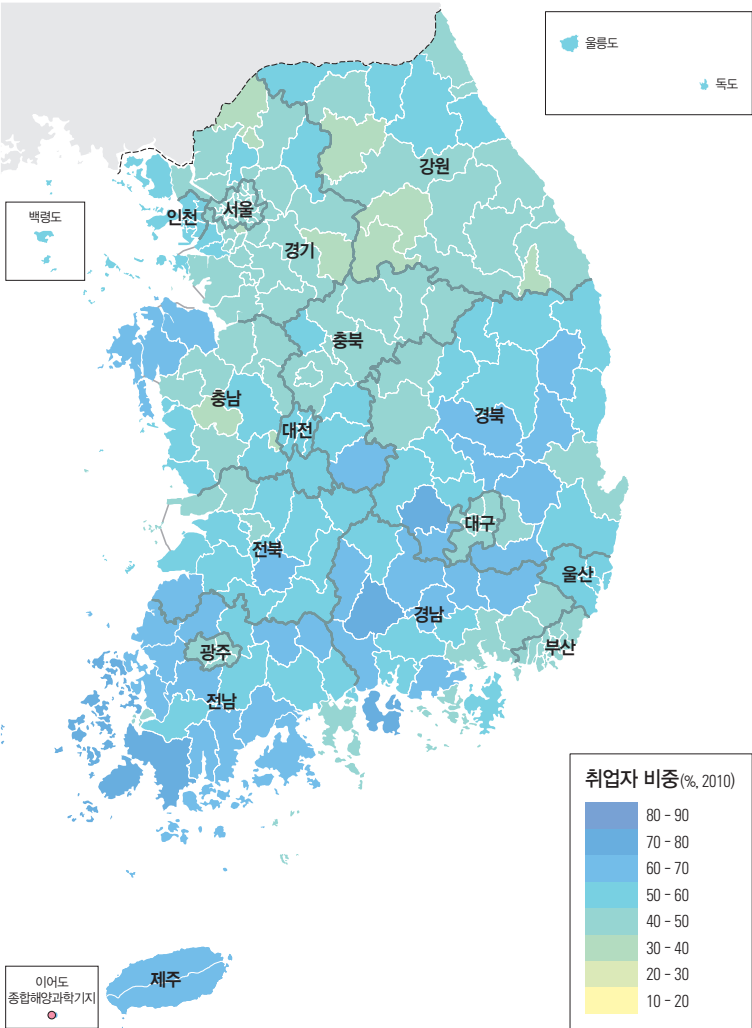
15~29세 취업자 비중



30~49세 취업자 비중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통계청(2011)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지난 60년 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에는 저숙련의 노동력이 풍족하게 공급되는 상황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정보 통신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 교육, 경험, 능력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50% 초반에서 2013년 60%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70~75%

수준에서 등락해 왔던 것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30% 중반에서 최근 50% 가까이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여성 노동력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노동 집약적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졸 또는 대졸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보육 시설의 확대, 평균 근로 시간 단축,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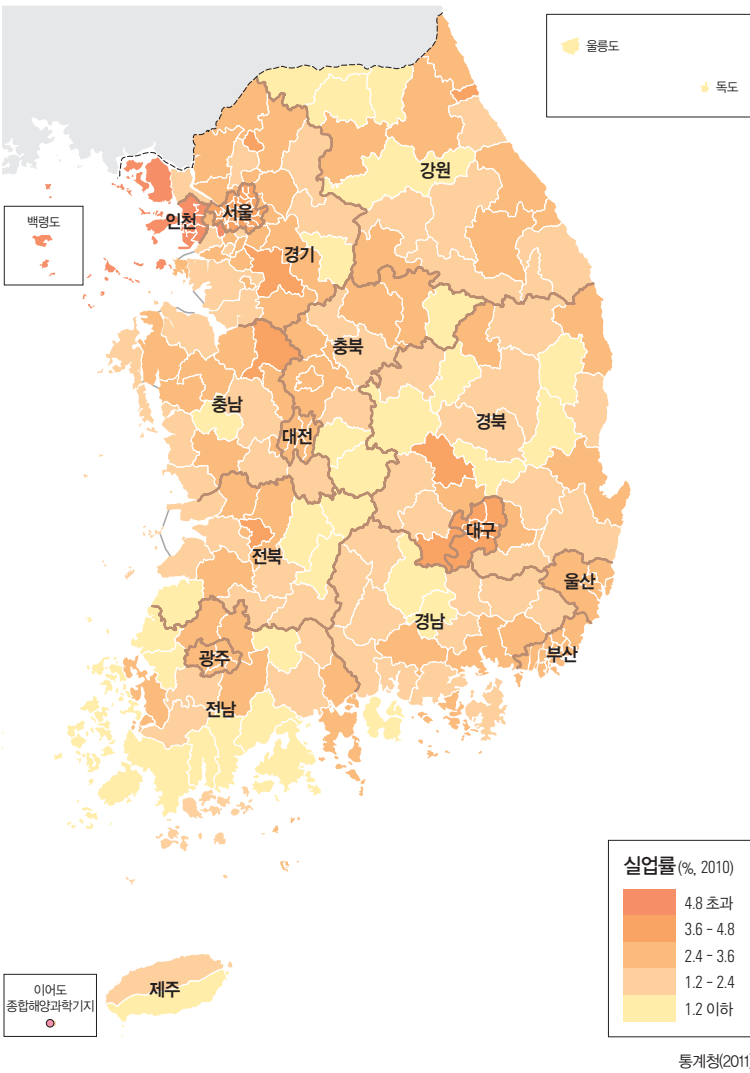
세대 간 부양 및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녀 세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높았던 것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하여 남성 노인의 경우 평균의 80% 초·중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50% 중반 정도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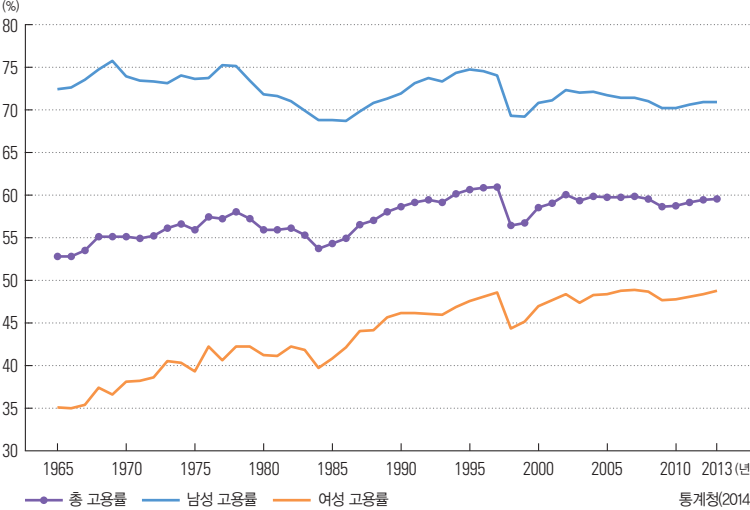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서울과 경기 남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순창군, 곡성군 등 남서부 농촌 지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5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의 경우에는 남부 도서·산간 지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이 낮게 나타나서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학력 상승에 따라 고학력 실업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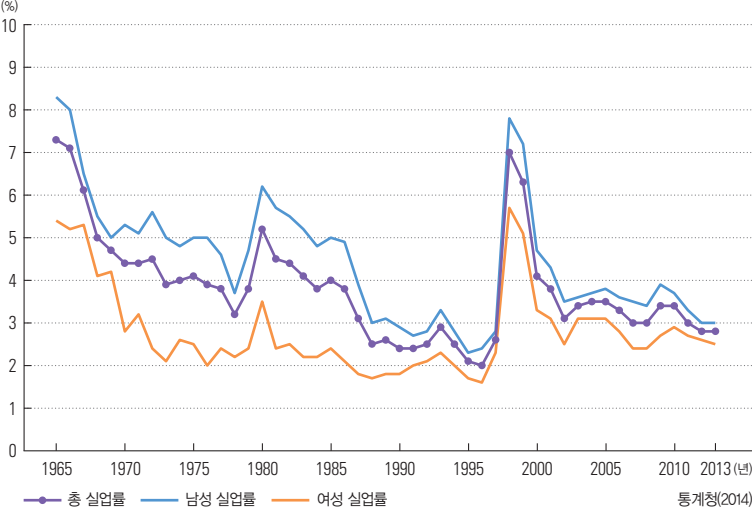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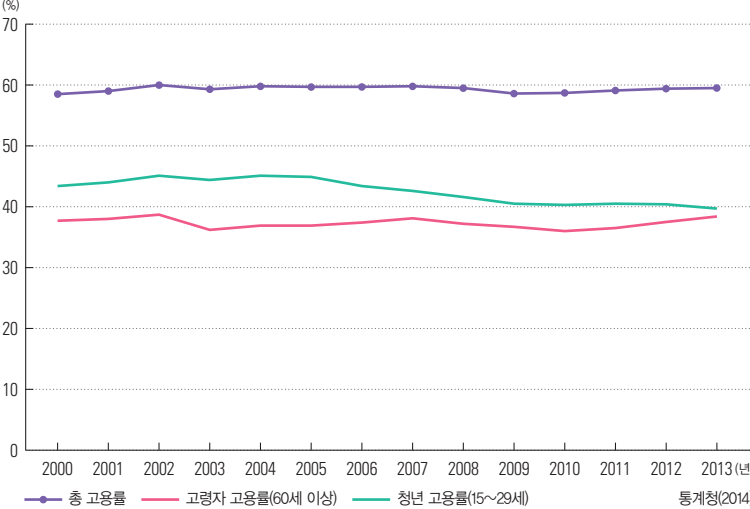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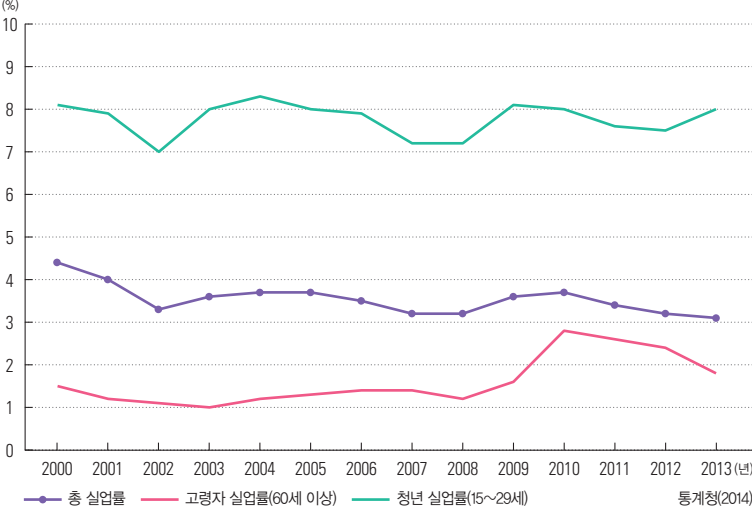
성별 실업률 변화



연령별 고용률 변화



연령별 실업률 변화



삶의 질

행복은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이고 삶의 지향이다. 그러나 그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산업화 초기 양적 성장 지향의 개발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 지향의 관리 시대에 접어들어, 경제적·객관적 지표 위주의 행복 수준 평가가 사회적·주관적 지표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 자체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부, 지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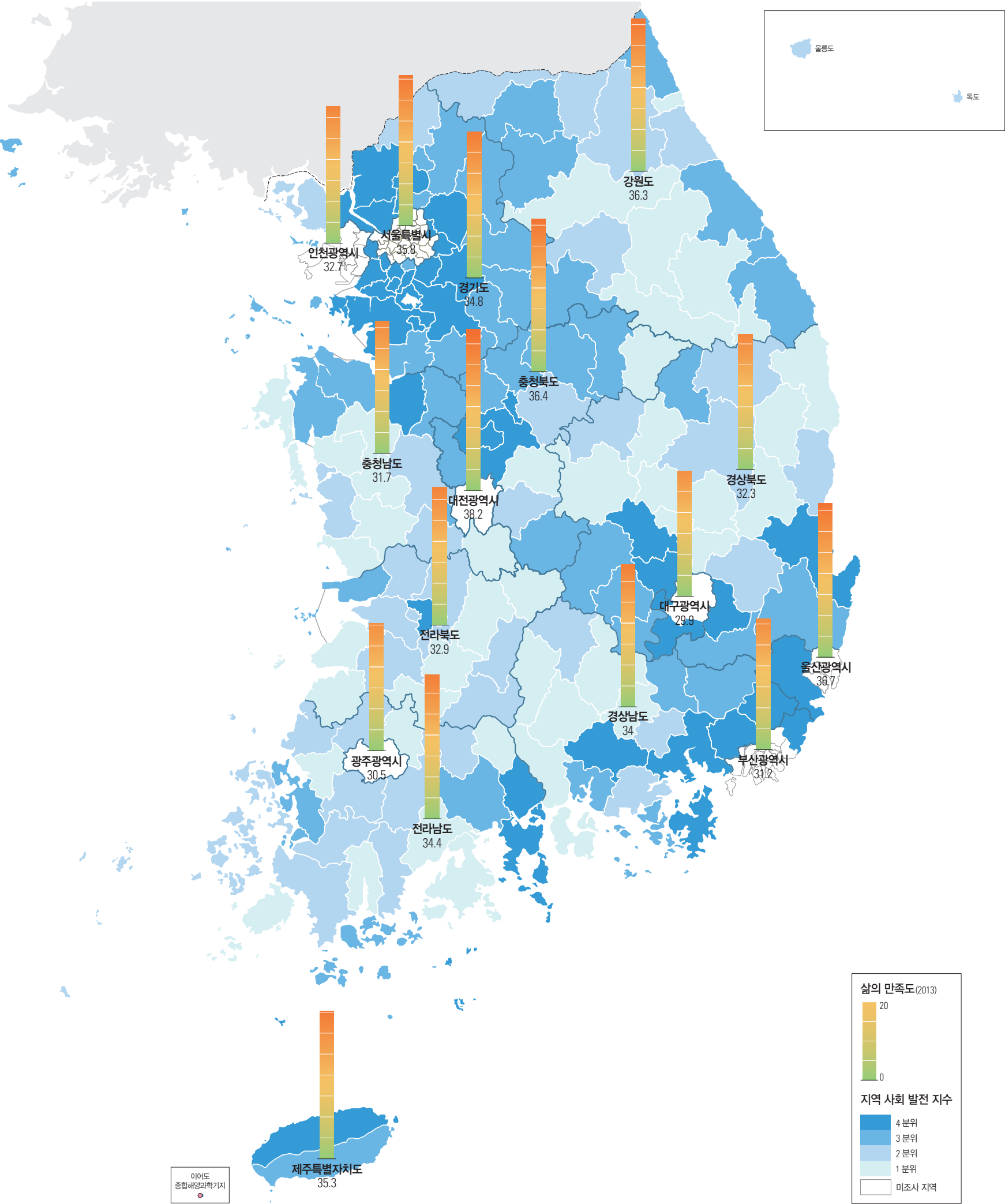
치단체, 학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미디어에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 간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개인의 행복을 지표화하는 데 금전이나 효용 등 단일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평가의 기준이 단일한 것이냐 다면적인 것이냐

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행복 수준의 해석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단일 개념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다. '삶의 질'은 금전이나 효용 등 단일 지표에 의한 행복 수준의 평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한 사회나 한 개인의 행복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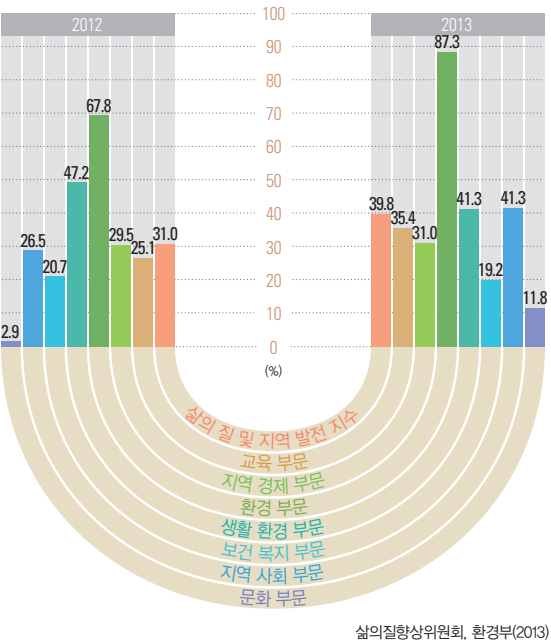
미를 공유하려는 공식적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있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해마다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민간 기관에서도 그들의 관심과 기준에 의해 삶의 질을 정의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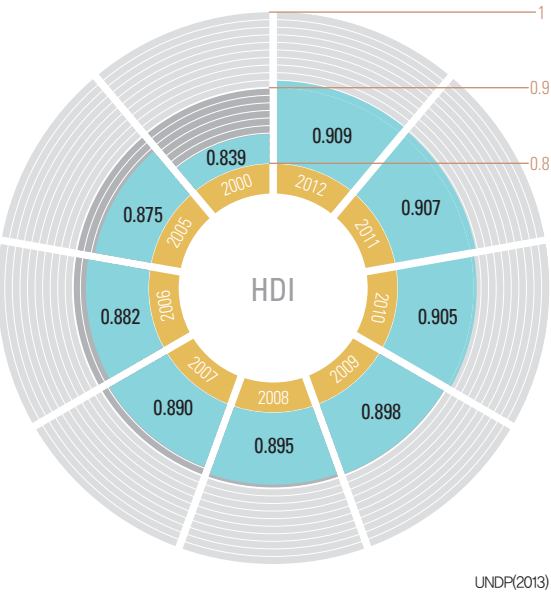
행복 지수(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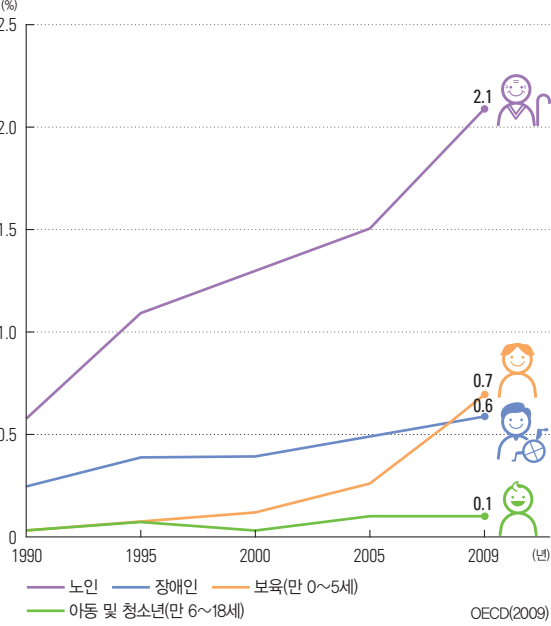
삶의 질 부문별 지표 전국 통계



인간 개발 지수(H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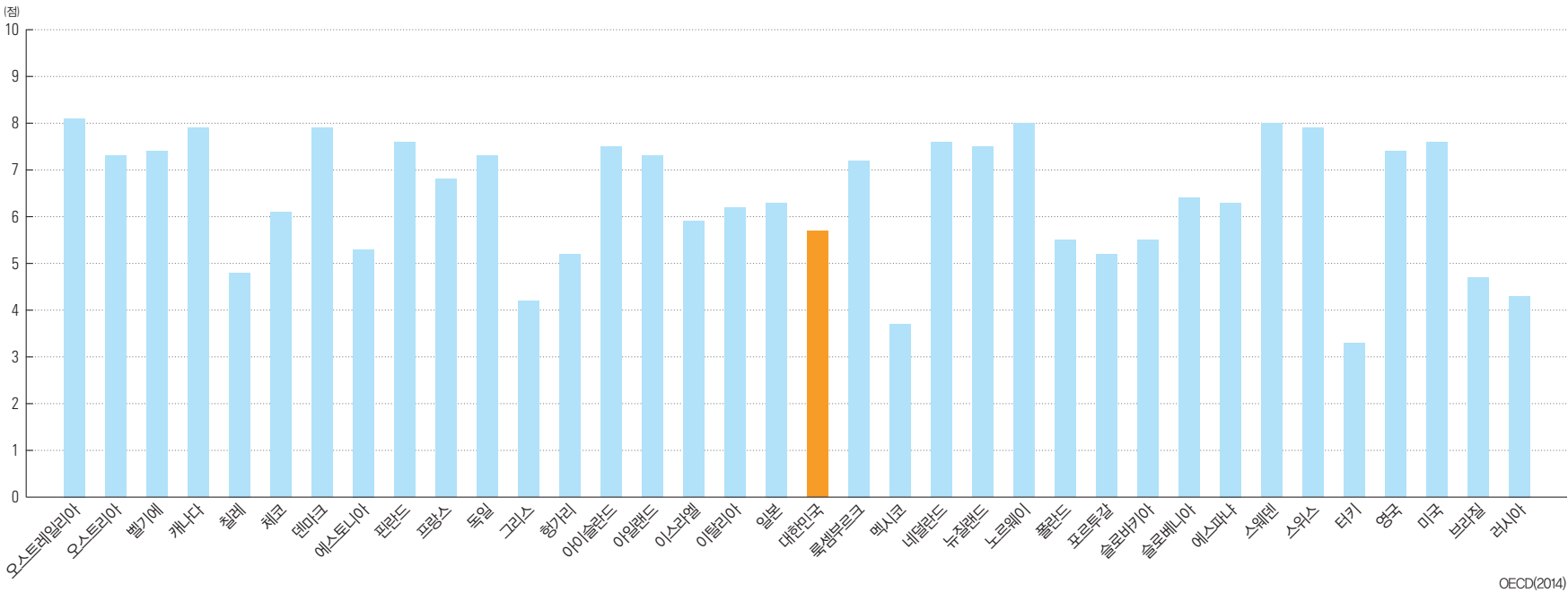


분야별 GDP 대비 복지 예산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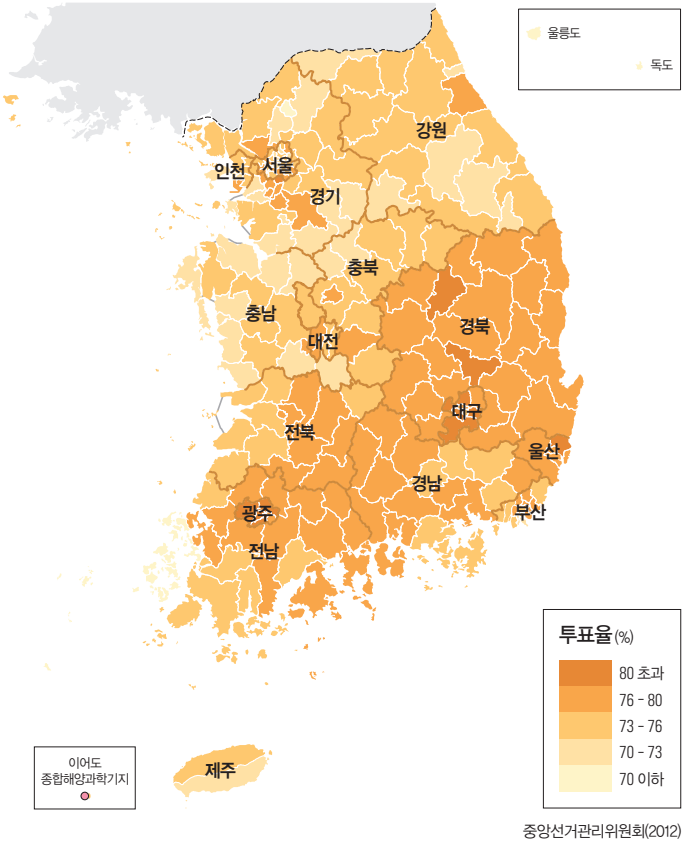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 (OECD Better Life Index)는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평가에서 교육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일·여가 균형, 삶의 만족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의 결과는 주로 많은 노동량으로 인해 개인 여가의 기회가 줄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의 문제가 있는데, 상위 10%는 하위 10%의 10.5배의 소득을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가 9위로, 최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같은 사실은 GDP 등의 거시적 경제 지표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민들의 실제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 삶의 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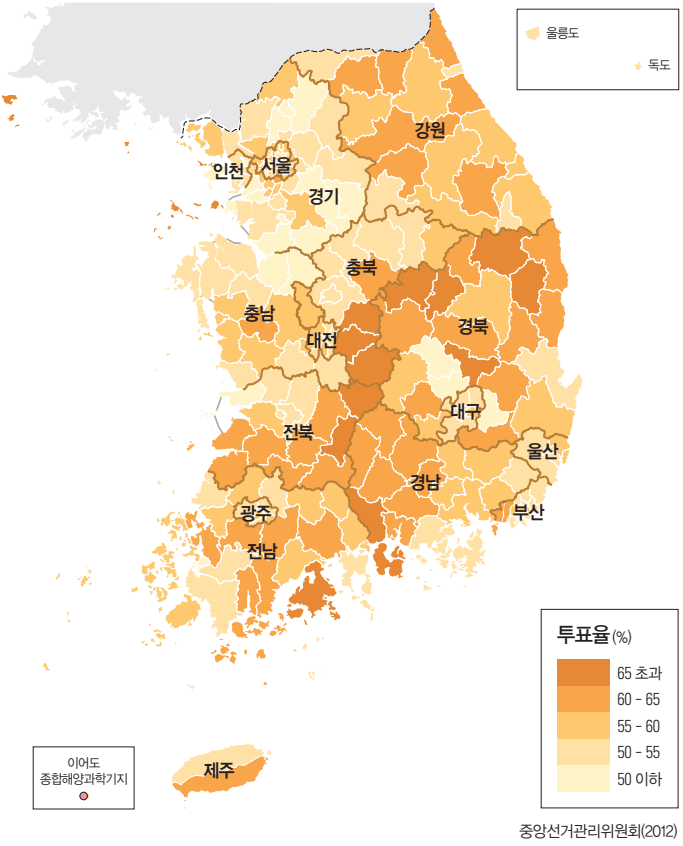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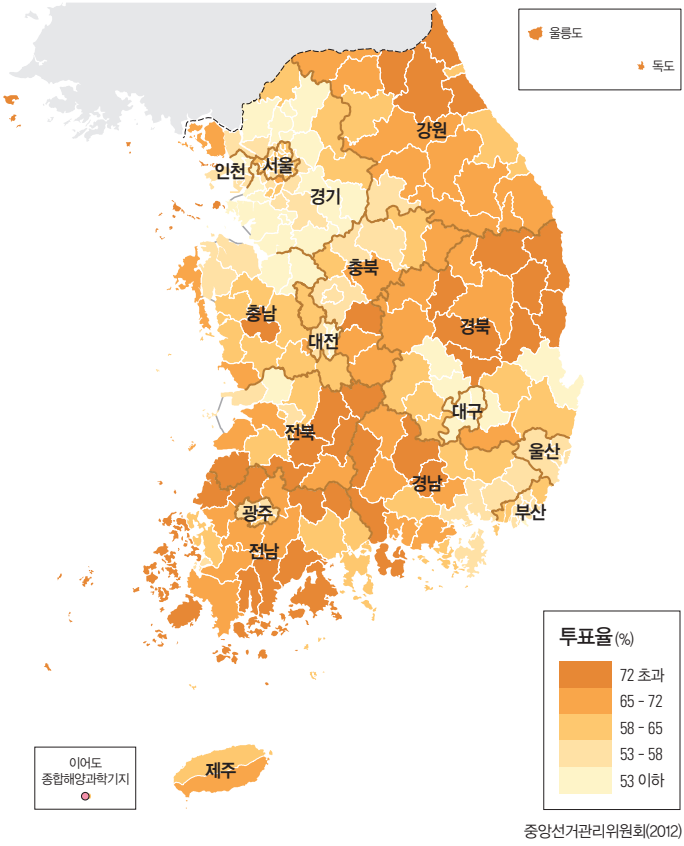
제18대 대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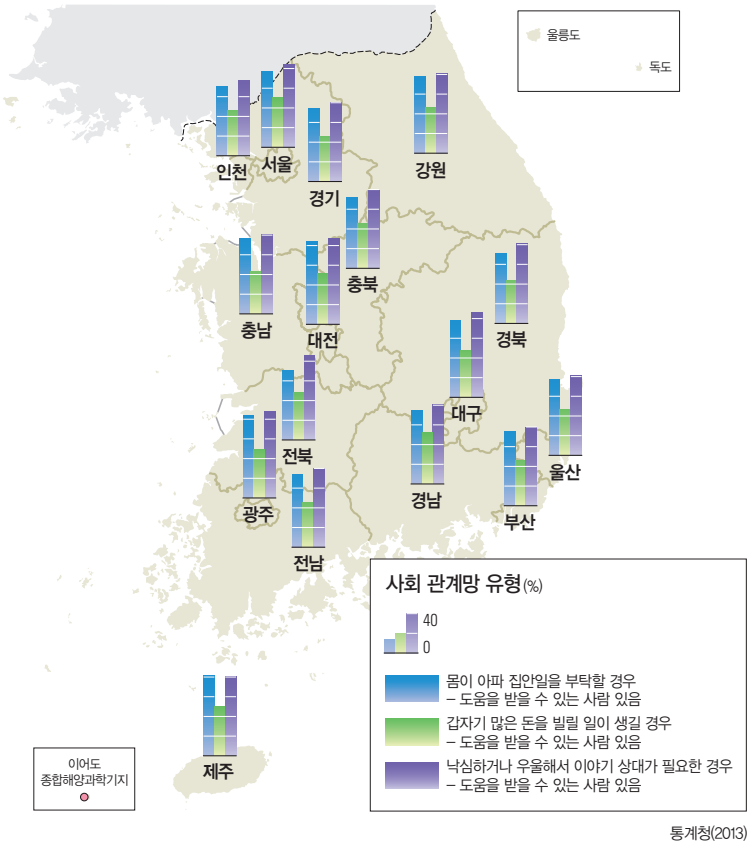
제19대 총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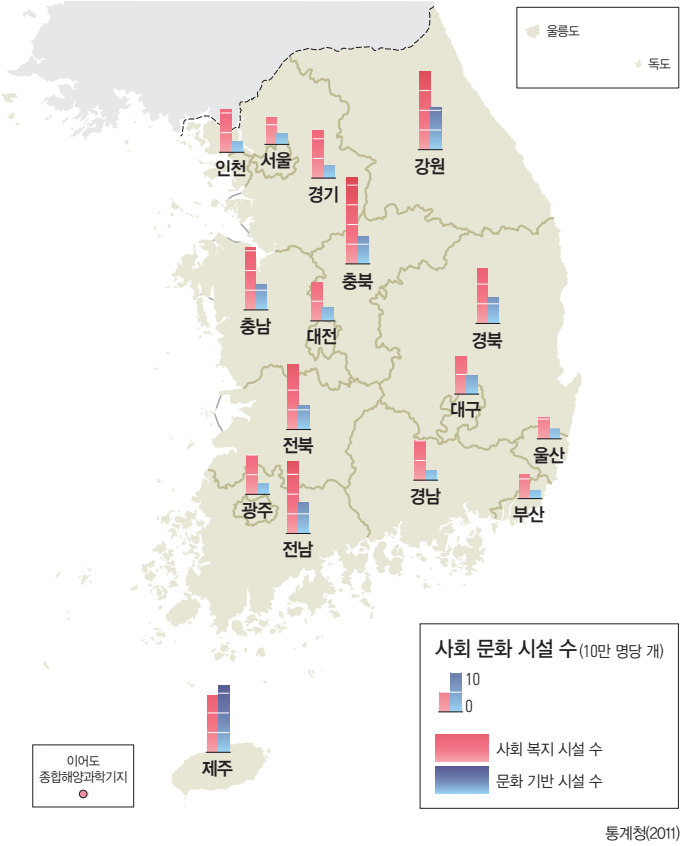
제6대 지방 선거 투표율



사회 관계망



사회 복지·문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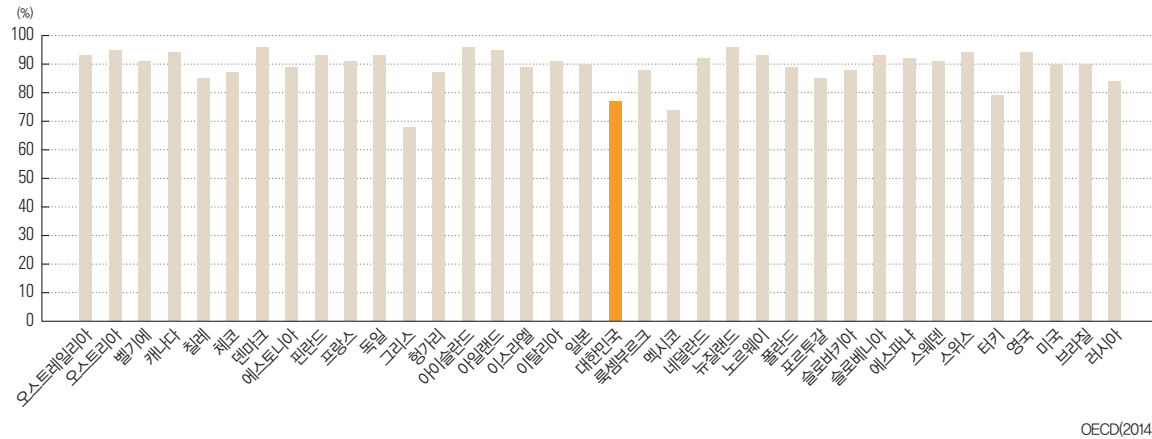


시민은 사회 참여로부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삶의 질의 현재 수준을 가능하고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천을 모니터링한다. 민주주의 태생의 근원인 시민 사회의 개인과 단체의 활발한 사회 참여 전통은 사회의 소속감과 건강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 참여는 다양한 모습을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이며, 선거와 투표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방식이다. 높은 투표율은 시민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운영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집단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 할 때, 서로 다른 집단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낮은 투표율은 그러한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와 투표는 중앙 정부의 대통령 선거, 지방 정부의 지방 선거, 나라를 대표하는 민의 기관인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투표율의 전반적인 경향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시민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사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개인별 사회 관계망 존재 여부와 사회 복지 시설·문화 시설 수준은 삶의 질 수준 평가에 역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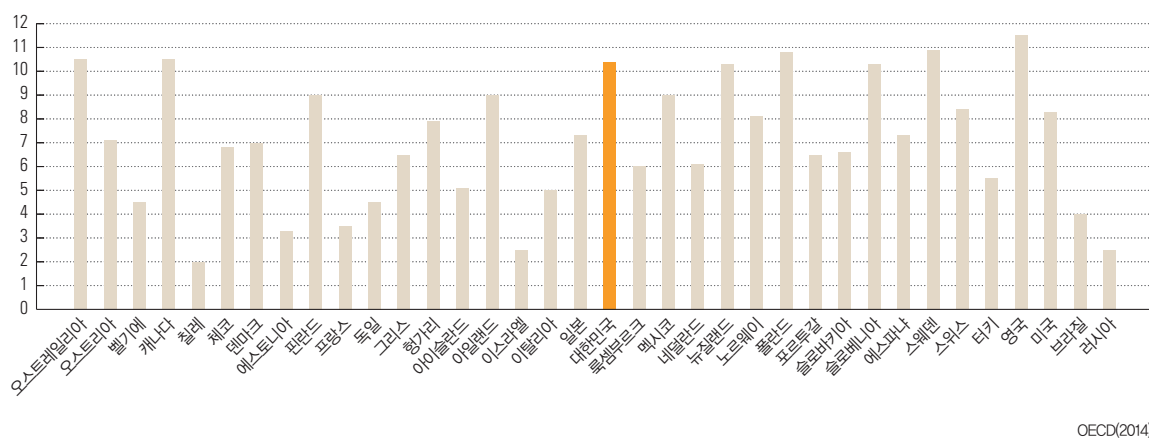
사회 관계망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지표는 타인과의 접촉 빈도와 개인적 관계의 질이 행복의 중요 요소임을 나타낸다. 규칙 제정 시민 참여는 정부의 법 제정 투명성의 수준 지표로서, 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 공식적인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표현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회 통합과 행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높은 투표율은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정치 과정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OECD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92%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한 반면, 초등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85%만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답을 하였다. 또한 OECD 전체 국가에서 39%의 시민들이 그들의 중앙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규칙 제정 시민 참여에 의한 정부 신뢰는 정부의 책임성, 경제 활동 효율성, 정부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증진시킨다. 투표 참여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OECD 평균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투표율의 차이는 10%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9%에까지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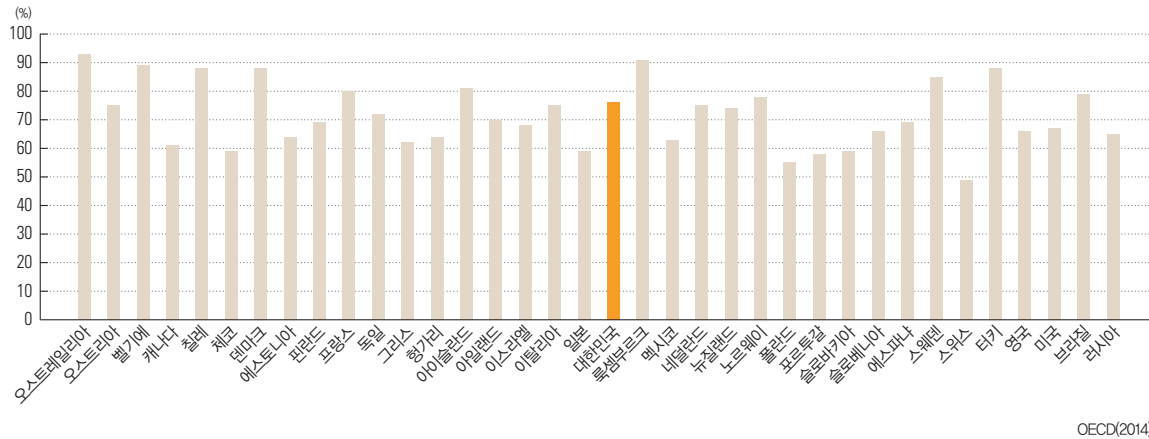
사회 관계망의 질



규칙 제정 시민 참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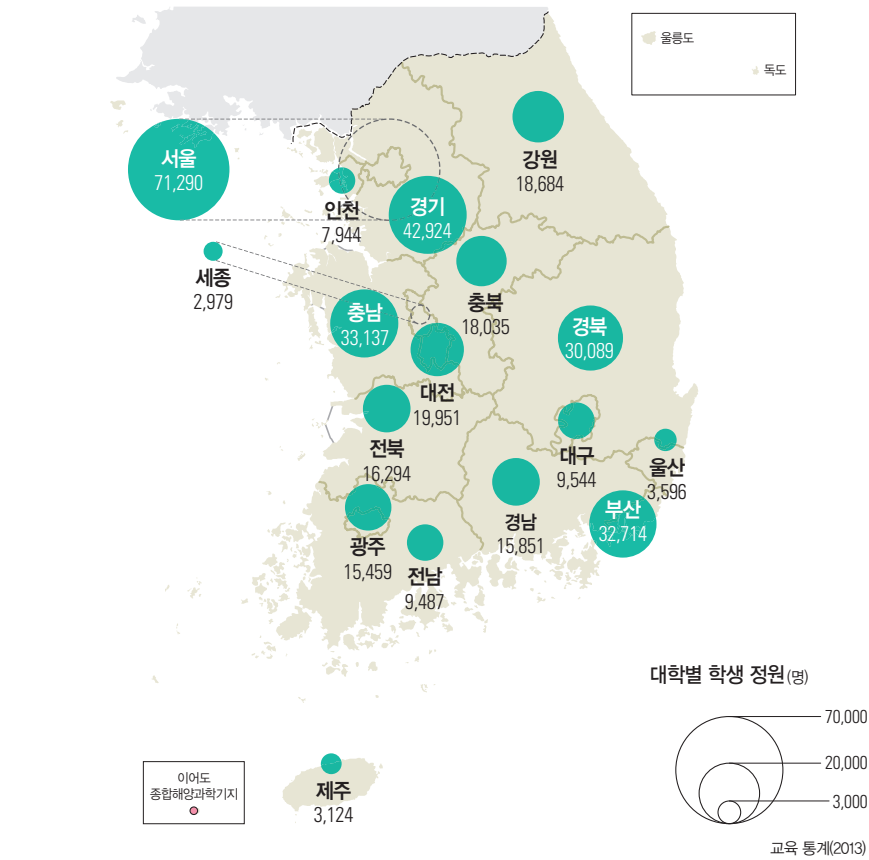


투표 참여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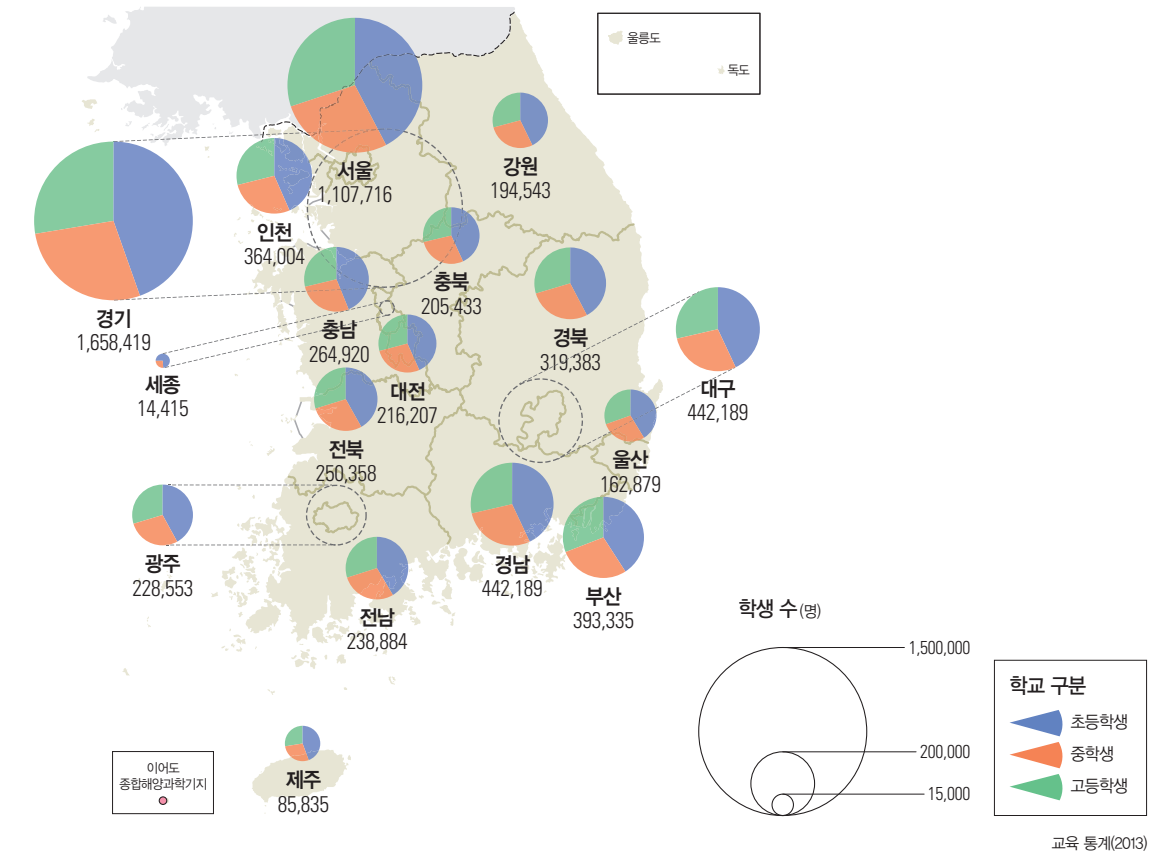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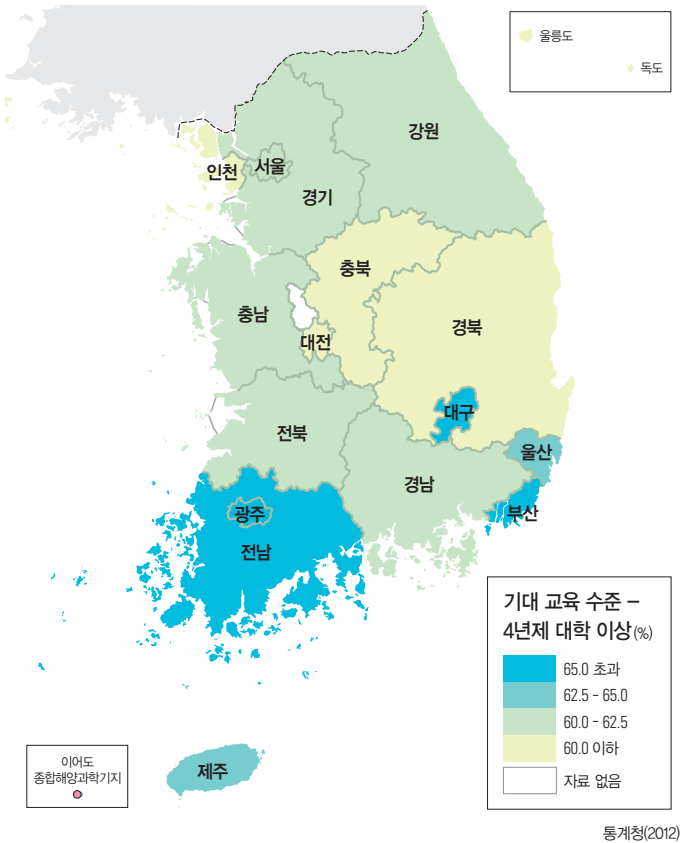
시·도별 대학 입학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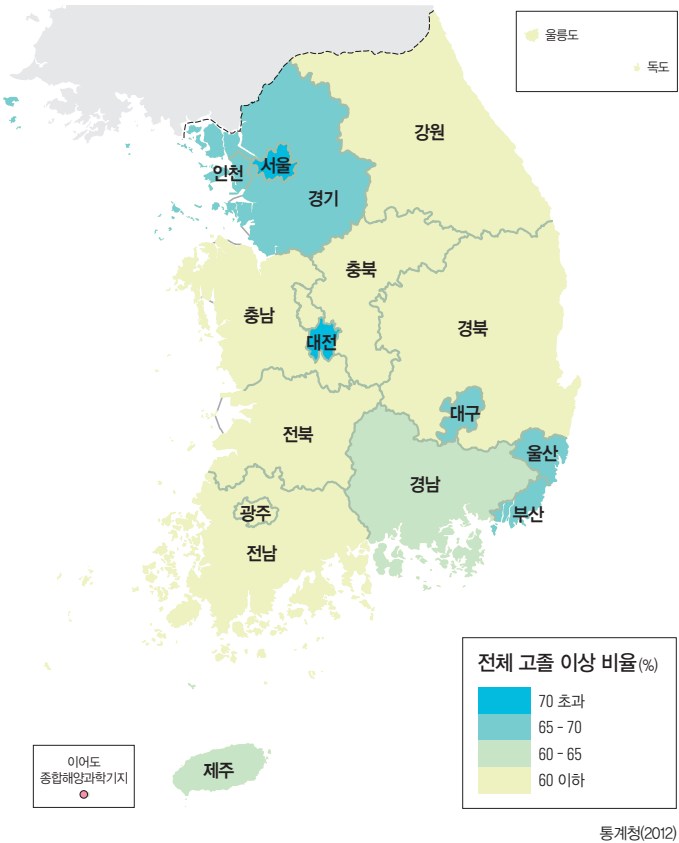
시·도별 초·중·고 재학생 수



시·도별 기대 교육 수준



시·도별 고졸 이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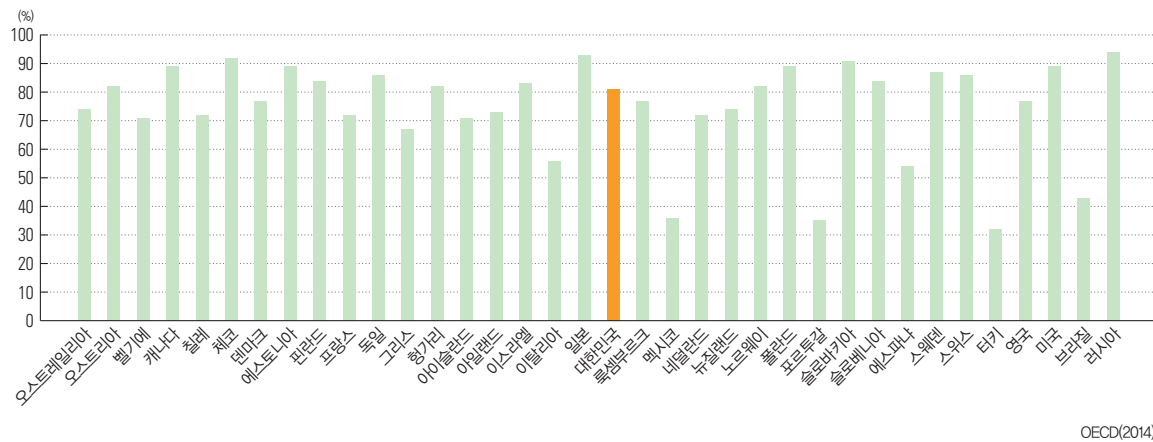
적정 수준의 교육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교 문화권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었다. 광복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은 피교육자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국가 발전과 개인의 성취를 위해 효율성 제고와 경쟁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육은 그 중요한 성취 과정이라 한다면,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가는 행복을 인격 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얻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과 성취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OECD는 교육의 수월성과 함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크게 중요시하여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기대 교육 수준, 기초 학력 이수 비율, 학업 성취도 등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해 중등 교육 기관 대비 대학 정원 과다와 구조 조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원리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는 교육에서도 상호 긴장과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국가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활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 교육 문제가 교육만의 영역이 아닌 사회의 모든 문제와 맞물리는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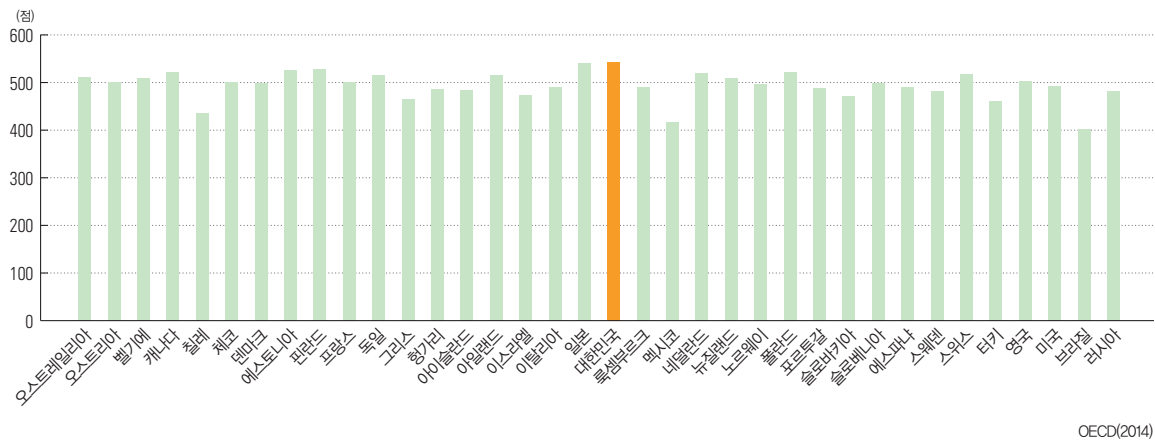
교육 기간은 5세 아동이 39세에 이르기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식적인 교육의 기간으로 측정되며, 급변하는 지식 사회에서 삶을 위한 기술을 익히는 데 그 사회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수학 기간을 필요로 하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고졸 이상 성인 비율은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학업 성취도는 15세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을 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에 근거하여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다. 약 15년에 달하는 의무 교육 기간의 마지막에 현대 사회에의 완

전한 참여를 위해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서 읽기, 수학, 과학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한다. OECD 평균으로 고졸 이상 성인 비율은 75%이며, 이 비율은 OECD 안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OECD 전체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83%가 직업을 갖고 있으나, 중등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비율이 5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학업 수행 능력 PISA 지수는 542점으로 OECD 1위이며 평균인 497점에 비해 크게 높고, 최저점 국가에 비해 140점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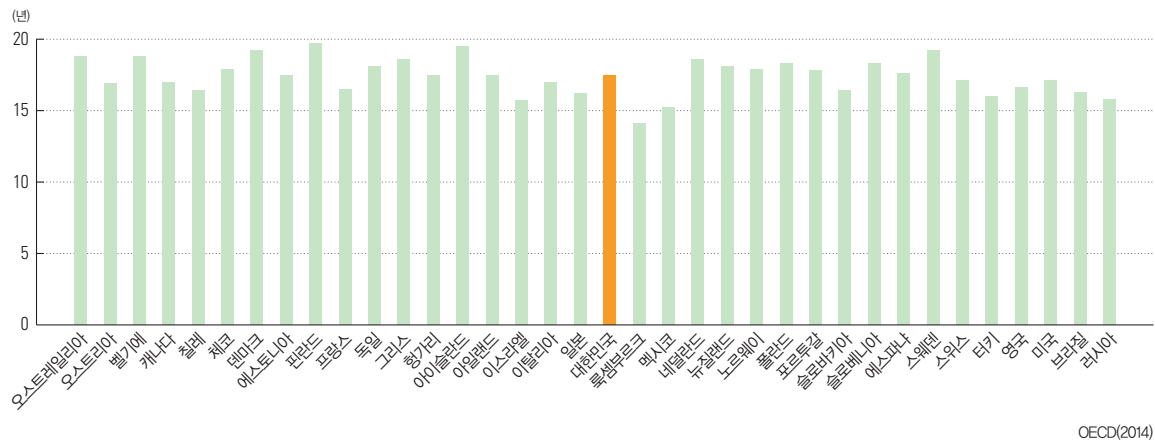
고졸 이상 성인 비율



독해, 수학, 과학에 대한 PISA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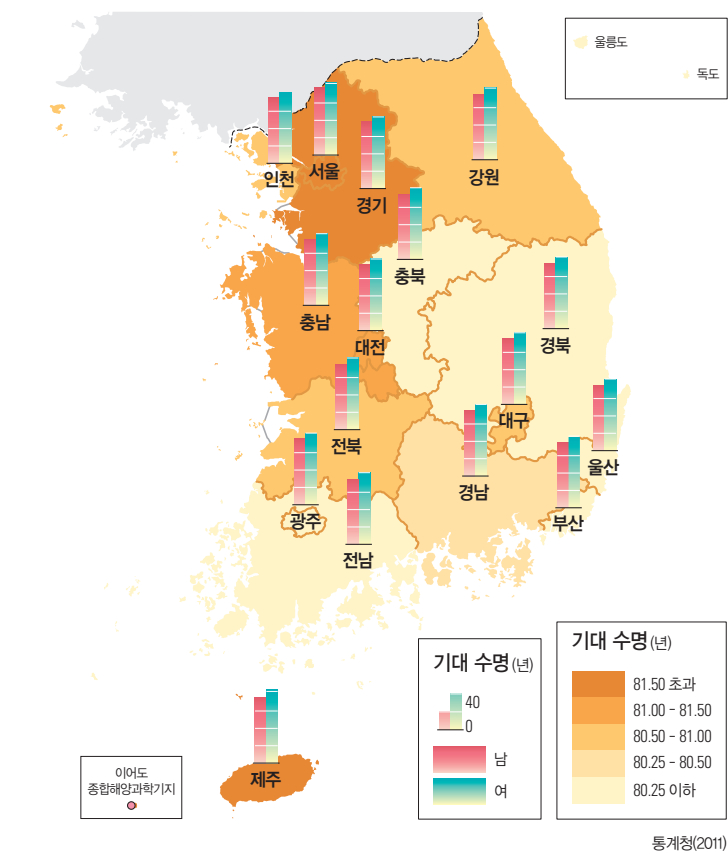


교육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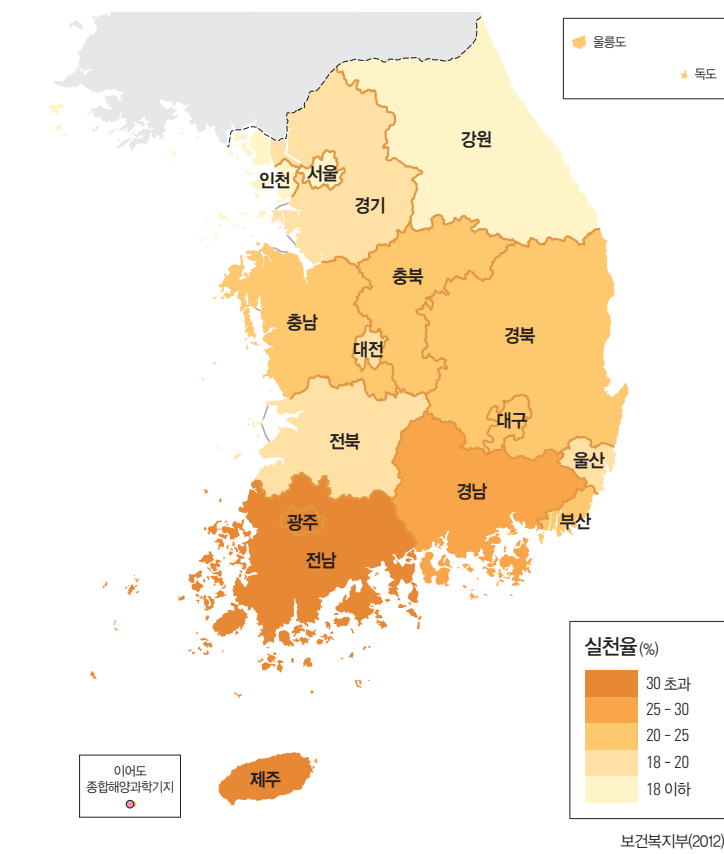


건강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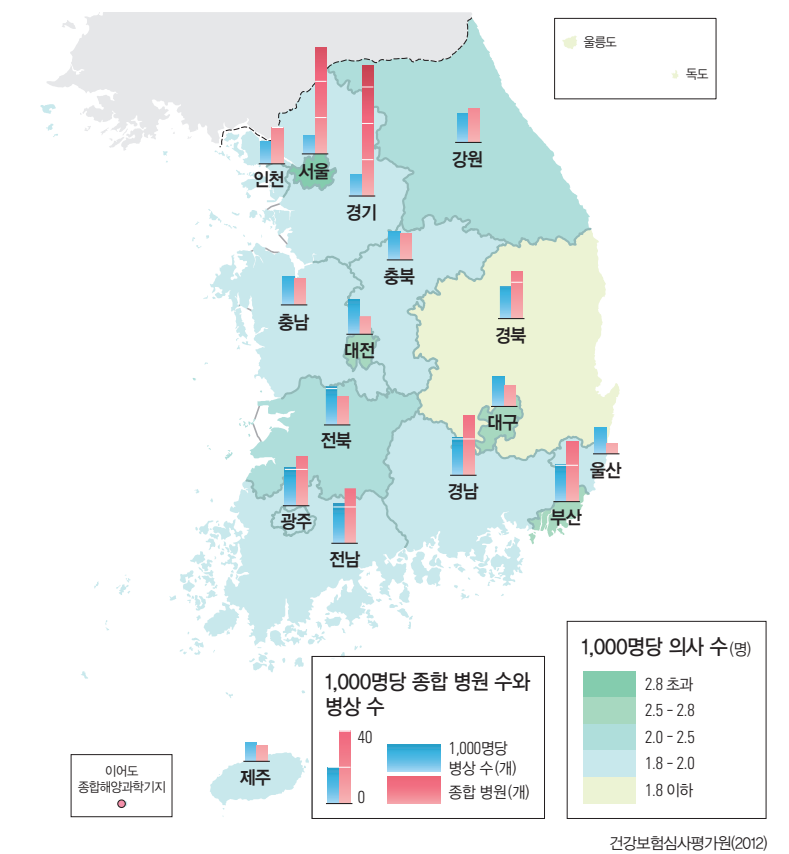
기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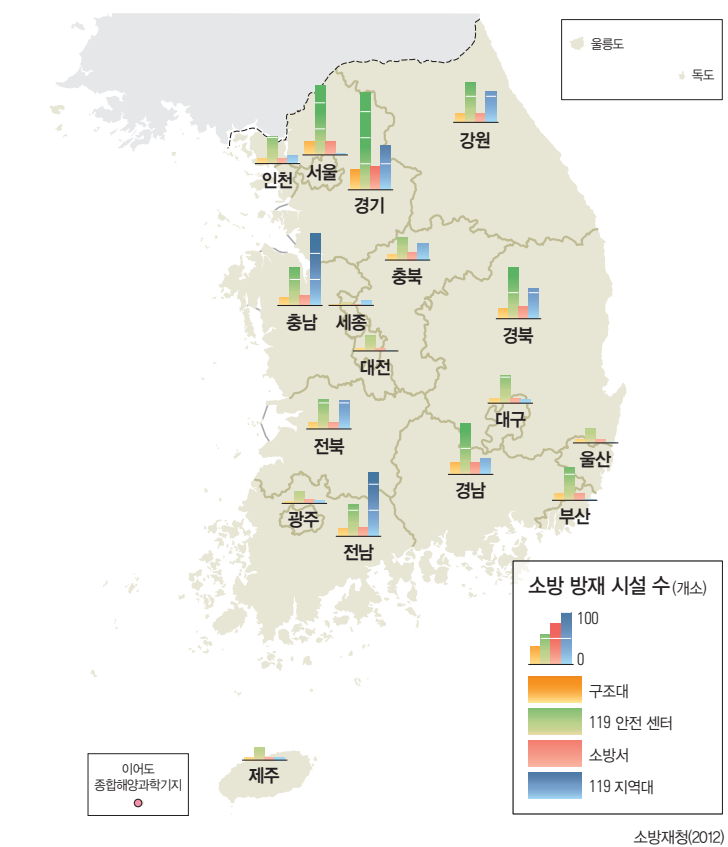
신체 활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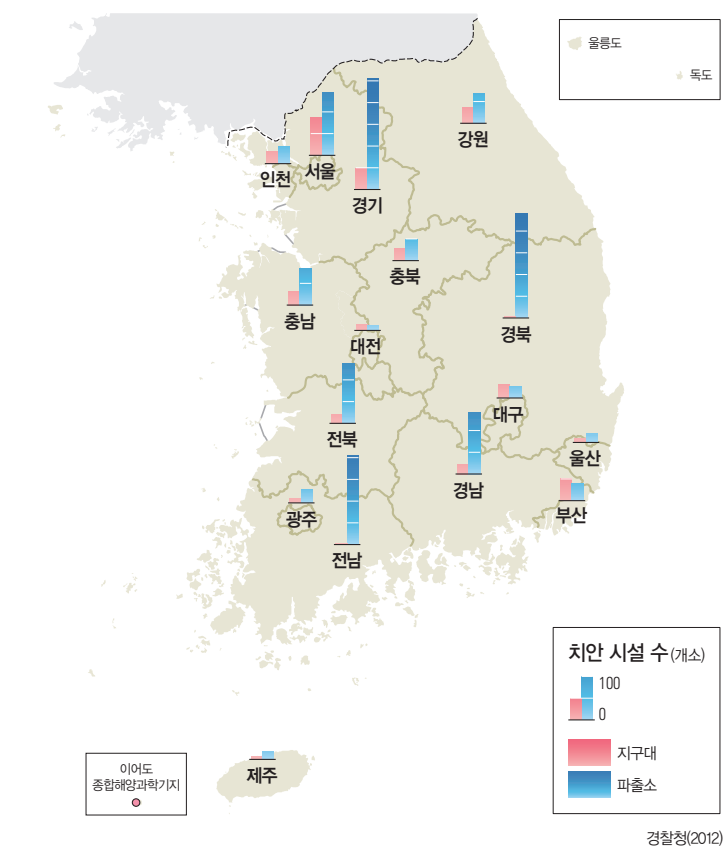
종합 병원 수 및 1,000명당 병상 수와 의사 수



소방 방재 시설 수



치안 시설 수



안전한 사회, 시민 개개인이 건강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건강 수준의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기대 수명은 수도권과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수도권은 더 나은 의료 인프라가, 제주는 더 나은 자연 및 생활 환경이 그 이유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별 편차도 상당히 존재한다. 2011년 남녀 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7세로 상당한 정도인데, 절대적인 기대 수명의 차이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건강 상태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역 별 소방서와 파출소의 분포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및 사고 대처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안전 관련 지표이다. 이러한 안전 관련 중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범죄나 사고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지역 특수성에 기초한 지방 분할적 직제안과 전국 통일의 신속성과 권한 집중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직제안 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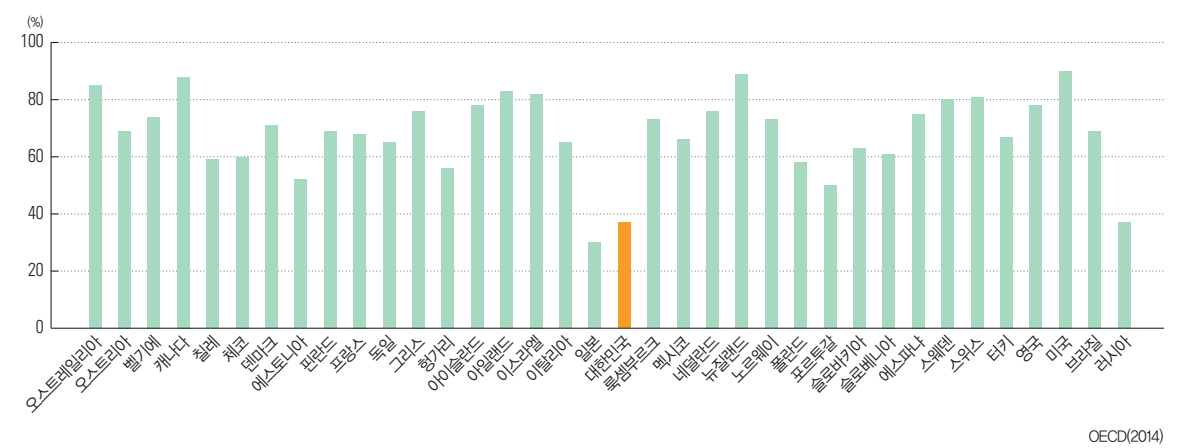
OEC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범죄 피해를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평상시 안전하다는 생각, 범죄로부터의 위험이 적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와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맡긴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기대 수명은 신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해수를 나타낸다.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전체로 지난 50년 간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기대 수명은 가장 널리 쓰이는 건강의 척도이나, 삶의 길이는 측정하지만 삶의 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자기 보고 건강 상태는 자기 스스로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건강을 평가하는 것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견 주관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사회의 미래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범죄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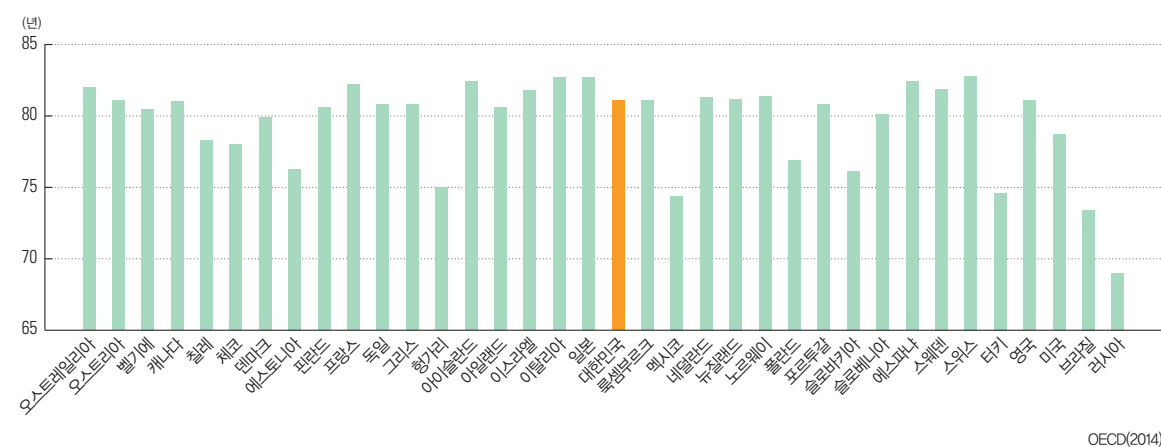
경험은 지난 해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범죄의 피해는 피해에 의한 직접적인 고통 외에 그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다.

OECD 평균으로 기대 수명은 80세인데, 이는 1960년에 비해 10년이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전체에서 약 69%의 성인이 스스로 건강하다는 답을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상위 20%는 80%가, 하위 20%는 61%만이 건강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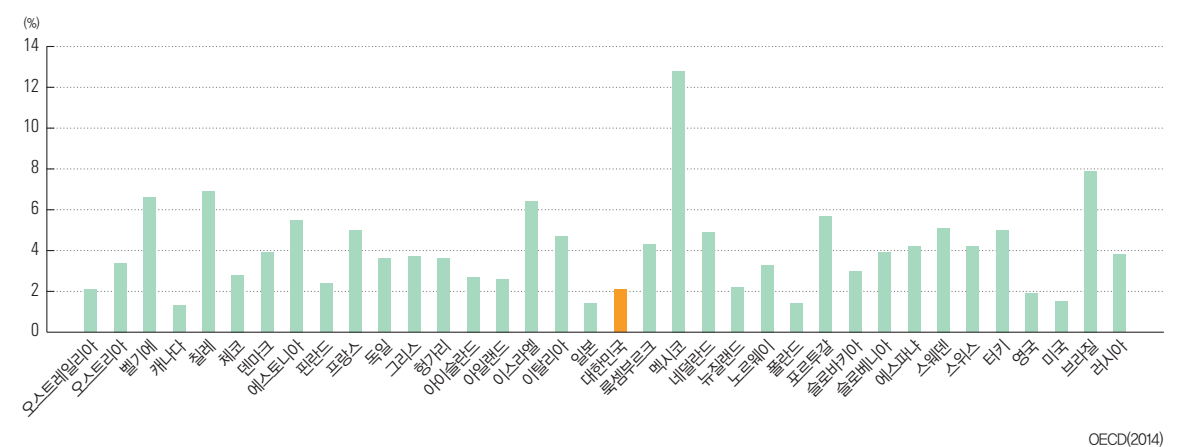
자기 보고 건강 상태



기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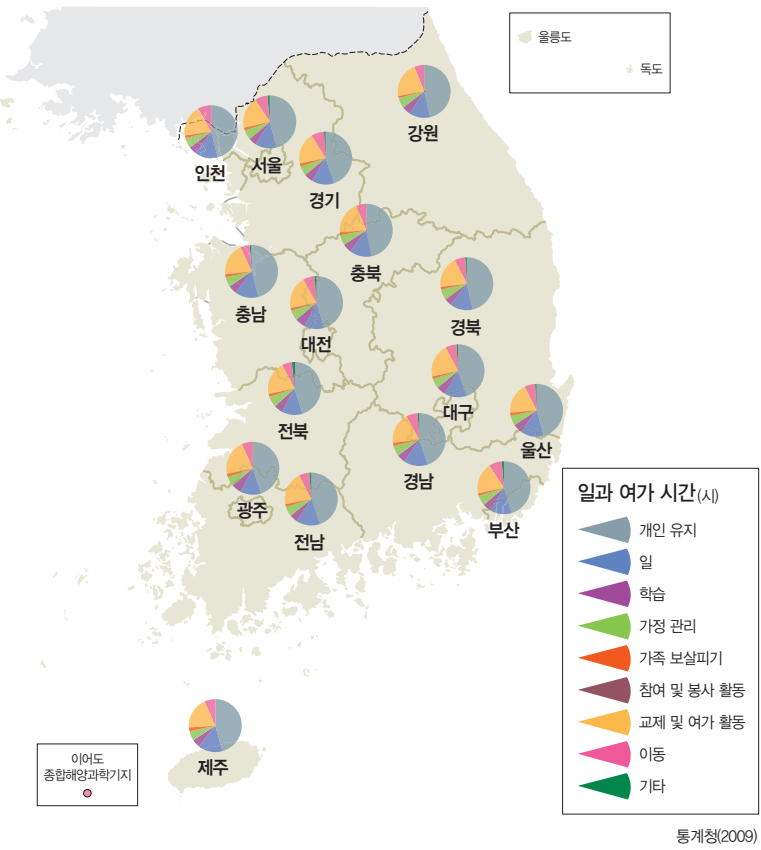


범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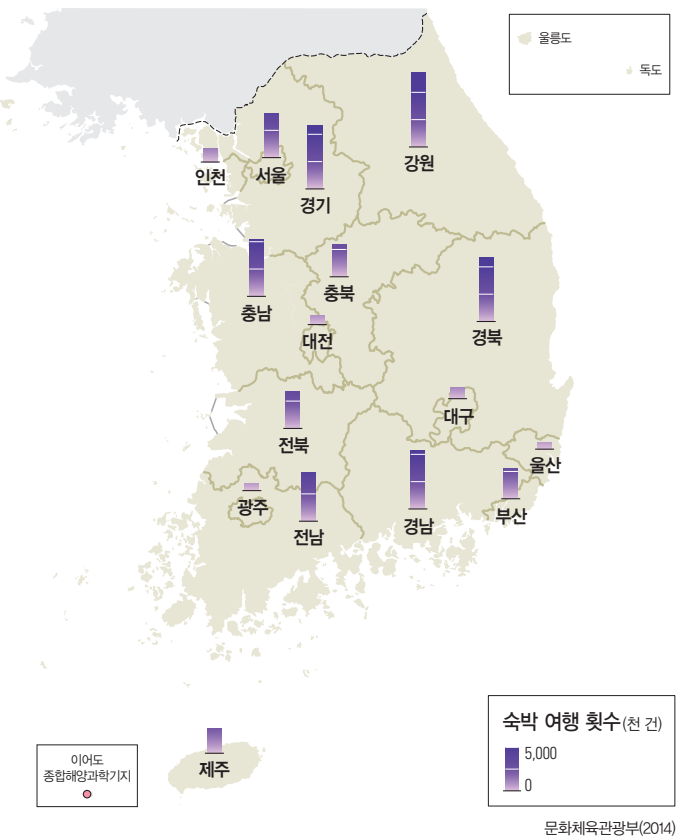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일, 여가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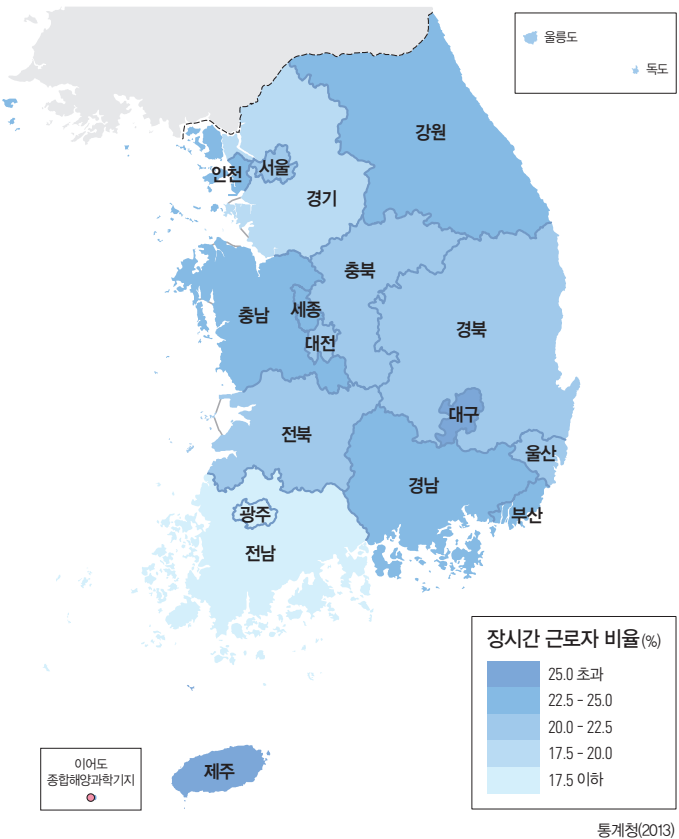
일과 여가 시간 사용(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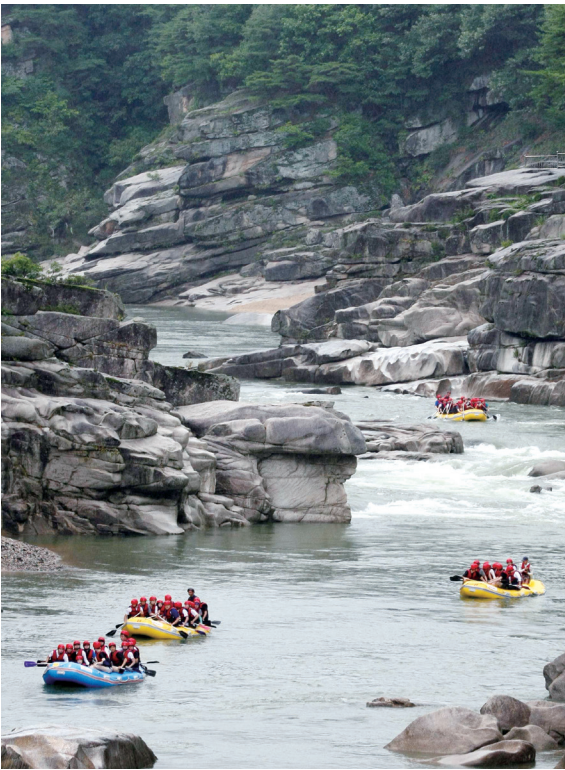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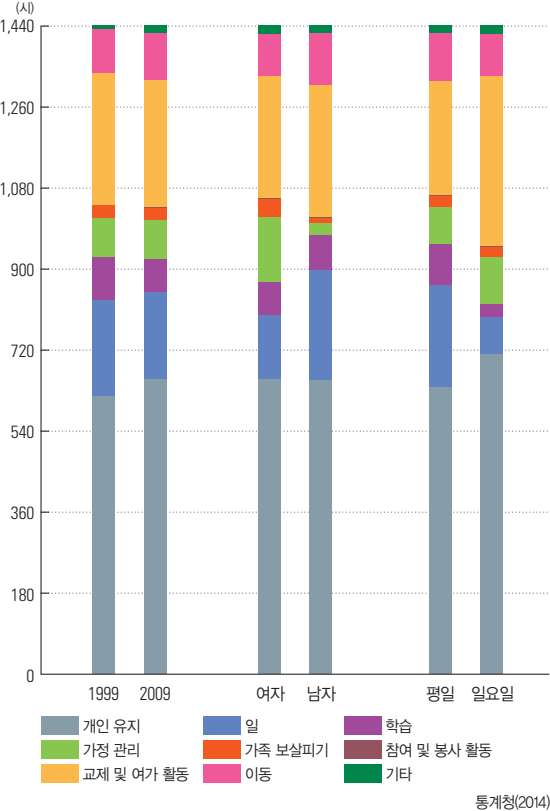
여행 실태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여가 시간의 활용(연도별, 성별, 요일별)



피서철의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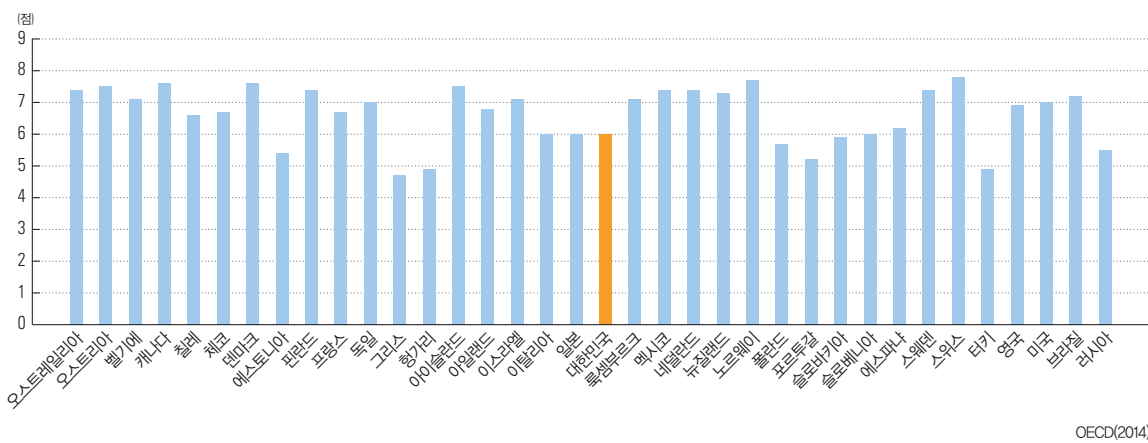
피서철의 바다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만일 근로 시간이 매우 길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삶의 질 저하 문제뿐 아니라 근로 외 기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의 활동 제약은 지역 간 혹은 개인 이나 인구 집단 간 삶의 질 차이를 발생시켜 사회적 배제 나 사회 정의의 문제까지 진전될 수 있다. 시간 이용과 삶의 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활동인데, 이상의 이유로 활동 참여에의 접근성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루 일과는 매우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면이나 일 등 고정된 시간 사용이 필요한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그때 그때 개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임의 활동 시간을 자유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의 수준과 직접 관련되는 이들 활동에 드는 시간은 활동 참여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활 방식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 시간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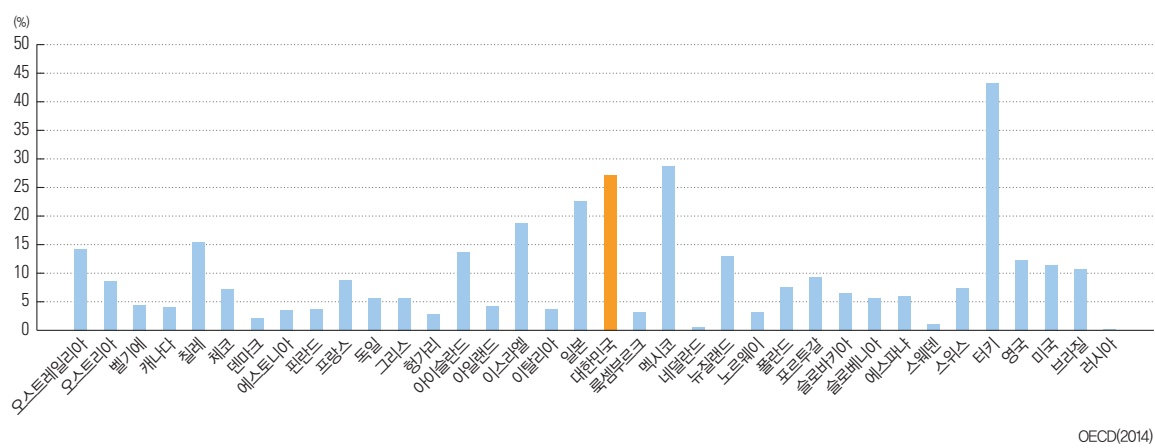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주관적 척도로서,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느낌보다는 이제까지 살아 온 전체로서의 그들 삶을 평가한 척도이다. 삶의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반영한다.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쓴 시간은 24시간 중 수면, 식사, 레저, 개인 용무 등에 쓴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할 것을 의미한다. 여가 시간의 양과 질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 추구에 중요하며 이 시간의 증가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장시간 근로는 1주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연평균 근로 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인, 2,163시간이며, 최하위 국가인 네덜란드 1,380시간의 1.6배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터키와 멕시코에 이은 3위로 27.1%를 기록한다. 일과 여가의 균형은 다양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바람직한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보더라도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 및 일에 대한 집중도 등에서 더욱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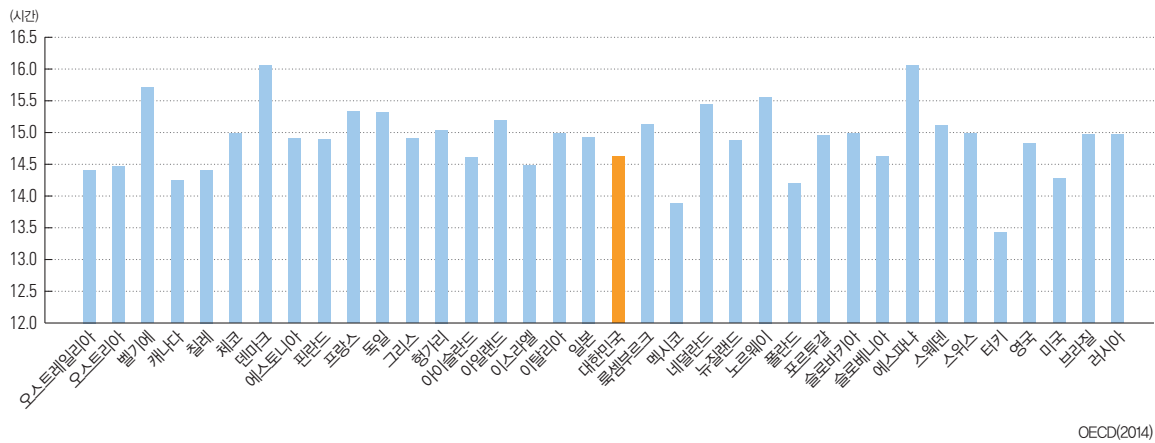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



장시간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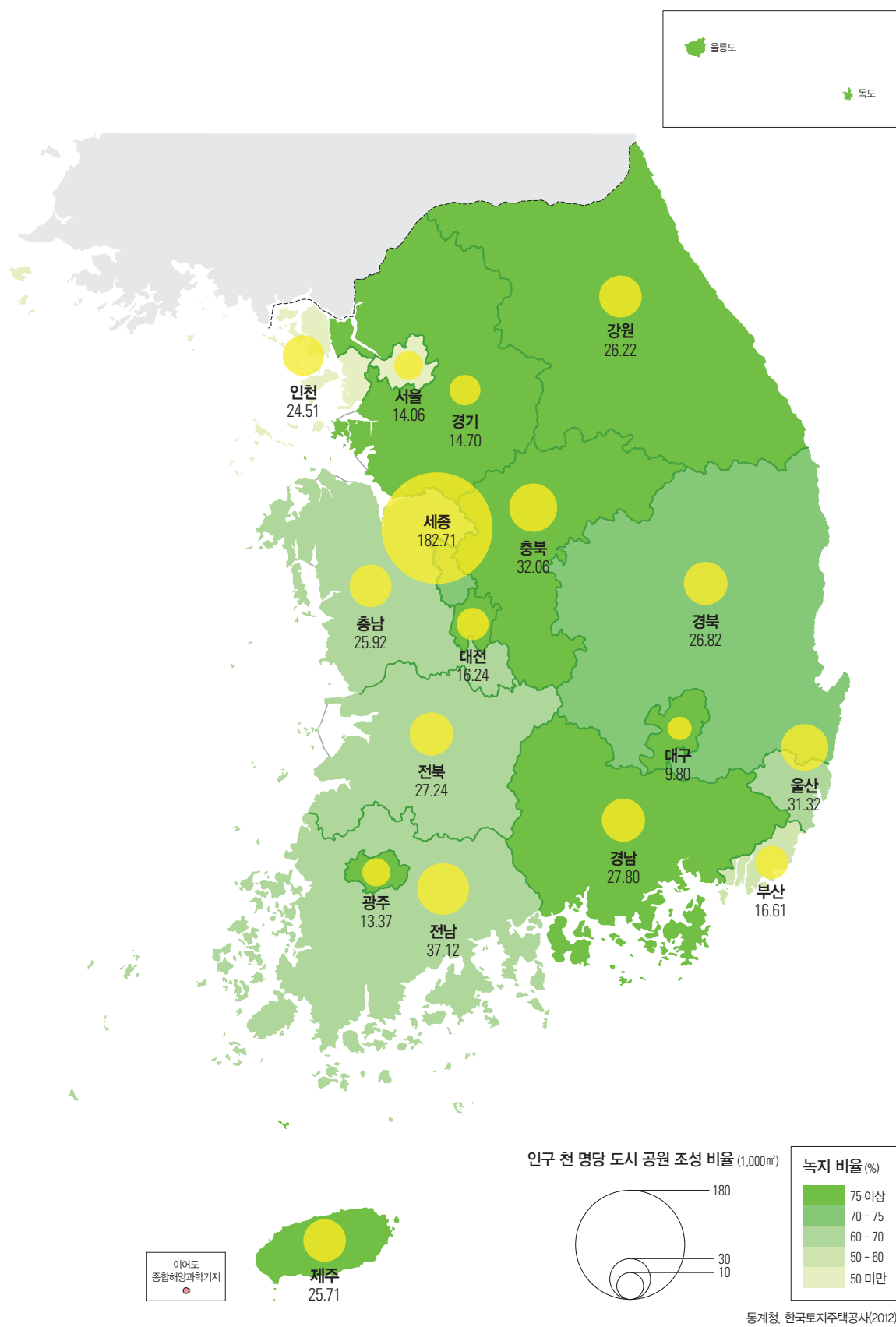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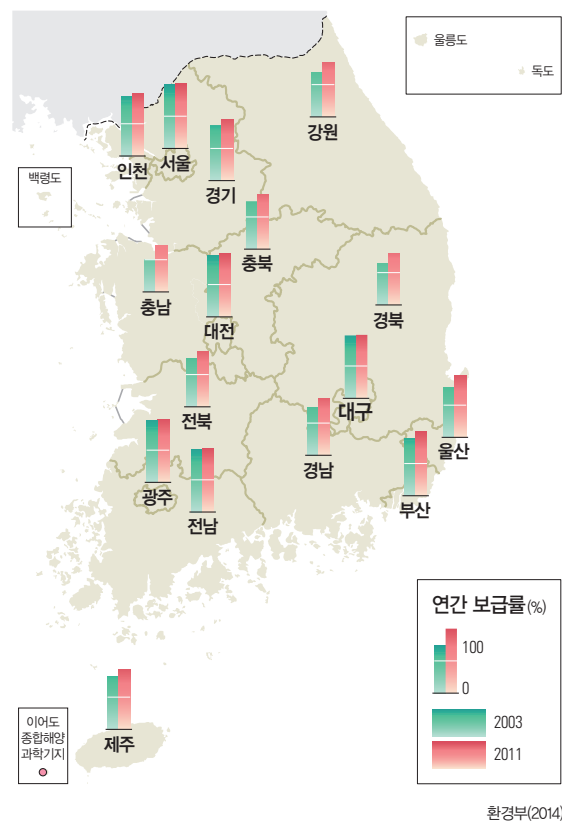


생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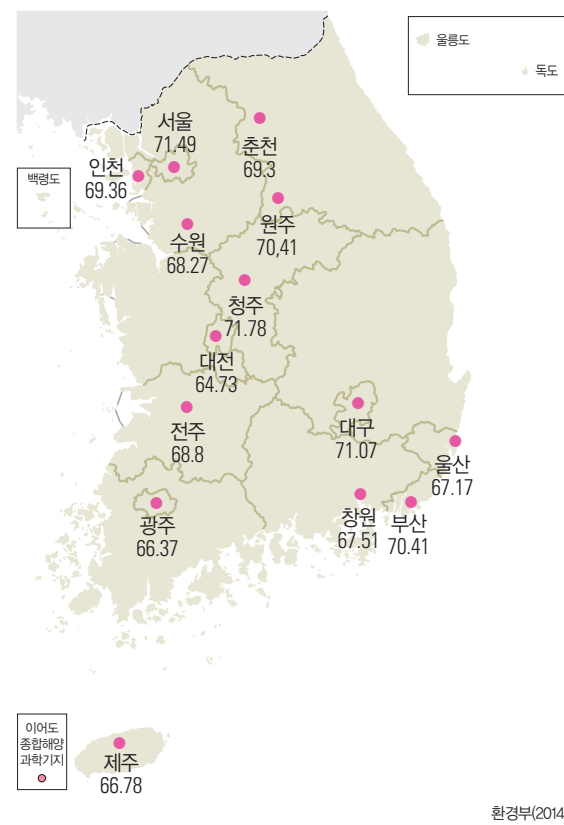
녹지와 도시 공원 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환경 소음(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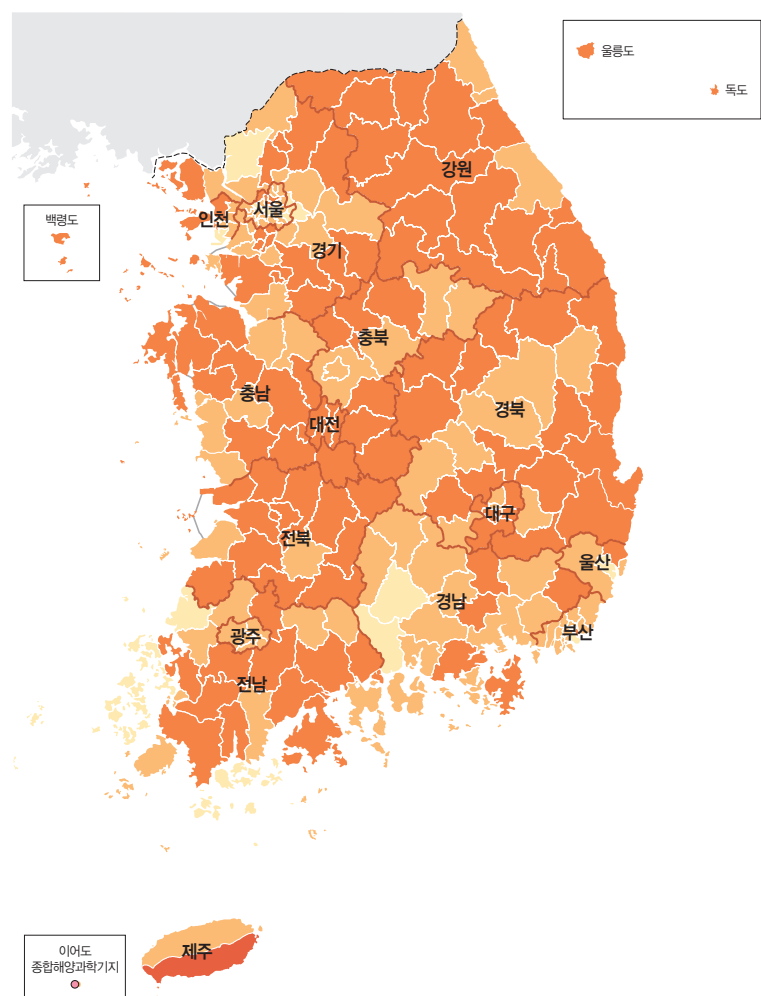
삶의 질 관련 생활 환경 수준은 녹지, 공원 등 생활 편의 시설과 상하수도 보급 등 삶의 편리성 제고에 관한 요소와 소음이나 방사능 위험 등 위험 및 위기 관리에 대한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인구 대비 도시 공원 면적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다른 광역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넓다. 광역 시·도별 녹지 비율은 산지가 많은 강원, 경기, 충북, 경남 등이 높는데, 산지의 국지적 분포에 따라 실제로 시·군·구별 녹지 비율은 매우 다르다.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지만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환경 소음은 대도시일수록, 근처에 공항 등의 대형 소음 유발 시설이 있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이다. 주로 공공 장소와 공공 시설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법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건축 자재의 방사능 포함 등을 이유로 개인 주택

과 공동 주택 등의 방사능 과다 여부를 검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라돈에 의한 방사선은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약 43%이다. 1초 동안 하나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양을 나타내는 라돈 농도는 방사성 물질의 국제 표준 단위인 베크렐(Bq)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 이용 시설의 라돈 권고 기준을 148Bq/m³ 이하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개인 주택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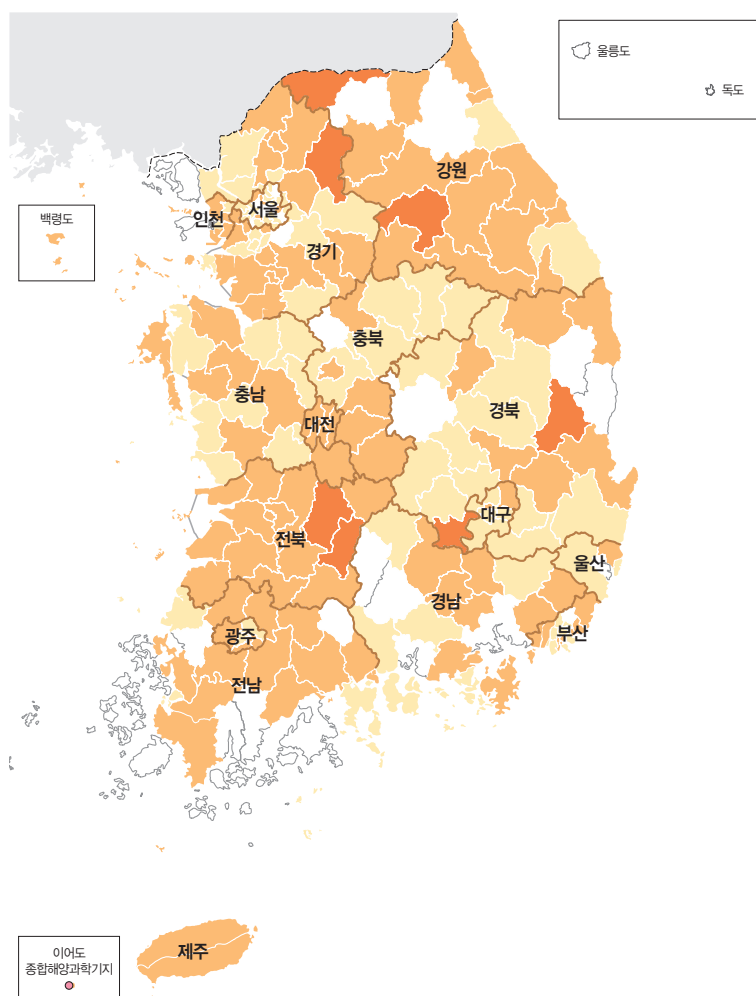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해마다 전국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라돈 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쓰인다. 현재 수집한 라돈 정보에 의해 전국 실내 라돈 지도가 작성되어 인터넷에 공개되며, 라돈 저감 시범 사업 및 라돈 관리·저감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다.

라돈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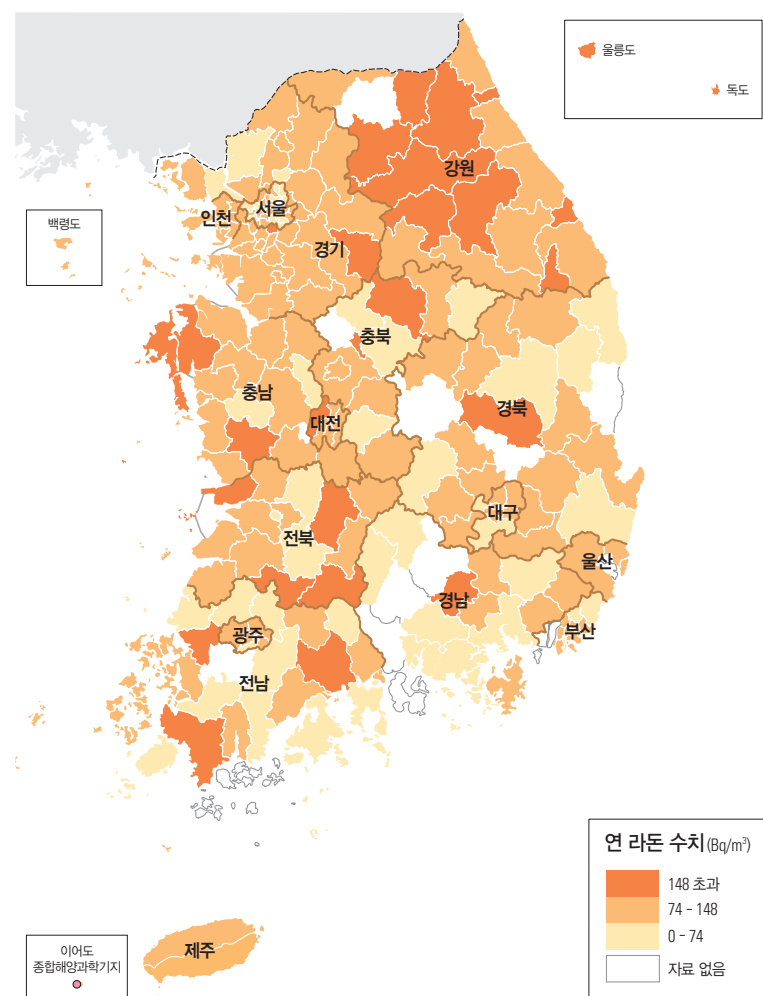
단독 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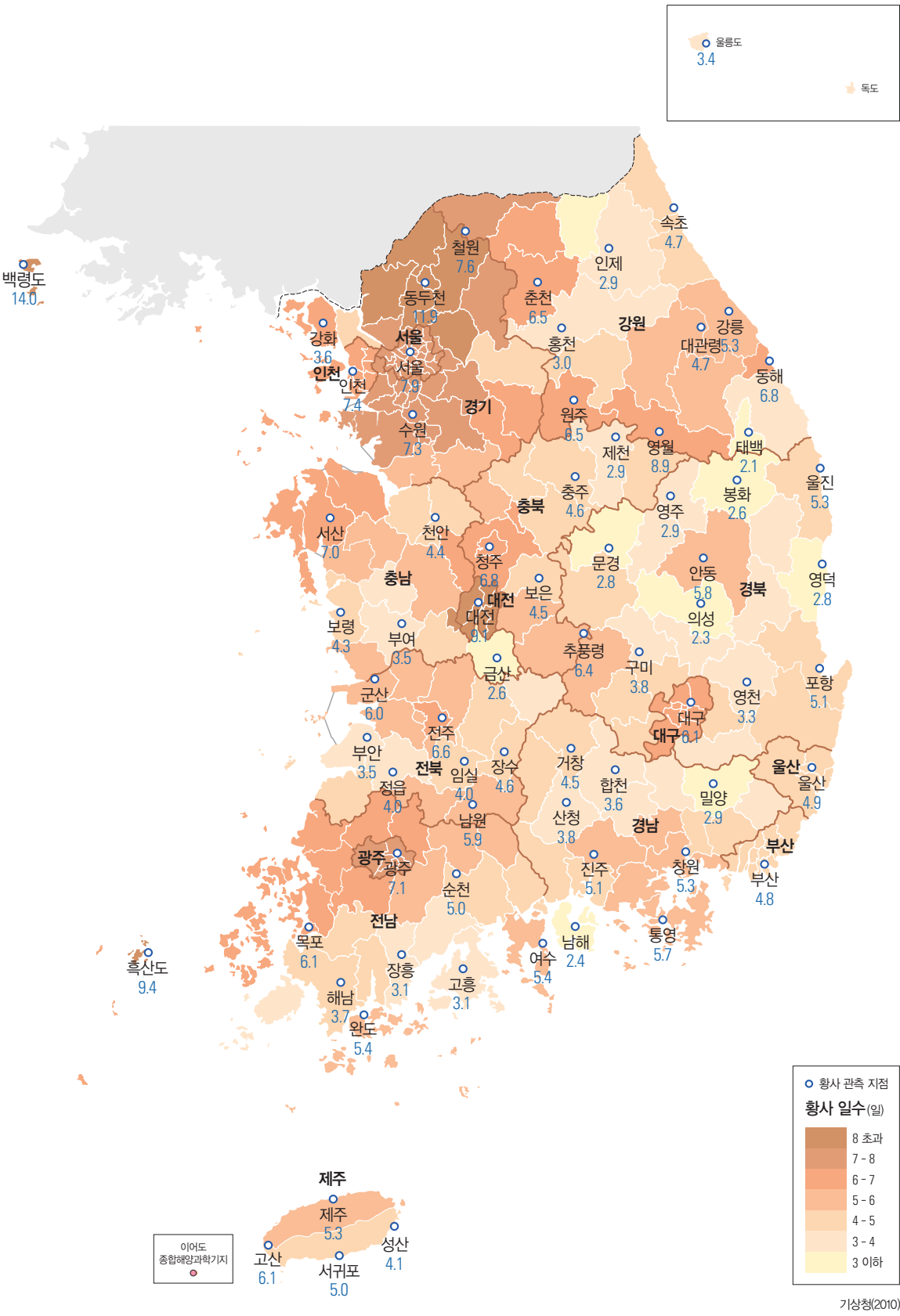


연립, 다세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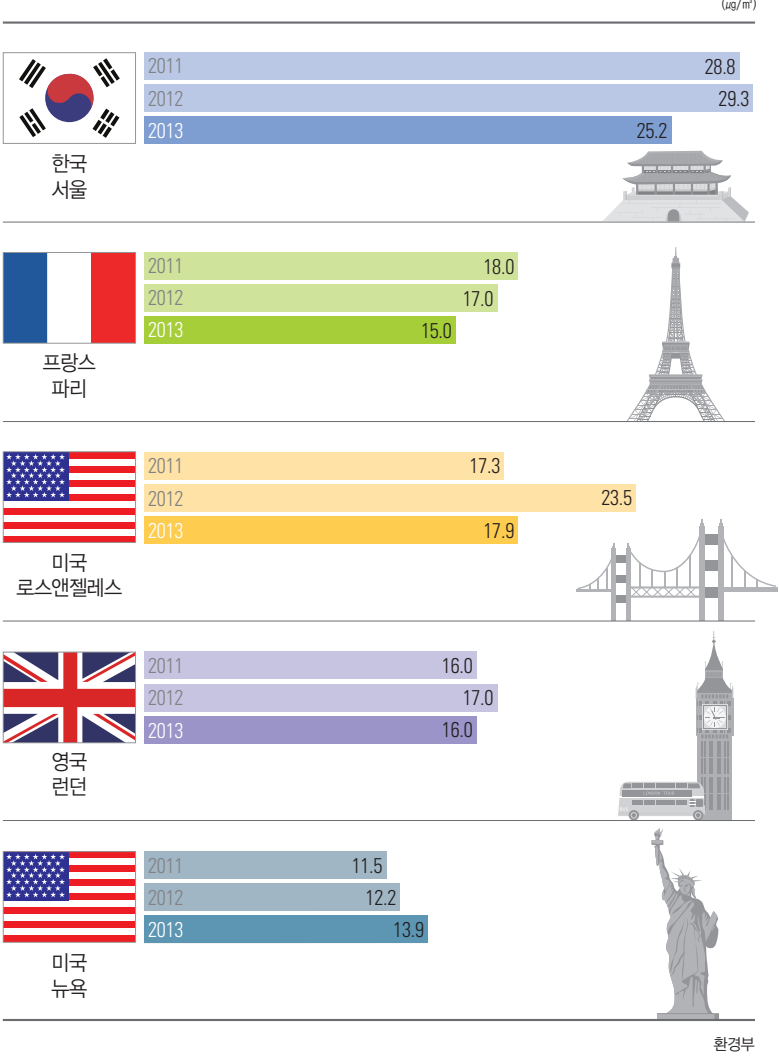
환경 보호

황사 관측 지점 및 황사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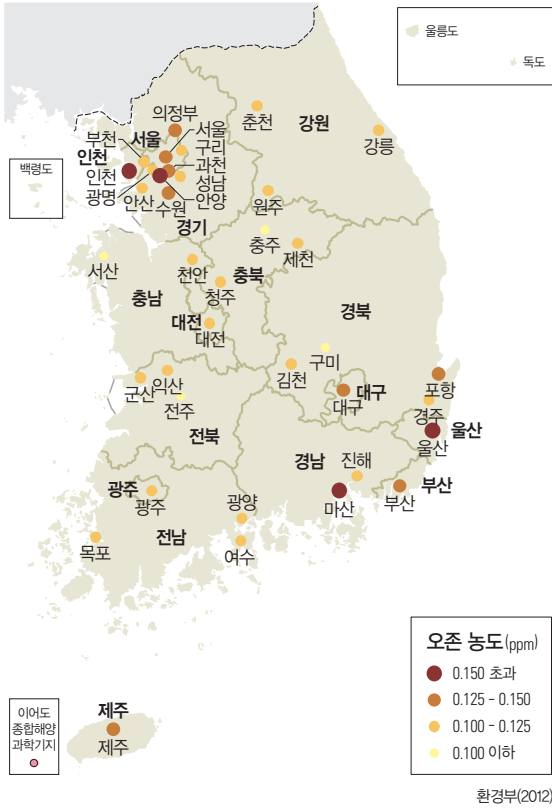


황사, 미세먼지, 오존은 과다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영향권 내에서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다. 황사, 미세먼지, 오존은 다른 환경 오염과 달리,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경을 넘어오는 오염 전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 발생원의 근본적인 제거와 지속적인 관리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과다 섭취하거나 오존에 과다 노출 시 인체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PM 2.5는 입자의 크기가 2.5 μm 이하인 초미세 먼지를 뜻한다. 서울은 2013년 현재 초미세 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이의 감소를 위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황산가스(SO_2)는 화석 연료에 의한 금속 제련,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며, 과다 노출 시 인체의 점막을 자극하고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황산가스(SO_2)는 미세먼지(PM 10)의 주요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이산화질소(NO_2)는 자동차, 발전 등 고온의 연소나 화학 물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계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연안 수질은 연근해 어업의 건강성 및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안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수온,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질소, 총인, 부유 물질, 투명도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mg/L)이다. 오염도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많아 산화 분해를 위한 산소 요구량 역시 높아진다. 동해안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서해안은 시화호 수질 개선 등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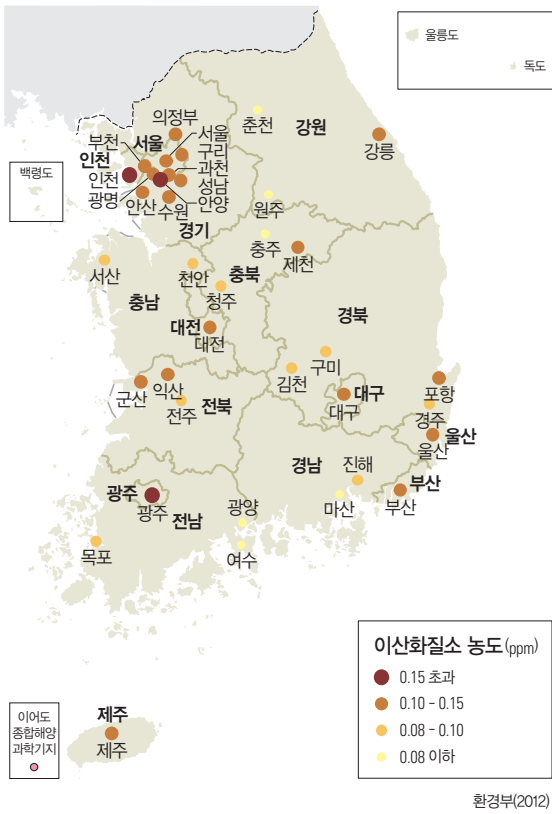
세계 주요 도시 PM 2.5 연평균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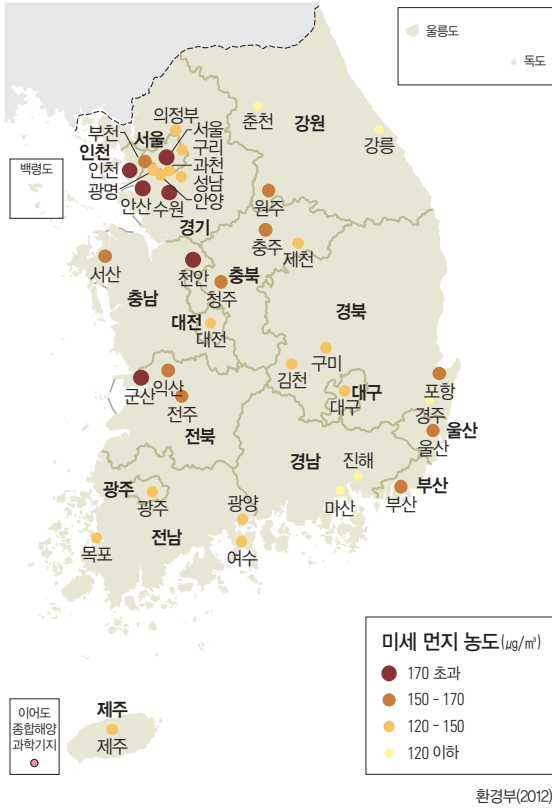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오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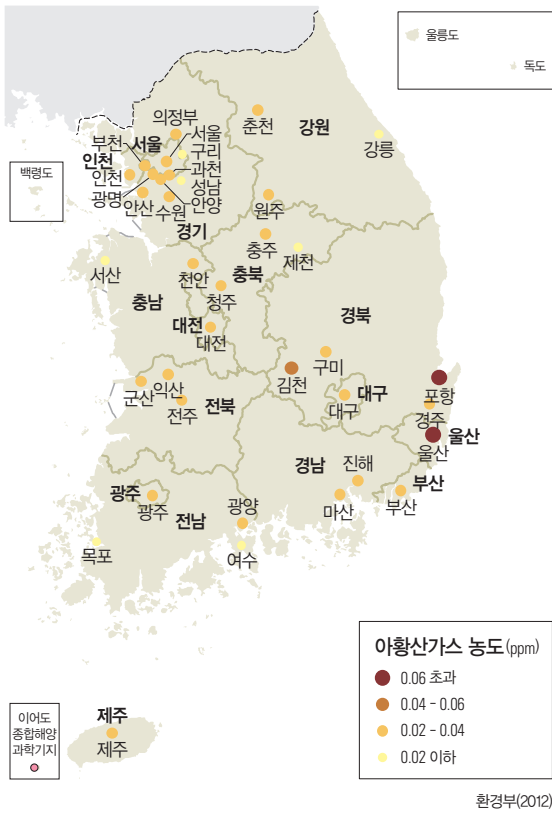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아산화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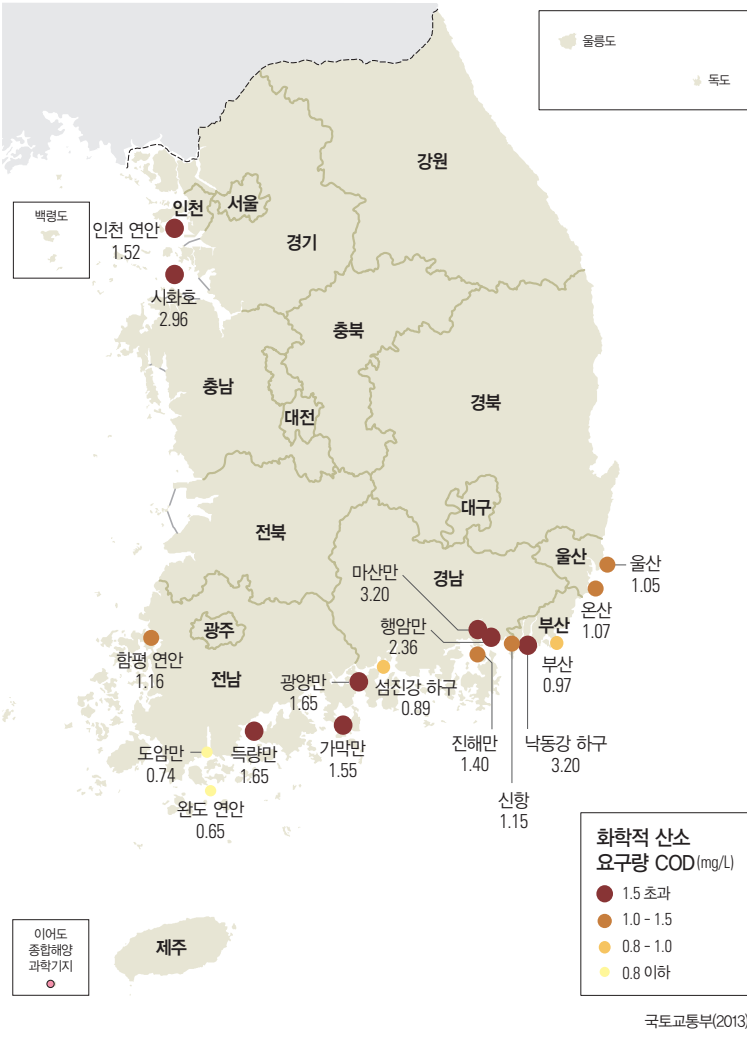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주요 도시별 아황산가스



연안 수질



인구와 정주 체계

인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이다. 한 나라나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의 분포, 구조, 이동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인구 분포는 특정 시점의 인구의 지역별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인구 구조는 연령, 성, 소득, 가구 구성 등 특성별 인구 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끝으로 인구 이동은 특정 시기 동안의 지역 간 인구의 이동을 말한다. 인구 분포의 변화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이동

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합계 출산율과 사망률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인구 이동은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즉, 그러한 요인들은 지역별로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인구 이동이라는 사회 공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 이동에는 전입과 전출의 국내 이동과 이주의 국제 이동으로 구분되며, 국내 이동은 다시 도농 간, 도시 간, 농촌

간 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구 이동에는 경제적, 인구학적, 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묘도로 표현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서는 인구의 과밀·과소 패턴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 분포 패턴에서 인구의 전체적인 성장·감소와 지역별 성장·감소 현상이 분명히 확인된다. 결국 인구 분포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적 특성의 집약체인 것이다.

또한 인구 중심점은 거주 인구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인구 중심점의 이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 분포의 특성을 나타낸다. 1966년 이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은 대체로 북쪽으로, 특히 최근에는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분포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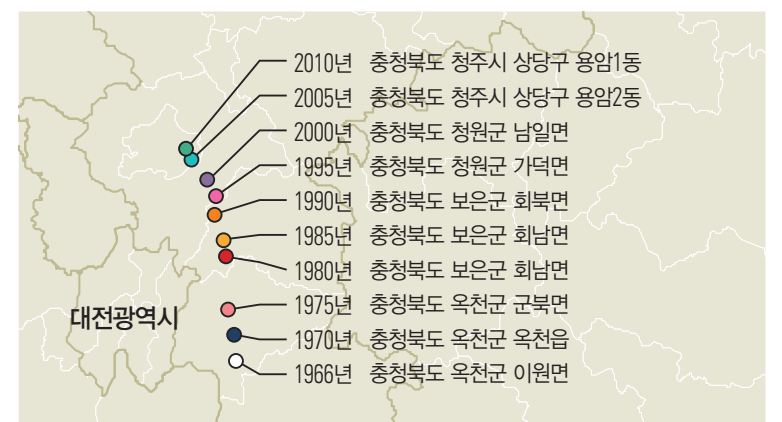


도시 지역



농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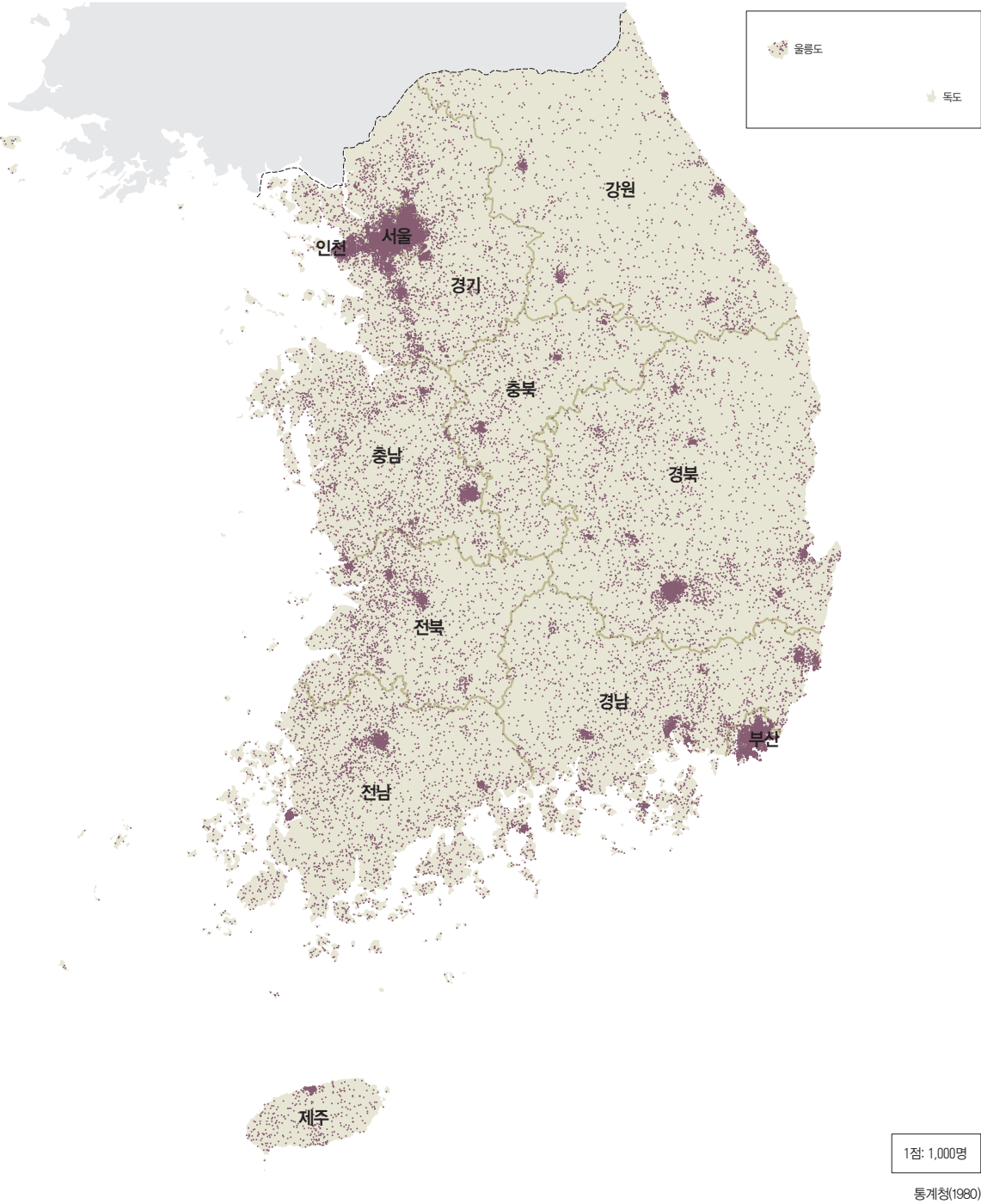
인구 중심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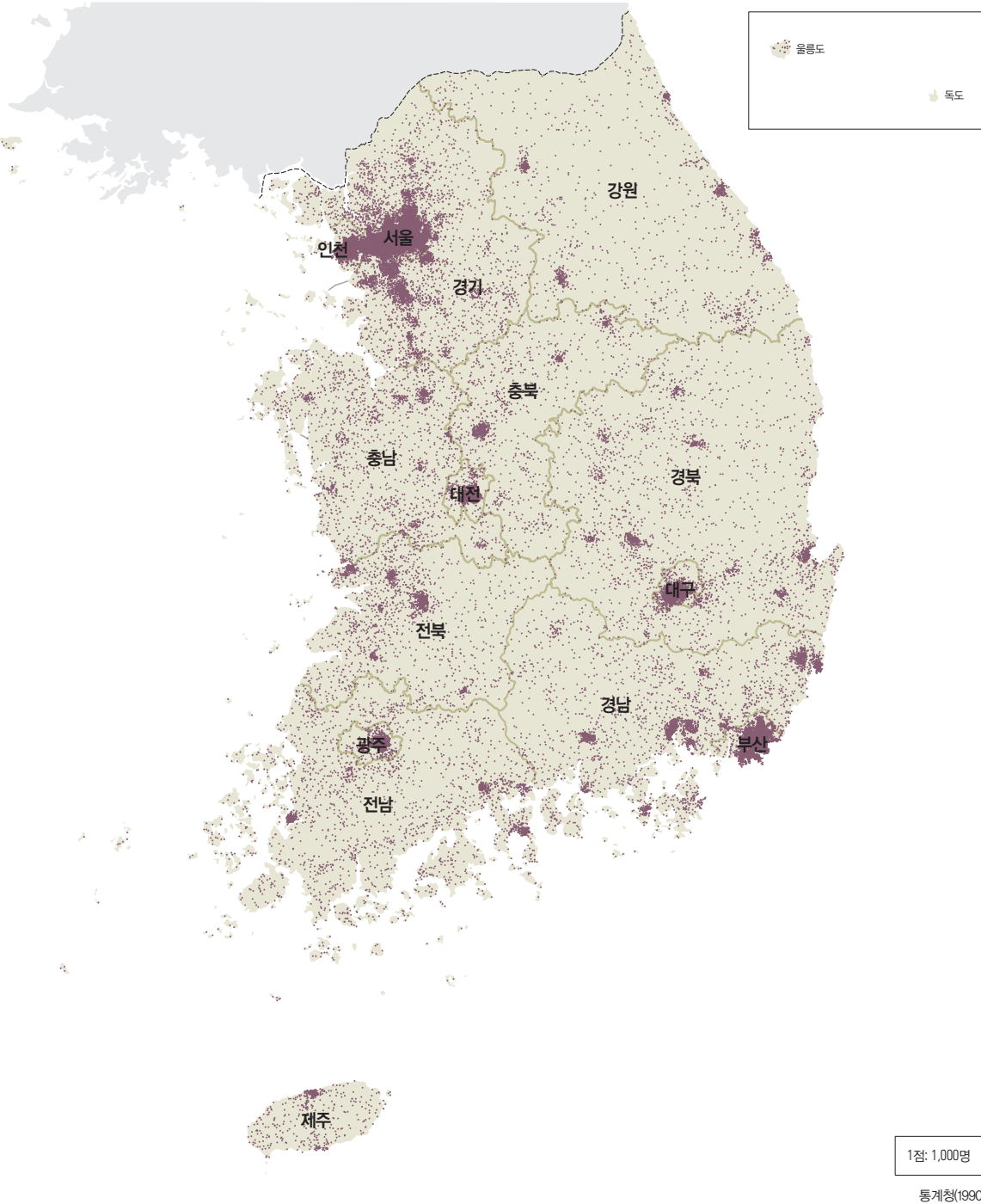
통계청(2013)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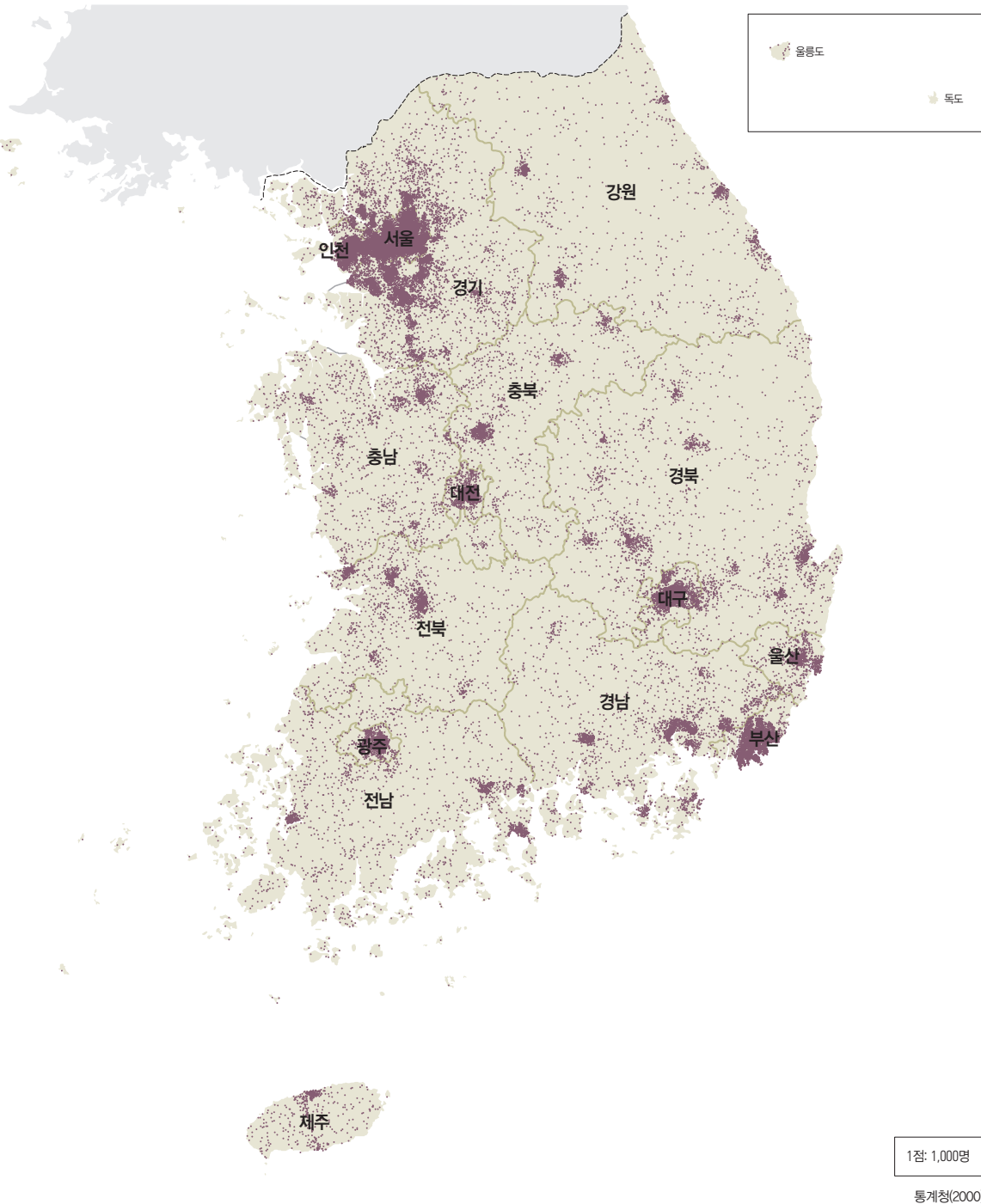
198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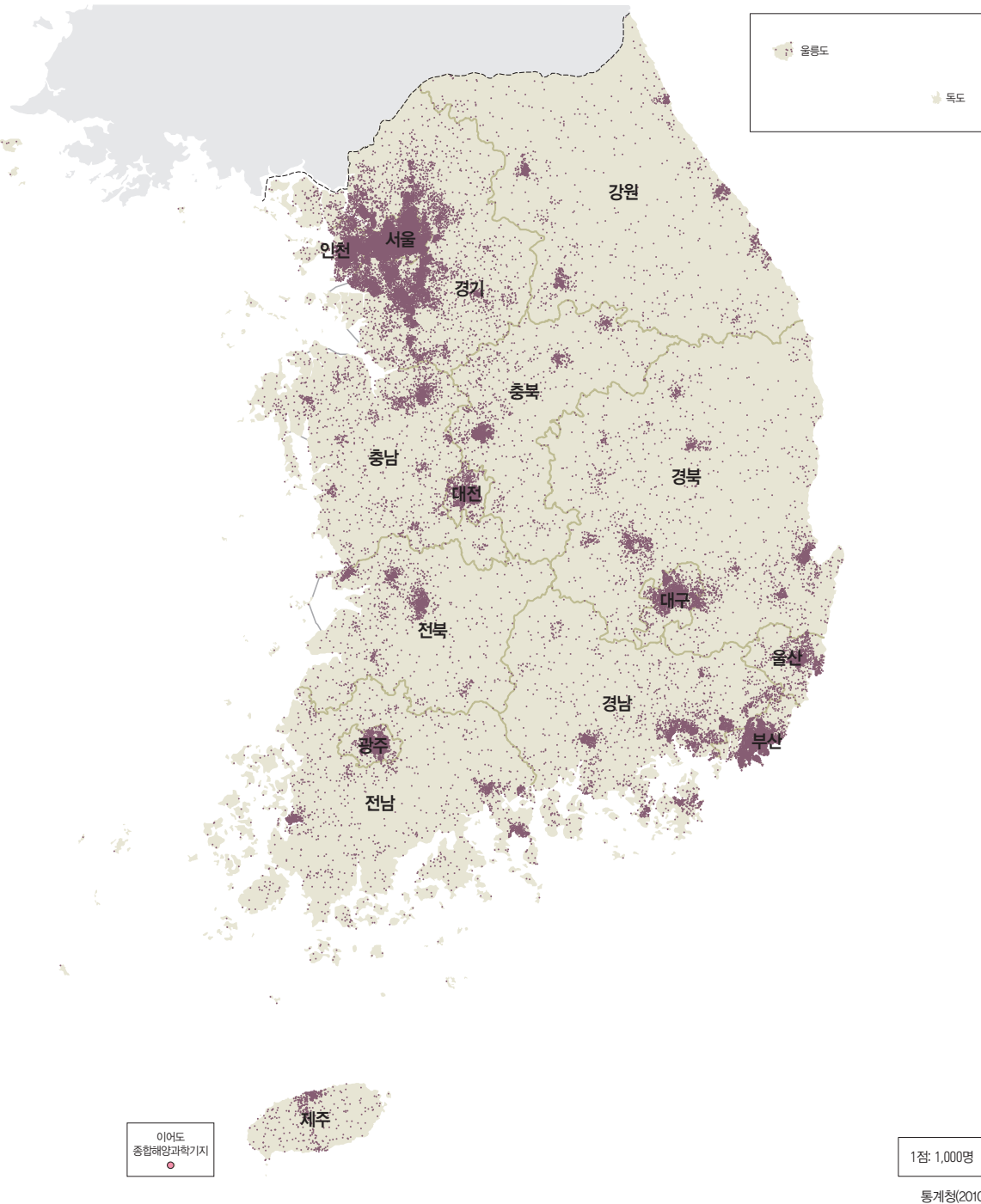
1990년의 인구 분포



200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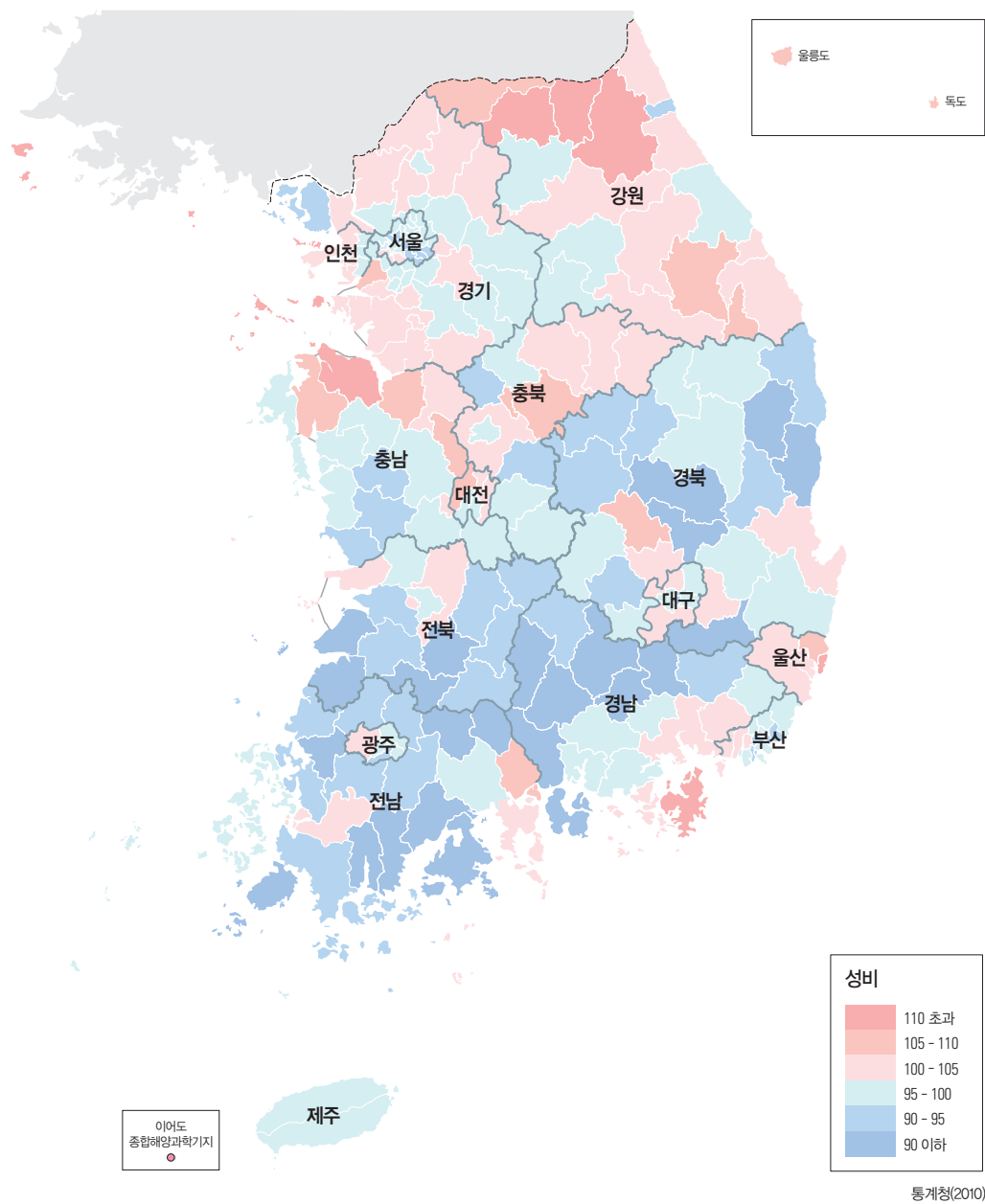


2010년의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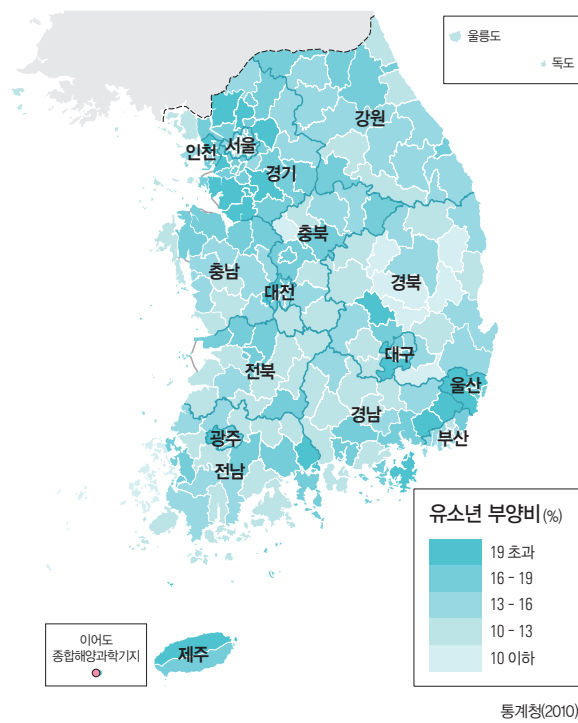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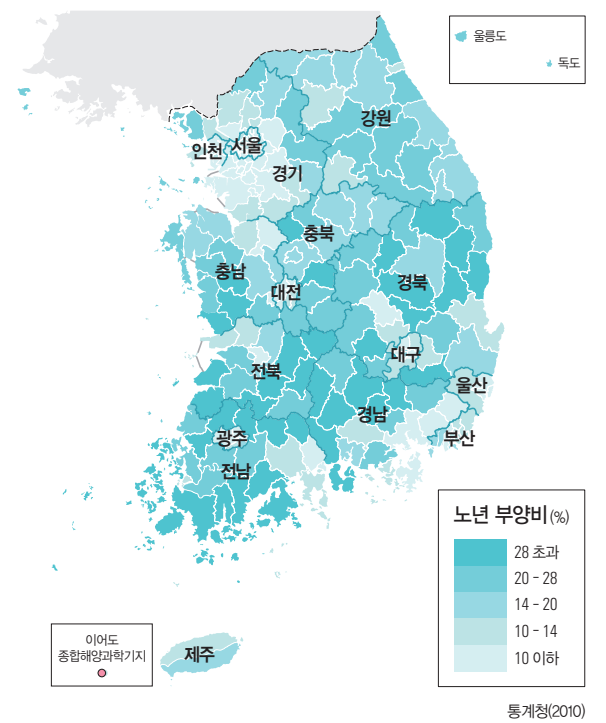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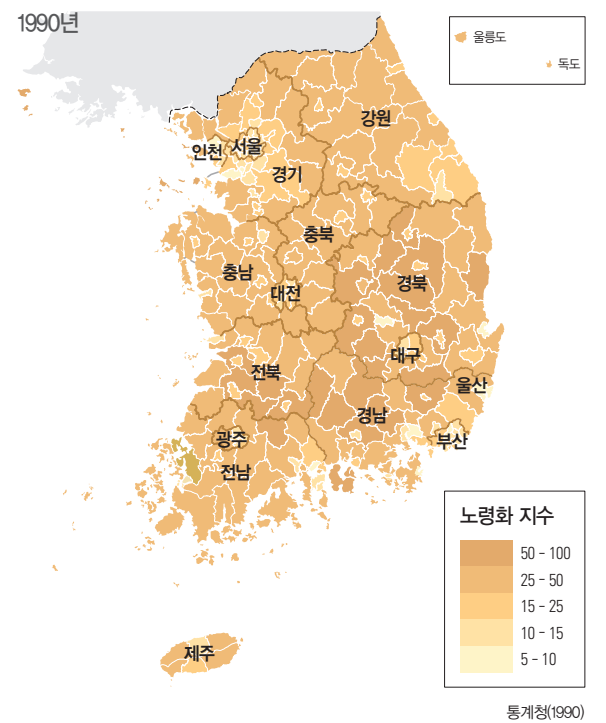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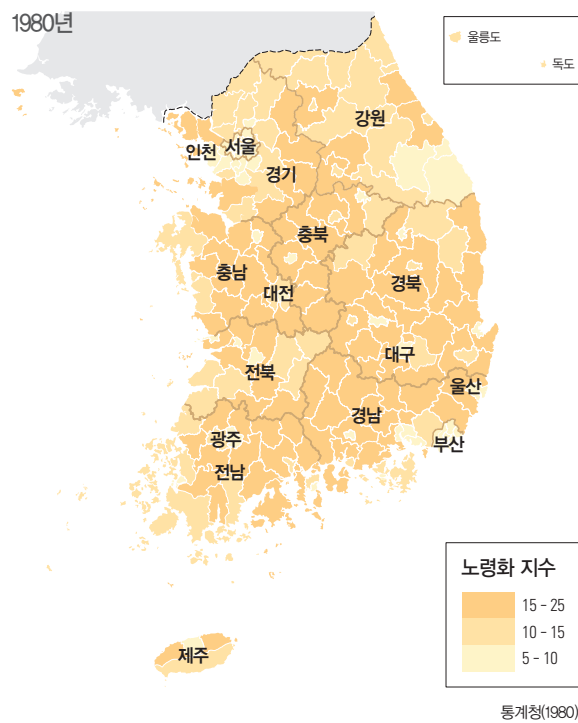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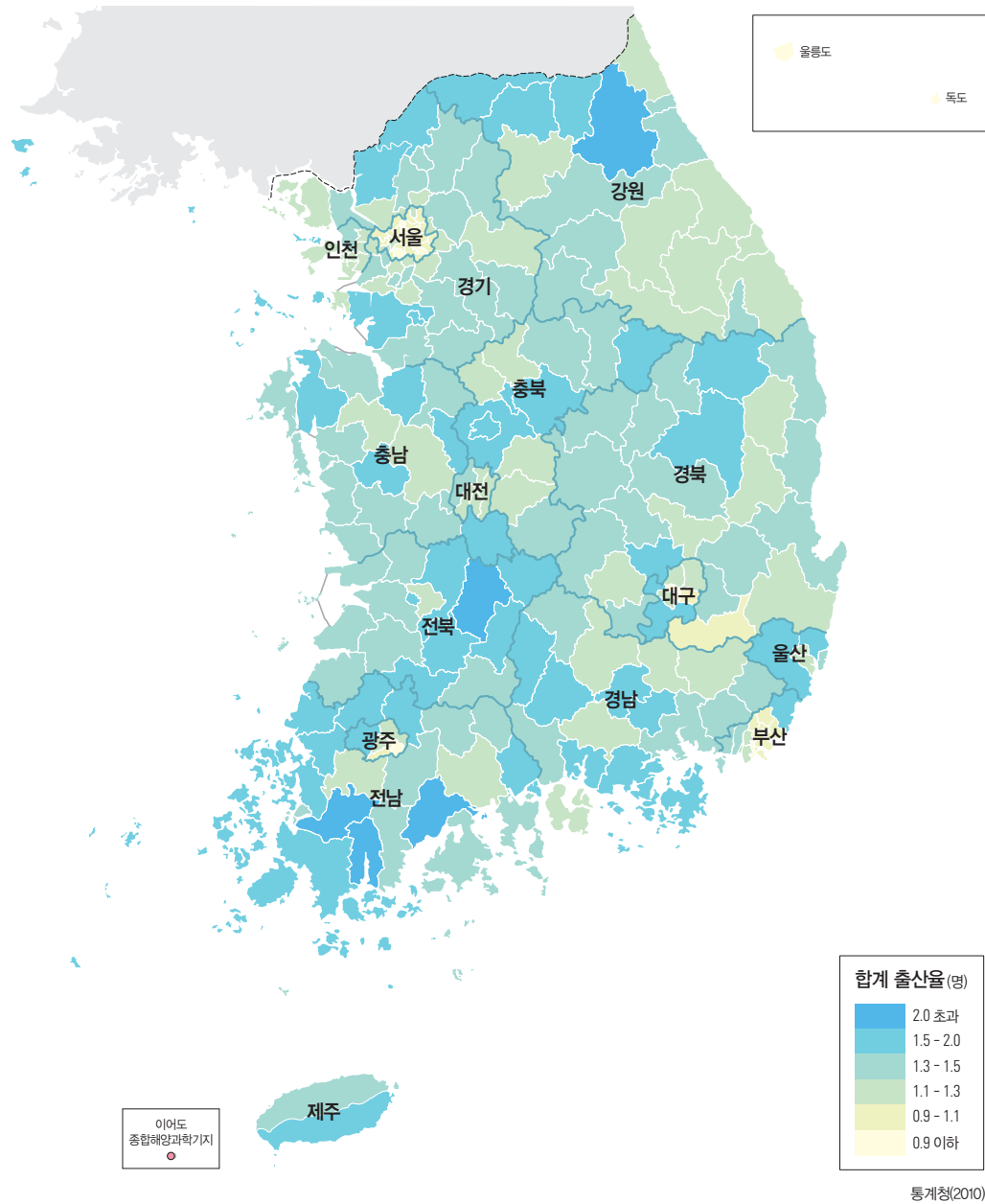
노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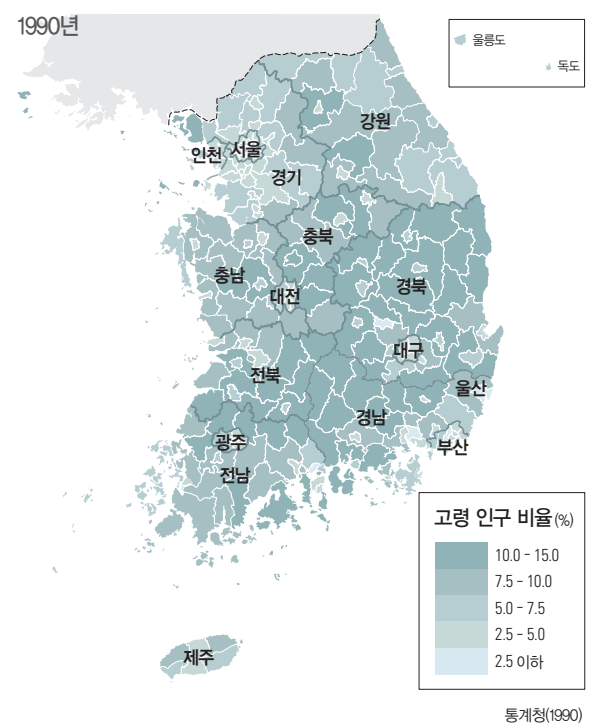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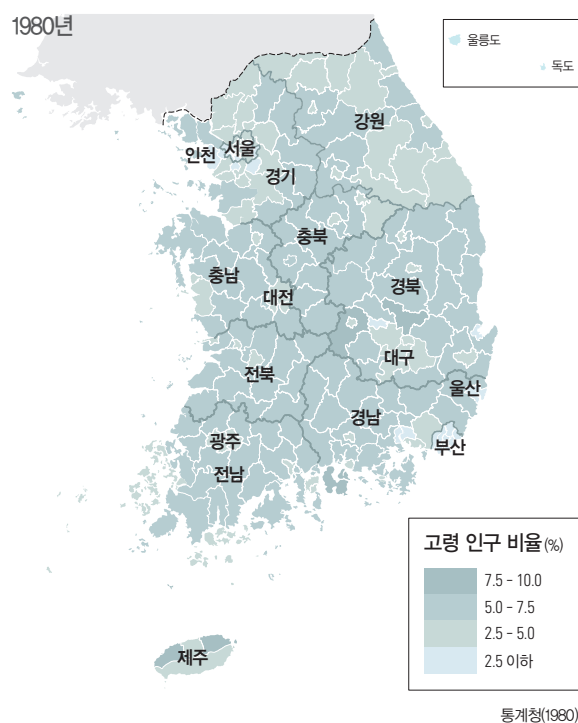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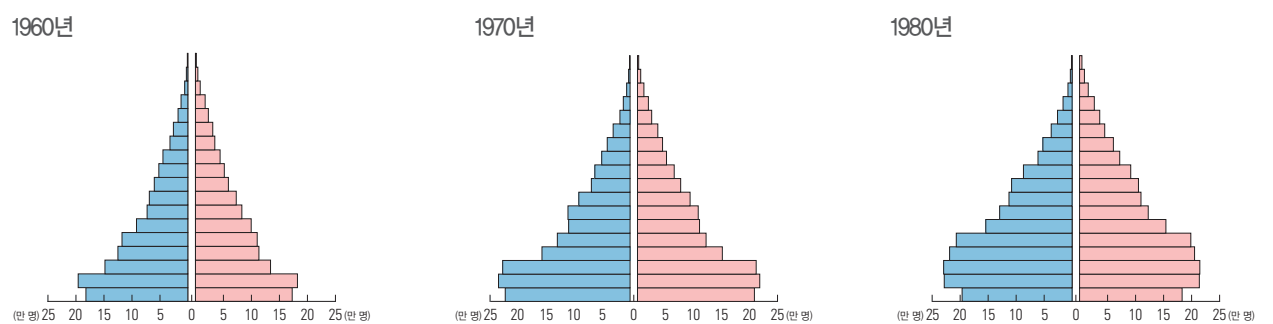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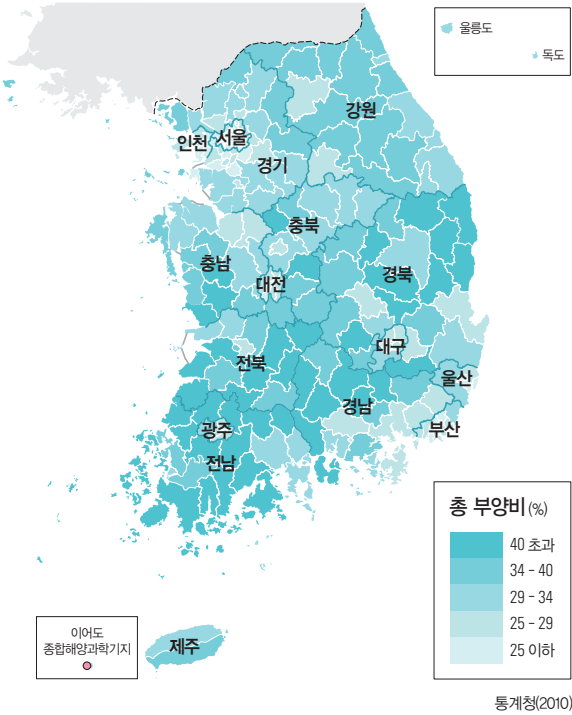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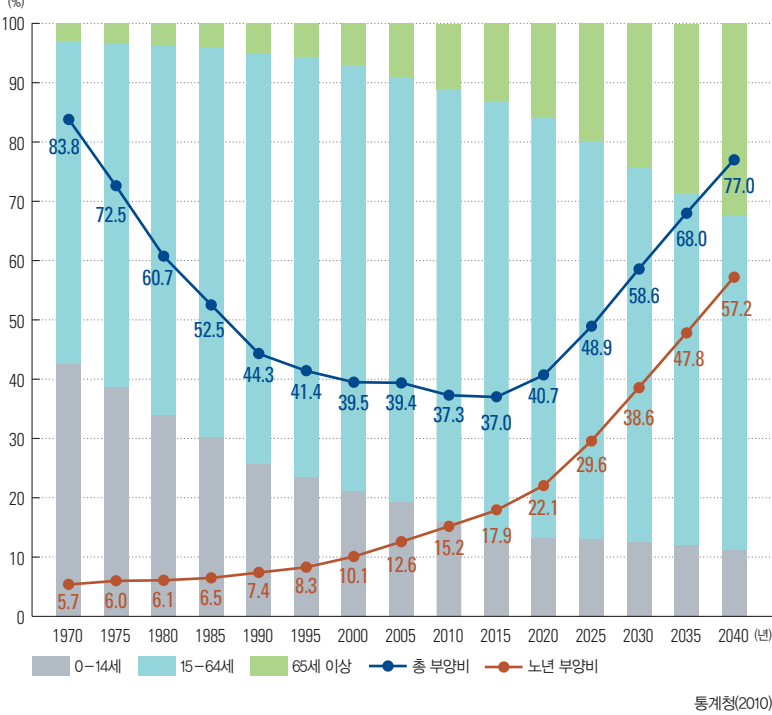
인구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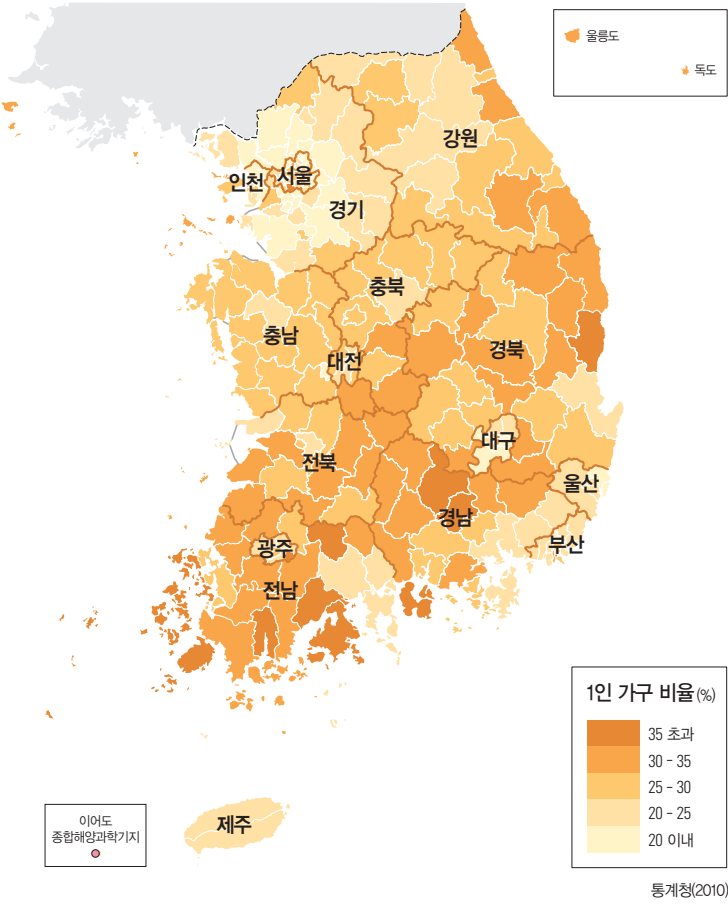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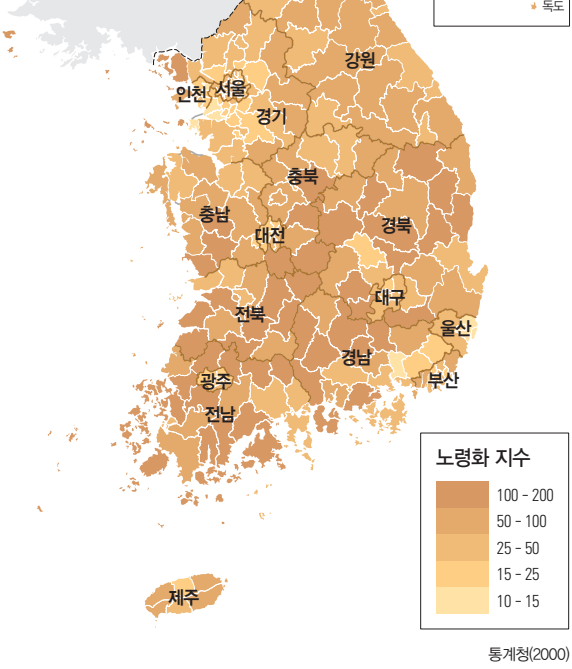
인구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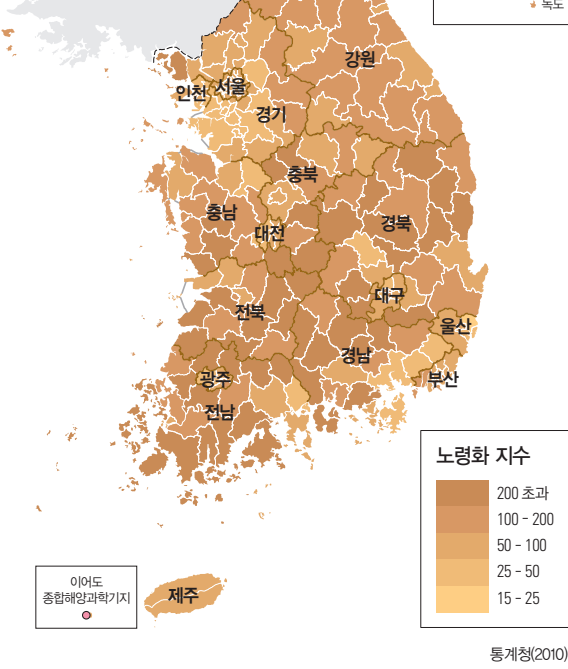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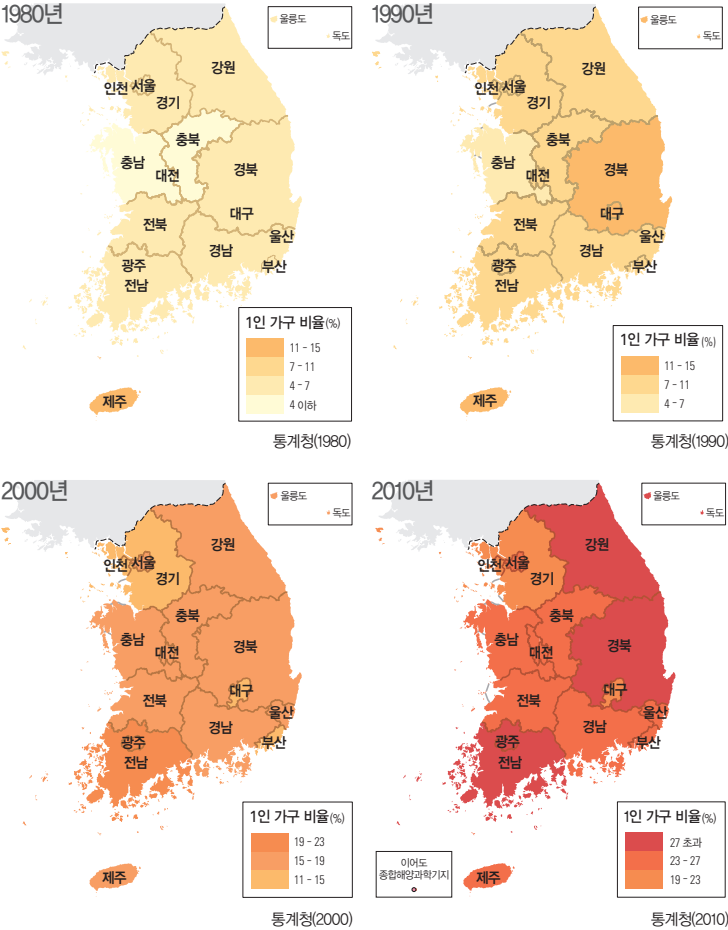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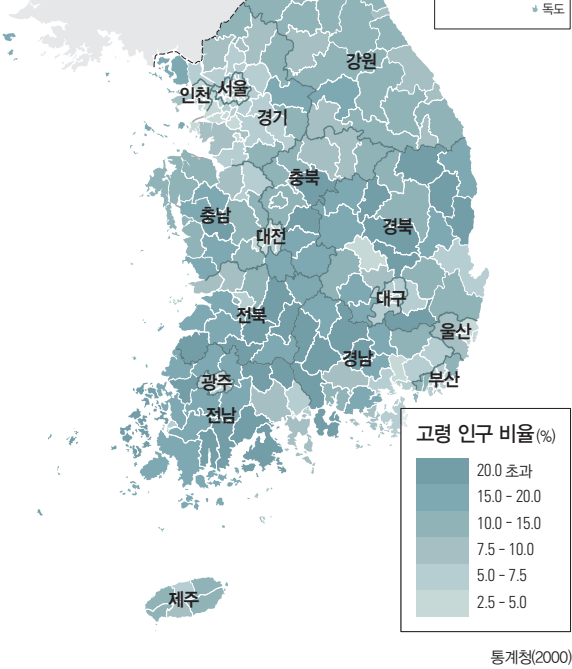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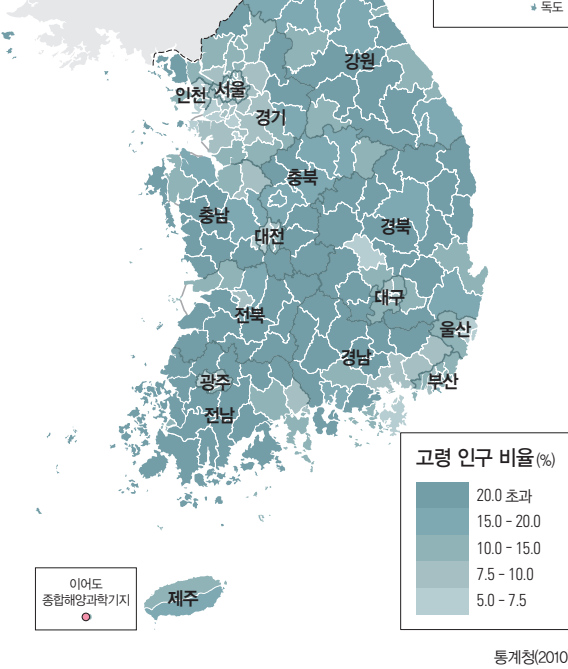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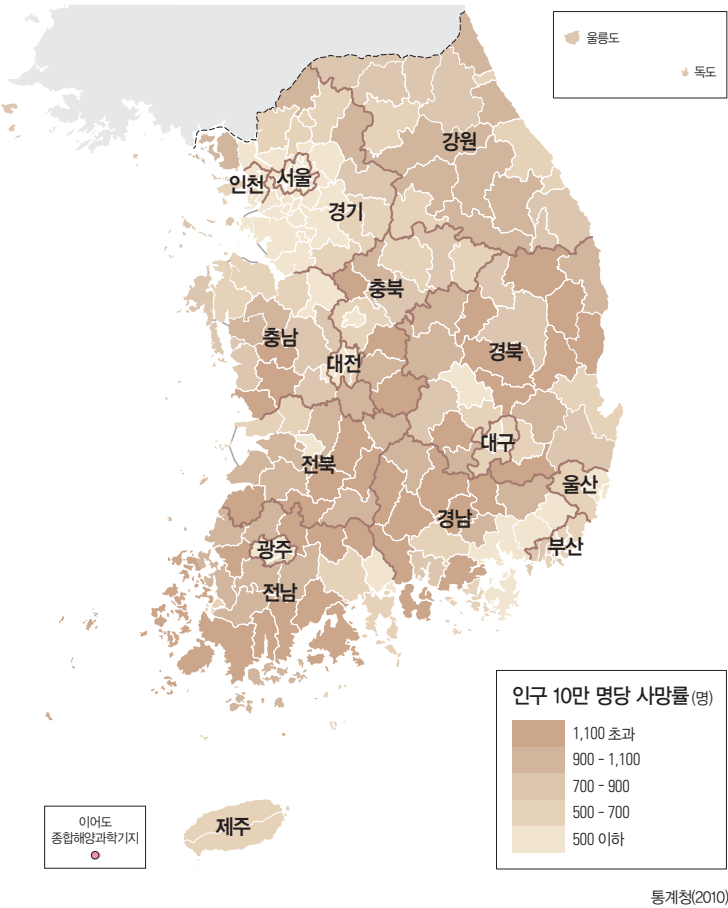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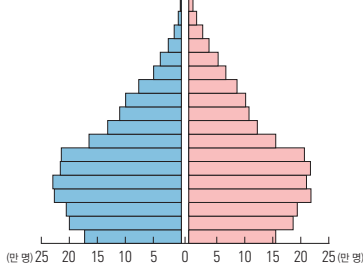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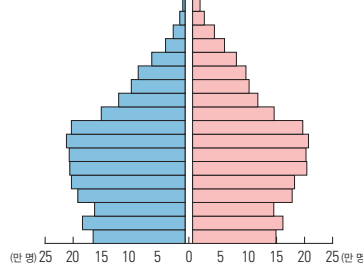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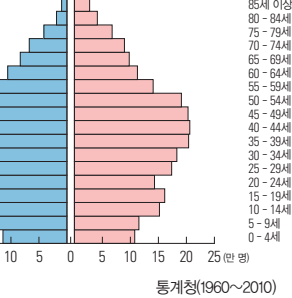
1990년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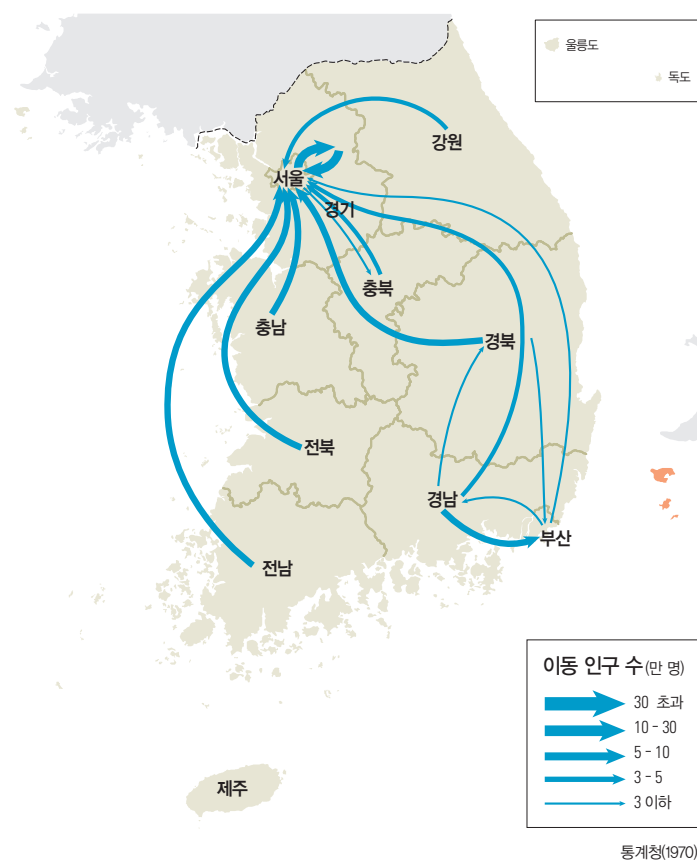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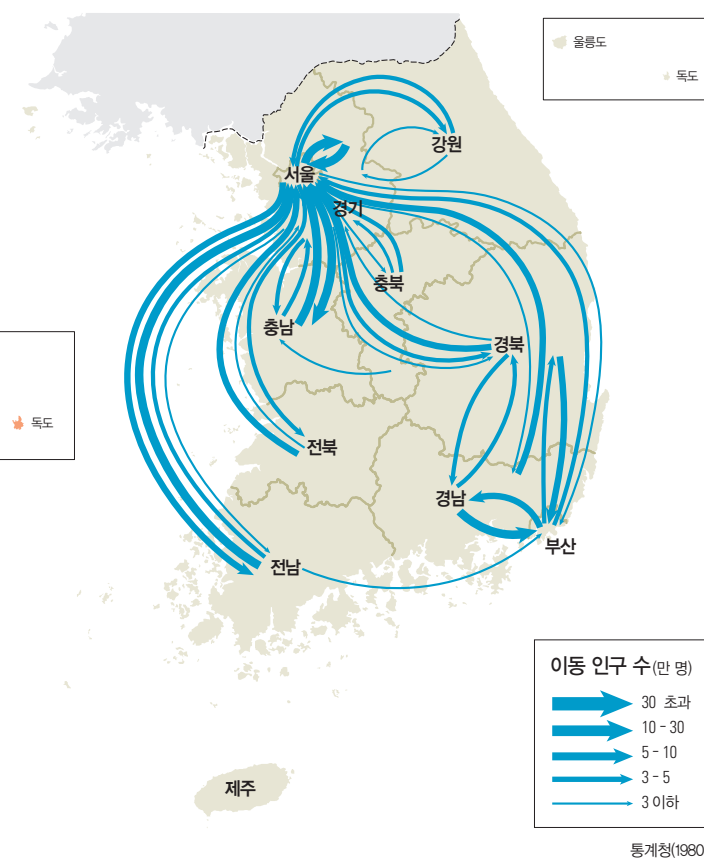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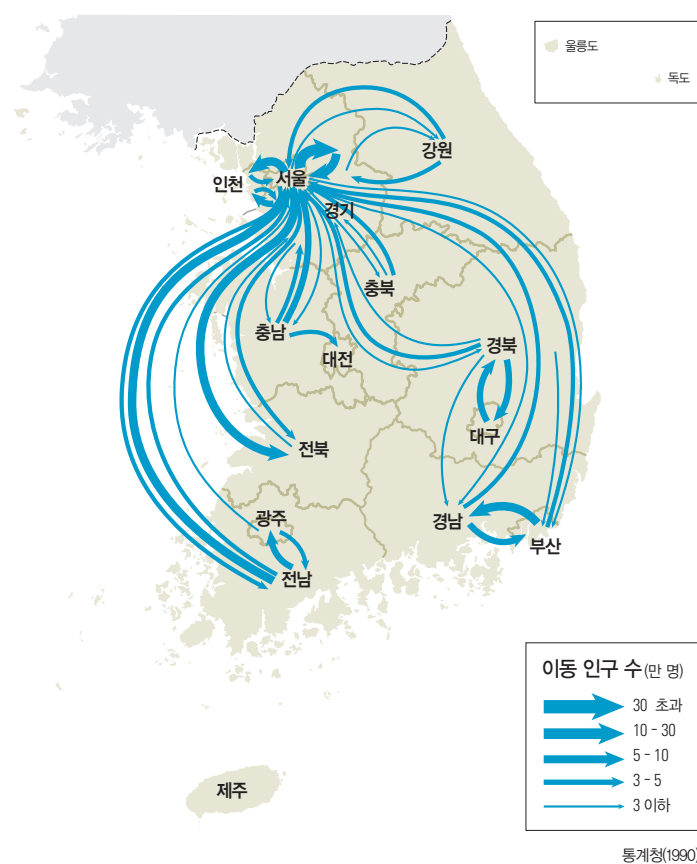
197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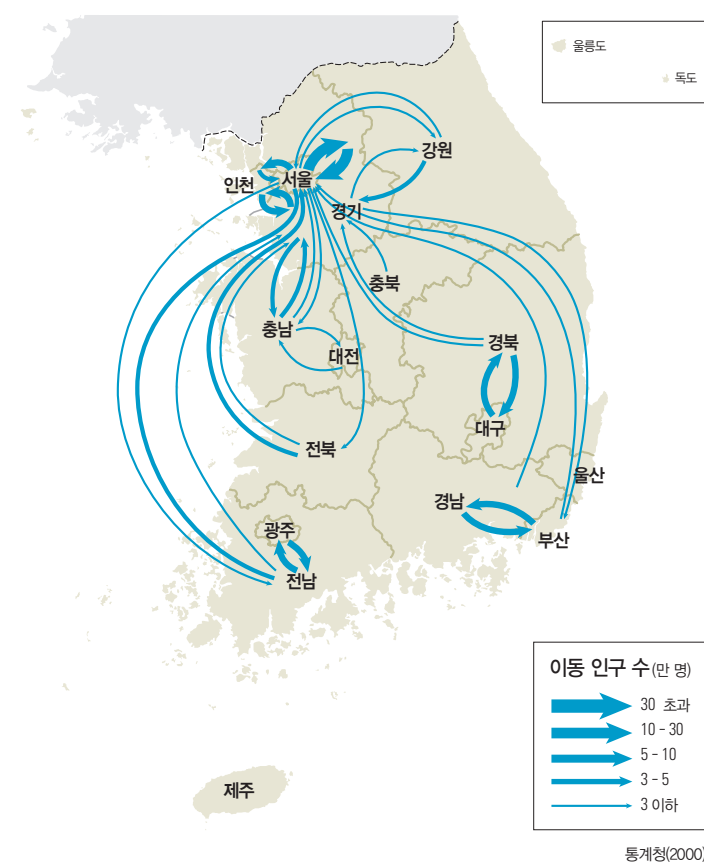
1980년의 인구 이동



1990년의 인구 이동



2000년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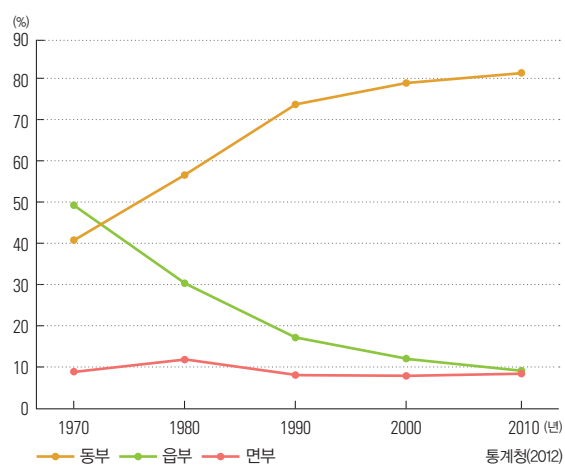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인구 이동의 규모를 보면, 197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후 그 상승세가 1990년에 다소 둔화되었다가 2000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든다. 이는 인구 정주가 1990년대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구 이동의 방향, 즉 지역 간 유출과 유입의 분포는 거리 조락, 도시화, 교외화·역도시화 등의 특징을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거리 조락 측면보다는 도시화의 특징이 두드러졌으나, 이후 1990년대부터는 거리 조락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2000년에는 교외화와 역도시화 현상이 국지적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특징들은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인구 정주 안정화 등의 사회적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잘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의 지역별 인구 이동은 이동의 일반적인 원리인 거리 조락 측면 이외에, 각 지역이 다른 특정 지역들과 갖는 관계의 강도와 방향성도 드러낸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구 이동의 한 유형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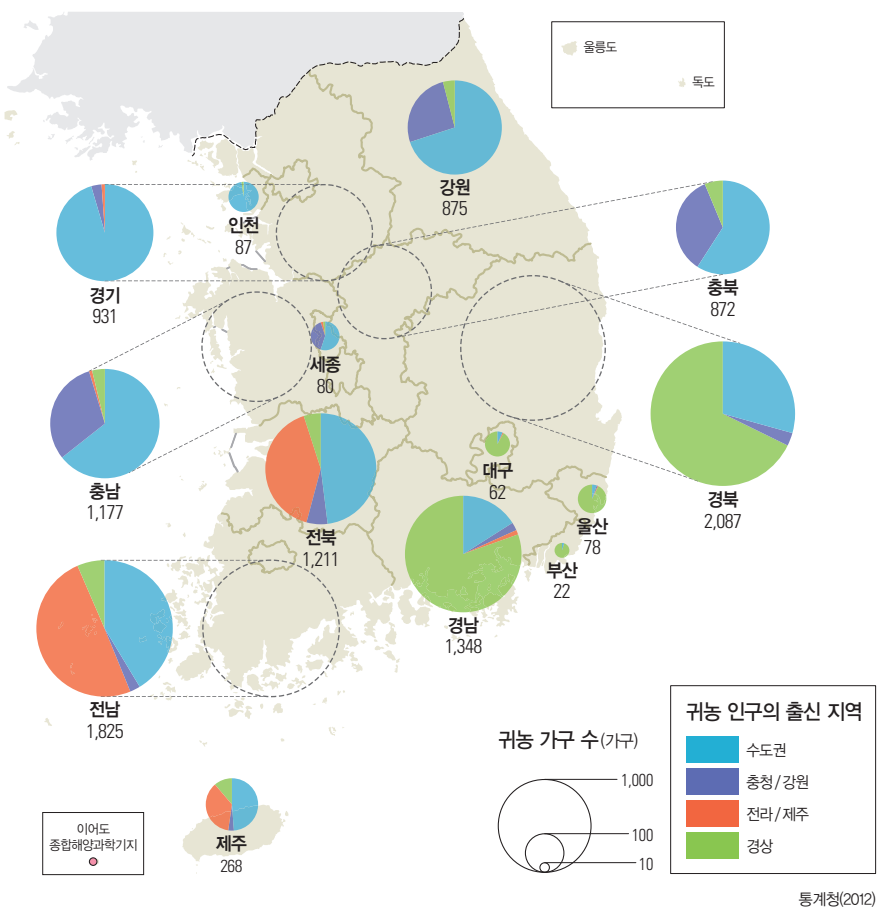
농 인구는 40대와 50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농촌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이러한 귀농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귀농에는 전업 귀농(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 겸업 귀농(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업), 농업 파생 귀농(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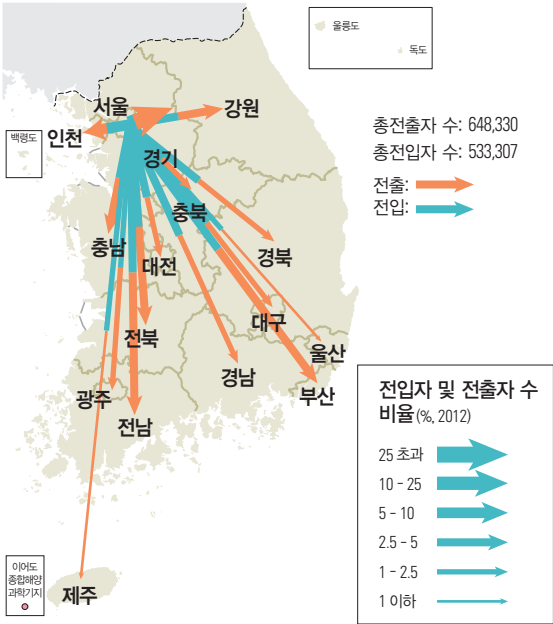
도농 간 인구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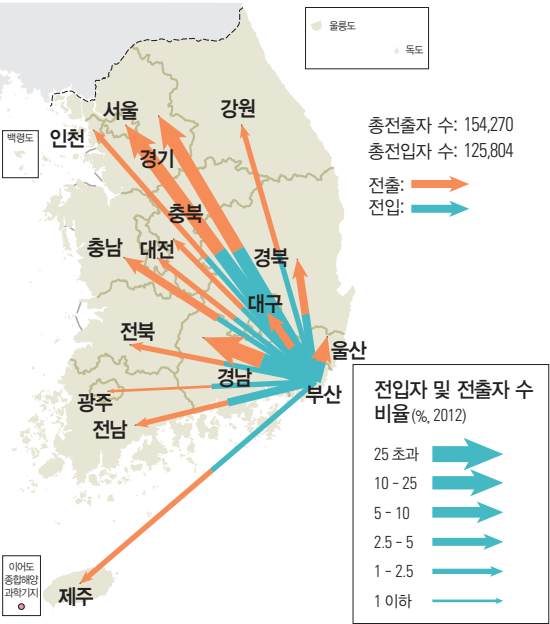
시·도별 귀농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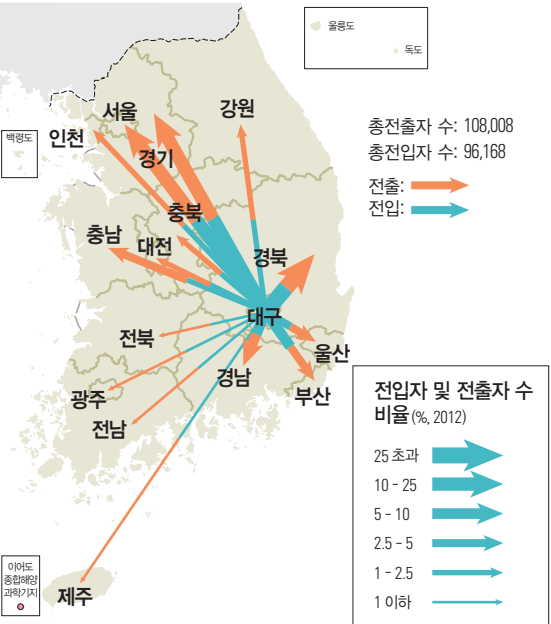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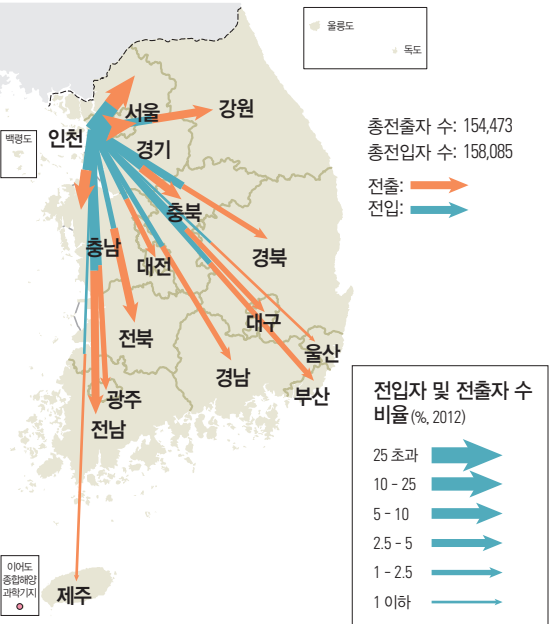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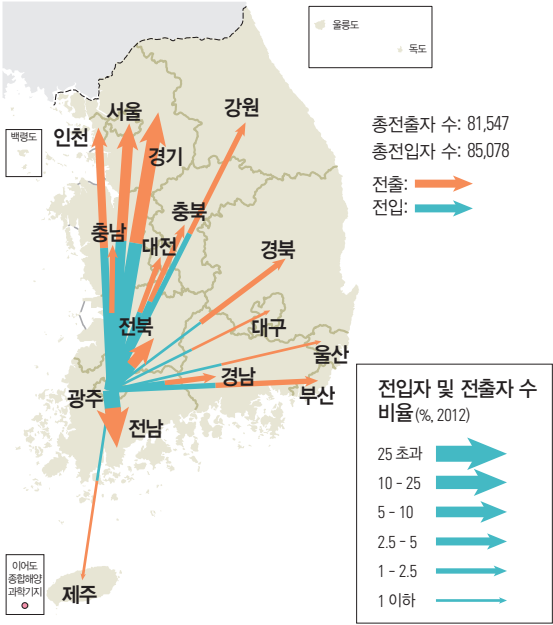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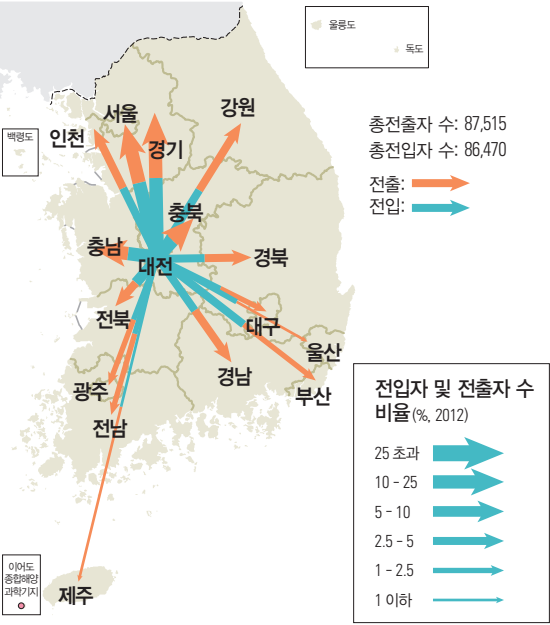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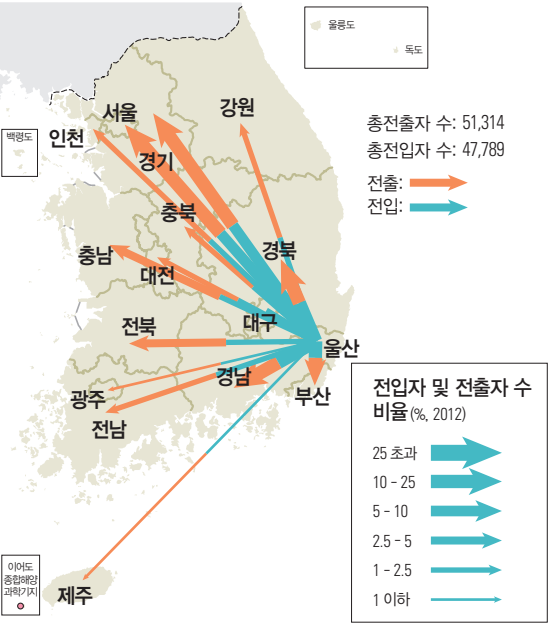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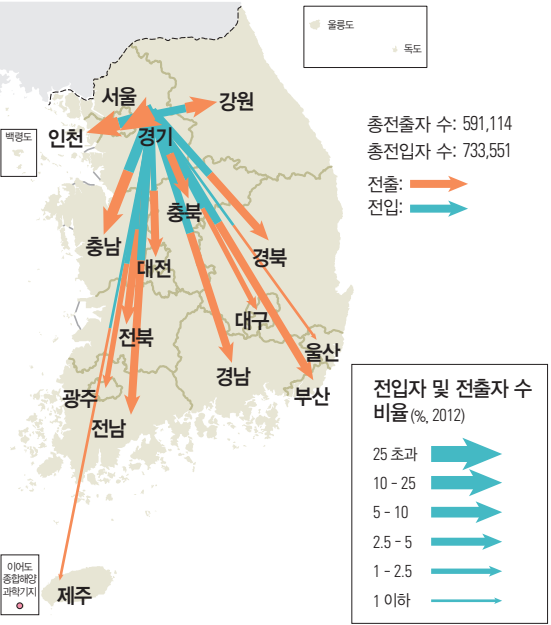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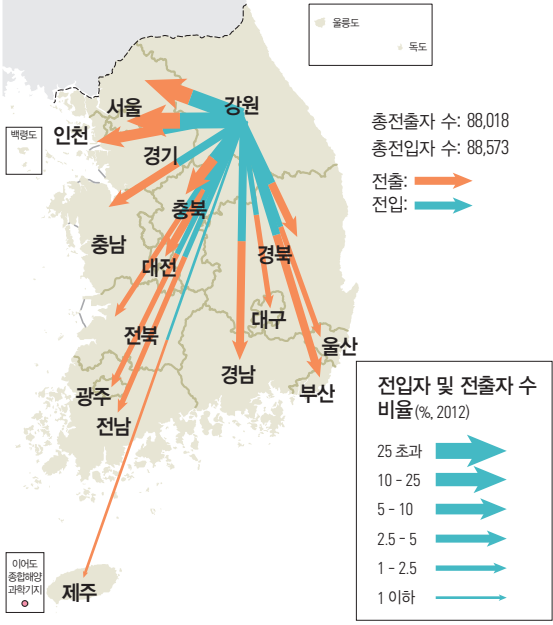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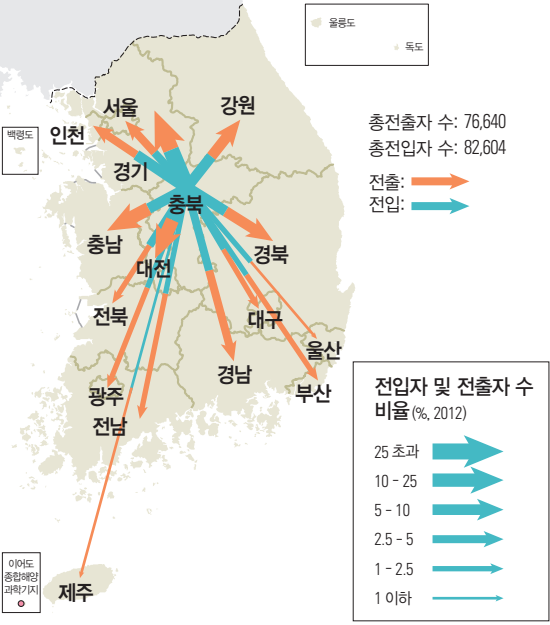
경기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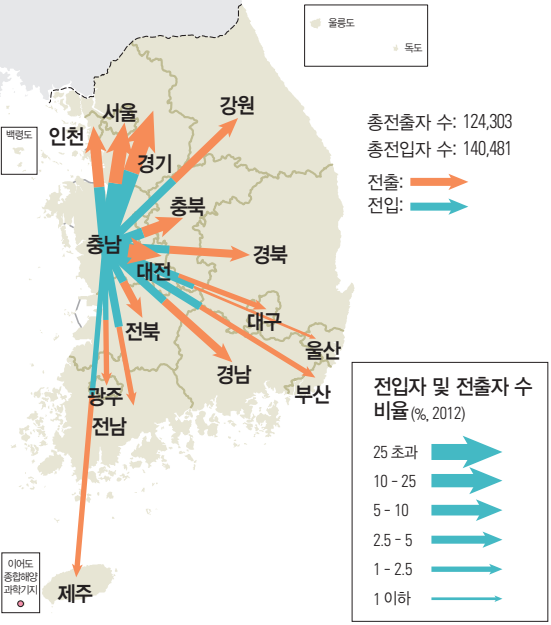
강원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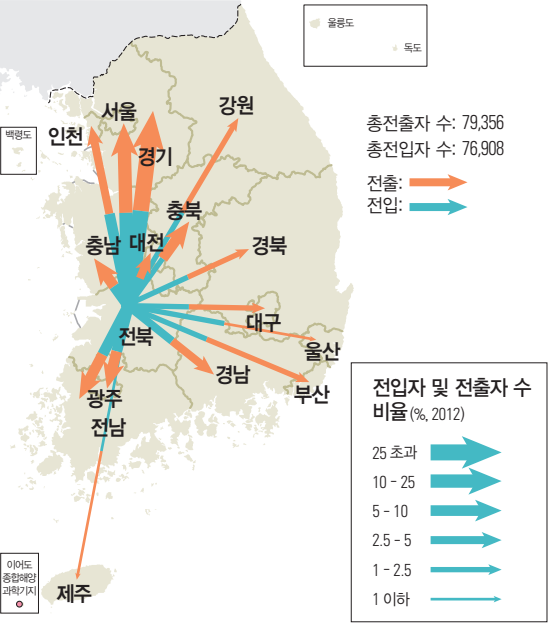
충청북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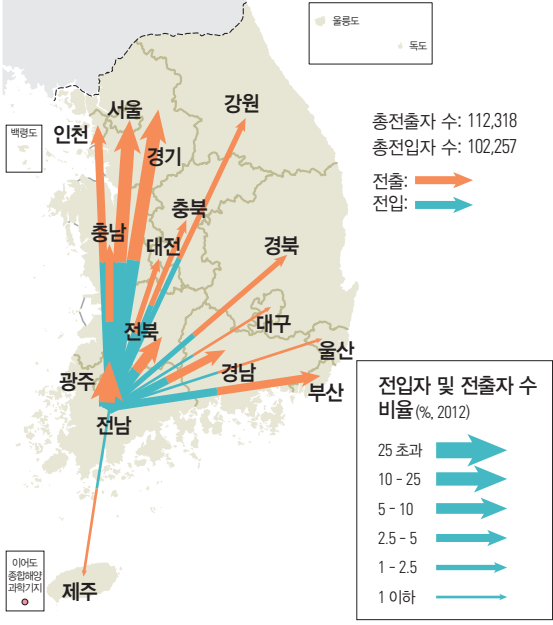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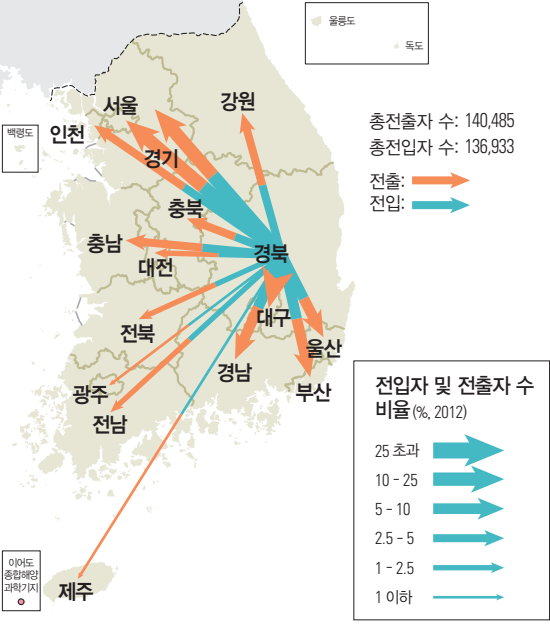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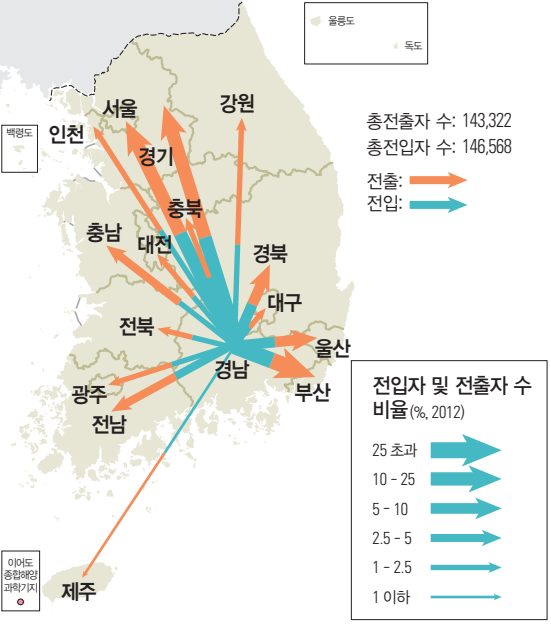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전입과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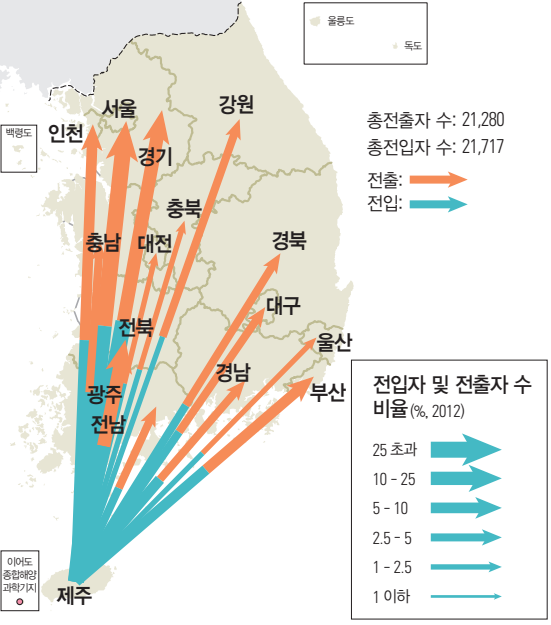
경상북도의 전입과 전출



경상남도의 전입과 전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입과 전출



통계청(1995~2012)